행정안전부

정부혁신 보다 나은 정부

2019
전국 지방의회
우수사례집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2019
전국 지방의회
우수사례집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행정안전부

Contents





본선 진출 우수사례 10편을 웹툰으로 만나세요~ 4

Part 1. 자치입법

1. 광역단위 최초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조례 제정
|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의회 | 28
2. 전국최초 「부산광역시 연제구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 36
3. 대구광역시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의회 | 38
4. 인천광역시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 제정 |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의회 | 42
5. 남동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 54
6. 평택시 이웃분쟁·공공갈등 조정 및 관리 조례안 | 경기도 평택시의회 | 60
7. 충청남도해양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충청남도 충청남도의회 | 70

Part 2. 지역 현안 해결

1. 종로구의회 미세먼지대책 특별위원회 운영 |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 80
2. 개별공시지가 문제제기로 10억 세수 증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 87
3. 직장운동부(북구청 검도부) 운영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운영
|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 89
4. 영광군 천일염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 제·개정 | 전라남도 영광군의회 | 98

Part 3. 의회 운영 효율성 제고

1. 의회의 투명성과 신뢰도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경기도 고양시의회 | 108
2. 정책위원회 제도 도입 운영, 의정 역량강화 및 전문성 제고 | 충청남도 충청남도의회 | 123
3. 경남도의회 『특별위원회의 공진화, 제도화 그리고 발전』 | 경상남도 경상남도의회 | 130



Part 4. 연구활동 등 전문성 제고

1. **정책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의회 | 152
2. **광산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주민자치연구회」** |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 160
3. **경기도의회 정책분석보고서 "GA정책이슈브리프"** | 경기도 경기도의회 | 163
4. **전문성 있는 의회 구현을 위한 정책중심, 연구중심의 의정활동 강화** | 경기도 고양시의회 | 172

Part 5. 주민참여소통

1. **시민 소통과 화합을 위한 "찾아가는 버스킹 의회" 개최** |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의회 | 196
2.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 대축제** | 경기도 경기도의회 | 199
3. **농산업경제위원회 적극 의정활동 통한 전문성 제고로 지역경제 활력** | 전라북도 전라북도의회 | 209
4. **채소가격 안정을 위해 민·관 합동 국산김치 소비확대 운동 전개** | 전라남도 전라남도의회 | 220
5. **군민생활현장 방문** | 전라남도 완도군의회 | 237
6.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통한 협력적 거버넌스의 실현** | 경상북도 경상북도의회 | 240

Part 6. 기타

1. **서울특별시의회 책임성·청렴성 강화를 위한 자정노력**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 250
2. **계양구의회 견학 프로그램 운영** |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 258
3. **(전국최초) '주민과의 약속, 도의원 매니페스토' 달성을 위한 프로젝트** | 경기도 경기도의회 | 265
4. **UN SDGs 추진을 위한 2019 지속가능발전 제주 국제컨퍼런스 계최**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 281

본선 진출
우수사례 10편을
웹툰으로
만나세요~

대상

01



국내 첫 이웃분쟁 공공갈등 조정·관리 조례

경기도 평택시의회

평택시 이웃분쟁 공공갈등 조정 및 관리 조례

최우수상

02



국산 김치 소비 운동으로 채소재배 농가 살리기

전라남도의회

채소가격 안정을 위해 민·관 합동 국산 김치 소비확대 운동 전개

03



시스템 혁신으로 의회 투명성과 신뢰성 UP!

경기도 고양시의회

의회의 투명성과 신뢰도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우수상

04



책임 있는 문제 제기로 10억 세수 증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개별공시지가 문제 제기로 10억 세수 증대

05



방만한 운영 검도부에 칼을 들이대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직장운동부(북구청 검도부) 운영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운영

06



지자체 최초 천일염 수매제 시행

전라남도 영광군의회

영광군 천일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영광군 천일염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장려상

07



지방의회 책임성·청렴성 강화를 위한 자정결의안

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책임성·청렴성 강화를 위한 자정노력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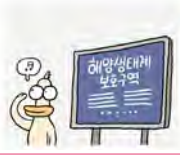


도의원 공약 4,194개 데이터베이스화

경기도의회

주민과의 약속, 도의원 매니페스토 달성을 위한 프로젝트

09



국내 첫 도 해양보호구역 추진!

충청남도의회

충청남도해양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10



주민은 적극 찾아가고, 전문가와 기업은 적극 모셔오고

전라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적극 의정활동 통한 전문성 제고로
지역경제 활력

01

대상

국내 첫 이웃분쟁 공공갈등 조정.관리 조례

평택시 이웃분쟁 공공갈등 조정 및 관리 조례

경기도 평택시의회



정훈이



1



2



3



4



5



6



7



8



9



10



11



12

02

최우수상

국산 김치 소비 운동으로 채소재배 농가 살리기

채소가격 안정을 위해 민·관 합동 국산 김치 소비확대 운동 전개

전라남도의회



정훈이



1



2

수입 김치의 지속적인 증가는 국산 배추·양념 채소류 소비 감소와 가격 폭락을 가져오고 있고, 국민의 건강까지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3

전라남도의회는 국내 채소류 가격 안정을 위해서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국산 김치 소비확대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4

농수산위원장의 제안으로 시작된 이 운동은 전 도민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도의회·도청·도교육청 등 공공기관 직원들이 먼저 행동에 나섰습니다.



5

우리 농산물로 만든 **김치**를 **사용**하는 **음식점**을 **적극 이용**하고, 음식점에서 국산 김치를 사용하는지 질문하기로 한 거죠.



6

관청 주변 음식점부터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7

일일이 음식점을 찾아다니면서 동참을 호소하고 국산 김치를 사용하는 음식점에는 아주 커다란 **스티커**를 **부착**했습니다.



8

많은 지역주민과 음식점 주인들도 운동에 동참했습니다. 2019년 11월까지 도내 1,394개 음식점이 참여했죠.



9

더 나아가 도의회는 한국외식업중앙회·전남농협·김치공장 등과 **국산 김치 소비 촉진 업무협약**을 맺어 음식점에 국산 김치의 납품가격을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10

지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이 운동으로 도내 음식점의 국산 김치 주문이 늘어나면서 배추와 채소류의 계약 물량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11

국산 김치 애용은 가격 폭락으로 시름하는 우리 농가를 살리는 양분이며,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농산물 가격 안정을 이끄는 마중물이 되는 길입니다.



12

03

최우수상

시스템 혁신으로 의회 투명성과 신뢰성 UP!

의회의 투명성과 신뢰도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경기도 고양시의회



정훈이



1



2



3



4

본회의 **생방송 중계 시스템**을 도입해서 시민들이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5

시간 단축과 신속한 의사 결정을 위해 **전자투표 시스템**도 도입했습니다.



6

의정기록은 과거를 통해 미래의 방향을 결정하는 이정표이며, 시민과 의회를 연결하는 매개체입니다.



7

속기는 고도의 숙련이 필요한 전문업무로써 일반사무업무와 다릅니다.



8

따라서 의회사무국 업무를 분리하고 의정기록과 의정자료 관리를 전담하는 **의정기록관리팀**을 **신설**했습니다.



9

또한, 법률 전문가를 팀장으로 한 **입법지원팀**을 신설하여 의원의 입법활동 역량을 강화했는데



10

입법지원팀 신설 후, 제8대 의회의 의안 발의, 시정 질문의 수가 제7대에 비해 무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개원 후 1년간 의정활동 비교

구분	제7대	제8대
의원발의	34	**78**
시정질문	19	**51**
5분 자유 발언	18	**27**

(단위 건)

11

이러한 시스템 혁신은 의회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면서, **의원의 의정활동 역량**도 **강화**하는 일이었습니다.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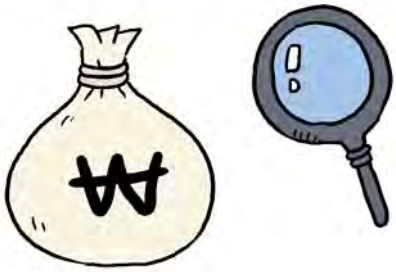
04

우수상

책임 있는 문제 제기로 10억 세수 증대

개별공시지가 문제 제기로 10억 세수 증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정훈이



1



2



3



4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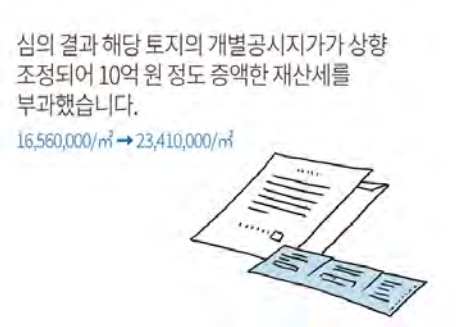
6



7



8



9



10



11



12

05

우수상

방만한 운영 검도부에 칼을 들이대다

직장운동부(북구청 검도부) 운영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운영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정훈이



1



2



3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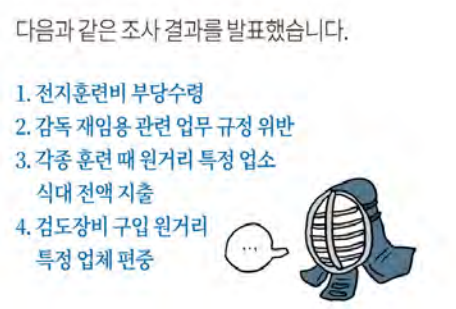
5



6



7



8



9



10



11



12

06

우수상

지자체 최초
천일염 수매제 시행

영광군 천일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영광군 천일염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의회



정훈이



1



2



3



4



5



6



7



8



9



10



11



12

07

장려상

지방의회 책임성·청렴성 강화를 위한 자정결의안

서울특별시의회 책임성·청렴성 강화를 위한 자정노력

서울특별시의회



정훈이



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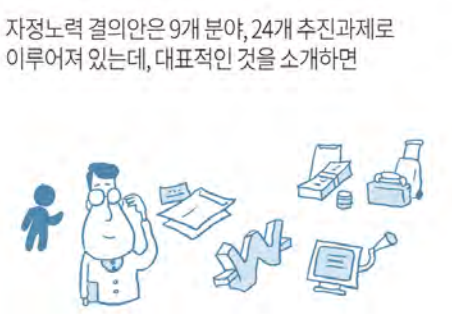
3



4



5



6



7



8



9



10



11



12

08

장려상

도의원 공약 4,194개 데이터베이스화

주민과의 약속, 도의원 매니페스토 달성을 위한 프로젝트

경기도의회



정훈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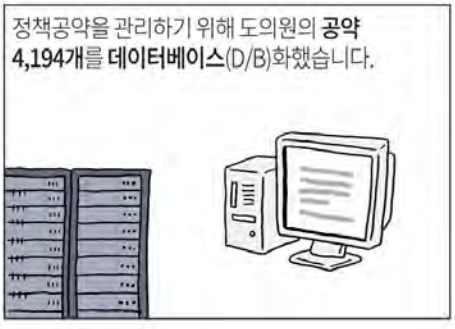
1



2



3



4



5



6



7



8



9



10



11



12

09

장려상

국내 첫 도 해양보호구역 추진!

충청남도해양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의회



정훈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0

장려상

주민은 적극 찾아가고, 전문가와 기업은 적극 모셔오고

농산업경제위원회 적극 의정활동 통한 전문성 제고로 지역경제 활력

전라북도의회



정훈이



1



2



3



4



5



6



7



8



9



10



구 분	2018	2019
간담회	0	17
스터디	0	5
세미나	4	10
현장행정	6	11

11



12

지방의회 우수사례집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Part 1

자치입법

1. **광역단위 최초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조례 제정** |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의회 |
2. **전국 최초 「부산광역시 연제구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
3. **대구광역시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의회 |
4. **인천광역시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 제정** |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의회 |
5. **남동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
6. **평택시 이웃분쟁·공공갈등 조정 및 관리 조례안** | 경기도 평택시의회 |
7. **충청남도해양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충청남도 충청남도의회 |

우수사례 요약서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01 광역단위 최초,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조례 제정

(부산시의회 최초, 위원회 제안 조례)

분야 : **자치입법 분야**



기관명 부산광역시의회

제출자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목적

-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주거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제정하여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 자치입법의 민주성와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부산시 조례로는 최초로 복지환경위원회 8명 전원의 의견을 모아, 위원회 제안 조례로 제정함

현황 및 문제점

- 부산의 출산율은 0.90명('18년)으로 심각한 수준의 저출산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그간 부산시의 출산장려정책이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청년인구의 유출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주거와 일자리를 가장 큰 요인으로 꼽고 있음
-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선진사례 연구와 수차례에 자체 회의 끝에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이 저출산 극복의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라 판단하고 관련 조례 제정 추진

추진경과

- **지자체별 출산장려 시책 사례 분석을 위한 광주시의회와의 공동워크숍 개최 : '19.4.2.**
  - 광주광역시의회(환경복지위원회) MOU 체결, 전문가 특강, 지자체 차원의 저출산 극복방안 공동연구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의 공동포럼 참석 : '19.4.23.**

- 시청 1층 대회의실, 저출산·고령사회 극복 지역 맞춤형 대응 토의, 100여 명 참석

*상임위 위원 토론(박민성 의원)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19.6.11.**

- 시의회 2층 대회의실, 저출산 문제를 주거문제에서 접근, 80여 명 참석

*상임위 위원 발제(박민성 의원)





● **영국정부의 주거정책 분석과 부산시 도입방안 연구 : '19.9.27**

- 영국 쉐필드할람대학 지역사회경제연구센터 방문, 관련전문가(에드 페라리 교수) 면담





● **제281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제안하여 본회의 원안가결 : '19.10.25**

조례 주요내용

● 사업지원 대상 : 신혼부부(아래 내용 모두 충족)

- 부부 모두 부산시 동일주소에 등재되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 혼인신고한 날로부터 5년 이내의 신혼부부

- 통계법 시행령에 따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00퍼센트 이하인 가구

※ 다른 방법으로 기존에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운용 전세자금 대출 받은 사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주택 거래 계약 체결자 등

● 지원 금액 및 범위

- 최대 1억 원의 전세자금 대출에 따른 이자를 전액 또는 일부 지원
- 지원기간은 최대 3년이나 자녀 출산시 1명당 2년씩 그 기간 연장, 난임치료 시술 받은 자는 1회 연장 가능

※ 재원조달 :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및 출산장려기금

● 사업 선정 : 세부 선정대상은 부산시 계획에 따름

※ 연간 1,000세대, 지원대상 주택가액과 이자지원액 최대한도액은 미정

기대효과

● 최근 10년간 부산의 15~39세 청년인구층의 인구 감소는 20.58%로 심각한 수준으로 신혼부부 주거지원 조례가 시행되면 청년층 인구 유출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

| 최근 10년간 특·광역시 인구구조(15~39세) 변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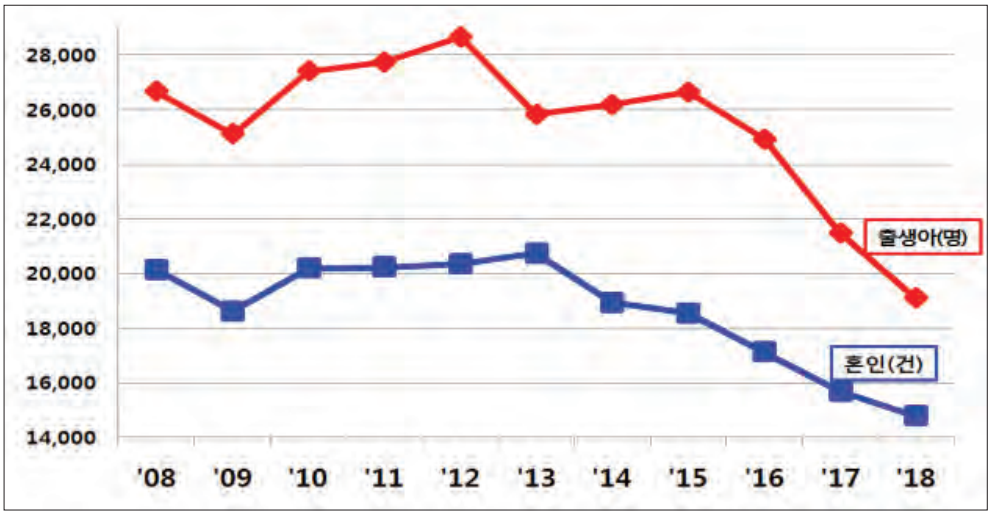
구분	총인구수(명)			15~39세 인구(명)		
	2008년	2018년	증감비율	2008년	2018년	증감비율
전국	49,540,367	51,826,059	4.61%	19,098,730	16,899,721	△11.51%
서울	10,200,827	9,765,623	△4.27%	4,249,044	3,473,315	△18.26%
부산	3,564,577	3,441,453	△3.45%	1,341,151	1,065,107	△20.58%
대구	2,492,724	2,461,769	△1.24%	957,193	789,132	△17.56%
인천	2,692,696	2,954,642	9.73%	1,073,405	1,002,169	△6.64%
광주	1,422,702	1,459,336	2.57%	569,653	502,206	△11.84%
대전	1,480,895	1,489,936	0.61%	596,166	511,326	△14.23%
울산	1,112,407	1,155,623	3.88%	441,418	386,014	△12.55%

※ 출처 : 통계청

● 광역단위 최초의 주거지원 조례로, 주택마련이 어려워 결혼을 망설이고 있는 신혼부부들에게 주거지원 정책 시행으로 결혼 장려 및 출산율 제고 기대

- 결혼과 출산은 매우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

| 최근 10년간 부산광역시 혼인(건)·출생아(명) 추이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출생아(명)	26,670	25,110	27,415	27,759	28,673	25,831	26,190	26,645	24,906	21,480	19,100
혼인(건)	20,149	18,614	20,195	20,224	20,362	20,734	18,927	18,553	17,113	15,677	14,781

※ 출처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 조례제정 과정에서 위원간 충분한 논의와 숙의과정 토론을 거쳐 위원회에서 발의한 조례로, 민주적인 조례제정의 우수사례로 평가

향후계획

● 사업 시행 : 2020년 상반기 중

참고 1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로 안정된 주거 환경을 조성하여 결혼·출산을 장려하고자 신혼부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혼부부"란 혼인한 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한다)부터 5년 이내의 부부를 말한다.
2.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으로 부산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을 말한다.
3. "주택 융자"란 부산광역시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과 협약하여 신혼부부에게 주택 전세계약 목적으로 제공하는 대출을 말한다.
4. "대출이자"란 주택 융자 지원에 따라 금융기관에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말한다.

제3조(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8조에 따라 선정된 신혼부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출이자를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41조제2호에 따른 출산장려계정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 사업 추진목표 및 방향
2. 전년도 추진 실적에 관한 사항
3.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 사업 재원에 관한 사항
4.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 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대상)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을 받으려는 신혼부부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부부 모두 부산광역시 동일 주소에 등재되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2. 「통계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지정 통계에 따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00퍼센트 이하인 가구

제6조(지원 제외 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를 지원하지 않는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3.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
4.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주택 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제7조(지원 금액 및 범위)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 금액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 융자는 최대 1억원으로 하며, 주택 융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자는 지원 기간 동안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이 지원할 수 있다.
2. 지원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지원 기간 내에 출산한 자녀 1명당 2년씩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을 1년 이상 받은 지원 대상자는 1회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지원 대상자 선정 등) ① 시장은 신혼부부 중 한명이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하는 경우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조건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이 경우 지원 신청자가 많으면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선정기준 및 그 밖에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환수 등 조치) 시장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 받은 경우
3. 잘못 지급된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신혼부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

참고 2 언론보도

부산일보 2019년 6월 11일 화요일 A01면 종합

청년들의 '탈부산'

20대는 일 찾아 수도권행 30대는 집 찾아 경남행

부산 15~39세 청년 인구 급감
2018년 106만 5107명
10년 전보다 20.58% 줄어

부산에 거주하는 청년 인구가 7대 특·광역시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20대가 떠나는 것뿐만 아니라 주거 부담에 허덕이는 30대의 '탈부산' 현상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추세 탓에 부산은 7대 특·광역시 중 가장 빠르게 '소멸 도시'로 접어들 위기에 놓인 상황이다.

▶관련 기사 4면

10일 행정안전부의 인구구조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부산의 15~39세 인구는 106만 5107명으로 10년 전인 2008년의 134만 1151명보다 20.58% 줄어들었다. 이는 서울·대구·인천 등 7대 특·광역시 중 가장 높은 감소율이다. 서울이 18.26%, 대구 17.56%, 대전이 14.23%로 뒤를 이었다.

특히 취업과 결혼이 활발한 25~34세 인구의 감소 폭이 컸다. 부산에 사는 25~29세는 7대 특·광역시 중 가장 큰 폭인 26.79%가 줄어들었고, 30~34세는 23.47%로 대구 25.42%와 광주 24.83%에 이어 3번째로 많이 감소했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민성 의원은 "해당 연령대 인구 감소가 큰 건 그만큼 부산에서 일자리를 찾거나 결혼 생활을 이어가기 쉽지 않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10년간 15~39세 인구수 변화

*자료: 행정안전부

구분	2008년	2018년	증감비율
전국	19,098,730	16,899,721	-11.51%
서울	4,249,044	3,473,315	-18.26%
부산	1,341,151	1,065,107	-20.58%
대구	957,193	789,132	-17.56%
인천	1,073,405	1,002,169	-6.64%
광주	569,653	502,206	-11.84%
대전	596,166	511,326	-14.23%
울산	441,418	386,014	-12.55%

실제로 부산의 청년들이 이주한 시·도를 보면 20대는 일자리, 30대는 주거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통계청의 1인 순이동자수 자료에 따르면 25~29세는 일자리가 많은 서울과 경기도로 이동하는 비율이 제일 높았다. 이와 달리 30~39세는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한 부산 외곽 지역인 경남으로 이주하는 수가 가장 많았다.

청년들의 '탈부산'이 이어지면서 부산은 7대 특·광역시 중 가장 빠르게 '소멸 도시'가 될 위험도 높은 상황이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한국의 지방소멸 2018' 자료를 바탕으로 2018년 12월 기준 인구소멸위험지수를 예측한 결과 부산은 0.74로 가장 심각했다. 도·농 지역인 충북이나 경북과 비슷한 수준이다. 지방소멸위험지수는 65세 이상 인구 대비 20~39세 여성 인구 비율을 뜻한다. 1 이하인 경우 인구학적 쇠퇴 위험 단계에 진입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부산 16개 구·군 중 원도심 지역의 인구소멸 위험이 가장 높은 상황이다. 영도구, 동구, 중구의 위험지수가 각각 0.41, 0.45, 0.47로 소멸위험 진입 단계에 접어들었다. 서구 0.51, 남·금정구 0.68, 수영구가 0.73 순으로 뒤를 이었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수준으로 인구 변화가 진행되면 2030년에 인구가 소멸하는 읍·면·동이 속출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사망이나 유출 인구 등을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강서구, 영도구, 서구, 동래구, 금정구 등에 속한 42개 읍·면·동이 인구가 없는 '유령 마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인구 유출을 막을 획기적인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우영 기자 verdad@

부산일보
2019년 10월 22일 화요일 A01면 종합

최대1억 무이자 전세대출 신혼부부 '탈부산' 잡는다

부산시의회, 오늘 지원조례 발의
내년 17개 시·도 중 최초 시행
3년 지원, 자녀출산 땐 2년씩 연장
첫해 1000쌍 300만 원씩 혜택

주거 비용 부담으로 부산 청년들의 '탈부산 행렬'이 이어진다는 지적(<부산일보> 6월 11일 자 1면 등 보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의회가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과 이자를 지원하는 조례를 발의한다. 조례가 부산시의회를 최종 통과하면 내년 초부터 부산 거주 신혼부부에게 최대 1억 원까지 무이자로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이 17개 시·도 중 최초로 시행된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22일 제281회 임시회에서 '부산시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안정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까지 장려하기 위한 목적이다.

해당 조례에 따르면 신혼부부는 최대 1억 원까지 전세자금을 무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다. 부산시에 동일 주소로 등재된 혼인 5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가 그 대상이고, 부부의 소득은 전년도 도시노동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00% 이하여야 한다. 복지환경위원회는 전세가 3억 원 이하 정도의 집까지 지원 가능토록 만들 계획이다.

무이자 전세자금 지원 기간은 3년 이내다. 다만 지원 기간 동안 아이를 낳으면 1명당 2년씩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모자보건법에 따라 난임 치료 시술을 1년 이상 받은 지원 대상자도 1회 연장할 수 있다.

현재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해당 조례가 시작되는 첫해 1000쌍의 신혼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첫해에는 예산 3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연이자 3% 기준으로 1000쌍에게 한 해 300만 원씩 지원이 가능한 규모다.

전세자금 1억 원은 주택금융공사, 은행 등과 협의해 지원 대상자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복지환경위 소속 박민성 의원은 "부산시 예산으로 전세자금까지 직접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했지만, 더 많은 신혼부부에게 지원이 가능하도록 금융기관과 은행 등을 연계한 대출 방식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17개 시·도 중 신혼부부에게 1억 원 규모의 전세자금과 이자를 지원하는 정책이 시행되는 곳은 부산이 처음이다. 앞서 조례는 복지환경위 상임위원 8명이 여러 차례 회의를 한 결과 최종안이 나왔고, 부산시 최초로 위원회 모든 의원이 뜻을 모아 발의할 예정이어서 더욱 뜻이 깊다.

관련 조례가 22일 상임위를 거쳐 25일로 예정된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내년 초부터 본격 실시에 들어갈 수 있을 전망이다.

복지환경위 김재영 위원장은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내년에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지원 신청자가 늘어나게 되면 부산시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시 관계자는 "청년의 주거 문제는 민선 7기 시정이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정책"이라면서 "시의회가 상임위 전원의 뜻을 모아 발의하는 조례인 만큼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의 가용예산을 총동원해 적극 지원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우수사례 요약서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02 전국 최초 「부산광역시 연제구 다자녀가구 전세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분야 : **자치입법 분야**

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제출자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목적

- 아이 키우기 좋은 연제구, 다자녀가구의 주거안정대책에 초점을 맞춰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초저출산 극복의 일환으로 조례제정.

현황 및 문제점

- 연제구는 2018년 1,264명이 태어나 지난 2014년 대비 출생률이 20%가 줄어들었고, 합계 출산율도 0.936%로 나타나 심각한 초저출산율을 기록하였음.

개선내용(추진경과)

- 지난 9월 27일에 열린 제217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에서 전국 최초로 관련 조례 만장일치 통과

- 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 추진기간 : 2020.1.2. ~ 계속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무주택 다자녀가구
  - 대상주택 : 연제구 소재 주택
  - 지원내용 :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연간 최대 100만원, 연1회)로 5년간 지원
  - 사 업 량 : 120세대(예상)
  - 사 업 비 : 120,000천원(구비 100%)

향후계획

- 2020년 본예산 반영 추진 : 2019년 10월 ~ 11월
- 구보 및 구청 홈페이지 게재 등 홍보 추진

우수사례 요약서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03 대구광역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9.05.20)

분야 : **자치입법 분야**



기관명 대구광역시의회

제출자 대구광역시의회

목적

장애인이 편안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도시 조성

- 장애인의 도시기반시설 접근성 제고
  - 장애인을 위한 사회기반시설의 정비
- 장애인에 대한 시민사회의 공동체 의식 함양
  - 장애인에 대한 시민의식 개선
- 장애인의 자아실현 지원
  - 장애인의 문화생활, 사회생활 등 자아실현을 위한 지원

현황 및 문제점

- 장애인이 생활하기에 취약한 환경
  - 오래된 전통도시인 탓에 사회기반시설이 장애인의 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되고 있음.
- 보수적이고 경직된 사회분위기
  - 경상도 특유의 내면적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기질적 특성 또한 장애인에게는 상당한 스트레스가 됨.

개선내용

-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계획 수립
  - 장애인친화영향 평가 제도 시행
  -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기준 수립

- 장애인친화도를 높이는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개선경과

- 장애인 친화 사회기반시설 확충
  - 사회기반시설을 장애인이 생활하기 맞게 개선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과 편의성이 증진 될 것으로 예상 함.
- 장애인 복지 증진
  - 장애인 친화도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을 문화, 복지, 예술 등 다방면에서 발굴 함으로써 장애인의 문화와 복지 수준을 제고
-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선구적 역할
  - 타 시·도의 모범사례(경기도, 경북 등에서도 조례 제정)

향후계획

- 2019년 5월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 2020년도에 예산에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용역을 시행할 예정이며
  - 이에 따라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평가제도와 조성기준 등을 수립할 예정임.

별첨 대구광역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5. 20.] [대구광역시조례 제5268호, 2019. 5. 20., 제정] 대구광역시(장애인복지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에 입각하여 장애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장애인친화도시"란 장애인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인프라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3. "장애인친화도"란 장애인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친화를 이룬 정도를 말한다.
4. "장애인친화영향평가"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본청, 소속기관 및 구·군의 정책 수립·시행 등이 장애인친화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각 구·군이 장애인친화도시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의 여건에 맞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의 목표 및 그 추진 방향
2. 장애인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친화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장애인친화도시 조성기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소를 포함하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도시기반시설에 있어서의 장애인의 안전성·편리성·접근성
2. 교통수단에 있어서 장애인의 이용 편의성
3. 여가 및 사회활동에 있어서 장애인의 접근성

4. 장애인의 자아실현성
5. 장애인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6. 기타 장애인에 대한 차별 인식개선 등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시장은 지원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평가) ① 시장은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구·군의 장애인친화영향을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전문성과 인력 등을 갖춘 연구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전문인력) 시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장애인친화영향 평가를 고려하여 구·군의 장애인친화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인친화도를 높이는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재정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협력체계구축) 시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중앙정부 및 구·군, 비영리 법인·단체, 시민,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협의체 설치 · 운영) 시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장애인친화도시조성협의체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2조(교육 · 홍보) 시장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관련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시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법인·단체·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5268호, 2019. 5.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우수사례 요약서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04 인천광역시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 제정 (전국 광역시·도 최초 시행)

분야 : **자치입법 분야**

기관명 인천광역시의회

제출자 인천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 이병래 의원

목적

● 자연재해, 재난사고, 대중교통사고, 강도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공제 및 보험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

* 인천광역시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 제정: 2018.10. 8.

– 이병래의원 등 11명 발의(대표발의: 이병래 의원)

현황

■ 3년 평균 인천광역시 사건·사고 현황

● 화재사망(13명/연),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22명/연)

피해유형	3년 평균	2014년	2015년	2016년
자연재해(열사병포함) 사망	0.3	–	–	1
화재 사망	13	12	16	10
화재 부상	85	73	89	94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22	19	22	24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중상)	527	559	614	409
강도 사망	0.3	1	–	–
강도 상해(중상)	38	38	40	35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27	25	29	28

☞ 자료출처 : 자연재해(행정안전부 재해연보), 화재(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 대중교통, 강도, 스쿨존 (인천지방경찰청)

■ 사고·재난 시 보상 지원사항 비고

구분	시민안전보험	생활안정지원금	재해구호기금	재난관리기금
근거	인천광역시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 등에 관한 조례(군·구)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8조	인천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지원 대상	○ 자연재해 사망자 ○ 폭발·화재·붕괴·대중교통 이용·강도 등으로 인한 상해 사망자 또는 후유 장해자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재난의 피해자 또는 유가족	이재민 또는 일시 대피자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예방활동(인적지원 불가)
지원 내용	○ 사망 1천만원 ○ 후유장해 최대 1천만원 (장해정도에 따라 상이)	○ 구호금 최대 1천만원 ○ 생계비, 장제비, 교육비 등	○ 응급구호비: 56천원 (1일 8천만원×최초 7일간) ○ 소상공인 지원 : 2백만원	○ 방재시설 보수 보강 등 ○ 재난예방경보 구축 ○ 재난피해시설 복구 ○ 긴급 구조능력 확충사업 ○ 감염병·가축 전염병·긴급복구
지원 조건	해당 사고발생시 피보험자의 청구 후 보험사 심사에 의해 결정	○ 군·구조례 제3조 제1항(군·구 결정사항) ○ 시 조례 제4조 제1호 (시60%,구40%)	자연재해로 피해발생시	재난관리기금 사용 신청 사업계획서 제출, 검토 후 결정 (군·구 부족액 범위 한도에서 지원가능)
재원	일반회계(인천광역시)	예비비(시, 군·구)	재해구호기금	재난관리기금

개선내용 ※ 장애극복, 성공요인 기술

■ 계약체결 현황

- 계약자 : 인천광역시
- 피보험자 : 인천시민(3,019,856명) * 외국인 포함
  - 인천광역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
- 보장기간 : 2019. 1. 1. 00시 ~ 2019.12.31. 24시
- 보험사 : DB손해보험(주)컨소시엄

● 사 업 비 : 422백만원

● 보장항목 :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등 8개 항목

■ 수혜 현황

● 시민안전보험 수혜현황

- 수혜일시 : 2019. 5.15.
- 수 혜 자 : 유가족
- 수혜금액 : 10,000천원
- 수혜사유
  - 2019년 2월 중 인천시 관내에서 발생한 화재로 사망한 시민의 유가족에게 보험사를 통하여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지급

개선성과

※사진, 보도내용 등 증빙자료 첨부 가능

● 시민안전보험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일반시민들은 직접 보험사를 통해 매월 보험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만 재해 및 재난 등 각종 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였으나,

● 시민안전보험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는 인천시민이면 누구나 보험금을 납부하지 않고도 재해 및 재난 등 각종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생활이 어려워 보험금 납부가 어려운 시민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향후계획

● 매년 시민안전보험은 자동으로 갱신됨.

※ 참고사항 (타 광역시·도 조례 제정 현황)

구분	조 례 명	제정일자	비고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8.12.31.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2019. 7. 1.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시민안전종합보험 조례	2019. 8. 9.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2019. 9.26.	

붙임 1 인천광역시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

제정 2018-10-08 조례 제600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인천광역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인천광역시민을 대상으로 인천광역시와 보험기관등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등"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와 계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3조(가입대상) 인천광역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된 외국인 포함)을 피보험자로 한다.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험계약시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보험기관등에 납입한다.

제6조(보험금액 산정) 보험금액의 산정과 지급금액의 신청방법 및 지급대상자 등에 관한 사항은 계약된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른다.

제7조(보험금 청구)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및 법정상속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 등에 보험금을 신청 할 수 있다.

제8조(보험금 지급) 보험기관등은 제7조에 따른 보험금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보험금 지급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1. 대상자가 사고 발생일 이전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받을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언론보도 사항

중부일보

2019년 01월 02일 (수)
사회 29면

전국 최초 중·고교 교복비 지원… 시민안전보험도 개시

올해부터 달라지는 인천의 변화

빈갑다 2019년. 기해년(己亥年)을 맞아 인천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인천시는 1일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담은 '2019년 인천시민의 생활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책자를 발간했다. 책자에는 시민 눈높이에 맞춰 변화된 제도 86건이 질문, 답 형식으로 수록됐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전자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우리 동네 공공도서관과 주민센터, 군·구 민원실에서 배포하는 책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리에서는 시민 피부에 와 닿은 교육부터 인천까지 총 4가지 영역의 기분 좋은 개선을 소개한다.

▶교육= 인천에서는 전국 최초로 중·고등학생들의 교복비를 지원한다.

대상은 중학생 2만6천462명과 고등학생 2만6천462명이다.

1인당 26만6천 원이 지원되며 동복은 자켓, 조끼, 셔츠, 바지 또는 치마이고 하복은 셔츠와 바지 또는 치마이다.

대학생을 위해서는 학자금대출 이자가 지원된다. 2019년 1학기 분부터 졸업 후 2년 내 미취업 시 이자 부담을 해소할 수 있다.

▶보육= 난임과 우울증 환자를 위한 상담센터가 문을 연다.

강병원 여성센터에 마련되는 상담센터에서는 심리상담과 정서적지지 프로그램 등이 운영된다. 어린이집에는 간호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해 아동의 건강을 점검하고 보육교사를 상담한다.

이 같은 내용은 학부모에게 전달돼 건강한 보육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대학생 위한 학자금대출이자 지원
난임·우울증환자 위한 상담센터도
장애인 대상 미세먼지마스크 배부

▶보건= 장애인의 건강을 위해 복지관에 미세먼지 흡입 방지 마스크가 지원된다.

중증장애인에게는 24시간 돌볼 수 있는 활동서비스가 제공된다. 거동이 불편한 이들을 위해 체위변경, 개인위생관리, 안전확인 등을 돕는 장애인활동사가 배치된다. 발달장애인을 위해서는 영유아기와 성인전환기, 성인권교육에 맞는 부모교육이 펼쳐진다.

성인발달장애인에게는 성교육이 실시되고 발달장애학생에게는 방과후 돌봄서비스가 지원된다.

▶안전= 관역시 최초로 시민안전보험이 실시된다. 시민안전보험이란 폭발, 화재, 붕괴 사망, 후유장애 등 8개 항목에 대해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인천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이 지급된다. 사용기간은 제한이 없으며 인천시민이면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생활에 꼭 필요한 제도는 책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시민들이 보다 쉽게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친숙한 그림형식으로 표현했다"며 "자세한 사항은 이달 초께 민원실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현진기자

방송보도녹취내용 1월 2일 [지방]

[KFM경기방송] '기해년' 달라지는 인천, 중.고교 무상교복 지원...시민안전보험 시행 (12/31)

[앵커] 기해년 새해가 밝아오는 가운데 인천에서도 내년부터 새로운 정책들이 예고돼 있습니다. 특히 광역시 중에선 처음으로 학생들에겐 무상교복이 지원되고, 전국 최초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지원되는 시민안전보험 등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신종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다가오는 기해년 새해에는 인천의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무상교복이 지원됩니다.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내년도 중학교 신입생 2만 6천명과 고등학교 신입생 2만 7천명 등 약 5만 3천명에게 1인당 26만원 상당의 교복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중.고등학교 신입생 모두에게 무상교복을 지원하는 곳은 광역시 중 인천이 첫번째입니다. 이에 따라 대전시와 세종시 등 중.고교 무상교복 지원을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히는 광역시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의 초.중.고등학생에 이어 유치원생도 내년 3월부터 무상급식을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전국 최초로 시민안전보험도 시행됩니다. 각종 사고와 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을 대상으로 최대 천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겁니다.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사고 후 신고를 통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인천시는 또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예산을 올해 13억 원에서 내년 200억 원으로 상향하는 등 복지사업 규모도 대폭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5년 만에 재개되는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과 수소연료 자동차 구입비 지원 등 40여개의 신규 사업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KFM 경기방송 신종한입니다.

기호일보
2019년 01월 02일 (수)
오피니언 18면

인천특별시대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시행하며

특별기고



한길자
인천시 시민안전본부장

현대사회는 산업화, 도시화 및 과학기술 발달 등으로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유형의 재난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 인천에서도 2017년 7월 집중호우, 2018년 8월 남동공단 세일전자 화재 등 크고 작은 재난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시민의 기본권에 속하는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지자체의 의무로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또한, 우리 시처럼 도시 특성상 산업단지와 공항, 항만 등이 위치해 있는 생활공간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해 2019년 1월 1일부터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추진하게 됐다.

보험은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타격이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수의 경제 주체가 협동해 합리적인 금액을 조달·지급하는 제도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위험 관리 방법이다.

시민안전보험이란 우리 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도 부담하는 단체보험적 성격의 제도다.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로부터 입은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버스·택시·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 이용 중에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를 당해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에 보험사를 통해 최대 1천만 원을 지급한다.

아울러 자연재해(폭염질환 포함)를 입어 사망한 경우와 스쿨존 교통사고를 당한 만 12세 이하 어린이에게도 보험사를 통해 최대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보험대상은 300만 인천시민 모두이며, 주민등록상 인구와 인천에 체류지를 등록한 외국인까지 포함된다.

시민이면 자동으로 가입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청약서 작성 등 가입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

비용도 시청에서 일괄 납부하므로 시민 부담은 전혀 없고, 피해를 입은 시민이나 유가족이 보험사에 청구해서 보험료를 받을 수 있다.

연령, 성별, 직업 구분 없이 365일 시민 누구나 보장되고 개인보험과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

시민들이 보험 기간 중에 인천으로 이사와도 해당이 되며, 보상 요건에 맞게 연령이 도래해도 해당이 된다.

또한, 서울을 비롯해 타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장이 돼 시민 여러분의 호응이 높을 것으로 생각한다.

현대사회에서 재난·사고는 누구도 피할 수 없이 이에 대한 극복은 지역사회와 국가가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이다.

이를 대비하기 위한 첫걸음인 시민안전보험 제도는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획기적인 제도로 안전에 취약한 여성, 아동, 노인을 비롯해 인천시민 모두의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으로 기대한다.

이 밖에 우리 시에서는 2019년에 인천형 빅데이터 활용 추진, 재난안전상황실 고도화,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사업 등을 추진해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살고 싶은 인천을 만들 것이다.

우리 시는 사람 중심의 사고와 자세로 안전을 대비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도하게 됐고, 전국의 모범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그 시작은 바로 인천시민 안전보험이다.

시작이란 그 자체로 특별한 일이다. 2019년 기해년,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새해가 열리고 있다.

새해 새 아침에 300만 인천시민들과 좋은 소식을 함께 하게 돼 기쁘다.

인천특별시대 안전복지 실현, 바로 시민안전보험이다.

방송보도녹취내용 1월 3일 [지방]

[KFM경기방송] 인천시, 전국 최초 '시민안전보험' 본격 시행...최대 1천만 원 지급 (1/2)

[앵커] 인천시가 광역시 중에선 처음으로 인천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시민안전보험을 본격적으로 시행했습니다. 인천시는 오늘 DB손해보험 컨소시업과 시민안전보험 계약을 체결해 300만 인천시민 모두가 보험 혜택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종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갑작스런 사고나 자연재해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재난 사고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는 예고가 없는 만큼 대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회적 취약계층은 더욱 대비하기가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인천시는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시민을 보호하는 제도적 방안 마련에 집중해왔습니다. 그 결과, 갑작스런 사고에 시민을 보호하도록 시민안전보험을 만들어 올 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300만 인천시민 모두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인천시가 직접 DB손해보험 컨소시엄과 시민안전보험 계약을 체결해 각종 피해를 본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대상은 자연재해부터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등의 피해, 강도 상해와 휴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등이고 최대 천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 당일 기준으로 인천시 주민등록 거주자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겁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입니다. (인터뷰) "재난이나 사고를 당할 경우, 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시민분들이 종종있습니다. 특히 생활이 어려운 분들일 수 록 그런 상황을 접하게되는데...국가나 시정부가 나서서 보완을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인천시는 보험 계약을 1년 단위로 갱신하며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지속적 운영할 방침입니다. KFM 경기방송 신종한입니다.

[경인방송ifm] 인천시, '시민안전보험' 통해 전 시민 재해, 사고 피해 보장…보험금 최대 1천 만원 (1/2)

(앵커) 올해부터 인천시민이라면 누구든 자연재해나 사고 피해를 입을 경우 최대 1천만 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광역시 최초로 시행되는 '시민안전보험' 제도는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사후 신청을 통해 보험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한웅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시민안전보험'은 인천시가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재난과 사고로 후유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인천시는 오늘(2일) DB손해보험을 포함한 5개 민간 보험사 컨소시엄과 협약을 맺고 300만 명에 달하는 시민을 대신에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인천시가 올 한해 부담한 보험금은 4억2천여만원입니다. 계속>>>

방송보도녹취내용 1월 3일 [지방]

[인터뷰 - 박남춘 인천시장] "재난이나 사고를 당할 경우 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이 있다. 특히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그런 상황을 많이 접한다. 이런 부분을 국가나 시가 나서서 보완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보장 항목은 일사병과 열사병을 포함한 자연재해와 폭발·화재·붕괴 등으로 인한 상해 사망과 후유장애 등 8가지로 정도에 따라 최대 1천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또 항공기와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발생한 사고와 강도로 인한 상해 사망과 후유장애도 항목에 포함됩니다. 만 12세 이하 어린이의 경우 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를 당할 경우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장소나 소득에 상관없이 인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은 누구나 보장이 가능하고,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다만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직접 보험사에 청구를 해야합니다. 때문에 시는 보험금 수령기간을 사고 발생 후 최대 3년으로 하고 시민 홍보도 늘려 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할 방침입니다. 경인방송 한웅희입니다.

[남인천방송] 인천시, '시민안전보험' 본격 시행 (1/2)

앵커) 인천시가 올해부터 광역시 최초로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시행합니다. 시민안전보험은 300만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보험에 들어 각종 재난과 사고 등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구자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인천시가 시민안전보험 시행에 따라 각계각층의 시민대표들에게 가입증서를 전달했습니다.

<CG. 인천시 시민안전보험 시행… 인천시민 누구나 무상 가입>

인천시 시민안전보험은 연령과 성별, 직업, 병력에 구분 없이 인천시민이면 누구나 무상 가입됩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와 화재, 대중교통, 강도 등으로 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등 8개 항목에 최대 1천만 원을 보장합니다. 관련법에 따라 15세 미만의 사망보험 계약은 무효이기 때문에 사망관련 보장은 15세 이상입니다. 인천시 시민안전보험은 외국인을 포함한 300만 인천시민 누구나 보장 받을 수 있고 개인보험과 중복지급도 가능합니다.

<CG. 12세 미만 어린이 스쿨 존 교통사고 보장>

특히, 어린이 스쿨 존 교통사고에 대한 부상치료비도 최대 1천만 원까지 보장합니다.

(인터뷰) 김영주 / 주부 시민대표

"-이번에 시민안전보험 가입이 되면서 특히, 만 12세 이하 어린이들에게도 혜택이 주어진다고 하고 개인보험과 중복적으로 지급이 된다고 해서 그 점이 부모로서 마음이 놓여서 참 좋았습니다."

인천에서 각종 재난과 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얻은 시민은 지난 3년 간 한해 평균 700여명입니다. 계속>>>

방송보도녹취내용 1월 3일 [지방]

인천시는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어려운 시민에게 작은 보탬을 주면서 더욱 안전한 인천을 만들어 가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박남춘 / 인천시장

"-한편으로는 이 보험이 많이 안 쓰여야 우리 인천시민들이 행복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하는 것과 동시에 인천시 안전보장회의라든지 필요한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들도 차분히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광역시 최초로 시행하는 인천시 시민안전보험 제도. 120미추홀콜센터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NIB뉴스 구자길입니다.

[t-broad] 인천시민, 안전 보험 가입...'8대 상해 사망' 최대 천만 원 보상 (1/2)

정유현 앵커) 인천시가 올해부터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각종 재난이나 교통사고 등에 있어서 최대 천만 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박일국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인천시가 시민 안전보험을 올해부터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보험사로 선정된 DB화재보험 컨소시엄과 협약을 체결하고 인천시민이 8대 사건 사고를 당했을 경우, 최대 천만 원까지 보상할 예정입니다.

- 박남춘 인천시장

"생활이 어려운 분들일수록 그런 상황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그거야말로 국가나 지방정부가 좀 나서서 보완을 해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화재 보험 대상은 크게 5가지입니다. 우선 각종 사건 사고로 사망하거나 장애가 생긴 경우로 화재나 폭발, 건축물 붕괴나 산사태 같은 재난형 사건 사고와 강도 사건도 포함됐습니다. 이밖에 일사명이나 열사명을 포함해 태풍이나 홍수로 인한 사망의 경우 최대 천만 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 12세 이하 어린이의 경우,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치료비를 최대 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김영주 / 학부모

"(스쿨존에서) 다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치료비를 지원해주면 아무래도 마음이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든든하지 않나 싶습니다."

인천시는 보험료 등으로 연간 6억5천만 원을 투입하고 시행 과정에 보험 내용을 보강해갈 예정입니다. 시민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장애나 부상 정도에 따라 최소 30만 원, 최대 천만 원이고 다른 보험과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보험금 청구는 전화 120 미추홀 콜센터로 접수하면 됩니다. 시민 안전 보험은 광역 지방정부로는 인천이 전국에서 첫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박일국 입니다.

인천일보

2019년 01월 03일 (목)
종합 03면

시민 안전보험 가입증서 전달

인천시가 올해부터 인천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제도를 운영한다.

2일 인천시청 시장실에서 박남춘 시장과 DB손해보험 컨소시엄의 정종표 DB손해보험 부사장은 시민안전보험 협약식을 가졌다. 이와 함께 각계각층에서 시민 대표로 선발된 20명과 함께 가입증서 전달식도 열었다.

시가 1일부터 시행한 시민안전보험 제도는 각종 자연재해·재난·사고·강도피해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전국 시·도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시민 맞춤형 안전보장 시스템으로 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이다.

앞으로 시는 각종 재난사고로 보험료 지급대상임에도 보험가입 사항을 모를 수 있는 시민들을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알리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오프라인 홍보와 120미추홀콜센터 상담사 교육은 물론 시청 누리집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을 통해서도 안내와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박남춘 시장은 "기해년 새해 행사에 참석한 민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한다"며 "시민안전보험을 시작으로 살고 싶은 도시, 안전한 도시 인천을 만드는데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김예린 기자 yerinwriter@incheonilbo.com

중부일보

2019년 01월 03일 (목)
종합 01A면

인천시, 광역단체 첫 시민안전보험 가입

재해·사고 등 피해땐 보험금 지급
각계각층 시민대표에 증서 전달

인천시는 올해부터 시행하는 인천시민안전보험 제도와 관련해 보험사와 협약식을 열고, 시민대표에 가입증서를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박남춘 인천시장, 이용범 인천시의회 의장, 이병래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 정종표 DB손해보험 부사장을 비롯해 어린이, 주부, 노인, 외국인, 노동자, 소방관, 안전관련 사회시민단체 등 각계각층 시민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인천시민안전보험은 민선 7기 인천시장 공약사항으로 이날 박 시장은 "기해년 새해 행사에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한다"며 "시민안전보험을 시작으로 살고 싶은 도시, 안전한 도시 인천을 만드는 데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시민안전보험은 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자연재해, 재난, 사고, 강도피해로 후유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전국 시·도 가운데 최초로 시행하는 시민 맞춤형 안전보장 시스템이다.

시는 오프라인 홍보는 물론, 120미추홀콜센터 상담사 교육 및 시청홈페이지, SNS 등의 홍보를 통해 온라인 안내 및 홍보 방안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민교기자

시민일보

2019년 01월 03일 (목)
종합 01면

인천시, 전국 최초 시민안전보험 가입

최대 1000만원 보상

인천시는 2일 시청 시장실에서 올해부터 시행한 인천시민안전보험 제도와 관련해 인천시-보험사간 협약식 및 시민대표 가입증서 전달식을 개최했다.

시는 4억2200만원 예산으로 DB손해보험 컨소시엄과 시민안전보험계약을 체결, 시민 302만명이 올해 1년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2일 밝혔다.

보상 대상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사망 또는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등이며,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시민안전보험 제도는 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자연재해, 재난, 사고, 강도피해로 후유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전국 시·도 가운데 최초로 시행하는 시민 맞춤형 안전보장 시스템이다.

이날 행사에는 박남춘 시장, 이용범 시의회 의장, 이병래 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 선정보험사인 DB손해보험 컨소시엄 DB손해보험 정종표 부사장을 비롯해 어린이, 주부, 노인, 외국인, 노동자, 소방관, 안전관련 사회시민단체 등 각계각층 시민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인천=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경인일보

2019년 01월 03일 (목)
종합 04면

인천시, 전국 첫 '시민안전보험제도' 시행

市·DB손해보험 컨소시엄 협약

재난피해 등 최대 1천만원 지급

인천시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2019년 1월 1일부로 시작했다.

인천시는 2일 시청에서 박남춘 시장과 시민 대표 20여 명, 보험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안전보험 가입증서 전달식을 개최했다. 인천시는 또 보험사로 선정된 DB손해보험 컨소시엄과 협약을 맺었다.

박남춘 시장은 "시민안전보험을 시작으로 살고 싶은 도시, 안전한 도시 인천을 만드는 데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시민안전보험 제도는 각종 자연재해와 재난, 사고, 범죄피해로 후유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최대 1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인천시가 피보험자인 시민들 대신 보험사와 직접 계약을 맺고 보험금을 낸다. 사고 당일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이 보험 적용 대상이다. 등록 외국인도 포함된다.

전입자는 자동 가입, 전출자는 자동 해지되는 방식이다. 나이와 성별, 직업, 과거 병력 등 구분 없이 모두 보험이 적용된다. 다만, 15세 미만의 경우 사망 사고에 대한 보상은 받지 못한다.

보험금은 가입증서에 명시된 사고로 부상을 입은 피보험자(시민) 또는 사망자의 법정상속인이 관련 증빙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수령 할 수 있다.

인천시는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시청 전화 통화연결음, 자동차세 고지서,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보험 약관과 보험금 청구서 양식은 인천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경기일보

2019년 01월 03일 (목)
종합 03A면

302만 시민 모두 '안전보험' 가입

인천시 광역지자체 중 최초

재난 등 최대 1천만원 보상

인천시가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2일 시에 따르면 1일부터 시행한 인천시민안전보험 제도와 관련, 시·보험사간 협약식 및 시민대표 가입증서 전달식을 진행했다. 시는 4억2천200만원 예산으로 DB손해보험 컨소시엄과 시민안전보험계약을 체결, 인천시민 약 302만명 모두가 2019년 1년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민안전보험 제도는 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하고, 보험사가 각종 자연재해·재난·사고·범죄 피해를 본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보상 대상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사망 및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등이며 최대 1천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사고 당일 기준으로 인천에 주민등록이 돼 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 사유가 발생하면 피보험자인 시민 또는 법정상속인이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시는 보험 계약을 1년 단위로 갱신하며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지속 운영할 방침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기해년 새해 시민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며 시민안전보험을 시작으로 살고 싶은 도시, 안전한 도시 인천을 만드는데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기호일보

2019년 01월 03일 (목)
종합 03면

인천시민 안전보험 시작

자연재해·사고피해 등 보상

시민대표에 가입증서 전달

인천시는 새해부터 시행하는 인천시민 안전보험 시민대표 가입증서 전달식을 열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박남춘 인천시장과 이용범 인천시의회 의장, 이병래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 선정보험사인 DB손해보험 컨소시엄 DB손해보험 정종표 부사장을 비롯해 어린이, 주부, 노인, 외국인, 노동자, 소방관, 안전 관련 사회시민단체 등 각계 각층 시민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인천시민안전보험은 민선 7기 공약사항이다. 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자연재해, 재난, 사고, 강도피해로 후유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인천시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시행하는 시민 맞춤형 안전보장 시스템을 도입했다.

박 시장은 "기해년 새해 행사에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한다"며 "시민안전보험을 시작으로 살고 싶은 도시, 안전한 도시 인천을 만드는 데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전국매일

2019년 01월 03일 (목)
행정 12면

300만 인천시민, 안전보험 혜택 받는다

전국 시·도 최초 시민맞춤형
시민안전보험 제도 본격 시행
재난·강도 피해 등에 보험금

인천시는 1일부터 시행하는 인천시민안전보험 제도와 관련, 인천시 및 보험사간 협약식 및 시민대표 가입증서 전달식을 2일 시장실에서 열었다.

행사에는 박남춘 시장, 이용범 시의회 의장, 이병러 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 선정보험사인 DB손해보험 컨소시엄 DB손해보험 정종표 부사장을 비롯, 어린이, 주부, 노인, 외국인, 노동자, 소방관, 안전관련 사회시민단체 등 각계각층 시민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인천시민안전보험은 민선 7기 인천시장 공약사항으로 박남춘 시장은 전달식에서 "거해년 새해 행사에 참석해 준 시민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면서, 시민안전보험을 시작으로 살고 싶은 도시, 안전한 도시 인천을 만드는 데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시가 추진하는 시민안전보험 제도란, 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자연재해, 재난, 사고, 강도피해로 후유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전국 시·도 가운데, 최초로 시행하는 시민 맞춤형 안전보장 시스템이다.

조동희 시 안전정책과장은 "대시민 홍보계획을 수립해 각종 재난사고로 보험료 지급대상임에도 보험가입 사항을 모를 수 있는 시민들을 위해 오프라인 홍보는 물론, 120미추홀콜센터 상담사 교육 및 시청홈페이지, SNS 등의 홍보를 통해 온라인 안내 및 홍보 방안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한국일보

2019년 01월 03일 (목)
수도권 14면

인천시민 재해 피해 때 최대 1000만원 보상

광역단체 첫 시민안전보험 시행

인천시민은 앞으로 재해 피해를 입었을 때 최대 1,000만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인천시는 2일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자치단체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자연재해, 재난, 사고, 강도 피해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시는 4억2,200만원을 들여 DB손해보험 컨소시엄과 시민안전보험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은 매년 갱신될 예정이다. 현재 경기 용인시, 인천 강화군 등 기초자치단체 30곳이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시행 중이지만 광역자치단체(17개 시·도) 중에는 인천이 처음이다.

보상 대상은 일사병, 열사병을 포함한 자연재해 사망(15세 이상), 폭발·화재·붕괴 상해로 인한 사망(15세 이상)이나 후유장해(전 연령),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15세 이상) 또는 후유장해(전 연령), 강도 상해로 인한 사망(15세 이상)이나 후유장해(전 연령),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2세 이하)이다.

사고 당일 기준으로 인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이라면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피보험자나 법정상속인이 보험금 청구사유가 발생하면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이환직 기자

세계일보
2019년 01월 03일 (목)
전국 10면

인천 전 시민 안전보험 가입 사망 땐 최대 1000만원 보상

인천=이돈성 기자 sports@segye.com

인천시가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인천시는 4억2200만원을 들여 DB손해보험 컨소시엄과 시민안전보험계약을 체결해 인천시민 302만명 모두가 올해 1년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2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해 비용을 부담하고, 보험사가 각종 자연재해·재난·사고·범죄 피해를 본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보상 대상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사망 또는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등이며,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이로써 사고 당일 기준으로 인천시 주민등록 거주자로서 보상 대상 재해를 당할 경우 누구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험 청구 사유가 발생하면 피보험자인 시민 또는 법정상속인이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인천시는 보험 계약을 1년 단위로 갱신하며,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사고가 끊이지 않는 점을 고려해 시민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시민안전보험 가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東亞日報
2019년 01월 04일 (금)
인천/경기 18B면

인천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사고땐 최대 1000만원 보상

인천시는 전국 17개 광역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각종 사고 피해를 입은 시민을 위한 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3일 밝혔다. 보험료는 4억2200만 원을 내고 DB손해보험 컨소시엄과 '시민안전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안전보험을 통해 인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외국인 포함) 302만 명은 올 1년간 폭우나 산사태 등 자연재해나 폭발, 화재, 붕괴 등의 사고로 숨지면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사고나 강력범죄로 인해 다쳤을 경우에는 장해비율에 따라 최대 1000만 원을 받는다. 학교 앞 스쿨존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로 다친 어린이도 치료비를 받을 수 있다.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하면 당사자나 법정상속인이 증빙서류를 첨부해 시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보험계약을 1년마다 갱신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남동공단 세일전자에서 일어난 불로 9명이 숨지고 2017년에도 영흥도 낚시어선 추돌사고로 15명이 숨지는 등 대형 인명사고가 잇따르자 안전보험에 들기로 했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우수사례 요약서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05 남동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분야 : **자치입법 분야**

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출자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목적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육아휴직의 확대를 통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 및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 남성의 육아 참여분위기 확산은 물론,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남성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

현황 및 문제점

연도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920	938	950
남	45	63	78
여	875	875	872

- 남동구 근로자 육아휴직 사용 현황
  -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남성 근로자수가 매년 증가하고는 있으나, 여성에 비하여 여전히 미비한 실정임.

개선내용

- 2018. 11월 :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제정
- 2019. 1월 : 보육정책과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예산 편성(100,000천원)
- 2019. 3월 : 제1회 추가경정예산 증액 편성(300,000천원)

개선성과

- 아빠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 매월 5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최대 300만원)
  - (2019. 8월말 기준) 67명, 97백만원 지원
- 남동구를 시작으로 계양구와 서구가 조례를 제정, 장려금 지원을 실시하는 등 타구에서 제도 벤치마킹[증빙자료 1]
- 가장 현실적인 부분인 경제적 부담 완화로 남성 육아휴직 독려 및 만족도 향상[증빙자료 2]

향후계획

- 지속적인 예산 편성과 적극적인 홍보로 남성 육아휴직 장려
-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출산율이 높아질 수 있는 여건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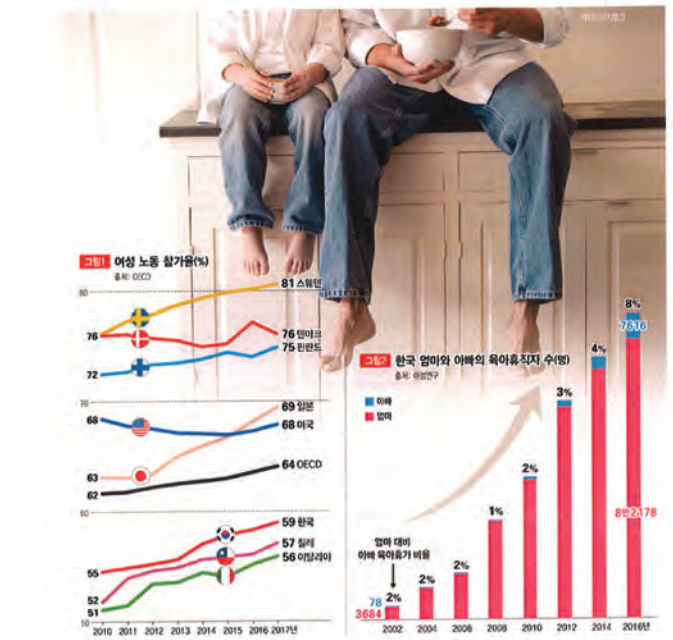
증빙자료 1

전국 전국일반

육아휴직 남성에 월 50만원…인천 남동구 전국 첫 시행

등록 :2018-12-17 15:52 수정 :2018-12-17 16:06

1인당 최대 300만원…내년 100명 혜택 예상
계양구도 예산 심의 중…서울 서초구 조례만



게티이미지뱅크

인천시 남동구가 내년부터 전국 최초로 '육아휴직 남성'을 대상으로 월 50만의 장려금을 지급한다. 앞서 인천 계양구와 서울 서초구가 관련 조례를 제정했으나 아직 예산 편성까진 이어지지 않았다.

남동구는 남성 육아휴직자 장려금 1억원이 포함된 내년도 예산안이 구의회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남동구에 주민등록이 된 9살 미만 자녀가 있는 남성 육아휴직자에게 매달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1인당 최대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신청일을 기준으로 남동구에 1년 이상 거주한 남성이 대상이다.

이번 장려금 예산 편성은 남동구의회 유광희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동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가 의결된 데 따른 것이다. 유 시의원은 남성 육아휴직이 느는 추세고, 이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남동구 관내 남성 육아휴직자는 2015년 45명, 2016년 62명, 2017년 78명으로 해마다 20%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100명을 넘길 것으로 구는 내다봤다. 구 관계자는 "남성 유아휴직 추이를 살펴 모자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2억원을 추가로 확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제도는 인천 계양구와 서울 서초구도 관련 조례를 제정했으나 아직 예산 편성이 확정되지 않았다. 계양구는 내년도 예산안에 남성 육아휴직자 장려금 1억2천만원을 반영해 구의회에서 예산심의가 진행되고 있다. 계양구는 월 70만원씩 최대 3개월간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올해 7월 전국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한 서울 서초구는 '육아휴직을 하기 어려운 남성이 많다'는 등 반대 의견이 많아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다.

한편,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은 2008년 1.2%에 불과했으나 2017년에는 13.4%로 증가했다. 하지만 여전히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86.6%로 남성의 6.5배에 달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증빙자료 2

한국일보

우리 동네 명품 행정

큰맘 먹고 육아휴직 낸 아빠들 "장려금 주니 기운 나요"

0 0

입력 2019.03.18 04:40　　14면 0단

<36>인천 남동 · 계양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육아휴직 중인 회사원 한희수씨가 지난달 26일 인천 남동구 중앙공원에서 쌍둥이 아들들과 함께 산책을 하고 있다. 한희수씨 제공

인천 남동구에 거주하는 회사원 한희수(37)씨는 결혼한지 4년만인 지난해 9월 쌍둥이 아들을 얻었다. 씽둥이는 예정일보다 두 달 먼지 나와 병원 인큐베이티에서 지내다가 지난해 11월 집으로 왔는데, 고된 육아를 휴직한 아내에게 전적으로 맡기기엔 부담이 컸다.

산후도우미 비용으로 한달에 280만원이나 들어갔지만, 평일 오후 6시 이후나 주말엔 도우미 없이 아이들을 돌봐야 했기에 큰 도움이 되진 못했다. 결국 아내에 이어 한씨도 지난해 11월, 회사 내에선 처음으로 육아휴직을 냈다.

그는 "먼저 육아휴직을 한 와이프가 도우미 없이 혼자서 쌍둥이를 돌보는 것도 쉽지 않았다"라며 "어린이집에 보내기에는 애들이 너무 어리고 감기 등 감염에도 취약할 것 같아 내 손으로 키워보자는 생각에 육아휴직을 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아내와 함께 시작한 육아휴직으로 불거진 현실 생활이었다. 기본적인 생활비에 육아 비용까지 추가되면서 어려움은 더해갔다. 고용보험에서 지급된 육아휴직급여는 당초 한씨 부부 임금의 40% 수준에 불과했다.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에게 1년간,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월 150만원), 이후엔 통상임금의 50%(상한액 월 120만원)를 지급한다.

한씨는 육아를 하면서 출산 가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정책 수소문에 나섰고 남동구의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사업을 찾아냈다. 이 사업에 따르면 남동구에선 본인과 자녀 주민등록이 된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장려금을 지원한다.

한씨는 인천고용노동청에서 발급한 육아휴직급여 지급 결정통지서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춰 동행정복지센터를 찾았다.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원 중인 자치단체는 전국에서 인천 남동구가 처음이었는데, 이 중 한씨가 첫 수혜자로 기록됐다. 한씨는 "구에서 지원하는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 금전적으로 많은 도움이 된다"며 "저출산이 심각한데 시나 구에서 육아용품 지원이나 돌봄 서비스 제공을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인천 기초자치단체들이 속속 도입하고 있는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사업은 최근 아빠들의 육아휴직이 늘고 있는 흐름에 기초한 맞춤형 복지정책의 하나다. 맞벌이 부부들에게 현실적인 도움도 되고 있다.

남동구는 지난달 기준 한씨를 비롯해 남성 11명에게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원했다. 이어 계양구도 올해부터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계양구는 한 달에 70만원씩 최대 3개월간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지난달 기준으로 9명이 혜택을 받았다.

남동구와 계양구에 이어 인천 서구도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마련해 이르면 올해 7월부터 월 50만원씩 최대 3개월간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서구를 포함하면 인천에선 10개 구·군 중에 3곳에서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원하게 된다.

계양구 관계자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에 힘써왔는데, 이번에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을 추가하게 됐다"며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출산율이 높아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우수사례 요약서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06 평택시 이웃분쟁·공공갈등 조정 및 관리 조례안

대상

분야 : **자치입법 분야**

기관명 경기도 평택시의회

제출자 경기도 평택시의회

목적

- 평택시의 경우 도농복합 도시로, 지역간 불균형한 개발에 따른 빠른 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은 지속가능한 도시로의 성장에 많은 걸림돌이 되고 있어,
- 평택시의 이웃분쟁 및 공공갈등으로 인한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동체 훼손을 막고 과도한 사회적 비용을 줄임으로써 신뢰받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하며,
- 분쟁 당사자간 화해를 통한 협의의 장을 마련하여 갈등과 분쟁을 줄여 지역사회를 화합하고 공동체 발전을 지향하고자 함.

현황 및 문제점

■ 갈등이 일상화 된 한국사회 현실

『갈등이 범죄로 이어지는 더 큰 사회적 문제 대두』

- OECD회원국 34개국 중 멕시코, 터키에 이어 세 번째로 갈등 정도가 심함 _ 한국경제 연구원
- 일본에 비해 소송 제기율 10배 _ 삼성경제연구원
- 1인당 연간 갈등비용 900만원 _ 삼성경제연구원
- 사회적 갈등비용 246조원 _ 삼성경제연구원

⇒ 국내 총생산(GDP) 의 27% 갈등관리 비용 지출

- 이웃분쟁으로 인한 갈등은 일상화되어 있는데, 이를 적절하게 풀어 낼 시민주체적인 역량과 제도적 장치가 미흡함.
- 이웃분쟁을 소송 등 법적절차로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시간적·금전적 비용이 많이 소요되며, 해결되지 않은 경우 이웃 간 갈등이 잔재함.

※ 이웃분쟁 예 : 아파트 층간소음, 반려동물 사육, 주차시비 문제 등

→ 주택가에서 상시 발생되고 있는 주차문제는 대화가 아닌 과태료부과나 견인요청을 통해 해소하고자 하고 있음

추진방향

■ 갈등과 분쟁을 줄여 지역사회 통합과 공동체 발전 도모

- 분쟁 당사자간 화해를 통한 협의의 장 마련
  - 분쟁 조정의 허브역할을 하는 조정기구 설립
  - 주민자율 화해 조정인 풀(POOL)운영체인 마을 소통방 운영
  - 민·관·학 협업주체를 통한 거버넌스 실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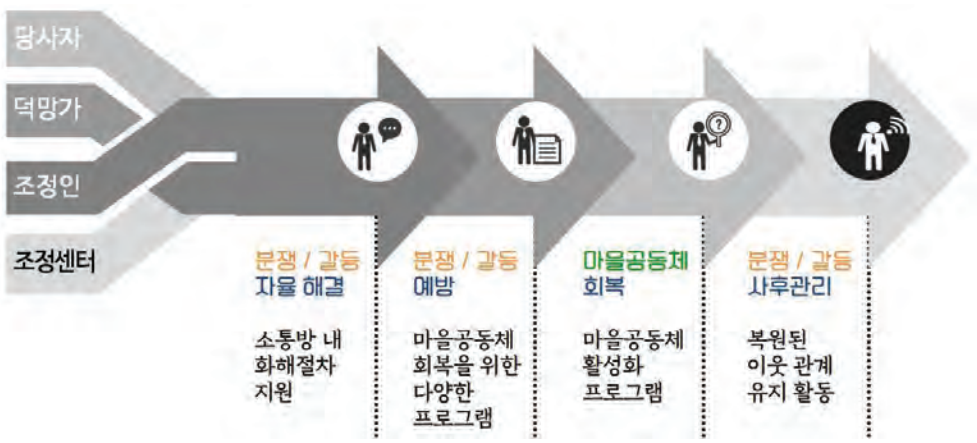
■ 협력을 통한 갈등관리 모델 운영

- 예방 : 소송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발생과 관계 단절 예방
- 회복 : 생활 속 분쟁발생 가능성 사전예방으로 마을 공동체 회복
- 참여 :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공동체가 살아있는 살기좋은 평택 구현



● 이웃분쟁 조정센터(소통방) 운영(안)

- 크고 작은 분쟁을 주민 스스로 해결하고 마을공동체를 회복하는 공간
- 마을 덕망가, 주민자율화해조정인 등이 대화와 상담을 통해 갈등 해결
- 작은도서관 등과 같은 소통 공간을 거점으로 운영
- 단절된 관계회복을 통해 공동체 내 갈등 사전 예방



추진내용

■ 한국정서에 맞는 대처 방안 마련 필요 인식

- 주민자율 갈등 예방 및 조정
- 마을공동체 리더 양성
- 마을공동체 및 이웃관계 회복적 접근
- 갈등예방 및 해결방안 제도화 추진

| 이웃분쟁 주민자율화해조정인 양성교육 실시 |

기 수	구 분	일 정	참여자(명)
계	총 4회		130
1기	기본과정	2018. 7. 3. ~ 7. 24.	60
	심화과정	2018. 8. 14. ~ 10. 2.	30
2기	기본과정	2018. 10. 16. ~ 11. 8.	20
	심화과정	2018. 11. 15. ~ 12. 13.	20

- 이웃분쟁 주민자율화해조정인 양성과정 일명 '도란도란'
- 사업목적 : 주민자율조정 시민네트워크 구성을 마련하고 갈등을 법적해결이 아닌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역량있는 주민리더 발굴·양성
- 주요내용 : 심리상담기법, 조정사례 및 법률상식, 조정 대화 및 설득법 등 전문교육 실시
- 사업성과 : 공동체 회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웃분쟁조정센터의 필요성 확인

| 2019년 마을 공동체 활성화 교육 |

기수	일정	참여자(명)
총 3회		42
1차	2019. 7. 30. ~ 8. 27.	17
2차	2019. 9. 10. ~ 10. 8.	25

- 마을공동체 교육을 통한 마을공동체 의식 함양 및 마을활동가들의 역량강화
- 지속적인 주민 공동체 네트워크의 조성의 장을 마련하여 상호 연대 및 정보교류

| 2019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교육 |

기수	일정	참여자(명)
총 3회		78
1차	2019. 7. 2. ~ 7. 25.	25
2차	2019. 9. 17. ~ 10. 15.	23
3차	2019. 11. 5. ~ 11. 28.	30

- 이웃 간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공동주택 공동체 활동가 양성
- 긍정적인 갈등문화 분위기를 만들어 공동주택 갈등해결에 기여

| 정책탐방 실시 |

일 시	장 소	참석자	내 용
2018.10.10.(금)	광주광역시 마을분쟁해결센터	이병배 부의장 등 30명	광주 마을분쟁해결센터 운영 현황 및 사례

- 광주 마을분쟁해결센터, 양림동 동개비 소통방, 콩깍지 소통방 등 타 시 운영 현황 및 사례 연구

| 이웃분쟁·공공갈등 조정 및 관리 조례 제정 관련 간담회 개최 |

구 분	일 시	참석자	내 용
1차 간담회	2018. 12. 26.(수)	이병배 부의장 등 25명	이웃분쟁 조례 제정 논의
2차 간담회	2019. 3. 28.(목)		

- 전국 최초로 이웃간 분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함으로써 누구나 공감하고 실행력을 갖춘 조례가 제정되도록 논의

| 평택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포럼 개최 |

일시	내용	장소
2019년 5월 9일(목) 14:00	공동체 활성화 공감을 위한 포럼 개최	평택 남부문예회관

- 공동체 회복을 위한 갈등관리 전문가 강연
- 주민 소통을 위한 전문가, 주민 종합토론 실시
-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의 필요성 인식 및 공감대 형성

| 평택시 이웃분쟁조정인 정기 간담회 개최 |

일시	내용	장소
2019년 1월 29일(화) 13:30	주민자율 화해 조정인 워크숍	청소년문화센터
2019년 2월 15일(금) 10:00	이웃분쟁 조례 제정TF팀 회의	평택YMCA
2019년 2월 26일(화) 13:30	이웃분쟁 조례 검토 모임	평택YMCA
2019년 4월 30일(화) 13:30	다문화사회 속 갈등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인문학공동체 여럿
2019년 5월 21일(화) 13:30	오성면 신리 마을활동 사례 공유	인문학공동체 여럿
2019년 6월 17일(월) 09:00	괴산 산막이길 탐방	괴산
2019년 7월 16일(화) 13:30	광주 마을분쟁 및 해결 사례 공유	평택YMCA

● 2019. 6. 28. 「평택시 이웃분쟁·공공갈등 조정 및 관리 조례」 제정

※ 전국 최초로 「평택시 이웃분쟁·공공갈등 조정 및 관리 조례」 제정

- 기존의 관주도형 조례 제정과는 다르게, 조례 제정 전 주민자율화해 조정인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정책탐방을 통해 이웃분쟁과 관련하여 시민사회 역량을 제고하였음.
- 시민, 시민단체, 전문가와 함께 조례에 대한 논의를 거쳐 시민과 함께 만드는 조례 제정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였음.

추진성과

● 이웃 간,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갈등에 대해 대화, 협의, 조정 등 이해와 배려를 바탕으로 주민자율로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음.

● 「평택시 이웃분쟁·공공갈등 조정 및 관리 조례」 제정을 통해 이웃분쟁조정을 단순히 민간영역으로 보는 관점을 탈피하고 평택시의 의무로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음.

● 마을(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교육 실시

- 주민들에게 공동체 활성화와 갈등관리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여 주민간 화합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동력을 마련
- 교육을 통한 지속적인 공동체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상호 연대 및 정보교류 마련

● 주민분쟁조정전문가 양성

- 주민 스스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역량을 기로가자 심리상담 기법과 법률상식을 습득한 주민분쟁 조정인을 양성 함.

■ 관련사진







▶ **이웃분쟁 주민자율화해 조정인 양성교육 실시**
▶ 2018.7.3.~2018.12.13.
▶ 총 4회, 130명 양성





▶ **마을공동체 활성화 교육**
▶ 2019.7.30.~2019.10.8.
▶ 총 2회 42명





▶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교육**
▶ 2019.7.30.~2019.10.8.
▶ 총 2회 42명




▶ **광주마을분쟁해결센터 정책탐방**

▶ 2018.10.10.

▶ 이병배 부의장 등 30명





▶ **이웃분쟁공공갈등 조정 및 관리 조례제정 관련 간담회**

▶ 2018.12.26. / 2019.3.28.

▶ 총 2회





▶ **공동주택 공동체활성화 포럼**

▶ 2019.5.9.

▶ 주민 등 200여 명

■ 비전 및 운영체계

공동체 신뢰 강화 & 따뜻한 공동체 구축

이웃분쟁의 예방과 체계적 관리

이웃분쟁조정센터 운영	주민자율분쟁조정가 양성교육	마을단위 소통방 운영
이웃 간 발생하는 소소하고 다양한 갈등을 예방·조정·관리하여 이웃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	지역사회 내 자율적 분쟁 해결 역량을 강화하여 마을단위 주민자율조정시스템 구축	생활권을 함께하는 주민들 간 소통과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갈등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 네트워크 강화

갈등 단계별 이웃분쟁조정센터 운영 체계(안)

갈등 이전 단계	갈등 시작 단계	갈등 진행 단계	분쟁 확대 단계	분쟁 이후 단계
이웃과 눈인사만 나눌 때	갈등이 시작되었을 때	갈등이 진행되었을 때	분쟁해결이 필요할 때	진정한 이웃되기 원할 때
• 이웃간 인사하기 캠페인 • 소통방 내 갈등예방 프로그램	• 소통방을 이용한 이웃간 소통	• 분쟁당사자와 상담 지원	• 이웃분쟁조정센터 전문 상담 지원	• 마을자치 활동 프로그램 지원

향후계획

- 이웃분쟁조정센터 설치_ 2020. 4월
- 주민자율분쟁조정가 양성과정 운영(6기수)_ 2020. 4월 ~ 12월
- 마을단위 소통방 운영(10개소)_ 2020. 4월 ~ 12월
- 이웃분쟁조정인 간담회_ 2020. 1월 ~ 12월

보도자료



국내 첫 '이웃분쟁 공공갈등 관리 조례' 제정

분쟁·갈등 민간차원 조정자 역할, 사회적 비용 절감
평택시이웃분쟁조정센터, 연간 2억 1600만원 투입

▶ 이웃분쟁 공공갈등 조정 및 관리 조례 제정

▶ 2019.6.19.



이병배 평택시부의장, 주민자율 화해조정인 간담회 개최

2018-12-27 13:52, 배민구 기자

#평택시의회, #이병배, #가등관리, #마을공동체, #화해조정인

"마을공동체 회복 위해 이웃분쟁 소통으로 푼다"

26일 평택시의회 간담회장에서 열린 갈등관리 및 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한 이웃분쟁 주민자율 화해조정인 간담회 참석자들이 이병배 평택시부의장(앞줄 가운데)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 평택시의회)

(경기=NSP통신) 배민구 기자 = 경기 평택시의회(의장 권영화)는 26일 평택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갈등관리 및 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한 이웃분쟁 주민자율 화해조정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웃갈등' 대화의 장 마련한 평택시의회

오원석 | 승인 2018.12.28 | 댓글 0

▲ 평택시의회 이병배 부의장이 이웃분쟁 주민자율 화해조정인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평택시의회

평택시의회가 이웃 간 갈등을 대화로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 주민자율 화해조정인 간담회 개최

▶ 2018.12.27.



평택시의회, 이웃분쟁·공공갈등 조정 및 관리 조례 제정 간담회 개최

기사입력 : 2019년03월29일 16:29 최종수정 : 2019년03월29일 16:29

가+ 가- 프린트 좋아요 0개

[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평택시의회(의장 권영화)는 지난 28일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이웃분쟁·공공갈등 조정 및 관리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29일 의회에 따르면 이병배 평택시의회 부의장 주관으로 열린 이날 간담회는 이웃 분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해 지난해 12월 26일 시의회에서 개최된 '이웃분쟁 주민자율화해조정인 간담회'에 이어 두번째다.



평택시의회 조례 제정 위한 간담회 개최

이병배 부의장 이웃분쟁·공공갈등 조정 및 관리 조례 제정 앞장

입력 2019-03-29 16:38 수정 2019-03-29 16:39

연관검색어 평택 평택시의회

기사 퍼가기 NEWS Link Facebook Tweet! Google + BAND Band Print

평택시의회(의장 권영화)가 지난 28일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이웃분쟁·공공갈등 조정 및 관리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이병배 부의장 주재로 열린 간담회 모습이다.(사진=평택시의회제공)

▶ **이웃분쟁 공공갈등 조정 및 관리 조례 제정 간담회 실시**

▶ 2019.3.29.

우수사례 요약서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07 충청남도해양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장려상

분야 : **자치입법 분야**

기관명 충청남도의회

제출자 충청남도의회

목적

- 해양수산부「해양보호구역의 내실화를 위한 개선방안」에 따라 광역도 차원의 지역해양보호구역 지정·관리 필요
- 해양생태계의 체계적인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道 해양보호구역 지정·관리에 대한 제도적 근거 마련

법적근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시 · 도해양보호구역의 지정 · 관리) ①시 · 도지사는 해양보호구역에 준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해역을 시 · 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현황 및 문제점

- 도내 해양보호구역 현황(4개소) - 現 도지정 해양보호구역 없음.

지 정 명 칭	지정일	면적(㎢)	지자체	지정권자
서천갯벌 습지보호지역	'18.09.03.	68.09	서천군	해양수산부 장관
신두리사구해역 해양생태계보호구역	'02.10.09.	0.64	태안군	
가로림만 해역 해양생물보호구역	'16.07.25.	91.237	서산시 태안군	
보령소황사구해역 해양경관보호구역	'18.12.01.	5.23	보령시	

- 해양생태계법 제36조에 따라 (해수부장관 지정)해양보호구역에 준(準)하여 보전할 필요가 인정되는 지역 또는 해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여 도민들의 여유있고 쾌적한 생활을 보장

● 특히, 어촌계 단위 또는 도서(島嶼) 단위 등 소규모 해역을 도지사가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는 체계 마련 필요

개선내용

● 「충청남도해양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19.04.10.공포).
- 전국 최초로 지자체 특성에 맞는 해양보호구역 지정, 관리 할 수 있는 근거마련

개선성과

● 해양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여 수산자원 보호와 생태관광 자원 발굴 등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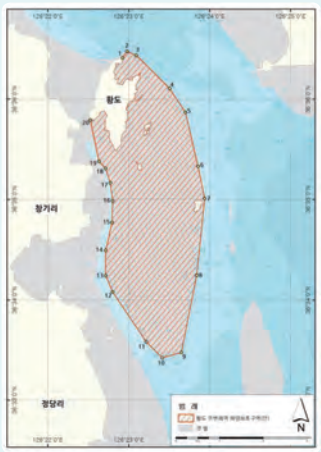
● 해양수산부 「해양보호구역의 내실화를 위한 개선방안」에 따라 시·도지사의 해양보호구역 지정 활성화 추진

▶ 조례 제정 후 "태안 황도주변해역 "道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 추진 중

태안 황도 주변해역 道 해양보호구역 지정(안)

○ **명칭** : 황도해역 해양생태보호구역
○ **지정요건 검토**
- 해양생태계법 제25조 제1항 3호 "해양의 기초생산력이 높거나 해양보호생물의 서식지·산란지 등으로서 보전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해역" 요건 충족

○ **면적** : 약 7.28㎢
○ **위치** : 태안군 안면읍 황도 주변해역
○ **목적**
- 검은머리물떼새, 알락꼬리마도요, 청다리도요사촌 등 법정보호종이 서식하고 염생식물 군락지가 넓게 분포하는 황도갯벌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향후계획

● 마을·갯벌단위 소규모 해양보호구역 대상지 선정 및 지정 추진

● 특히, 어촌계 단위 또는 도서(島嶼) 단위 등 소규모 해역을 도지사가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추진

조례전문 충청남도 해양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2019-04-10 조례 제 448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라 해양생물 다양성이 풍부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하거나 해양경관 등 해양자산이 우수하여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 또는 해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 있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충청남도해양보호구역"(이하 "도해양보호구역"이라 한다)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서 해양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하거나 해양경관 등 해양자산이 우수하여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큰 구역으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제3조(도해양보호구역의 지정 등) ①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해양생태계 및 해양경관 등을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구역을 도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다.

1. 해양의 자연생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해양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보전 및 학술적 연구가치가 있는 해역
2. 해양의 지형·지질·생태가 특이하여 학술적 연구 또는 보전이 필요한 지역
3. 해양의 기초생산력이 높거나 보호대상해양생물의 서식지·산란지 등으로서 보전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해역
4. 다양한 해양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거나 표본에 해당하는 해역
5. 산호초·해초 등의 해저경관 및 해양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해역
6. 해양생태계의 탄소흡수원 기능을 유지하거나 증진하기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
7. 그 밖에 해양생태계의 효과적인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해역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역
   가.「해양환경관리법」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환경보전해역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다.「자연공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해양에 해당하는 곳에 한한다)
   라.「문화재보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로서 같은 조 제1항 제3호(나목 및 다목에한한다)에 따른 기념물로 지정된 구역 및 그 보호구역(해양에 해당하는 곳에 한한다)
   마.「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해양에 해당하는 곳에 한한다)

바.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절대·준보전무인도서 인접해역
사.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특정도서 인접해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도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태계의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부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관리할 수 있다.

1. 해양생물보호구역 : 보호대상해양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구역
2. 해양생태계보호구역 : 해양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해양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구역 또는 취약한 생태계로서 훼손되는 경우 복원하기 어려운 구역
3. 해양경관보호구역:바닷가또는바다속의지형·지질및생물상(生物相)등이해양생태계와 잘 어우러져 해양경관적 가치가 탁월한 구역

③ 도지사는 도해양보호구역이 군사목적상 필요하거나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해양보호구역으로서의 가치를 상실 또는 보전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변경·해제할 수 있다.

제4조(도해양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등) ①도지사는 도해양보호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지정계획서에 도해양보호구역의 범위 및 면적을 표시한 축적 7만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해도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인 및 관할 시장·군수의 의견을 수렴한 후 지방해양수산청장(도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 또는 해역을 관할하는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충청남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운영 조례」제2조에 따른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지정 또는 변경의 사유 및 목적
2. 주요 해양생태계의 현황 및 특징
3. 지정대상구역 토지 및 인접한 토지의 용도지역 및 이용현황
4. 해양보호구역의 구분 및 관리방안
5. 어업권·광업권 현황
6. 법령상 규제지역 현황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청취 또는 협의의 요청을 받은 관할 시장·군수, 지방해양수산청장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도해양보호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1. 도해양보호구역의 명칭 및 근거
2. 지정·변경 또는 해제되는 도해양보호구역의 위치·면적 및 범위
3.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사유 및 목적
4.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연월일
5. 관리기관

6. 제1항에 따른 지형도(해도를 포함한다)

제5조(도해양보호구역의 조사 및 관찰) ①도지사는 도해양보호구역을 지정·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해양생태계의 현황, 특성 및 지형 등 그 지정·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고 측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관할 시장·군수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도해양보호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시장·군수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지정한 도해양보호구역에 관하여 해양생태계의 현황과 해양생물의 서식실태 등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야 한다.

제6조(도해양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누구든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도해양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건축물 그 밖에 공작물의 신축·증축행위(해양보호구역 지정 당시의 건축연면적의 2배 이상 증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2. 토지의 형질변경행위
3. 공유수면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해수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4. 공유수면에서의 바다모래·규사 및 토석의 채취행위
5. 제6조에 따른 도해양보호구역 표지물을 오손(汚損) 또는 훼손하거나 이전하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사목적상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행위로서 도해양보호구역 및 도해양보호구역에 오염 등의 영향을 직접 미칠 수 있는 인접지역 주민의 고유한 생활양식의 유지 또는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기존에 실시하던 영농·영어(營漁)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
4. 학술적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또는 관련 시설로서 도지사가 당해 도해양보호구역의 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경우
5.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6. 「어촌·어항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어촌종합개발사업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어항시설개발사업
7. 도지사가 도해양보호구역을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가. 제7조에 따른 도해양보호구역의 관리계획에 포함된 시설 등의 설치

나. 도해양보호구역의 해양생태계에 관한 정기적인 현황조사·학술연구 및 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관측시설 등의 설치

다. 도해양보호구역을 보호하고 외부인의 무단출입으로 인한 해양생태계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의 설치

8. 도지사와 협의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개발행위 등을 하거나 인·허가 등을 하는 경우

제7조(해양보호구역 관리계획) ①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지정한 도해양보호구역에 관하여 관할 시장·군수의 의견을 수렴한 후 지방해양수산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사항이 포함된 도해양보호구역별로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해양생태계 및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관리
2. 도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접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이해관계인의 이익보호
3.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 수립을 위하여 도해양보호구역 또는 그 인접지역의 이용실태, 오염원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8조(도해양보호구역의 인식증진 등) ①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지정한 도해양보호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해양보호구역의 교육·홍보
2. 도해양보호구역의 정보공유 및 국내외 교류
3. 그 밖에 해양보호구역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지정된 도해양보호구역의 관리를 위하여 도해양보호구역에 안내판과 표주(標柱)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안내판과 표주의 규격·내용·설치간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4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을 따를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안내판과 표주가 훼손되거나 설치한 위치에서 이탈되지 아니하도록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도해양보호구역 주민의 지원 등) ①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지정한 도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접지역에 관하여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해양폐기물 수거사업
2. 해양오염저감을 위한 시설사업
3. 마을진입로·공중화장실 등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비용 지원
4. 치어(稚魚)의 방류 및 종패(種貝)의 살포 등 해양생물자원의 확산을 통한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의 지원
5.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개선, 복리증진 및 주민소득 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지원

②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도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당해 도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접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용시설의 지원, 편의시설의 설치 및 주민소득 증대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도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접지역의 일부를 해양생태계의 탐방 또는 교육·휴양 등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도해양보호구역의 우선이용 등) ①시장·군수는 지방해양수산청장,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도지사와 협의하여 관할구역에 있는 도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접지역 주민이 해당 도해양보호구역을 우선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해양보호구역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은 그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도해양보호구역의 토지 등의 매수) ①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지정한 도해양보호구역의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등을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토지 등을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가액에 따른다.

제12조(도해양보호구역에서의 해양생태계 보전·이용시설의 설치·운영) ①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지정한 도해양보호구역에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와 해양의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의 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해양생태계를 보전·관리하거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2.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안내시설, 생태관찰을 위한 나무다리 등 해양생태계를 이용하기 위한 시설
3. 해양생태계관찰시설, 해양생태계보전관, 해양생태계학습원 등 해양생태계를 보전·이용하기 위한 교육·홍보시설 또는 관리시설
4. 도해양보호구역 해양생태계의 복원을 위한 시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해양생태계보전·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유지·관리비용 등을 고려하여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4조(업무의 위탁) ①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35조의2(업무의 위탁)에 따라 해양환경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도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조사·측량
2. 제5조제3항에 따른 도해양보호구역 지정 이후 해양생태계의 관찰
3. 제7조제3항에 따른 도해양보호구역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및 지역주민·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

4. 제8조에 따른 도해양보호구역의 인식증진 및 표지물의 설치·관리
5. 제9조에 따른 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접지역 주민의 지원
6. 제12조에 따른 도해양보호구역에서의 해양생태계 보전·이용시설의 설치·운영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했을 때에는 사무위탁사실을 홈페이지와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5조(과태료) 제6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해양보호구역의 표지물을 오손(汚損) 또는 훼손하거나 이전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1백 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①「충청남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 도해양보호구역의 지정·변경·폐지 등에 관한 사항

지방의회 우수사례집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Part 2

지역 현안 해결

1. **종로구의회 미세먼지대책 특별위원회 운영** |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
2. **개별공시지가 문제제기로 10억 세수 증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
3. **직장운동부(북구청 검도부) 운영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운영** |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
4. **영광군 천일염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 제·개정** | 전라남도 영광군의회 |

우수사례 요약서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01 종로구의회 미세먼지대책 특별위원회 운영



분야 : **지역 현안 해결**

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제출자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미세먼지대책 특별위원회

목적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미세먼지법」)이 시행되고 미세먼지에 대응하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법 제3조) 하는 책무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된 바, 종로구의회가 '특별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지역사회와 주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대한 다각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미세먼지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능동적이고 선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현황 및 문제점

● **지역적 특성에 맞는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대책 마련 곤란**

- 면적 23.91㎢에 이르는 종로구 내에 대기측정망(미세먼지 측정시설)은 단 한 곳(종로56가동)으로 교통량이 많은 종로 간선도로 주변과 북한산이나 낙산 등 산림·공원이 위치한 지역, 또는 주택가나 상업지역의 미세먼지량과 발생 원인이 다를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 측정 장비 및 시설로는 지역 전체의 발생요인 현황을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종로구 각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됨

●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사회 구성원의 적극적 실천 부족**

- 일상생활의 편리성이나 경제성 때문에 에너지 소모량, 탄소 배출량이 많은 냉·난방시설, 자동차, 가전제품 등에 대해 사용량을 줄이거나 생활양식을 쉽게 바꾸지 못하는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실천 의지가 부족함

- 이에, 서울특별시 지역 전체에 대한 국가나 서울시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방안에 대한 광역적 정책과 논의와는 별도로 주민생활이나 그 주변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량과 원인을 분석하여 주민생활과 밀접한 곳에서부터의 미세먼지 저감 방안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상향식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방안 필요성이 제기됨

● **미세먼지 대책 마련 지방정부의 제도적 기반 미비**

- 「미세먼지법」 제정 이전에 「종로구 미세먼지 저감 및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미세먼지법」에서 규정한 조항들이 충분히 조례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등 종로구의 미세먼지 관련 자치법규의 전반적인 점검과 개정 필요성이 대두됨

【 특별법, 조례 제정일 및 시행일 】

- 「종로구 미세먼지 저감 및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 2017. 12. 29. 제정(2018.1.1. 시행)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 2018. 8. 14. 제정(2019.2.15. 시행)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019. 2. 8. 제정(2019.2.15. 시행)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2019. 2. 13. 제정(2019.2.15. 시행)

추진경과

● **종로구의회 미세먼지 특별위원회 구성**

-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미세먼지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기초지방정부 차원의 능동적이고 선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미세먼지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함

【 특별위원회 구성 】

- 구성 일자 : 2019. 4. 25.(제284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구성 인원 : 5명(위원장 1, 부위원장 1, 위원 3)
- 활동 기간 : 2019. 4. 25. ~ 2020. 2. 24. (10개월)

● **교육 실시**

- '미세먼지대책 특별위원회'는 특위 활동을 위해 위원 뿐만아니라 지방의회 의원이 알아야 할 기본 지식 및 정보 습득을 위해 "미세먼지에 대한 이해 및 저감 방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

【 미세먼지의 이해 및 저감 방안에 대한 교육 】

- 교육 일자 : 2019. 5. 17.(금)
- 참여 인원 : 전체의원(11명), 관련부서 및 의회직원(10명)
- 교육 내용 : 미세먼지 개념, 미세먼지 발생 메커니즘, 미세먼지 발생과 제도적 변화, 도시 내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 미세먼지와 건강, 도시 내 미세먼지 활동유형 및 특성, 도시생활권 내의 미세먼지 저감 방안 등
- 강사 : 김정곤 박사(現,SH공사스마트사업단·미세먼지대책추진단 단장)

● **집행기관 업무보고**

- '미세먼지대책 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대한 추진 현황, 추진 계획 등을 파악하기 위해 종로구 집행기관 해당부서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그 실태를 파악함

【 집행기관 관련 업무실태 파악 】

- 회의 일자
  - 1차 : 2019.5.20.(제285회 임시회 회기 중)
  - 2차 : 2019.9.17.(제288회 임시회 회기 중)
- 해당부서 : 환경과, 청소행정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도로과, 주차관리과, 복지지원과, 여성가족과, 보건위생과
- 회의내용 : 집행부 관련부서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현황 업무보고, 질의 답변

● **현장 견학**

- '미세먼지대책 특별위원회'에서는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기술이나 장비 파악을 위해 전시회 및 현장 견학을 실시함

【 현장 견학 활동 】

- 환경 관련 기술 및 장비 전시 견학
  - 일자 및 장소 : 2019. 5. 16.(목), 코엑스 전시관
  - 참석자 : 의원(전체 11명), 관련부서 직원(환경과, 청소과 등)
  - 내 용 : 제41회 국제환경산업기술&그린에너지전
- 대기 미세먼지측정시설 현장 방문
  - 방문 일자 : 2019. 7. 15.(월)
  - 방문 시설 : 도시대기측정소(종로5·가동주민센터 옥상) 도로변대기측정소(종묘주차장 앞 인도)
  - 방문자 : 특위 위원 5명, 관련부서 직원(환경과,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 시설 안내 및 설명 :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소속 직원

추진성과

● **미세먼지 관련 지역 정책에 대한 주민 관심 제고**

- 종로구의회의 미세먼지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이후, 국가나 서울시의 미세먼지 관련 정책에 대한 관심과 함께 종로구의 미세먼지 정책 및 시책, 예산에 대한 지역 주민의 관심도 함께 높아짐

| 언론보도 증가 사례 |



▲ 티브로드, 2019. 5. 20.


시민일보

종로구의회 미세먼지대책특위, 현장방문 실시

▲ 시민일보, 2019. 7. 17 .


종로구의회 미세먼지 특위 1차 회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 '봇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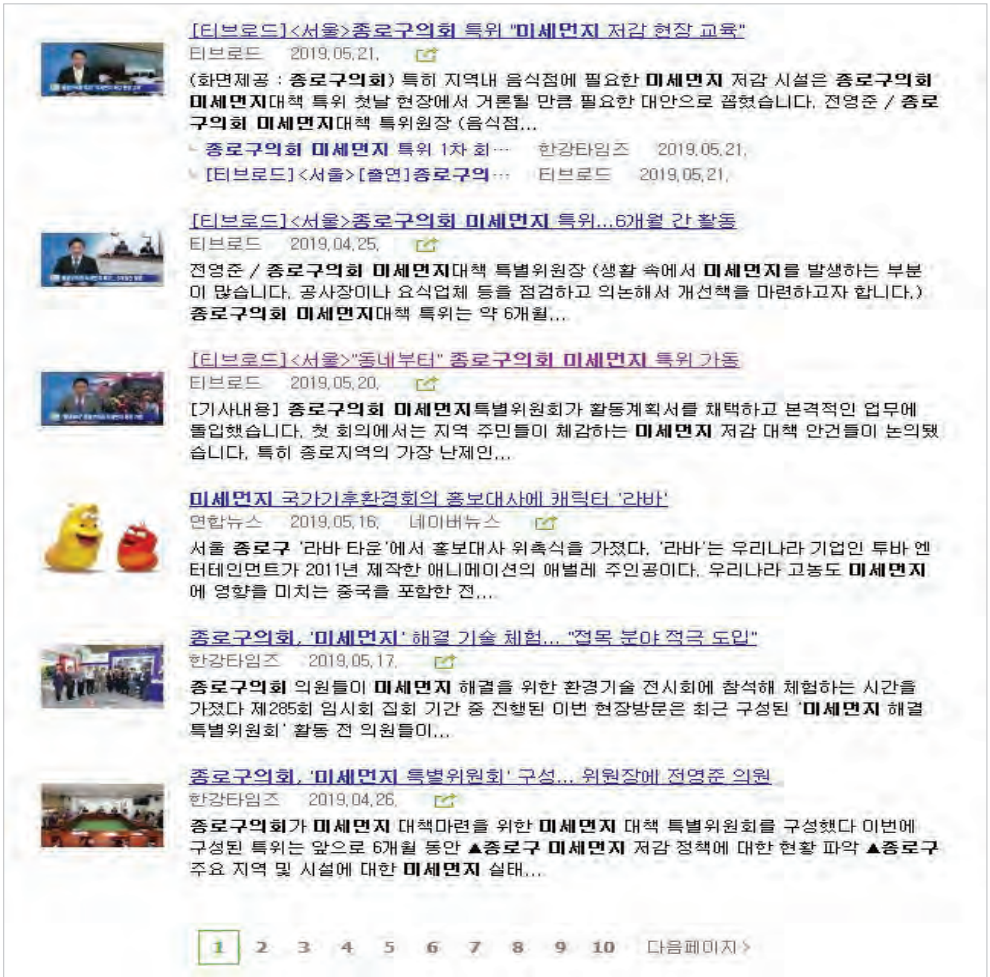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종로구의회(의장 유양순)가 20일 관내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한 '미세먼지대책 특별위원회(이하 미세먼지 특위)' 1차 회의를 열었다.

처음 열리는 만큼 특위 위원들은 그간 현장에서 검토하고 파악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했으며 이에 대한 대안도 제시하는 등 실태와 대안을 봇물 터지듯 쏟아냈다.

'미세먼지 특위'는 기초 의회에서는 이례적으로 구성된 것으로 의회 차원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 한강타임즈, 2019. 5. 21.

| 포털사이트(네이버) 검색 뉴스 |


[티브로드]<서울>종로구의회 특위 "미세먼지 저감 현장 교육"
티브로드 2019.05.21.
(화면제공 : 종로구의회) 특히 지역내 음식점에 필요한 미세먼지 저감 시설은 종로구의회 미세먼지대책 특위 첫날 현장에서 거론될 만큼 필요한 대안으로 꼽혔습니다. 전영준 / 종로구의회 미세먼지대책 특위원장 (음식점...
종로구의회 미세먼지 특위 1차 회… 한강타임즈 2019.05.21.
[티브로드]<서울>[출연]종로구의… 티브로드 2019.05.21.

[티브로드]<서울>종로구의회 미세먼지 특위...6개월 간 활동
티브로드 2019.04.25.
전영준 / 종로구의회 미세먼지대책 특별위원장 (생활 속에서 미세먼지를 발생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공사장이나 요식업체 등을 점검하고 의논해서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종로구의회 미세먼지대책 특위는 약 6개월...

[티브로드]<서울>"동네부터" 종로구의회 미세먼지 특위 가동
티브로드 2019.05.20.
[기사내용] 종로구의회 미세먼지특별위원회가 활동계획서를 채택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습니다. 첫 회의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체감하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 안건들이 논의됐습니다. 특히 종로지역의 가장 난제인...

미세먼지 국가기후환경회의 홍보대사에 캐릭터 '라바'
연합뉴스 2019.05.16. 네이버뉴스
서울 종로구 '라바 타운'에서 홍보대사 위촉식을 가졌다. '라바'는 우리나라 기업인 투바 엔터테인먼트가 2011년 제작한 애니메이션의 애벌레 주인공이다. 우리나라 고농도 미세먼지에 영향을 미치는 중국을 포함한 전...

종로구의회, '미세먼지' 해결 기술 체험... "절목 분야 적극 도입"
한강타임즈 2019.05.17.
종로구의회 의원들이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환경기술 전시회에 참석해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285회 임시회 집회 기간 중 진행된 이번 현장방문은 최근 구성된 '미세먼지 해결 특별위원회' 활동 전 의원들이...

종로구의회, '미세먼지 특별위원회' 구성... 위원장에 전영준 의원
한강타임즈 2019.04.26.
종로구의회가 미세먼지 대책마련을 위한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번에 구성된 특위는 앞으로 6개월 동안 ▲종로구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대한 현황 파악 ▲종로구 주요 지역 및 시설에 대한 미세먼지 실태...

1 2 3 4 5 6 7 8 9 10 다음페이지 >

● **종로구 미세먼지 관리 예산 및 정책 반영 증가**

-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제2회, 2019. 9)을 통한 미세먼지 관련 사업 예산 증액 편성
  - 종로노인종합복지관 공기청정기 설치 : 약 1천만원
  - 미세먼지 저감 녹지 확충사업 : 약 1억원

【 종로구 2019년도 미세먼지 대책 관련 신규 사업 】

- 어린이집 미세먼지 알리미 신호등 설치
- 경로당, 동주민센터 미세먼지 방진망 설치
- 에코쉼터 조성
- 미세먼지 대피소 스마트 에코쉘터 설치 추진
- 공공건축물 미세먼지 방지시설 강화
- 공사장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강화

● **자치법규 입법 반영**

- '미세먼지대책 특별위원회'제안으로「종로구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개정 추진

【 종로구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 조례 개정안 】

- 개정 시기 : 2019년 11월 중(현재 입법 예고 중)
- 개정 이유 : 주민 생활 주변에서 시행되는 건설 공사로 발생하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함으로써 미세먼지 감축에 기여하고 지역 주민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 내용 : 주거지역, 도서관, 어린이집, 유치원·학교, 병원 등의 주변 또는 각종 매설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업자는 법정 미만의 소규모 공사라 하더라도 구청장에게 비산먼지 발생신고를 하여야 함

향후계획

● 연구용역 추진

- 종로구 지역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발생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 실시

  ※ 2020년도 신규 예산편성 예정인 '의원정책개발비' 활용

● 주민 의견수렴

-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주민 토론회, 간담회 등 실시 추진

● 특위 제안 건의안 발의

- 국가나 광역지방정부 차원의 미세먼지 대응에 관한 대정부 및 국회, 서울시 등에 대하여 관련 입법 및 정책 건의 추진

● 특위 제안 조례 개정안 발의

- 종로구의 미세먼지 대응 정책 및 시책으로 제도적 또는 지속가능하게 반영되어야 할 사항을 발굴하고 미세먼지 대응과 저감 관리에 미비한 현행 규정을 보완하는 「종로구 미세먼지 저감 및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개정 입법 추진

● 기타

- 2020년도 종로구 본예산 미세먼지 대책 예산 증액 편성 추진
- 특위 활동 종료 전 특위 활동보고서 채택

우수사례 요약서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02 개별공시지가 문제제기로 10억 세수 증대

우수상

분야 : 지역 현안 해결

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제출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추진배경

- 부산진구 부전동은 부산상업의 중심지로 지가 수준이 높게 형성 되어 있고 부산외곽 순환도로 개통 등 광역적 접근성이 개선되어 유동인구 흐름, 지역발전 등 전반적인 지가가 강보합세를 보이나
- 중심상권에 위치한 부전동 소재 롯데그룹 토지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이 인근토지에 비해 상당히 낮게 책정됨

현황 및 문제점

- 2019년 개별공시지가가 부산진구 평균 14.77%, 부전동 평균 25.73%로 부산진구가 전국 5위로 상승률이 높았으나,
- 부산교통의 요충지며 상업의 중심지에 위치한 부전동 소재 롯데그룹 토지(부전동 503-15)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8%로 인근토지 20%~100% 상승폭에 비해 상당히 낮게 책정됨을 구의회에서 문제 제기함
- 따라서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토지특성, 표준지 적용, 비준표 등 산정과정을 구의회에서 면밀히 검토한 결과 표준지 적용의 오류를 발견하여 해당부서로 재심의 요청

추진경과

- 2019. 5. 14. : 부산진구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개최 ⇨ 원안가결
- 2019. 5. 31. : 공시지가 산정 문제제기 및 재심의 요청 ⇨ 구의회
- 2019. 6. 7. : 공시지가 산정 문제제기 및 재심의에 따른 회신
- 2019. 7. 17. : 부산진구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개최

  ▷ 결과 : 수정의결(16,560,000/㎡ ⇒ 23,410,000/㎡)으로 조정

추진성과

- 당초 공시지가 기준 재산세 대비 10억 정도 증액하여 재산세 부과
- 이러한 세입증대로 인해 지역발전과 주민들을 위해 쓰여지는 예산을 확보 한 것은 기초의회에서 노력한 결과의 산물이며,
- 구청 예산 중 세출예산 부분에 대하여 견제 및 감시하던 사항을 세입 부분까지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기초의회의 위상을 높임

우수사례 요약서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03 직장운동부(북구청 검도부) 운영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운영

분야 : 지역 현안 해결

우수상

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출자 광주광역시 북구 의회사무국

추진배경

- 북구청 검도부는 1991년 창단 이후 2018년 기준 선수단 10명, 연간 운영비 6억원이 투입되는 작지 않은 규모이나,
- 허위전지 훈련 등 방만한 운영에 따른 행정사무조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북구의회 개원 이후 최초로 행정사무조사가 실시됨

1991년 북구의회 개원 이후 최초로 행정사무조사 실시

추진경과

- 「구청 검도부」 허위 전지훈련 동향 감지 : '18. 11. 21
- 전지훈련 기간 중 화상통화를 통한 허위출장 확인 : '18. 11. 21
  - 강원도에 있어야 할 검도부는 실제로는 광주에 있는 것으로 확인
- 「구청 검도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안결 의결 : '18. 12. 4
- 「구청 검도부」 행정사무조사 실시 : '18. 12. 12 ~ '19. 1. 30
- 「구청 검도부」 행정사무조사 결과 발표 및 조치 : '19. 1. 30

추진성과

- 허위 전지훈련 여비 환수(선수단 10명) : 7,746천원
- 재임용 관련 업무규정을 위반하고 임용된 감독 해임조치

● 북구청 검도부 운영 개선방안 및 발전계획 수립 건의

●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조례 및 시행규칙 정비

● 훈련비 집행 및 검도 장비구입 투명성 확보

선택과 집중을 통한 행정사무조사의 효율성 및 성과를 극대화

세부 추진내용

① 행정사무조사 실시 경과

일 시	내 용	비 고
2018.12.04.	• 행정사무조사 발의 및 의결	제24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8.12.06.	•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 위원장, 부위원장 호선	
2018.12.14.	•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채택	
2018.12.18.	•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	제24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9.01.04.	•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 증인 출석 요구 결의안 의결	
2019.01.10.	•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① 업무보고 및 질의·응답 – 출석증인 : 부구청장, 자치행정국장, 총무과장, 검도부 감독대행 ② 증인 출석 요구 결의안 의결 ③ 현지 확인 결의안 의결	
2019.01.18.	•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현지 확인 실시 ① 확인자 : 의원 5명, 사무보조직원 3명 ② 확인대상 : 센텀보구(부산 소재), 대운스포츠(경남 양산 소재)	
2019.01.21.	•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① 질의·응답 – 출석증인 : 자치행정국장, 총무과장, 검도부 감독대행 및 선수	
2019.01.24.	•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① 질의·응답 – 출석증인 : 자치행정국장, 총무과장, 건국동장, 검도부 감독대행 및 선수	
2019.01.29.	•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①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② 전지훈련 기간 중 화상통화를 통한 현지출장 확인

▶ 일 시 : 2018. 11. 21.

▶ 내 용 :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실시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중 강원도 인제군에서 전지훈련중인 감독과 영상통화를 하였음. 모두가 지켜보는 감사장에서 진행된 영상통화에서 감독은 실제 전지훈련을 가지 않았음을 실토함.


2018. 11 22. 연합뉴스

연합뉴스

구청 검도부 '허위 전지훈련' 딱 걸렸네…구의원, 돌발 영상통화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 북구의원이 행정사무 감사 도중 전지훈련 간 구청 소속 검도부의 허위훈련 사실을 영상통화를 시도해 적발했다.

백순선 광주 북구의원은 전날 실시한 북구의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운영해오고 있는 북구청 검도부의 허위 전지훈련 현장을 적발해냈다고 22일 밝혔다.

③「구청 검도부」 행정사무조사 발의 및 의결

▶ 일 시 : 2018. 12. 04.

▶ 조사목적 : 북구청 검도부와 관련한 실태조사 및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 제시

▶ 조사근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광주광역시 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조사범위 : 직장운동경기부(검도부) 운영에 대한 업무 전반

2018. 12. 04. 노컷뉴스	2018. 12. 04. 전남일보
 노컷뉴스 광주 북구의회, 검도팀 실태 점검 위한 행정조사권 발동 광주CBS 박승진 기자 | 2018-12-04 15:58 백순선 광주 북구의회 의원(사진=광주 북구의회 제공) 광주 북구의회가 구청 소속 검도팀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행정조사권 발동을 의결했다. 이번 행정조사권 발동은 1991년 북구의회가 개원한 이후 처음이다.	 全南日報 허위 전지훈련 광주 북구 검도부 '행정사무조사' 추진 허위 전지훈련 등 방만한 운영실태가 드러난 광주 북구 검도부를 대상으로 북구의회의 '행정사무조사'가 추진된다. 광주 북구의회는 4일 제248회 제2차 정례회의 2차 본회의에서 백순선 의원이 발의한 '북구청 직장운동경기부(검도부)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 안건'을 찬석의원 20명 중 찬성 13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의결했다.

④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및 조사실시

▶ 일 시 : 2018. 12. 06. ~ 2019. 01. 30

▶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 백 순 선 의원
- 부위원장 : 김 형 수 의원
- 조사특별위원회위원 : 양 옥 균 의원
  최 용 환 의원
  김 건 안 의원
  전 미 용 의원
  선 승 연 의원



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현지 확인

▶ 일 시 : 2019. 01. 18.

▶ 출 장 지 : 거래처 2곳(대구, 부산 소재 센텀보구, 대운스포츠)

▶ 출 장 자 : 위원(5명) 백순선 외 4명 / 사무보조자(3명)

▶ 출장목적 : 거래처 직접 방문하여 장비구입사항 질의 · 응답

센텀보구 현지확인	대운스포츠 현지확인
	

⑥「구청 검도부」행정사무조사 결과 발표

가. 전지훈련비 부당수령

- 2018.11.21.(수)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실시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중「대통령기 제40회 전국일반검도선수권대회」대비 검도선수단 전지훈련을 실시하지 않음을 적발함.
- 이 전지훈련은「대통령기 제40회 전국일반검도선수권대회」(2018.11.24.(토)~11.25.(일))에 참가하기 위해 2018년 11월 17일부터 11월 22일까지 5박6일의 일정으로 강원도 인제군청 훈련장에서 검도선수단 10명(감독1, 코치1, 선수8)이 실시하는 계획으로 2018.11.09.자로 검도선수단 단장의 결재를 받고 전지훈련비(총 5,224,000원)를 지급 받음.
- 또한,「대통령기 제40회 전국일반검도선수권대회」참가를 위해 참가여비 총 2,522,000원을 2018년 11월 21일 지급받음.
-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지훈련 미실시 및 허위 실시 보고 사실이 적발되고 이로 인해「북구청 직장운동경기부(검도부)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실시가 의결됨에 따라 전지훈련 여비를 반납함.(2018.11.29.)
- 그리고 북구의회 행정사무조사에 임하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해「대통령기 제40회 전국일반검도선수권대회」에 불참을 결정하고 대회 참가여비 전액을 반납함.(2018.11.29.)

나. 감독 재임용 관련 업무규정 위반

- 검도선수단 감독 김OO의 계약 기간은 2015.08.03. ~ 2018.08.02.【3년간】으로 2018년 8월 9일 감독을 재임용 한 것은 문제가 있음.
- 또한, 감독 재임용을 위해
  - i) 2018.08.07. 광주광역시 북구 직장운동경기부 검도선수단 감독 재임용평가계획(안)(총무과-16053)을 마련하고,
  - ii) 8월 7일부터 8월 8일까지 이틀간에 걸쳐「북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의 서면심의를 거쳐,
  - iii) 2018.08.08. 광주광역시 북구 직장운동경기부 검도선수단 감독 재임용 평가결과 보고(총무과-16216)를 통해 재임용을 결정하고,
  - iv) 2018.08.09. 검도선수단 감독 재임용(재계약)(총무과-16286)을 통해 2018.08.03~2021.08.02.【3년간】을 계약기간으로 2018년 8월 3일 재계약함.
- 이는 계약기간이 종료 후에 재임용을 진행한 상황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은 상황이며,
- 「광주광역시 북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제13조(단원의 재임용평가),「광주광역시 북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단원의 재임용 평가)에 검도선수단 단원에 대하여 재임용 평가를 시행할 것을 규정한 입법취지를 살펴볼 때, 검도선수단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선수단원의 재임용 시 적절한 평가를 시행하여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재임용에 탈락하였을 시 신규단원을 모집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단원에 대한 재임용평가가 완료되어야 함이 당연하나,

- 2018. 8월 시행한 감독 재임용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무시한 채, 계약기간이 만료된 상황에서 진행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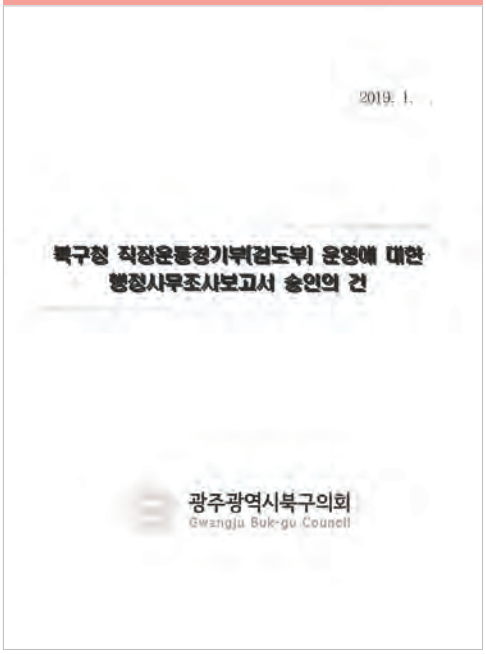
다. 각종 훈련 때 특정 업소 식대 전액 지출

- 각종 훈련 시 북구청은 검도선수단에 급량비를 지급함.
- 합숙훈련을 실시할 때 식사를 위해 3식의 비용을 지급하고 있으나 지출장소가 서구 풍암동 특정업체에 국한되어 있으며, 합숙소(두암동)-아침훈련장소(동강대)-훈련장소(검도회관) 으로 이어지는 선수단의 동선을 고려하면 합리적이지도 않음.

라. 검도장비 구입 특정업체 편중

- 최근 5년간 검도장비 구입 현황은 다음과 같음.
- 검도장비 구입을 위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총10번 지출을 하였고 그 금액은 총84,616,370원임.
- 2019.01.18(금) 센텀보구(부산 소재), 대운스포츠 (경남 양산 소재)에 현지 확인을 실시한 결과 부산이나 경남 양산 등 원거리 업체에 구매를 할 실익이 없음.
- 또한, 구입 과정에서 市검도협회가 물건 발주 등에 관여되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구입업체 선정에 있어 투명성 확보 필요성이 제기됨.
- 검도장비를 특정 업체에 편중하여 구입을 하는 관행을 탈피해야 할 것임.
- 거래처 2곳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센텀보구는 2018년 8월 컴퓨터 고장으로 하드를 교체하였으며 고장난 하드디스크 데이터를 복구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결국에는 복구하지 못해 이전의 거래자료가 모두 사라졌으며, 대운스포츠 역시 2016년 이후 세 차례에 걸친 사업장 이전으로 인하여 기존 거래처에 대한 거래자료를 잃어버린 상황으로 이전 거래내역 등에 대하여 확인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
- 거래처 대표자의 표현을 따르면 검도관련 업계의 시장이 매우 작기 때문에 검도부가 있는 학교나 국내 실업팀을 중심으로 도매 판매를 진행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생산되는 물품이 거의 없으므로 일본,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수입하여 판매를 하기 때문에 수입여건에 따라 단가에 변동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예를 들어 물건을 배로 실어오느냐 비행기로 실어오느냐에 따라 판매가격이 달라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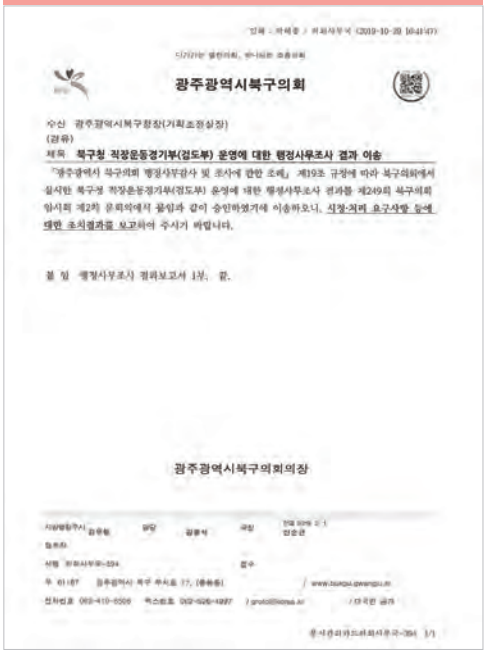
결과보고서 본회의 채택


2019. 1.

북구청 직장운동경기부(검도부)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보고서 승인의 건

광주광역시북구의회
Gwangju Buk-gu Council

개선사항 이행 요청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수신 광주광역시북구청장(기획조정실장)
(경유)
제목 북구청 직장운동경기부(검도부)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이송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 규정에 따라 북구의회에서 실시한 북구청 직장운동경기부(검도부)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제249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붙임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이송하오니, 시정·처리 요구사항 등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1부. 끝.

광주광역시북구의회의장

추진성과

■ 지검도부 운영관리 및 지도감독 철저, 부당전지훈련비 환수

- 선수단 임용·재임용절차, 전지훈련과 합숙훈련, 대회의 참가 등 검도선수단의 활동에 대한 지원 절차, 물품구입 절차 등에서 미비점이 밝혀짐.
- 검도선수 임용은 비인기스포츠 종목의 한계에 따라 市 검도협회와 감독의 추천에 의존하고 있어, 공정한 선수선발과 실효성 있는 재임용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훈련비 집행 및 검도 장비구입 투명성 확보

- 전지훈련과 합숙훈련은 계획에 의하여 경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사후확인 및 점검 과정이 없어 허위 전지훈련의 빌미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특히 전지훈련은 타 지역에서 이루어 지는 것을 감안하여 전지훈련지측 선수단과 교차검증, 영상통화 등 다양한 확인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함.
- 장비구입에 있어서는 특별한 이유 없이 관내 업체가 아닌 부산, 경남 업체에서 구매를 하고 (최근 5년간 84백만원) 철저한 검수가 없는 것은 개선을 해야 할 것임.

■ 직장운동경기부 조례, 시행규칙 재정비

- 단원의 재임용 평가는 결기실적, 체력검사, 근무태도 등으로 평가하도록 되어있으나, 감독은 단원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재임용평가에서 체력검사를 실시하지 않음.
- 선수임용, 포상, 특별승급의 기준이 되는 대회의 규모에 대한 표현이 전국대회, 전국규모대회, 전국체육대회로 상이하여 모두가 알 수 있도록 명확한 정비가 필요
- 우수선수 유치비를 받고 임용된 선수가 타 선수단으로 이적 또는 사직을 원할 경우 지급받는 유치비를 반납만 하면 됨에 따라 북구청 검도단은 권한이 없는 실정으로 영입한 우수선수에 대한 보유책을 강구
-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 구성(총 7명 이내)시 지역검도인 1명을 위촉하도록 하는데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대한검도회 광주시 검도회 소속임원 및 관계자는 배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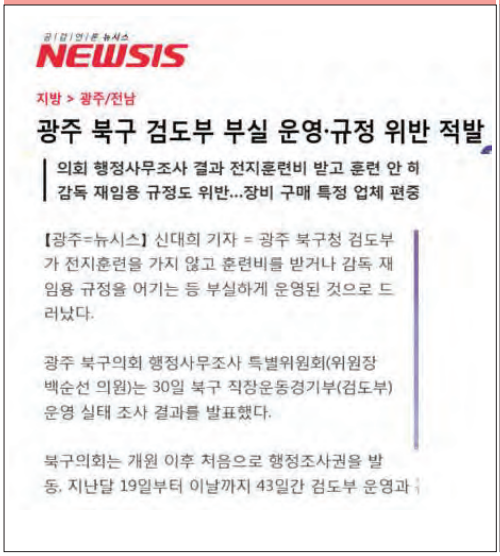
■ 북구청 검도부 운영 개선방안 및 발전계획 수립

- 행정사무조사를 계기로 검도부 개선방안과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음.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견제기구로서의 역할 강화

- 28년간 운영되어오던 북구청 검도선수단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운영으로 인해 북구의회 개원 이래 최초로 행정사무조사가 이뤄짐.
-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견제 기구로서의 위상을 세웠으며, 44만 북구민을 대변하는 대의기관로서 자리를 매김함.

2019. 1. 13. 뉴시스	2019. 1. 30. 광주일보



NEWSIS

지방 > 광주/전남

광주 북구 검도부 부실 운영·규정 위반 적발

의회 행정사무조사 결과 전지훈련비 받고 훈련 안 하 감독 재임용 규정도 위반…장비 구매 특정 업체 편중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광주 북구청 검도부가 전지훈련을 가지 않고 훈련비를 받거나 감독 재임용 규정을 어기는 등 부실하게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 북구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백순선 의원)는 30일 북구 직장운동경기부(검도부) 운영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북구의회는 개원 이후 처음으로 행정조사권을 발동, 지난달 19일부터 이날까지 43일간 검도부 운영과



光州日報

북구의회, 북구청 검도부 부실 운영·규정 위반 적발

가 가

광주북구의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북구청 직장운동경기부(검도부)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부실 운영, 규정 위반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특별위는 지난해 11월 21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검도부의 허위 전지훈련이 드러남에 따라 시정조치와 검도부 운영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조사 결과 허위 전지훈련비 부당수령, 감독 재임용 관련 업무규정 위반, 각종 운관 시 특정 업소 식대 편액 처술, 검도장비 구입 특정업체 편중 등이 확인됐다.

특별위는 북구청에 검도부의 전반적인 운영관리 및 시도·감독 철저, 검도부 감독 재임용 과정에서 업무규정 위반에 따른 부당지급액 환수, 각종운관 미행검증과 운관비 집행 점검, 북구청 검도부 운영 개선방안 및 발전계획 수립 등을 촉구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 혁신과 개선을 통한 실업검도부의 명성을 회복

- 1990년 실업팀으로 창단하여 대통령기 등에서 입상을 하여왔으나, 선수단의 해이와 방만한 운영은 최근 3년간 단 한차례의 대회 입상도 없는 등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였음.
- 부정적하게 임용된 감독을 해임, 임용 평가를 통한 신규단원 모집, 검도단 이동 동선 조정 등 혁신과 개선을 통해 운동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행정사무조사 이후 전국체전 등 2019년 한 해 동안 3회의 대회 입상

▣ 2019. 8월 하계 전국실업검도대회 3위

▣ 2019. 9월 제16회 추계전국실업검도대회 단체전 준우승

▣ 2019. 10월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우승

전국체전 금메달 (2019.10.10.) 연합뉴스	추계 전국실업검도대회 준우승 (2019.09.10.) WIKITREE
	

우수사례 요약서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04 영광군 천일염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 제·개정

분야 : **지역 현안 해결**

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의회

제출자 전라남도 영광군의회

목적

● 천일염 업체의 영세성, 산지가격 지속하락, 고령화에 따른 인력난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천일염 생산자의 소득안정과 지속 발전 가능한 천일염 산업 인프라 마련을 위해 천일염 수매제 등 천일염 생산자 보호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현황 및 문제점

● 현대인들의 저염식 식단 선호로 인한 식습관 변화

- 고염분 식단에 대한 고혈압, 심장병, 당뇨 등 건강상의 이유로 저염식 식단으로의 식습관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게 됨에 따른 소금 이용량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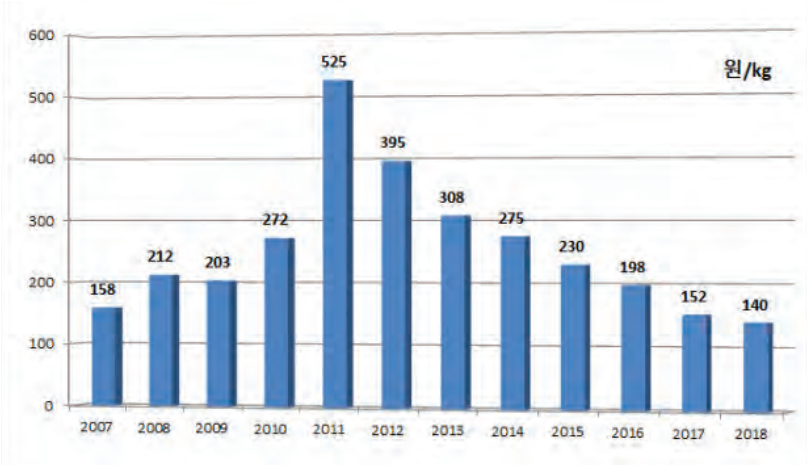
● 정부의 나트륨 저감화 정책



- 세계보건기구(WHO)의 나트륨 권고량 2000mg에 비해 한국은 두 배 가까이 높은 섭취량을 보임. 정부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 등을 통해 나트륨 저감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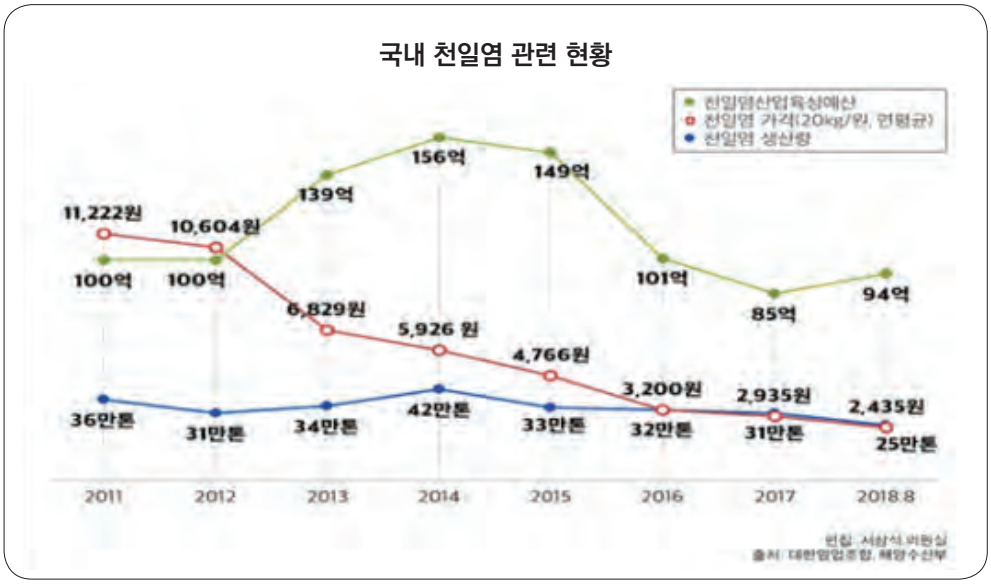
● 값싼 수입 소금의 유통으로 인한 국내 천일염 산업의 위기

| 천일염 판매가격 추이(2007 ~ 2018) |



- 97년 7월부터 시작된 소금 수입 자유화로 가격경쟁력을 잃은 국내 천일염 생산업계는 다음 해 이어진 수입소금에 부과되는 부담금까지 폐지된 후부터 산업의 존폐에 위협을 받기 시작

● 천일염 육성사업에 막대한 예산 투입, 결과는 부정적



- 정부는 2011년부터 8년간 천일염산업 육성예산에 924억을 투입했지만, 천일염 가격은 20kg 기준으로 2011년 11,222원에서 2018년 8월 기준 2,435원으로 폭락

■ 추진경과

시 기	추 진 내 용	비고
사전 현장조사	● 집행부 및 천일염 생산자단체와의 소통을 통한천일염 산업 육성 정책 개발 – 집행부와의 지속적인 정책토론과 생산자 단체와의 수차례에 걸친 현장 면담 – 실태를 파악하고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노력.	
2018.11.20.(화) – 제11회 의원간담회 –	● 하기억 의원의 대표 발의를 통해 「영광군 천일염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안)」, 「영광군 천일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보고 및 의견교환	
2018.11.28.(수) – 제236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	● 「영광군 천일염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안)」제정 및「영광군 천일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2018. 12. 14. 의결 – 2018. 12. 28일 자 조례 공포.	

- 천일염 산업 육성 지원 조례 개정사항으로 추가된 '천일염 수매제'는 지자체 최초로 시행된 수매제로 천일염 가격 동향 분석, 물량배정, 대행기관 운영 방법, 수매 기간 등을 검토하여 천일염 산업의 경쟁력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됨.

● 천일염 수매제 시행 일정(2019. 7. 1. ~ 9. 30.)

수행기관 모집공고 6. 26. ~ 7. 1.	○ 참여예상 기관 : 영광군 수협, 농협 등
▼	
수행기관 선정 7. 1.	○ 선정 기준 : 천일염 장기 보관능력을 갖춘 기관
▼	
수매참여 희망자 조사· 수매물량 배정 7. 1. 한	○ 조사방법 : 영광군, 천일염생산자협의회 합동 ○ 물량배정 : 4톤 ~ 20톤(1ha 당 4톤 수매) * 5ha 이상은 20톤까지 수매
▼	
천일염 수매(1차) 7. 1. ~ 31.(30일간)	○ 수매물량 : 2,000톤 ○ 수매가격 : 400백만원 * 1톤 수매가격 200천원(20㎏ 4,000원 기준)
▼	
천일염 수매 지원금 지급(1차) 8. 9.	○ 지 급 액 : 100백만원(영광군 → 수행기관) * 1톤 당 50천원 지원
▼	
천일염 수매(2차) 9. 1. ~ 31.(30일간)	○ 수매물량 : 2,000톤 ○ 수매가격 : 400백만원 * 1톤 수매가격 200천원(20㎏ 4,000원 기준)
▼	
천일염 수매 지원금 지급(2차) 10. 9.	○ 지급액 : 100백만원(영광군 → 수행기관) * 1톤 당 50천원 지원
▼	
사업 완료 및 결과보고 10월 중	○ 천일염 수매제 완료에 따른 결과 보고 및 사업효과 분석, 가격 동향 파악 등

영광군 공고 제2019 – 호

영광군 천일염 수매제 수행 기관·업체 모집 공고

천일염 재고량 증가, 소비량 감소 등으로 인한 천일염 가격하락에 따른 소금가격 안정화를 위한 천일염 수매제 수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본 사업을 능동적이고 책임감 있게 추진 할 수 있는 기관·업체는 6. 26.일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6. .
영 광 군 수

1. 공 고 명 : 영광군 천일염 수매
2. 공고자격 : 영광군 천일염 수매 및 보관 능력을 갖춘 기관·업체
3. 공고기간 : 2019. 6. 24. ~ 2019. 7. 1.(7일간)
4. 신청장소 : 영광군청(해양수산과 굴비천일염젓갈팀) – 직접방문 서면 신청
5. 신청방법
○ 천일염을 수매한 후 장기 보관 할 수 있는 창고 보유 등 보관능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신청서를 2019. 7. 1.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과거 3년간의 경영 상태를 알 수 있는 자료(경영 장부 또는 경영일지 등)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6. 안내 및 상담
○ 천일염 수매제 지원조건, 자격, 지원내용과 사업신청서 등의 작성요령을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영광군청 해양수산과 굴비천일염젓갈팀(문의전화 350-5738)

추진성과

● 가격 및 수급 조절을 통한 천일염 생산어가의 소득안정 기여로 어업인 기본소득 보장

* 소금 가격동향

7. 29.(수매시작)	⇨	8월말	⇨	9월초	⇨	10월초
2,400원		3,400원		3,700원		4,500원

● 천일염 산업의 공익적 가치 제고 및 지속 가능 성장기반 마련
- 태양광 및 풍력 발전시설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시행으로 외부자본에 의해 잠식돼가는 염전(천일염산업) 보호

향후계획

- (산업연계) 영광의 굴비·젓갈산업과의 연계로 저렴한 가격으로 천일염을 공급하고, 영광의 천일염이 굴비-젓갈산업 전반에 사용되어 win-win하는 긍정적 영향
- (생산관리) 천일염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노력
  - 국제식품규격 충족하는 염도 달성을 위한 생산기반 구축
- (수급관리) 생산업계의 자율수급관리 지속 지원
  - 출하량 조절, 품질향상, 소비확대 홍보를 위한 생산자단체 자조금 조성 등
- (사업확대) 광역 · 중앙부처 건의를 통해 천일염 수매제 전국 확대 시행으로 천일염 산업 지속 발전 기반 구축

참고자료 천일염수매제 시행 관련 언론 보도자료



무등일보 2019년 10월 14일 (월) 지역 10면

영광군, 지자체 최초 '천일염 수매제'

4천톤…가격·수급안정 효과 커
어려움 처한 생산어가 소득 기여

영광군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천일염 수매제'를 시행, 가격·수급안정을 이뤄 생산 여가들의 소득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영광군은 지난 7월29일부터 시작해 10일까지 천일염 4천톤 수매를 성공리에 마무리했다.

천일염 수매제는 저염식 식탁 선호와 정부의 나트륨 저감화 정책 등에 따른 식습관 변화로 천일염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재고량이 증가해 판매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어려움에 처한 지역 생산어가를 돕기 위해 도입했다.

지난 7월말 수매 시작 단계에서 1포대(20kg)에 2천500원까지 급락했던 천일염 가격은 8월말 3천400원, 9월초 3천700원, 10월초 4천500원으로 안정화 된 것으로 조사됐다.

영광군은 가격과 수급 안정 측면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뚜렷한 만큼 내년에도 수매제를 확대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서해 청산바다와 세계 5대 갯벌을 품고 있는 영광군은 연 평균 3만5천톤의 천일염이 생산되는 지역으로, 전국 천일염 생산량의 10%를 차지하고 있다.

영광=정명기자 ygic1130@srb.co.kr

영광군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천일염 수매제'를 시행해 가격·수급 안정 측면에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연합뉴스 2019년 10월 10일 (목)

영광군 천일염 4천t 수매…가격·수급 안정

(영광=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전남 영광군은 7월 29일부터 10일까지 천일염 4천t을 수매했다.

식습관의 변화로 천일염의 소비량이 지속해서 감소하고 재고량이 증가하는 등 천일염 산업이 전반적으로 경쟁력이 약화하는 데 따른 것이다.

7월 말 수매를 시작으로 1포대(20kg) 가격 2천500원, 8월 말 3천400원, 9월 초 3천700원, 10월 초 4천500원으로 가격과 수급이 안정화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군은 수매 전 올해 초부터 천일염 가격 동향 분석, 물량 배정, 대행 기관 운영 방법, 수매 기간 등을 면밀히 검토했다.

또 수매제 대행 기관으로 수협을 선정하고 수협과 천일염생산자협의회 양측이 사업을 원만히 추진할 수 있도록 힘썼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천일염 수매제를 확대할 계획이며 향후 수출시장 개척, 천일염 홍보정책 등 다양한 대책을 발굴해 천일염 산업을 보호하고 세계 시장 속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남일보

2019년 10월 14일 (월)
지역 10면

영광군 '전국 최초' 천일염 수매 눈길

4000t 시행…가격·수급 안정화 등 가시적 성과

영광군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천일염 수매에 나서 눈길을 끈다.

영광군은 지난 7월 29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천일염 4000t에 대한 수매를 시행했다고 13일 밝혔다.

군은 저염식 식탁 선호, 정부의 나트륨 저감화 정책 등에 의한 식습관 변화로 천일염 소비량 지속감소, 재고량 증가, 판매가격 하락 등 천일염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됨에 따라 전국 최초로 천일염 수매제를 추진하게 됐다.

천일염 수매제는 지난 7월 말 수매를 시작으로 1포대(20kg) 가격 2500원, 8월 말 3400원, 9월 초 3700원, 10월 초 4500원으로 가격과 수급이 안정화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 현지 생산 여가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동안 군은 천일염 수매를 시행하기 위해 천일염 가격동향 분석, 물량배정, 대행기관 운영방법, 수매 기간 등을 올봄부터 면밀히 검토 해왔다.

또한 수매제 대행기관 모집공고를 통해 대행기관으로 수협을 선정하고 수매 기간 중 수협과 천일염생산자협의회 양측과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왔다.

김준성 군수는 "천일염 수매제가 가격 안정화 및 생산자 보호를 위한 정책으로 검증된 만큼 내년에도 천일염 수매제를 확대할 계획이다"며 "향후 수출시장 개척, 천일염 홍보정책 등 다양한 대책을 발굴해 천일염 산업을 보호하고 세계시장 속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광=정규철 기자 jkjg@

전남매일

2019년 10월 14일 (월)
지역 11면



영광군은 지난 7월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천일염을 수매했다. /영광군 제공

영광 지자체 첫 천일염 4천t 수매

가격·수급 안정 성과…내년 확대키로

영광군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행한 천일염 4,000t 수매가 성공리에 마무리됐다.

영광군은 저염식 식탁 선호 등 식습관 변화로 인한 천일염 소비량 지속감소, 재고량 증가, 판매가격 하락 등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천일염 산업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천일염 수매제를 추진했다.

천일염 수매는 지난 7월말 시작해 1포대(20kg)가격이 2,500원에서 8월 말 3,400원, 9월 초 3,700원, 10월 초 4,500원으로 가격과 수급이 안정화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 생산 여가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영광군은 천일염 수매를 시행하기 위해 천일염 가격동향 분석, 물량배정, 대행기관 운영방법, 수매기간 등을 면밀히 검토했다.

또 수매제 대행기관 모집공고를 통해 대행기관으로 수협을 선정하고 수매기간 중 수협과 천일염생산자협의회 양측과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썼다.

영광군 관계자는 "천일염 수매제가 가격 안정화 및 생산자 보호를 위한 정책으로 검증된 만큼 내년에도 천일염 수매제를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영광=곽용순 기자

호남일보

2019년 10월 14일 (월)
지역 08면

영광군, 지자체 최초 '천일염 수매제' 도입

재고량 증가 · 소비량 감소 속 가격 · 수급 안정 성과



수매를 위해 생산어가가 천일염을 출하하고 있다.

영광군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천일염 수매제'를 시행, 가격·수급안정 측면에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영광군은 지난 7월29일부터 천일염 4000t 수매를 시작해 10일까지 성공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천일염 수매제는 지염식 식탁 선호와 정부의 나트륨 저감화 정책 등에 따른 식습관 변화로 천일염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재고량이 증가해 판매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어려움에 처한 지역 생산어가를 돕기 위해 도입했다.

지난 7월말 수매 시작 단계에서 1포대(20kg)에 2500원까지 급락했던 천일염 가격은 8월말 3400원, 9월초 3700원, 10월초 4500원으로 안정화 된 것으로 조사됐다. 영광군은 가격과 수급 안정 측면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두드러진 만큼 내년에도 수매제를 확대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앞서 영광군은 천일염 수매제 시행을 위해 올 봄부터 가격동향 분석, 물량배정, 대행기관 운영방법, 수매기간 등을 검토 해왔다.

수매제 대행기관 모집공고를 통해서는 수협을 대행기관으로 선정하고 수매기간 중에는 수협과 천일염생산자협의회 양측이 사업을 원만히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했다.

서해 최신비다와 세계 5대 갯벌을 품고 있는 영광군은 연 평균 3만5000t의 천일염이 생산되는 지역으로, 전국 천일염 생산량의 10%를 차지하고 있다.

올해는 약 3만t이 생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천일염 재고량 증가와 소비량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

영광군은 위기에 직면한 천일염산업 활성화를 위해 수매제 도입과 경영안정 자금 지원, 해외 수출시장 확대 등에 노력하고 있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수매제가 생산자 보호를 위한 정책으로 검증된 만큼 내년에도 확대 시행할 계획이며, 향후 수출시장 개척, 천일염 홍보정책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지역 천일염 산업을 보호·육성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광=원복성 기자

서울매일

2019년 10월 14일 (월)
전국 10면

영광, 천일염 수매 지자체 최초 시행 성공리에 마쳐

가격과 수급안정 성과 '톡톡'



임교택 기자 /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지난 7월 29일부터 10월 10일까지 천일염 4,000톤에 대한 수매를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행해 성공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영광군은 지염식 식탁 선호, 정부의 나트륨 저감화 정책 등에 의한 식습관 변화로 천일염 소비량 지속감소, 재고량 증가, 판매가격 하락 등 천일염 산업이 전반적으로 경쟁력이 약화돼 올해 처음으로 천일염 수매제를 추진하게 됐다.

천일염 수매제는 지난 7월 말 수매를 시작으로 1포대(20kg)가격 2,500원, 8월 말 3,400원, 9월 초 3,700원, 10월 초 4,500원으로 가격과 수급이 안정화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 현지 생산 어가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간 영광군은 천일염 수매를 시행하기 위해 천일염 가격동향 분석, 물량배정, 대행기관 운영방법, 수매기간 등을 올봄부터 면밀히 검토 해왔다.

또한 수매제 대행기관 모집공고를 통해 대행기관으로 수협을 선정하고 수매기간 중 수협과 천일염생산자협의회 양측과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왔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천일염 수매제가 가격 안정화 및 생산자 보호를 위한 정책으로 검증된 만큼 내년에도 천일염 수매제를 확대할 계획이며 향후 수출시장 개척, 천일염 홍보정책 등 다양한 대책을 발굴해 천일염 산업을 보호하고 세계시장 속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타임즈
2019년 10월 11일 (금)
지역 06면

영광군, 지자체 최초 '천일염 수매제' 시행

가격·수급 안정 성과



수매를 위해 생산여가가 천일염을 출하하고 있다. /영광군 제공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지난 7월 29일부터 10일까지 천일염 4000t에 대한 수매를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행해 성공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영광군은 저염식 식탁 선호, 정부의 나트륨 저감화 정책 등에 의한 식습관 변화로 천일염 소비량 지속감소, 재고량 증가, 판매가격 하락 등 천일염 산업이 전반적으로 경쟁력이 약화돼 올해 처음으로 천일염 수매제를 추진하게 됐다.

천일염 수매제는 지난 7월 말 수매를 시작으로 1포대(20kg)가격 2500원, 8월 말 3400원, 9월 초 3700원, 10월 초 4500원으로 가격과 수급이 안정화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 현지 생산 어가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간 영광군은 천일염 수매를 시행하기 위해 천일염 가격동향 분석, 물량배정, 대행기관 운영방법, 수매기간 등을 올봄부터 면밀히 검토 해왔다.

또한 수매제 대행기관 모집공고를 통해 대행기관으로 수협을 선정하고 수매기간 중 수협과 천일염생산자협의회 양측과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왔다.

영광=임두섭 기자

지방의회 우수사례집

Part 3

의회 운영 효율성 제고

1. **의회의 투명성과 신뢰도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경기도 고양시의회 |
2. **정책위원회 제도 도입 운영, 의정 역량강화 및 전문성 제고** | 충청남도 충청남도의회 |
3. **경남도의회 『특별위원회의 공진화, 제도화 그리고 발전』** | 경상남도 경상남도의회 |

우수사례 요약서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01 의회의 투명성과 신뢰도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최우수상

분야 : 의회 운영 효율성 제고

기관명 경기도 고양시의회

제출자 경기도 고양시의회

개요

■ 주요 추진 사항

1	지방의회 사상 유례 없는 「의원의 출석률 및 재석률 의회 홈페이지 공개」 제도화 마련
2	「본회의 생방송 중계 시스템」 도입으로 실시간 대 시민 알권리 강화
3	「전자투표 시스템」 도입으로 신속한 의사진행과 대 시민 결과 고지 등 시민 만족도 제고
4	「의정기록관리팀」 최초 신설로 속기록 관리 전문성과 체계화 가능
5	「입법지원팀」 신설로 전문적이고 고도화된 조례 분석 검토

개선내용

● **「의원의 출석률 및 재석률 의회 홈페이지 공개」**

- 요지 : 고양시의회 회의규칙(제226회 제2차 정례회, '18.11.29.) 일부를 개정하여 경기도 최초로 본회의 및 상임위 회의 시 개의(개회), 속개, 산회 때마다 재석의원의 성명 및 의원 수를 회의록에 기재하며 회의 종료 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

※ 별첨 1-홈페이지 공개 화면 자료

별첨 2-제227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의원 출석·재석률 현황표(예시)

- 비교분석

• 제7대 및 제8대 의회 개원 후 1년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 현황 비교

구 분		본회의	상임위원회				
			운영	기획	환경	건교	문복
제7대 고양시의회 (제190회 ~ 제194회)	출석률	97.94	93.75	98.95	92.57	97.5	97.14
제8대 고양시의회 (제227회 ~ 231회)	출석률	99.23	98.75	99.70	100	100	96.7

(※ 제7대 의회는 회의장(본회의 및 상임위) 참석 후 이석한 경우에도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여 제8대 의회와의 출석률에 있어서는 큰 차이는 없음.)

- 시사점
  - 지난 7대와 개원 후 1년 비슷한 시기의 재석률 비교 결과 본회의의 경우 7대 의회는 97%, 8대는 99%로, 각 상임위의 경우 대체적으로 8대 의회가 높은 출석률을 보여주었음.
  - 개의(개회), 속개, 산회 때 마다 재석의원을 회의록에 기록하는 제도를 의원 스스로가 개선함으로써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이 있어야 할 회의장에서 의정활동에 전념하겠는 의지의 표출이며,
  - 이는 주민의 대표자로서 주민의 권익향상과 복리증진을 우선시하고 투명하게 성실한 회의 출석 의무를 다하자는 의미임과 동시에 회기 중 철저한 의정활동으로 민의에 보답하고자 하는 의지 표현임.

  (※ 별첨3-출석률 및 재석률 홈페이지 공개 관련 보도자료)

● **「본회의 생방송 중계 시스템」 도입**

- 요지 : 제2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19. 5.16.)부터 많은 시민들이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본회의를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본회의 생방송 중계 시스템」을 도입하였음.

- 내용
  - 경기도 31개 시·군 의회 중 18개 시의회가 대 시민 인터넷망 생방송을 실시하고 있으며, 13개 시·군 의회가 녹화영상(본회의)를 공개하는 있는 상황에서,
  - 고양시의회에서는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공공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19년 3월 의원총회 개최 후 대 시민 본회의 회의 중계 생방송 결정
  - 당초 상임위 회의도 생방송 중계를 계획하였으나 송출 장비 등의 추가설치가 필요한 관계로 우선적으로 본회의만 생방송을 실시하고 추후 상임위 회의까지 점진적 확대 예정
  - 추후 상임위 회의의 생방송 중계를 위해 시스템 점검 및 장비교체, 추가설치, 인터넷망 확충 등 자체 검토 추진 예정

- 시사점
  - 시민의 알권리 충족 및 모바일과 인터넷을 통한 의정활동의 참여 기회 확대 등 의회의 공공성과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 손쉽게 의정활동의 정보를 습득할 수 있어 대 시민 소통창구로서의 역할이 기대 됨.

(※ 별첨 4-본회의 생방송 중계 관련 보도자료)

● **「전자투표 시스템」도입**

- 요지 : 의사결정 과정 중 표결 시 기존 기립 또는 거수, 무기명 수기투표 방식에서 벗어나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 방식으로 전자투표 시스템을 구축하였음.

- 내용 :

- 고양시의회 회의규칙(제226회 제2차 정례회, '18.11.29.) 일부를 전자투표가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으며,
- 전자투표 시스템 구축 후 수차례 여러 표결 상황(기기 등록 및 미등록, 기명, 무기명, 의원 부재 시 등)을 가정한 시뮬레이션 모의투표를 실시하여 오류사항 최소화
- 제2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19. 5.7)부터 전자투표를 하였으며 현재까지 오류사항 없이 전자투표로 표결 실시

- 시사점

- 의사결정과정에 있어 전자투표 방식이 기존 수기 표결방식(거수 및 표결, 무기명 투표 시 투표함 준비 등)보다 획기적으로 시간이 단축되어 의원들이 다른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음.
- 또한 표결 결과가 대형 화면을 통해 신속하게 공개됨으로써 빠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의정활동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였음.

(※ 별첨 5-전자투표 시스템 구축 관련 보도자료)

● **의정기록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의정기록관리팀」 최초 신설**

- 요지 : 의정기록은 단순한 회의 기록이 아니라 의정활동의 과거를 통해 미래의 의정방향을 정하는 이정표이며, 시민과 의회를 연결해주는 매개체로서 그 중요성과 역할이 높아지고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공개할 의정기록관리팀을 신설하였음.

- 의정기록관리팀의 필요성

- 의정기록물 발간 업무의 특수성 제고

☞ 속기는 최초 기록 이후 맞춤법과 전문용어, 한자, 숫자, 중언부언하는 말, 시간 표기, 출석의원 체크 등 모든 회의상황을 가감하고 발언의 진의를 판단하여 기록하는 것으로 고도의 숙련이 필요하여 일반 행정업무와는 확연히 구분이 필요한 전문 업무임.

- 속기 사무업무의 증가

☞ 연구단체 활동, 상설 특별위원회 신설, 공청회 및 간담회, 의원총회 등으로 의정활동 범위가 광범위하게 확대됨에 따라 속기업무의 영역 또한 기존에 기록하던 정례회 및 임시회를 뛰어넘고 있으며 업무량의 증가에 따른 세분화되고 독립된 속기업무의 체계적 관리 필요

- 의정자료의 체계적 관리 필요

☞ 제1대 고양군의회부터 현재까지 영구보존문서의 양이 146권(180,555쪽)에 달하고 있어 날로 늘어나는 회의록 관리체계의 구축이 필수적인 상황임.

- 속기 담당 공무원의 소속감 고취 및 사기진작

☞ 속기업무의 특성상 업무부서가 의회사무국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전문 분야 업무 직원으로서의 자긍심 및 소속감을 고취시키고 사기 진작을 위해 의정기록물관리의 전담부서가 필요

- 의정기록관리팀 신설('19. 1월)

의사팀		의사팀	의정기록관리팀(신설)
13명	⇒	8명	5명
○ 의안접수 및 의사진행 ○ 위원회 보좌 ○ 의정기록 발간		○ 의안접수 및 의사진행 ○ 위원회 보좌	○ 의정기록 발간 ○ 의정기록 보존 ○ 의정기록 공개

- 시사점

-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의제가 복잡해지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입법행정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시민의 대의기구인 시의원의 의정활동 영역 또한 광범위하게 넓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임.
- '기록이 곧 한 시대의 역사'이듯 기존 업무범위를'의사업무 지원'의 보조적 개념에서 탈피하여 '의정기록'의 전문영역으로서의 입지를 구축한 것으로 의정기록관리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음.
- 팀 신설로 소속 직원은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의정기록물관리 업무에 매진하여 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기대할 수 있으며, 전문분야 직원으로서의 자긍심과 소속감이 고취되어 직원 사기 진작을 이룰 수 있음.

(※ 별첨 6-의정기록관리팀 신설 관련 보도자료, 별첨 7-의정기록관련 참고사항)

● 입법활동 지원을 위한「입법지원팀」신설

- 요지 : 폭넓은 의제발굴로 입법지원 업무를 강화하고 의안의 질적 향상 통한 입법전문성 확보를 위해 입법지원팀을 신설하였음.

- 입법지원팀의 필요성

• 자치법규에 대한 중요성 제고 및 관심 증대

☞ 자치법령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등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유사법령 및 상위법령 비교, 입법목적과 의안의 내용 및 구조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흠결 보정 필요

☞ 지방의회의 위상이 높아지고 지역현안에 대해 의회의 책임성이 강화되면서 자치법규에 대한 주민의 관심이 증대하고 있음.

• 의정활동의 범위 확대 등 자치입법의 수요 증대

☞ 의원들의 자치입법에 대한 수요 및 관심도 증대로 의원들이 자치입법의 설계단계부터 전문적인 입법지원을 요구하고 있음.

☞ 기존 조례 및 규칙 정비, 향후 의원 발의 증가 등 업무 범위가 광범위하게 확대될 예정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위해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함.

| 의원발의 안건의 폭발적 증가(고양시의회) |

(단위: 건)

의회대수	4대('02~ '06)	5대('06~ '10)	6대('10~ '14)	7대('14~'18)
의원발의안건	63	79	104	137

- 입법지원팀 운영 현황

• 입법지원팀 설치('18. 7월)

조직구성	업무분장	
○ 팀장: 임기제공무원 (6급 상당) 1명 ○ 팀원: 일반공무원(7급) 2명	○ 상위법 등 관련법규해석 및 자문 ○ 의원발의 조례안 관련 자료수집 ○ 의원발의 조례안 법적 검토 및 입법지원	○ 고양시의회 자치법규 검토 및 정비 ○ 고양시의회 및 지방자치 관련 법규집 제작 ○ 의원발의 조례안 검토 대장 관리

• 입법지원팀 업무지원 실적

☞ 고양시의회 5대 · 6대 · 7대 · 8대 의회 개원 후 1년 간 의정활동 비교 자료

	제5대	제6대	제7대	제8대
의원발의 건수	5건	28건	34건	78건
시정질문 건수	20건	30건	19건	51건
5분 자유 발언 건수	-	-	18건	27건

개원 후 1년 통계상 평균 한 회기에 입법지원팀에서 처리하는 안건(제정 · 개정 포함)의 경우 10건이며, 이는 제7대 의회 평균 3건에 비해 월등히 많은 수치로서 입법지원팀 신설로 의안 발의, 시정질문 등이 활발한 이루어지고 의원의 의정활동 역량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음.

※ 제5대 2006년 7월 1일 ~ 2010년 6월 30일, 제6대 2010년 7월 1일 ~ 2014년 6월 30일
제7대 2014년 7월 1일 ~ 2018년 6월 30일, 제8대 2018년 7월 1일 ~ 2022년 6월 30일

- 시사점

  •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의제가 복잡해지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입법행정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그에 맞추어 입법지원팀을 신설하였고 의안발의에 대한 입법지원을 통해 의정활동 역량 강화에 기여하였으며,

  • 법률 전문가의(일반임기제 6급) 채용으로 의안에 대한 공신력을 높이며 상위법 저촉 및 타 조례 중복 여부, 의무 부과 사항 확인 등 다각적인 교차 검토로 의안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음. ·

추진성과

● 경기도 최초로 시행된 「의원의 출석률 및 재석률 홈페이지 공개」는 회기 중 본회의 및 상임위에 집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의원 스스로가 마련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으며, 이를 통해 시민에 대한 알권리 충족 및 의회와 의원에 대한 신뢰도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한편, 「본회의 생방송 중계 시스템」 도입으로 알권리 충족 및 시민과의 소통이 더욱 원활해짐으로써 의회의 위상이 높아지며,

● 「전자투표 시스템」 구축으로 신속한 의사결정 사항 공개, 획기적인 시간 단축 등 의회의 투명성 및 효율성이 제고됨으로써 시민에게 신뢰받는 선진 의회, 열린 의회가 될 것으로 기대됨.

● 의정기록관리팀 신설을 통해 의정기록물의 기록 및 관리, 보존 등 전문 영역으로서의 의정기록물 관리에 효율성과 전문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 기존 의사팀과 분리됨으로써 입법 활동이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신속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으며 의원 의정활동 지원에 더욱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

● 입법지원팀 신설로 의원의 입법활동 역량이 강화되고 이를 통해 주민을 위한 다양한 지역 의제 발굴 및 의안 발의 등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할 수 있음.

별첨 1 의회 홈페이지 공개 화면 자료 및 보도자료

■ 의회 홈페이지 공개 화면 자료



■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출석률 및 재석률 현황표(엑셀자료)

제227회 임시회

본회의

구분	강경자	김덕심	김미수	김보경	김서현	김수환	김완규	김운남	김종민	김해련	김효금
참석 개의수	2	2	2	2	2	2	2	2	2	2	2
출석률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참석 회의수	6	6	6	6	6	6	6	6	5	6	6
재석률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83%	100%	100%
구분	문재호	박소정	박시동	박한기	박현경	손동숙	송규근	심홍순	양훈	엄성은	윤용석
참석 개의수	2	2	2	2	2	2	1	2	2	2	2
출석률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참석 회의수	6	5	6	6	6	6	2	6	6	5	6
재석률	100%	83%	100%	100%	100%	100%	100%	100%	100%	83%	100%
구분	이규열	이길용	이윤승	이해림	이홍규	장상화	정봉식	정연우	정판오	조현숙	채우석
참석 개의수	2	2	2	2	2	2	2	2	1	2	2
출석률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50%	100%	100%
참석 회의수	6	6	6	6	6	5	6	6	2	6	5
재석률	100%	100%	100%	100%	100%	83%	100%	100%	33%	100%	83%

■ 출석률 및 재석률 공개 관련 보도자료

일요서울

HOME > 지역본부 > 경기 북부

고양시의회, 의원 출석·재석률 홈페이지 공개

강동기 기자 승인 2019.01.27 00:12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일요서울 | 고양 강동기 기자] 고양시의회(의장 이윤승)는 지난 해 12월 17일부터 21일까지 열린 제227회 임시회 의원 출석·재석률을 23일 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의원 출석·재석률 공개는 경기도내 시·군 의회에서는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의원들의 성실한 회의 출석과 의정활동 몰입을 통한 내실 있는 회의운영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출석·재석률 공개는 지난 해 11월 29일 제226회 제2차 정례회에서 김서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내실 있는 회의운영을 위해 본회의, 각 상임위원회 등 회의 시 개의(개회), 속개, 산회 때마다 재석의원의 성명 및 수를 회의록에 기재하고, 회기 종료 후에는 의원별 회의 재석률을 고양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규칙 개정에 따라 고양시의회는 앞으로 회기 종료 후에 의원별 회의 출석·재석률을 지속적으로 고양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다.

이윤승 의장은"의원 출석·재석률 공개를 통해 내실 있는 의회운영을 도모하고, 의정활동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믿을수 있는 인터넷 언론 CNB뉴스 페이지 1/4

cnbNEWS

고양시의회,경기도 內 최초 '출석 및 재석률' 홈페이지 공개...시의원 출석 점수는?

김서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규칙' 개정 이후 앞으로 앞으로 회기 종료 후 홈페이지에 게재 공개

기사입력 2019.01.30 08:56:57 | 최종수정 2019.01.30 08:56:57 | 김진무 |



고양시의회 본회의 장면, 시의원들이 모두 참석해 있다. (사진= 고양시의회)

고양시의회는 지난 23일 경기도 내 시군의회 중 최초로 홈페이지에 의원들의 '출석 및 재석률'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이날 시의회 홈페이지에 엑셀파일 형태로 공개한 내용은 지난해 12월 17일부터 21일까지 열렸던 제227회 임시회의 본회의와 상임위에서 의원들의 출석 및 재석률이다. 의회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처음으로 공개된 본회의 '출석 및 재석률'에 의하면 총 33명의 시의원 중 송규근 의원과 정판오 의원이 동일하게 본회의 참석개의수가 2개 중 1개 참석, 참석회의수는 6개 중 2개만 참석하고 4번 불참을 기록해 불참한 횟수가 가장 많은 의원들이 됐다.

http://www.cnbnews.com/news/article_print.html?no=398650 2019-10-24

고양시의회, 의원 출석・재석률 홈페이지 공개

입력 : 2019-01-25 16:09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개정, 경기도내 처음 실시

[KFM 경기방송 = 이창문 기자] 고양시의회는 지난해 12월 17일부터 21일까지 열린 제227회 임시회 의원 출석・재석률을 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고양시의회 제226회 제2차 정례회 폐회 본회의 모습

의원 출석・재석률 공개는 경기도내 시・군 의회에서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지난해 11월 29일 제226회 제2차 정례회에서 김서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개정안'의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본회의와 각 상임위원회 등 회의 시 개의(개회), 속개, 산회 때마다 재석의원의 성명 및 수를 회의록에 기재하고, 회기 종료 후에는 의원별 회의 재석률을 고양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합니다.

이 기사와 관련된 기사



'인천e음카드' 캐시백 서비스, 오늘부터 3%·경기방송



단풍 보러 강원도까지 간다고? 수도권에도 설악산 뺨치는 단풍 명소들이 이렇게나 많다



추나요법, 안산에서도 실비가 된다고?

이윤승 고양시의장은 "의원 출석・재석률 공개를 통해 내실 있는 의회운영을 도모하고, 의정활동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창문 ewindow@hanmail.net

고양신문 페이지 1/2

인쇄하기 인쇄하기 창닫기

고양신문

고양시의회 의원 출석률 공개... '대체로 양호'

문화복지위원 상임위 회의 100% 출석

문화복지위원 상임위 회의 100% 출석
정판오 의원 본회의 출석 미흡

[고양신문] 고양시의회가 경기도에선 처음으로 시의원들의 회의 출석률을 공개했다. 시의회는 최근 시의회 홈페이지에 제227회 임시회(12월 17 ~ 21일)의 출석·재석률을 공개하고 내실 있는 의회운영을 다짐했다.

자료를 확인해본 결과 의원들의 출석·재석률은 대체로 양호한 편이었다. 본회의에선 6번의 출석체크가 있었는데 전체 33명의 시의원 중 6명을 제외한 27명이 100% 출석률을 보였다. 본회의 출석률이 가장 저조했던 정판오 의원은 6번 중 2회만 출석이 체크됐다. 김종민·박소정·염성은·장상화·채우석 의원은 1번씩 빠져서 83%의 출석률을 보였다.

출석·재석률은 회의를 개회하고 속개될 때마다 체크하는데, 회의 중간에 빠지는 의원들까지 확인하기 위해 회의가 중단되거나 끝나는 산회 시에서 출석체크를 한다.

상임위원회에서 가장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했던 곳은 문화복지위원회였는데, 15번의 출석체크에 8명의 시의원이 100% 출석률을 보였다. 출석체크를 20번 한 건설교통위원회도 김종민 의원(출석률 85%)을 제외하고 모두 100% 출석했다. 환경경제위원회는 심홍순 의원(출석률 81%)을 제외하고 100%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출석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상임위는 기획행정위원회였다. 22번의 출석체크에서 100% 출석률을 보인 의원은 이홍규 의원이 유일했다. 강경자(68%), 김보경(73%) 의원이 가장 낮은 출석률을 보였고 그 뒤로 이규열·채우석(77%) 의원도 다섯 차례 출석하지 못했다.

이번 출석·재석률 공개는 지난해 11월 29일 제226회 정례회에서 김서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개정에 따른 것이다. 회의 시 개의(개회), 속개, 산회 때마다 재석의원의 성명과 수를 회의록에 기재하고, 회기 종료 후에는 의원별 회의 재석률을 고양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고양시의회는 규칙 개정에 따라 앞으로 회기 종료 후에 의원별 회의 출석·재석률을 지속적으로 고양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다.

이성오 기자 rainer4u@mygoyang.com

http://www.mygoyang.com/news/articlePrint.html?idxno=49745 2019-10-24

이뉴스투데이

HOME > 전국 > 기타

고양시의회, 의원 출석·재석률 홈페이지에 공개

이배윤 기자 승인 2019.01.25 18:32



[사진제공=고양시의회]

[이뉴스투데이 이배윤 기자] 고양시의회(의장 이윤승)는 지난 해 12월 17일부터 21일까지 열린 제227회 임시회 의원 출석·재석률을 23일 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의원 출석·재석률 공개는 경기도내 시·군 의회에서는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의원들의 성실한 회의 출석과 의정활동 몰입을 통한 내실 있는 회의운영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출석·재석률 공개는 지난 해 11월 29일 제226회 제2차 정례회에서 김서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내실 있는 회의운영을 위해 본회의, 각 상임위원회 등 회의 시 개의(개회), 속개, 산회 때마다 재석의원의 성명 및 수를 회의록에 기재하고, 회기 종료 후에는 의원별 회의 재석률을 고양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규칙 개정에 따라 고양시의회는 앞으로 회기 종료 후에 의원별 회의 출석·재석률을 지속적으로 고양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다.

이윤승 의장은"의원 출석·재석률 공개를 통해 내실 있는 의회운영을 도모하고, 의정활동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 본회의 생방송 중계 시스템 구축 관련 보도자료

파이낸셜뉴스 10px 12px 인쇄하기 취소

고양시의회 의정활동 생중계 16일 개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5.14 02:30 수정 : 2019.05.14 02:30



제231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사진제공=고양시의회

[고양=파이낸셜뉴스 김근주 기자] 고양시의회가 앞으로 본회의를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시민에게 실시간 생방송으로 제공해 시민의 알권리 충족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고양시의회는 오는 16일 열릴 제2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부터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의정활동을 실시간으로 생중계한다고 13일 밝혔다.

고양시의회는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를 구현하고자 2019년 본예산에 인터넷 생방송 시스템 구축 예산을 확보해 사업 착수 및 시험 가동과 점검을 마친 상태다.

앞으로 시민 누구나 고양시의회 홈페이지에서 본회의 생방송에 접속하면 회기 중 본회의 의사진행 과정 전반을 생방송으로 생생하게 볼 수 있다.

이윤승 의장은 "인터넷 생방송 시스템 구축으로 시민과 지금보다 더 가깝게 소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본회의 생방송을 통해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의회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나가는 등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 열린 의회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김근주 기자

news1

전국 > 경기

고양시의회, 16일부터 본회의 인터넷·모바일 생방송



경기 고양시의회(의장 이윤승)는 앞으로 회기중 본회의 장면을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시민들에게 실시간 생방송으로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고양시의회는 오는 16일 열리는 제2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부터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의정활동을 실시간으로 생중계 하기로 했다.

고양시의회는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2019년 본예산에 인터넷 생방송 시스템 구축 예산을 확보해 사업착수 및 시험가동과 점검을 마친 상태다.

앞으로 시민 누구나 고양시의회 홈페이지에서 본회의 생방송에 접속하면 회기 중 본회의 의사진행 과정 전반을 생방송으로 생생하게 볼 수 있다.

이윤승 의장은 "인터넷 생방송 시스템 구축으로 시민들과 더 가깝게 소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본회의 생방송을 통해 시민의 알권리를 증족하고, 의회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나가는 등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 열린 의회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일보

HOME > 지역사회 > 고양시

고양시의회, 인터넷 생방송 시스템 구축

송주현 기자 승인 2019.05.15

고양시의회는 어디서든 시민들이 본회의를 시청 할 수 있도록 인터넷 생방송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4일 밝혔다.

시의회는 오는 16일 열리는 제2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부터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의정활동을 실시간으로 생중계할 방침이다.

현재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 2019년 본예산에 인터넷 생방송 시스템 구축 예산을 확보, 사업 착수 및 시험 가동과 점검을 마친 상태다.

앞으로 시민 누구나 고양시의회 홈페이지에서 본회의 생방송에 접속하면 회기 중 본회의 의사진행 과정 전반을 생방송으로 생생하게 볼 수 있다.

이윤승 의장은 "인터넷 생방송 시스템 구축으로 시민들과 더 가깝게 소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본회의 생방송을 통해 시민의 알권리를 증족하고, 의회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나가는 등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 열린 의회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고양=유재원 · 송주현 기자

저작권자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송주현 기자

HOME (/) > 포털+ (/news/articleList.html?sc_section_code=S1N17) > 경기 (/news/articleList.html?sc_sub_section_code=S2N87)

고양시의회, 인터넷 생방송 시스템 구축

임창무 기자 승인 2019.05.14

16일 제231회 임시회 2차 본회의부터 생중계



경기 고양시의회는 앞으로 본회의를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시민들에게 실시간 생방송으로 제공한다. (사진=고양시의회)

경기 고양시의회는 앞으로 본회의를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시민들에게 실시간 생방송으로 제공함에 따라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의회는 오는 16일 열리는 제2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부터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의정활동을 실시간으로 생중계한다고 14일 밝혔다.

시의회는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2019년 본예산에 인터넷 생방송 시스템 구축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 착수 및 시험 가동과 점검을 마쳤다.

앞으로 시민 누구나 시의회 홈페이지에서 본회의 생방송에 접속하면 회기 중 본회의 의사진행 과정 전반을 생방송으로 생생하게 볼 수 있다.

이윤승 의장은 "인터넷 생방송 시스템 구축으로 시민들과 더 가깝게 소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본회의 생방송을 통해 시민의 알권리를 증족하고, 의회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나가는 등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 열린 의회로 거듭나겠다" 고 말했다.

[신아일보] 고양/임창무 기자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인일보

고양시의회 본회의, 내일부터 인터넷·모바일 생중계

김환기 기자

고양시의회(의장·이윤승)가 본회의를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시민들에게 실시간 생방송으로 제공한다.

시의회는 16일 열리는 제2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부터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의정활동을 실시간으로 생중계한다고 14일 밝혔다.

고양시의회는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2019년 본예산에 인터넷 생방송 시스템 구축 예산을 확보해 사업 착수 및 시험 가동과 점검을 마쳤다.

앞으로 시민 누구나 고양시의회 홈페이지에서 본회의 생방송에 접속하면 회기 중 본회의 의사진행 과정 전반을 생방송으로 생생하게 볼 수 있다.

이윤승 의장은 "인터넷 생방송 시스템 구축으로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의회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나가는 등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 열린 의회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

■ 전자투표 시스템 구축 관련 보도자료

고양신문 페이지 1 / 2

인쇄하기 인쇄하기 창닫기

고양신문

고양시의회, 전자기명투표로 신뢰도 높인다



▲ 지난 11월 열린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모습

"출석확인 강화해 참여율 높일 것"
"5분발언 인원제한 두지 않았으면"
투명하고 적극적인 의회활동 기대

[고양신문] 고양시의회가 조만간 본회의장에 전자투표 장치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표결시 찬반 의사를 본회의장 전광판에서 곧바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시의원들의 본회의와 상임위 출석여부 확인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한 회기에 5명으로 제한했던 5분 자유발언은 인원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지난 11일 3개 정당 전체 시의원들이 모인 의원총회에서 결정됐다. 이번에 합의된 내용은 조례개정이 아닌 회의규칙을 바꾸면 바로 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빠르면 다음 회기부터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단 전자투표는 예산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내년 초쯤에야 적용될 예정이다.

모든 시의원들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번 결정에 합의한 이유는 의회 운영의 투명성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http://www.mygoyang.com/news/articlePrint.html?idxno=48234 2019-10-24

고양신문 페이지 2 / 2

그동안 시의회 본회의장에서는 손을 들거나 기립해서 안건에 대한 찬반투표를 했지만, 전자투표가 도입되면 방청객들은 어느 시의원이 찬반으로 투표했고 누가 기권했는지 신속하고 정확히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전자투표는 기명투표가 원칙이기 때문에 시의원들의 책임감도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윤용석 의회운영위원장은 "의원들 간 갈등의 소지가 있는 시의회 원구성 투표를 제외하고는 앞으로 대부분의 안건들이 전자기명투표로 시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회 출석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회의 초기(계의)에만 확인하던 출석 여부를 산회 시에도 다시 확인해 명단과 수를 기록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의회기간 동안 시의원들이 회의 초반에만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는 행위를 막자는 의도다.

이와 관련해 한 시의원은 "임시회나 정례회가 열리는 시기에도 일부 시의원이 회의에 오지 않고 지역행사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되면 의회활동에 전념한 시의원들이 지역민들로부터 오히려 욕을 먹는 경우가 있다. 심지어 정족수가 모자라 회의가 진행되지 않는 사례도 있다. 회의기간 중에는 의회활동에 집중하는 것이 정치인의 도리이기 때문에 의회출석이 지역행사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지키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5분 자유발언에 참여 제한을 두지 않기로 겉토한 것은 이번 시의회의 특징을 그대로 반영한 결과다. 지난 8월 임시회에서는 13명의 시의원이 시정질의에 참여해 이재준 시장이 아침부터 오후 7시까지 각 사안별로 자세히 답변에 임했다. 13명 시의원이 시정질의를 요청한 사례는 이번 시의회가 유일했다. 그만큼 이번 제8대 시의원들이 의회활동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 것.

지난 5일, 9월 임시회 5분발언에는 많은 시의원들이 참여의사를 밝혔지만 5명의 의원만이 참여할 수 있었다. 현재 의회 회의규칙에 '한 회기에 5명 이내로 발언을 제한한다(접수순서)'는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이에 시의원들은 의원총회에서 회의규칙을 바꿔 5분발언 인원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많은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공개발언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에 합의했다.

윤용석 의회운영위원장은 "3당이 참여한 의원총회에서 이렇게 의미 있는 내용들이 논의될 수 있어서 기쁘다"며 "더욱 투명하고 적극적인 의회활동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오 기자 rainer4u@mygoyang.com

<저작권자 © 고양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쇄하기

http://www.mygoyang.com/news/articlePrint.html?idxno=48234 2019-1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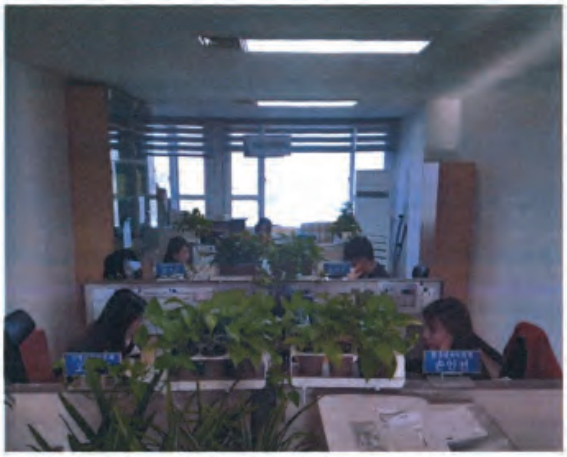
■ 의정기록관리팀 신설에 따른 보도자료

연합뉴스 인쇄하기 닫기

고양시의회 사무국, 의정 기록관리팀 신설

기사입력 2019/01/28 14:11 송고

(고양=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도 고양시의회는 회의록 등 의정 기록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회사무국 내 의정 기록관리팀을 신설했다고 28일 밝혔다.



고양시의회 사무국, 의정 기록관리팀 신설
[고양시의회 제공]

의정 기록관리팀은 충실한 기록을 통해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의회 민주주의를 지원하는 등 의정 기록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 기초의회 사무국 중 기록관리팀을 만든 곳은 처음으로, 시가 최근 단행한 조직개편에 맞춰 이뤄졌다.

의사팀에서 담당하던 의정 기록 업무를 분리해 시의회 사무국이 종전 4개 팀에서 5개 팀으로 확대·개편됐다.

팀장 1명, 주무관 4명으로 구성됐으며 회의록 작성, 발간, 열람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이윤승 의장은 "본회의를 비롯해 각 상임위원회 등 모든 회의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작성하는 등 회의록(전자회의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ns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1/28 14:11 송고

OBS경인TV

인쇄하기

OBS NEWS

HOME > 경인세상 > 경기

고양시의회 사무국, 의정 기록관리팀 신설

경기도 고양시의회는 회의록 등 의정 기록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회사무국 내 의정 기록 관리팀을 신설했다고 오늘 밝혔다.

의정 기록관리팀은 충실한 기록을 통해 시민의 알 권리를 증즉시키고 의회 민주주의를 지원하는 등 의정 기록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 기초의회 사무국 중 기록 관리팀을 만든 곳은 자음으로, 시가 최근 단행한 조직개편에 맞춰 이뤄졌다.

의사팀에서 담당하던 의정 기록 업무를 분리해 시의회 사무국이 종전 4개 팀에서 5개 팀으로 확대개편됐다.

팀장 1명, 주무관 4명으로 구성됐으며 회의록 작성, 발간, 열람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이윤승 의장은 "본회의를 비롯해 각 상임위원회 등 모든 회의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작성하는 등 회의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

OBS경인TV webmaster@obs.co.kr

<저작권자 © OBS경인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쇄하기

http://www.obsnews.co.kr/news/articlePrint.html?idxno=1139070 2019-10-24

고양시의회, 기초의회 최초 의정기록관리팀 신설

입력 : 2019-01-28 12:43

사무국 5개팀 확대 개편...회의록 체계적인 관리

[KFM 경기방송 = 이창문 기자] 고양시의회가 회의록 등 의정기록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회사무국 내 의정기록관리팀을 전국 기초의회 사무국 중 최초로 신설했습니다.



전국 기초의회 최초로 고양시의회가 의회사무국에 설치한 의정기록팀 모습

이번 의정기록관리팀 신설은 시가 지난 21일자로 단행한 조직개편에 맞춰 이뤄졌고, 의사팀에서 담당하던 의정기록 업무를 분리해 시의회 사무국이 종전 4개팀에서 5개팀으로 확대개편됐습니다.

새롭게 구성한 의정기록관리팀은 팀장 1명, 주무관 4명으로 구성됐고, 회의록의 작성, 발간, 열람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특히 본회의를 비롯해 각 상임위원회 등 모든 회의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작성하는 등 회의록(전자회의록)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의정기록에 대한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이 기사와 관련된 기사 by


'인천e음카드' 캐시백 서비스, 오늘부터 3%-경기방송


단풍 보러 강원도까지 간다고? 수도권에도 절약산 명지는 단


수소차 관련주, 인공지능은 일고 있었다

이윤승 고양시의장은 "의정기록은 지방자치의 역사를 기록하는 중요한 일인 만큼 의정기록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의정기록관리팀을 신설했다"며 "시의회가 변화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며 전문성 있는 선진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news1

전국 > 경기

고양시의회, 전국 기초의회 최초 '의정기록관리팀' 신설



경기 고양시의회(의장 이윤승)는 회의록 등 의정기록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회사무국 내 의정기록관리팀을 신설했다고 28일 밝혔다.

의정기록관리팀 신설은 충실한 기록을 통해 시민의 알 권리를 증즉시키고 의회 민주주의를 지원하는 등 의정기록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기초의회 사무국 중 최초로 만들어졌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의사팀에서 담당하던 의정기록 업무가 분리돼 시의회 사무국이 종전 4개팀에서 5개팀으로 확대됐다.

새롭게 구성한 의정기록관리팀은 회의록의 작성, 발간, 열람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특히 본회의를 비롯해 각 상임위원회 등 모든 회의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작성하는 등 회의록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의정기록에 대한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윤승 의장은 "의정기록은 지방자치의 역사를 기록하는 중요한 일인 만큼 의정기록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의정기록관리팀을 신설했다"고 말했다.

경기신문

HOME > 경기

고양시의회, 전국 최초 의정기록관리팀 신설

고중오 기자 승인 2019.01.28 20:18

고양시의회가 전국 기초의회 사무국 중 최초로 의정기록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회사무국 내 의정기록관리팀을 신설했다고 28일 밝혔다.

의정기록관리팀 신설은 충실한 기록을 통해 시민의 알 권리를 증즉시키고 의회 민주주의를 지원하는 등 의정기록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의정기록관리팀 신설은 시가 지난 21일자로 단행한 조직개편에 맞춰 이뤄졌으며, 의사 팀에서 담당하던 의정기록 업무를 분리함으로써 시의회 사무국이 기존 4개 팀에서 5개팀으로 확대개편됐다.

이에 따라 새롭게 구성된 의정기록관리팀은 팀장 1명, 주무관 4명으로 이뤄지며, 이들은 회의록의 작성, 발간, 열람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또 본회의를 비롯해 각 상임위원회 등 모든 회의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작성하는 등 회의록(전자회의록)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의정기록에 대한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윤승 의장은 "시의회가 변화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며 전문성 있는 선진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양=고중오기자 gjo@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중오 기자

별첨 2 의정기록팀 관련 참고사항

■ 의정기록관리팀 주요 업무

구 분	업 무
발 간	○ 의회 회의록 작성 및 발간 ○ 회의 전반에 관련된 백데이터 수록 관리 ○ 속기장비 관리 및 속기사 배치, 운영에 관한 사항 ○ 의장단 간담회 등 대외지원 속기업무
보 존	○ 영구회의록의 보존 및 관리 ○ 회의 녹음보존 업무
공 개	○ 회의록 자료의 복사·열람 신청 관리 ○ 홈페이지 회의록 업데이트(전자회의록 관리)

■ 의정기록물 업무 흐름도(13단계)

① 회의 속기 → ② 번문(편집) → ③ 교정(1차) → ④ 교정(2차) → ⑤ 수정 → ⑥ 임시회의록 등록 → ⑦ 교정(3차) → ⑧ 교정(4차) → ⑨ 출력(결재) → ⑩ 자료 첨부 → ⑪ 최종 검토 및 교정 → ⑫ 회의록 발간(인쇄) → ⑬ 공개회의록 전환

■ 의정기록물 발간 추이

대 수	생 산	누 적	비고
1대	7권(8,659p)		
2대	18권(22,266p)	25권(30,925p)	
3대	14권(17,318p)	39권(48,243p)	
4대	25권(30,925p)	64권(79,168p)	
5대	23권(28,451p)	87권(107,619p)	
6대	28권(34,636p)	115권(142,255p)	
7대	29권(35,873p)	144권(178,128p)	
8대	2권(2,474p)	146권(180,602p)	

※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 ② 회의록은 의회에 보존하고 보존연한은 영구

우수사례 요약서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02 정책위원회 제도 도입 운영, 의정 역량 강화 및 전문성 제고



분야 : 의회 운영 효율성 제고

기관명 충청남도의회

제출자 충청남도의회 정책위원회

목적

- 자치법규 입안 등 의정활동 지원과 도, 교육행정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및 지역현안에 대한 연구, 개선책 마련 대안 제시
- 지방정부의 두 수레바퀴로서의 역할 충실히 수행, 도민 행복실현

■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안의 발굴·조사·연구 제시로 의정발전 견인
■ 도정 및 교육행정 현안 이슈에 대한 연구를 통한 정책적 대안 제시 등
■ 입법정책 연구용역과제의 심의·선정 및 연구용역 결과물의 평가·활용관리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향

- 도의회의 도정·교육행정 정책대안 제시를 위한 연구 기능 미흡
- 정책연구 개발을 위한 도의회의 기구를 마련 견인차 역할 필요

  ⇨ **사후·소극적 대안 제시 ⇒ 정책을 발굴·제안하는 의회로의 전환**

추진경과 및 절차

- 충청남도의회 정책위원회 설치 정책연구기능 제도적 도입

  - 충청남도의회 정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정 : 2018. 11. 20.
  -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연구 용역 관리 조례 : 2018. 11. 20.

● 정책위원회 구성 20명(의원10명, 외부전문가10명) : 2019. 1. 7.

※ 외부전문가(10명) : 행정 3, 문화 1, 복지 1, 농업·경제 1, 건설 1, 도시공학 1, 교육 1, 기타 1

– 정책위원회 소위원회 설치 : 3개 분과 기능설 세분(분과별 6~7명)

• 1분과(행정자치, 경제, 농·어업), 2분과(문화, 환경, 건설, 소방)
3분과(교육, 보건, 복지)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 자체과제 수행

⇨ **정책위원회 및 소위원회 17회(전체 4, 소위원회 13) 개최를 통해 도, 교육행정 및 의정 관련 과제 발굴 용역 및 자체연구 수행**

● 입법정책 연구용역 제안 과제 9건 중 6건 심의 선정(예산액 1억원)

| 추진절차 |

연구과제 접수 (의원제안)	⇨	제안과제 심의 (예산범위 고려)	⇨	연구용역 착수·중간·최종보고 자문	⇨	연구용역 결과 (공유 및 평가)
상임위·정책위		**정책위원회**		**분과별 소위원회**		**정책위원회**

| 연구용역 과제 6건 선정 용역 |

①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결산분석 재정지표 선정 및 활용방안(1분과)
② 충남 농민기본소득(가칭) 보장방안(1분과)
③ 지역복지정책과 사회적 농업 접목 방안(2분과)
④ 전통시장 및 주택·상가 밀집지역 LPG사용실태와 위험성 저감 방안(2분과)
⑤ 충남형 인문학적 상상력 기반 창의력 개발 프로그램 연구개발(3분과)
⑥ 충청남도의회 예·결산분석 중장기적 운영 방향(전체)

● 소위원회별 연구과제 4건 선정, 자체연구 및 정책자문 수행

| 소위원회별 자체 과제 수행 4건 |

① 드론 관련 산업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연구(1분과)
② 블록체인 기술기반 축산물 유통시스템 개발을 위한 연구(1분과)
③ 충남문화 관광 자원 연구(2분과)
④ 4차 산업혁명 발전을 위한 기초교육 육성사업 토론회(제3분과)
–·지역기반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교육혁신 플랫폼 구축방안

추진성과

● 도정 주요 현안사항을 엄선하여 도의회에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수행하고 정책위원회 위원과 도의원이 중간과정에 활발하게 참여

- 용역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에 도의회의원과 집행부 관련부서 관계공무원, 전문가가 함께 참여 토론과 의견개진의 장 활용

⇨ **도의의원 의정역량 강화 및 집행부에 대한 현안 해결방향 제시**

● 연구용역에 이르지 않는 과제는 3개 소위원회별 자체 연구과제로 선정 13회의 회의와 토론 갖고 대안 마련과 조례 제정 등

● 2020 신설된 의원 정책개발비 조례의 기준에 따라 안정적 집행 가능

● 정책자문위원회 활동 등 연계 활발한 의원 자치입법 활동 확대

- 2019년 전체 조례 제·개정 152건 중 의원발의 116건(77.6%) ※ '19. 9월말 현재

※ 제11대 의회 220건 중 148건(67.2%), 제10대 의회 448건 중 189건(42.2%)
제9대 의회 419건 중 176건(42.0%), 제8대 의회 324건 중 103건(31.8%)

향후계획

● 입법정책 연구용역 결과와 소위원회별 자체 연구 성과품 공유

- 2019. 11. 26. 100여명(도의원 42, 전문가 10, 용역기관 6, 집행부등 40)
-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도의정 및 도, 교육행정 현안의 개선 방향 제시

● 연구용역 등 결과를 행정에 반영한 결과 등을 고려 성과품 평가

- 평가 결과를 차년도 입법정책 연구용역 등 정책개발에 피드백

● 정책개발 연구용역 심사·자문 확대 : '19년 100백만 → '20년 300백만원

- 의원 연구모임 등록 심사 및 연구모임별 연구과제 심사·선정, 연구결과 평가

※ 의원정책개발비 210백만원, 정책개발 연구용역비 90백만원

● 정책개발을 위한 정책자문, 토론회·세미나 등 확대 및 용역결과·활용도 평가

● 분과별 과제연구 활동을 통해 도정·교육행정에 대한 정책대안 제시

붙임 보도자료

대전투데이

2019년 01월 11일 (금)
정치 02면

충남도의회 '제1기 정책위원회' 출범

활발한 입법 및 정책연구활동으로 지방의회 역할 및 위상 강화 기대

충남도의회(의장 유병국)는 10일 도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기 정책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

'제1기 정책위원회'는 도의원 10명, 외부 전문가 10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됐으며, 전문적인 정책연구 활동을 위해 위원회 산하에 행정자치경제능어연구, 문화환경건설소방연구, 교육보건복지연구 등 3개 소위원회를 두었다.

이들은 충남도의회의 싱크탱크로서 충남도의회가 정책의회로 나아갈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된다.

이 날 '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명숙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은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정책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위원님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위촉식에는 충청남도의회 유병국 의장(천안10, 더불어민주당)이 참석해 '제1기 정책위원회' 출범을 격려해 주었다.

한편, 부위원장에 박정원 충남도립대 교수, 1분과 소위 위원장에 안장헌 의원, 제2분과 소위 위원장에 김동일 의원, 3분과 소위 위원장에 한옥동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유병국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위촉된 위원님들께서는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220만 도민들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고, 주민이 원하는 실질적인 선진 지방의회가 정립될 수 있도록 주어진 임기동안 정책 대안제시와 연구에 총력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도민의 안전 · 민생 · 일자리 정책 등은 물론 지방의회 역할과 위상을 강화하는 활발한 정책연구 활동을 당부하며 의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정환기자

201 X 117 mm

대전투데이

2019년 01월 11일 (금)
정치 02면

충남도의회 '제1기 정책위원회' 출범

활발한 입법 및 정책연구활동으로 지방의회 역할 및 위상 강화 기대

충남도의회(의장 유병국)는 10일 도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기 정책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

'제1기 정책위원회'는 도의원 10명, 외부 전문가 10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됐으며, 전문적인 정책연구 활동을 위해 위원회 산하에 행정자치경제능어연구, 문화환경건설소방연구, 교육보건복지연구 등 3개 소위원회를 두었다.

이들은 충남도의회의 싱크탱크로서 충남도의회가 정책의회로 나아갈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된다.

이 날 '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명숙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은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정책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위원님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위촉식에는 충청남도의회 유병국 의장(천안10, 더불어민주당)이 참석해 '제1기 정책위원회' 출범을 격려해 주었다.

한편, 부위원장에 박정원 충남도립대 교수, 1분과 소위 위원장에 안장헌 의원, 제2분과 소위 위원장에 김동일 의원, 3분과 소위 위원장에 한옥동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유병국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위촉된 위원님들께서는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220만 도민들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고, 주민이 원하는 실질적인 선진 지방의회가 정립될 수 있도록 주어진 임기동안 정책 대안제시와 연구에 총력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도민의 안전 · 민생 · 일자리 정책 등은 물론 지방의회 역할과 위상을 강화하는 활발한 정책연구 활동을 당부하며 의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정환기자

201 X 117 mm

충청투데이

2019년 02월 15일 (금)
정치 05면

충남도의회 제1기 정책위원회 분과별 소위 열어

충남도의회(의장 유병국) '제1기 정책위원회'는 14일 오후 도의회 회의실에서 분과별 첫번째 소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1기 정책위원회는 충남도의회의 활발한 의정 연구활동 및 도의회 역량강화를 위해 출범됐으며 구성원으로는 위원장인 김명숙 의원을 비롯해 충남도의원 10명과 분야별 외부전문가 10명 등 총 20명이 활동하고 있다. 소위원회는 실질적인 연구 성과 도출을 위해 ▲행정자치경제농업분과 ▲문화환경건설소방분과 ▲교육보건복지분과 등 3개 분과로 나눠 구성돼 있다. 이사 소위원회에서는 각 분과별 연구과제 선정 등 활발한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연간 운영 방향 등을 논의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이번에 새롭게 출범한 정책위원회는 정책연구용역과제 선정 및 평가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면서 "도의회에서는 기능별 소위원회가 활발한 연구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통해 정책위원회가 도 의정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57@cctoday.co.kr

113 X 81 mm

대전투데이

2019년 03월 14일 (목)
정치 02면

충남도의회 '제1기 정책위원회 2차 회의' 개최

2019년 입법정책연구용역 기본계획 변경계획안 심의 확정



충남도의회 제 1기 정책위원회(위원장 김명숙)는 지난 3월 12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정책위원회 2차 회의를 갖고 '2019년 입법정책연구용역 기본계획 변경계획안' 심의 의결 및 정책위원회를 비롯한 소위원회 운영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 했다.

이날 심의한 연구용역 기본계획 변경안의 주요골자로는 향후 추가 확보할 연구용역비 5천만원을 감안해 연구용역사업 확대 및 정책위원회 위원이 정책연구과제를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또한, 연구용역을 수행할 경우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등에 전문가인 정책위원회 위원을 참여시켜 의견을 제시 · 반영할 수있도록 통로를 확대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과 관련 다양한 의견 제안 ▲소위원회 운영 시 전문가 자문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조례에 반영하자는 의견 ▲소위원회별 분과 연구기능을 활발히 하기 위해 부족한 예산을 추가 확보해 연구활성화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이 제안 되었다.

김명숙 위원장은 "정책위원회는 도의회의 입법정책 관련 연구용역과제 선정 등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기능과 소위원회 별로 도민이 원하거나 집행부에 제안할 수 있는 개선과제를 선정해 연구토론을 거쳐 개선정책을 발굴해 내는 등 투 트랙로 운영 할 계획이며, 활발한 위원회 활동을 위해 위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 제안된 개선방안 등은 정책위원회 운영 및 연구용역 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김정환기자

149 X 131 mm



중앙매일

2019년 08월 01일 (목)
종합 02면

충청남도의회, 예 · 결산분석 중장기적 운영 방향 마련

'19년 상반기 입법정책 연구활동 성과 분석 · 의원정책개발비 운영방안 논의

충남도의회는 '예 · 결산분석 중장기적 운영방향 마련' 과 2020년도 신설되는 의원정책개발비 집행 · 운용 관련 자문을 위해 충청도의회 정책위원회(위원장 김명숙)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위원회의에서는 ▲ 자체연구사업에 대한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연구용역 추진상황 ▲ 정책위원회 소위원회별 정책자문 추진상황 ▲ 의원정책개발비 신설에 따른 예산운용 방향 ▲ 충청남도의회 예 · 결산분석 중장기적 운영 방향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순으로 진행됐다.

입법정책 연구용역은 5개 상임위원회 각 1개 과제와 입법예산정책담당관 1개과제 등 총 6개과제가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도 11월중 6개 과제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끝으로 성과품을 납품받을 예정이다.

정책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자체 발굴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정책자문 사항은 총 4건으로 ▲드론관련 산업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연구 ▲블록체인 기술기반 참여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연구 ▲충남 문화관광 자원 연구 ▲용도지역변경 등 개선방안 연구가 진행중에 있으며 오는 2019년 10월까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충청남도의회는 위 입법정책 연구용역과 소위원회별 정책자문이 완료되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조례를 제정하거나 집행부와 연구결과를 공유하여 도정과 교육행정에 접목토록 함으로써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도의회 상을 정립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금년 7월 행정안전부의 2020년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에 따라 2020년도 신설될 의원정책개발비는 지방의회에 등록된 의원연구모임에서 정책개발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사용하게 되어있다.

의원정책개발비는 금년 하반기 행정안전부의 2020년 세출예산집행지침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집행기준을 설정하기로 하였으며, 관련 자치법규 개정, 의원 정책개발비 예산운용계획 수립 등 후속조치도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충청남도의회 예 · 결산분석 중장기적 운영방향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재정의 효율적이고 건전한 집행을 위해 도의회가 전문적인 예 · 결산 심사 등을 통해 재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에 모두 공감했으며, 도의회는 짧은 법정기한 내에 다규모의 예산을 심의 · 의결해야하는 어려운 상황으로 예 · 결산에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예산 관련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인식을 같이 했다.

김명숙 정책위원회 위원장은 도의회의 주요 기능인 재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충청남도의회의원들에 예산 및 지방재정에 관한 자문을 수행할 수 있는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설치 ▲예산정책조직의 확대 ▲충청남도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분석 기법 제시 등을 주문했다.

충청남도의회 입문수 입법예산정책담당관은 앞으로 충남도의회 의원의 도정발전을 위한 정책연구가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천수 기자

241 X 128 mm



금강일보

2019년 08월 01일 (목)
정치 04면

충남도의회 의원정책개발비 운용방안 논의

충남도의회는 31일 정책위원회를 열고 예·결산 분석 중장기적 운영 방향 마련과 내년부터 신설되는 의원정책개발비 집행·운용 등에 관한 협의를 했다.

이날 정책위에서는 자체연구사업에 대한 도의회 입법정책연구용역 추진상황과 정책위 소위원회별 정책자문 추진상황, 의원정책개발비 신설에 따른 예산운용 방향 등에 대하 논의하고, 도의회 예·결산 분석 중장기적 운영 방향 연구용역 중간보고 등도 가졌다.

도의회 정책위는 이 자리에서 6개 과제의 입법정책 연구용역과 4건의 소위원회별 정책자문이 완료되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조례를 제정하거나 집행부와 연구결과를 공유해 도정과 교육행정에 접목하기로 했다. 또 내년에 신설될 의원정책개발비는 행정안전부의 세출예산집행지침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집행기준을 정하고 관련 자치법규 개정, 의원정책개발비 예산운용계획 수립 등 후속조치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예·결산 분석 중장기적 운영방향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예·결산 심사 등을 통해 재정에 대한 견제·감시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예산 관련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명숙 정책위원장은 "재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예산 및 지방재정에 관한 자문을 수행하는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설치와 예산정책조직의 확대 등이 필요하다"라고 주문했다. 내포=이석호 기자 ilbolee@ggilbo.com

140 X 98 mm

중앙매일

2019년 10월 22일 (화)
종합 02면

충남도의회 정책위 3분과 "4차 산업발전, 기초교육 육성 관건"

연구과제 토론회 열고 4차 산업 선도 위한 교육 플랫폼 개발 논의

충남도의회 정책위원회 3분과(위원장 한옥동)는 21일 호서대학교 천안캠퍼스에서 '4차 산업혁명 발전을 위한 기초교육 육성사업' 을 주제로 연구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옥동 3분과 위원장이 좌장을 맡았고 이노신 호서대 교수가 '지역기반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교육혁신 플랫폼 구축 방안' 을 주제로 발제 했다.

토론자로는 박병렬 엄사초 교장과 이태경 충남테크노파크 자동차센터장, 정윤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황영섭 선문대 교수가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4차 산업혁명 발전을 위한 기초교육 육성 강화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들은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우리 앞에 와 있는 피할 수 없는 현실적 과제" 라며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교육프로세서 운영과 지원을 통해 누구보다도 우리가 앞장서 나가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초 · 중등 교육기관에서 대학과 산업현장으로 교육 연계성을 확인하고 중장기적으로 기초교육 육성을 통해 4차 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교육 플랫폼 개발에 중점을 둬야 한다" 고 입을 모았다.

한옥동 위원장은 "2016년 스위스 다보스 경제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가 발표됐다" 며 "전세계적인 4차 산업혁명 시대 무한경쟁에서 우리가 앞장서 나갈 수 있도록 기초교육 육성을 통한 교육역량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오천수 기자

234 X 74 mm

대전투데이

2019년 10월 22일 (화)
정치 02면

충남도의회 정책위 3분과, 연구과제 토론회 열어

"4차 산업발전, 기초교육 육성 관건" 4차 산업 선도 위한 교육 플랫폼 개발 논의



충남도의회 정책위원회 3분과 위원장 한옥동)는 21일 호서대학교 천안캠퍼스에서 '4차 산업혁명 발전을 위한 기초교육 육성사업' 을 주제로 연구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옥동 3분과 위원장이 좌장을 맡았고 이노신 호서대 교수가 '지역기반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교육혁신 플랫폼 구축 방안' 을 주제로 발제 했다. 토론자로는 박병렬 엄사초 교장과 이태경 충남테크노파크 자동차센터장, 정윤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황영섭 선문대 교수가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4차 산업혁명 발전을 위한 기초교육 육성 강화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들은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우리 앞에 와 있는 피할 수 없는 현실적 과제"라며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교육프로세서 운영과 지원을 통해 누구보다도 우리가 앞장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초 · 중등 교육기관에서 대학과 산업현장으로 교육 연계성을 확인하고 중장기적으로 기초교육 육성을 통해 4차 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교육 플랫폼 개발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옥동 위원장은 "2016년 스위스 다보스 경제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가 발표됐다"며 "전세계적인 4차 산업혁명 시대 무한경쟁에서 우리가 앞장서 나갈 수 있도록 기초교육 육성을 통한 교육역량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149 X 127 mm

우수사례 요약서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03 경남도의회 『특별위원회의 공진화, 제도화 그리고 발전』



분야 : 의회 운영 효율성 제고

기관명 경상남도의회

제출자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운영특별위원회 특별담당

목적

- 지방의회는 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되는 회의체가 특징임. 상임위원회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지만, 특별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처리함.
-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제56조에 따라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와 「지방자치법」 제57조에 따라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서 『윤리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음.
- 행정안전부는 2018.12. 31.「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공고하였음. 주요 개정내용으로 "지자체의 책임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의 한 정책수단으로 "예산특위를 상설로 운영하는 시·도의회에 4급 전문위원 1인 추가 설치를 허용"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이와 같이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의 하나가『특별위원회』이며, 특별위원회는 지방의회의 중요한 활동 수단으로서 역할을 함.
- 이하에서는 경상남도의회의 〈특별위원회〉의 공진화, 제도화, 발전의 차원에서 기준점(bechmark)으로 제시하고자 함.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 민선 8기 경남도의회(58명)는 (1) 1개의 윤리특별위원회(2년 상설), (2) 4개의 특위(①가야사특위 ②남부내륙철도 특위③ 자치분권특위④ 동남권 항공대책 특위), (3) 2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소관, 교육청 소관) 등 총 7개의 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 중임.

● 민선 8기 경남도『특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실태는 다음 〈표〉와 같이 위원수(103명), 회의개최(30회), 현장방문(13회), 건의안채택(4), 학술대회(4회) 등이 중심임.

| 경남도의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태 |

유형	연번	특위명	활동기간	활동목적	위원수	회의 개최	현장 방문	건의안 채택	학술 대회
		계			103	30	13	4	4
유형❶ 【윤리특위】	1	윤리특별위원회	2년간 ('18.7.25.~ '20.6.30)	의원의 자격징계 윤리심사 등	7	0	0	0	0
유형❷ 【특별위원회】	2	가야사연구복원사업 추진특별위원회	1년 간 ('19.1.17.~ '20.1.16.)	영호남에 걸쳐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가야의 역사와 문화의 철저한 조사연구와 복원정비를 통해 가야유적·유물의 국가문화재 지정, 가야고분군 유네스코 세계유산등재추진, 가야사 연구복원의 제도적 근거인 가야문화권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19	4	10	1	1
	3	남부내륙철도(KTX) 조기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	1년 간 ('18.7.27.~ '19.7.26.)	350만 경남도민의 숙원사업인 남부내륙철도(서부경남 KTX) 조기 건설	16	5	1	1	1
	4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1년 간 ('19.5.14.~ '20.5.31.)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여론형성 및 대정부 건의 등 활동과 함께 의회의 자치분권을 강화	13	3	1	1	1
	5	동남권 항공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	1년 간 ('18.12.14~ '19.12.13)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은 낙후된 경남의 물류, 교통, 관광 등 경남 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이 현실에 맞게 빠른 시일 내에 건설될 수 있도록 대정부 건의, 여론형성 등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	18	5	1	1	1
유형❸ 【예결특위】	6	도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8.7.1.~ '19.6.30,	도청 소관 예결산 심사의결	15	7	0	0	0
	7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18.7.1.~ '19.6.30	교육청 소관 예결산 심사의결	15	6	0	0	0

2. 문제점

1) 【사례 ❶】(윤리특별위원회의 운영 기준 미흡으로 정책정보 관리 부조화)

■ 윤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운영편람 부재로 인한 체계적 윤리심사 기능 미흡

○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회의규칙」 등에 따라 ①의원의 자격심사 ② 의원징계심사 ③ 의원윤리심사 등 3가지 사항을 처리함.

○ 그런데 문제점으로 첫째, 윤리위원회 운영은 지방자치법과 시행령, 회의규칙이 복잡하게 상호 얽혀 있어, 체계적인 심사를 위한 기준과 절차을 산발적으로 규정함.

○ 둘째, 이로 인해서 지방의회사무처의 인사운영상 2~3년에 마다 인사교류가 생기면, 윤리특별위원회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어렵게 됨.

○ 셋째, 의회재직 중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을 전혀 하지 않고 본청으로 복귀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윤리특별위원회에 대한 역할과 관련 규정을 전혀 알지 못하게 됨.

2) 【사례 ❷】(특별위원회 운영의 효율적 운영 미흡)

■ 특별위원회의 운영상 문제점으로

○ 첫째, 지방의회 내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 타 지방정부, 중앙정부, 타 및 관내 기초 자치단체 등에 연계되는 특성을 가짐.

○ 둘째, 특위는 관련 전문가로부터 자문, 관련 전문연구기관이나 학술단체, 중앙정부(예, 지방자치분권위원회) 등 전문기관과 정책연계가 필요함.

○ 셋째, 특위활동은 현장과 다른 지방정부 간 협력이 중요함.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특위활동을 단순히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 수준의 의정활동에 그치는 문제점이 있음.

■ 특위활동에 외부전문가 정책네크워크 미흡

○ 특위활동은 지자체나 중앙정부 내 행정기관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있지만, 관련 전문가, 학회, 연구원 등과 협력이 필요함. 그런데 기존의 특위활동은 행정/관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법령과 정책과 제도의 변화를 주도하는 외부전문가와 정책연대와 협력이 전혀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3) 【사례 ❸】(경남도의회 예결산특별위원회의 1회성으로 인한 예결위 전문성 미흡)

○ 17개 광역 시·도 중 경남도의회만 유일하게 예산결산위원회가 ① 예결산안 제출 시 구성하여 심사/심의 후 해산 되었고 ② 예결위 구성도 도청과 교육청 소관을 분리하여 운영하였음.

○ 지방자치제가 다양한 예산결산위원회 구성을 전제로 할 수 있지만, 17개 광역시·도의회 중 16개 시·도 지방의회가 2년 상설로, 예결위가 도청과 교육청을 동시에 검토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남도만의 특이성이 있었음.

○ 이러한 예결위 운영상 문제점은 첫째, 예결위원의 전문성 부족

○ 둘째,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간 법정·비법정 예산의 내부거래(전입전출)에 대한 예결산 정보에 대한 이해 부족을 초래

○ 셋째, 당초 및 추경, 결산 등의 예결산 심사 시 중요 쟁점 사항에 대해서 예결위원들이 관련 예결산정보를 전혀 공유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

개선내용

1. 【사례 ❶】(윤리특별위원회의 『운영편람』발간을 통한 체계적인 윤리특위 운영 역량 강화)

■ (윤리특별위원회 근거 규정의 형식상 모호성 극복)

○ (임의규정으로서 윤리특별위원회) 지방의회의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7조(윤리특별위원회)[1]에서 임의규정에 따라 설치됨. 하지만 거의 모든 지방의회에 윤리특위를 설치 운영하여 '강행규정'에 준하고 있음.

○ (개별 조문에서 산발적으로 규정) 지방자치법상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규정은 제35조(금직 등 금지). 제36조(의원의 의무), 제79조(의원의 자격심사), 제80조(자격의상실), 제81조(궐원의 통지), 제82조(회의의 질서유지), 제83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제86조(징계의 사유), 제87조(징계의 요구), 제88조(징계의 종류와 의결) 등에서 규정함.

○ (윤리위원회 운영편람 발간을 통한 정보공유) 윤리특별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윤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운영편람 부재로 인한 체계적 윤리심사 기능 미흡. 「윤리특별위원회 운영편람」작성하여, 경남도 윤리위원과 의원에게 배포함.

○ 경남도는 전국 최초 「윤리특별위원회 운영편람」(2018.7.)을 발간함.

○ 의원자격심사, 의원 징계심사, 의원윤리심사 등 각각의 심사 요건에 맞는 절차와 서식을 체계적으로 제작

○ 예컨대, 〈의원 자격심사〉 〈의원 징계심사〉 〈의원 윤리심사〉의 각각의 사례에 대해서, ① 개요(정의, 근거, 심사대상, 청구요건, 추진절차 등) ② 처리흐름도 ③ 관련규정 ④ 관련 서식으로 구분

1) [지방자치법] 제57조(윤리특별위원회)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타 지방자치단체 징계심사 사례 조사 및 적용) 타 지방정부에서 징계심사 한 회의록 중심으로 사례를 수집하여 수록함.

2) 【사례 ❷】 특별위원회의 추진체계 구축

■ 효율적인 4개특별위원회 활동의 추진체계 구축과 집행 강화

○ 특위담당 직원 5명(5급 1명, 6급 2명, 7급 2명)은 윤리특위 1개, 특별위원회 4개, 예결특위 2개 등 총 7개의 위원회를 설치 운영함.

○ 4개 특위위원회의 중요 활동은 내내적 활동과 대외적 활동으로 구분함.

○ 첫째, 대내적 활동은 소관부서의 업무보고, 중앙정부와 언론동향 파악 등으로 이루어짐.

○ 둘째, 대외적 활동은 ① 중앙정부 및 국회 방문 ② 관련 지방의회 방문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 협력 강화 ③ 전문가 초청 특강 및 학술대회 개최 ④ 대정부 건의안 등으로 구성됨.

■ 전문가와 중앙정부의 정책협력 강화

○ 경남도의회는 민선이후 최초로 전국적 단위의 학술단체인 (사)한국지방정부학회와 공동으로 워크숍을 개최하여, 도의회가 경남도의 주요 정책을 주창하고 공론하는 역할을 함.

○ 경남도 4개 특별위원회는 〈경남도의회 섹션〉 2개를 배정받아, 제1섹션은 〈지방분권과 가야사복원〉 , 제2섹션은 〈남부내륙철도와 동남권 항공대책〉에 대해서 외부전문가와 더불어, 특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정책학습의 기회를 가짐.

○ 특히, 분권특위는 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자치분권연구회〉와 공동으로 참여하여, 특별위원회와 의회 내 연구단체 간 공동활동을 강화함.

■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인 「가야사 연구복원사업」에 종합적/다차원적 추진

○ 가야사 연구복원 사업 추진을 위한 특위는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음.

○ 이 특별법은 4개분화권(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문화권), 9개 관련 특별법이 제정 추진으로 법안 발의자, 소관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위원회, 국토교통위), 3개시도(경남·경북·전북도), 지역국회의원, 문화재청, 국립중앙박물관, 경상남도의회 가야사특위,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25개 시장·군수) 등이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참여는 구조임.

■ 이러한 복잡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정책문제로서 주요 활동은

○ 첫째, 경남도의회는 9차례에 걸쳐 가야고분 발굴현장, 유적지, 경북도의회, 국회(부의장, 문화체육위원회, 위원11명) 등을 방문하여 [역사문화특별법] 의 조속한 추진 필요성을 건의함.

○ 둘째, 경남도내 18시군의장협의회와 공동협력서(MOU)를 체결하여 대정부 및 국회차원의 의한 채택을 위한 정책협력을 강화하였음.

○ 셋째, 경남도 내 가야유적 544개 중 지정문화재는 44개(8.1%) (국가지정 30개, 5.5%, 도지정 14개 2.6%0)에 불과하여 91.9%(500개)의 유적을 지정문화재 추진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음 넷째, 역사문화권 연구복원 사업은 가야문화권에 약 3천억원에 불과한 반면, 신라문화권 4.7조원, 백제문화권 3.3조원 규모와 비교하여 열악한 상태를 인식하고 접근하고 있음.

3) 【사례 ❸】 예결특위의 상설과 예결특위 기능 강화

(1) 경남도의 예결산특별위원회의 운영상 특이성 파악

○ 경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첫째, 상설이 아닌, 비상설로 운영되고 있음. 둘째, 예결특위도 본청과 교육청으로 분리하여 운영되는 것이 특징임.

| 17개 광역 시도별 예결위 심사 현황 |

(2018.11. 2. 현재)

시도	임기	위원수	종합심사								예비심사		비 고
			심사방법			답변자	답변위치		부단체장	부지사	답변		
			일괄	상임위별	실국별	국장	기립	착석	참석	착석	국장	과장	
계			6	5	6	16	12	5	14	9	15	2	
서울	1년	32			○	○	○		○	○	○		
부산	1년	13	○			○	○		○	○	○		
인천	1년	13	○			○	○		×	○	○		
대전	1년	9		○		○	○		○	×	○		
대구	1년	11		○		○	○		○	○	○		
광주	1년	9		○		○	○		○	○	○		
울산	1년	9	○			○	×	○	○	○	○		
세종	1년	7			○	○	×	○	○	○	×	○	
경기	1년	26			○	○	○		×	×	○		
강원	1년	15	○			○	○		○	×	○		
충남	1년	20	○			○	×	○	○	×	○		
충북	1년	13		○		○	×	○	○	×	○		
경북	1년	15			○	○	○		×	○	○		
경남	-	도:15 / 교:13			○	×	○		○	○	×	○	
전북	1년	11			○	○	○		○	×	○		
전남	1년	20	○			○	○		○	×	○		
제주	1년	13		○		○	×	○	○	×	○		

주 1. 종합심사 답변자는 국장을 원칙, 필요시 과장
2. 예비심사 답변자 국장, 필요시 과장

(2) 예산결산특위원회 설치 유형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도 각 시·도의회는 ① 운영위원회 소속의 예결전문위원(부산) ② 예결전문위원실(서울) ③ 특별전문위원실(경기, 충남, 전남) 등 3가지 유형으로 운영됨.

| 17개 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설치 유형 |

유형	운영위원회 소속특별전문	운영위원회 소속 예결전문	특별전문위원실	예산결산특별 전문위원실	비고
단체수	1	11	3	2	17
단체현황	경남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기, 충남, 전남	서울, 제주	

자료 : 각 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현황 조사

(3) 예산결산위원회의 상설화와 전문성 강화 필요성 인식/인정

■ ❶ 예결특위 상설화의 장단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국 17개 시·도 중 16개(44.%)가 상설로 운영됨. 예결특위가 상설 또는 비상설화에 따른 장단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❷ 예결특위 상설화 장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설화되는 경우에 다음과 같은 장점을 기대할 수 있음.

○ 첫째, 집행부의 예산과 결산에 대한 의회의 재정감사 감독권이 강화됨. 예산심의 과정은 예산규모가 커지고 있고, 전문성 기술성이 강하게 요구되기 때문에 상설화를 통해서 예산결산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 정보 수집과 분석 그리고 관련 정책지식을 축적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예산과 결산에 대한 전문성, 책임성, 계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임. 상임위나 윤리특위는 2년으로 1년으로 정한 것임.[2)]

○ 셋째, 예산정책과 사업이 전문화에 따라 지방의회의 전문성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넷째, 거시적 관점에서 예산심사가 가능하다. 미시예산 심사인 상임위 예비심사는 개별사업이나 지역적 차원에서 주로 다루기 때문이다. 예산결산위원회는 종합정책질의를 통해서 거시적 예산배분, 예산정책과 사업의 중장기적 관점의 정책효과와 정책목표 달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음.

2) 국회사무처. (2016). 「국회법해설」. p. 203-204.

■ ③ 예결특위 비상설화 장단점

○ 비상설화된 예결특위는 다음과 같은 단점이 있을 수 있음.

○ 첫째, 전문성 부족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사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는 문제점이 있음.

○ 둘째, 재정 총량과 거시적 재정 배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예산편성의 적정성, 집행 가능성, 정책목표 달성 가능성 등을 분석·평가할 수 있는 예산분석·심사·평가 기능을 제대로 실현할 수 없음.

○ 셋째, 예산정보 부족으로 형식적 심사가 된다. 예산결산에 관한 정보 부족으로 예산정책과 사업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기 곤란하다. 즉 예산결산 정보가 집행부에 비해서 비대칭성에 있기 때문임.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설 vs 비상설 비교 |

구분	상설	비상설
장점	• 예결위 심사의 전문성,효율성, 책임성 강화 – 충분한 기간 및 준비로 거시적, 총량적인 심사역량 확보 – 예결위 활동 기간이 1년 단위로활동에 따른 책임성 강화	• 예결위 순환 위촉에 따른 심사 다양성 확보 – 위원별 지역 현안사업에 예산정보에기초한 균형적 예산심사 가능
	• 예산과 결산의 연계와 모니터링 가능 – 예산편성과 집행(결산)을 연계한 상시적, 일관성 있는 재정통제 가능	• 다수의원 예결위 참여기회 제공 – 지역별, 정당별로 다수의원 참여 기회 보장
	• 예산심의 통제권과 집행부예산 견제기능 강화	• 위원 개인별 전문 분야에 기초한 개별사업 중심 심사 가능
	• 통합적 관점(거시적·미시적)예결위 활동 가능	• 상임위 활동의 연장선에서 예산결산 활동 가능
단점	• 다수의원의 예결위 참여기회 감소 • 예결위 활동에 대한 준비 필요 • 특위 중심의 예산심의 – 상임위 예비심사 의견 배제 우려	• 전문성, 책임성 저하 – 예산정책과 사업의 전문화에 따른 전문적 심사 기능 약화 • 예·결산 심사의 일관성 결여 • 예산(안) 제출 시기만 소집

(4) 예결특위 전문위원(4급) 1명 증원 근거 마련(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 지방의회의 전문성, 자율성, 투명성, 책임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 또한 지방의회의 책임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의 한 수단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 행정안전부 공고 제2018-818호(2018.12.31.)

(예결위)를 상설로 운영하는 시·도의회에 4급 전문위원 1인 추가 설치 허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음.[3] [별표 5] 제1호 비고에 제5호를 신설하였다. 제5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예산의 심의·확정 및 결산의 승인을 위한 위원회를 상설로 운영하는 시·도는 위 표에도 불구하고 4급 전문위원 1명을 추가로 둘 수 있다"고 규정하였음.[4]

○ 2019. 4. 30. 일부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및 정원 규정이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서 [별표 5]에서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 및 정원기준(제15조2항)'에서 4급 전문위원 1명이 증가

○ 그러나 법제처의 심사과정에서 [별표 5] 제1호 비고에 예결위 상설시 4급 전문위원 1명을 추가로 둘 수 있는 규정은 삭제되었음.

○ 그럼에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2019.5.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내용보고』에서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예결특위 상설 운영하는 시·도의회에 4급 전문위원 1명 추가 가능』하는 점을 알리는 공문을 배포함.

(5) 경남도의회의 예결특위 변화와 도전

■ (변화) ❶ 경남도의회은 기존의 예결위 운영에 변화를 가져옴. : 비상설에서 상설 예결위로 패로다임 전환

○ 이러한 변화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2019.4.30.)함으로서 변화의 공공의제로 설정되고 실제 개선되는 계기가 됨.

■ 예결특위 『비상설』에서 『상설』로 위원 자격 유지

○ 경남도의회는 2019년 7월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비상설』에서 『상설』로 운영체계를 개편함.

○ 이에 따라 예결위원회는 예결산안이 제출되면, 예결위를 구성하는 행태에서 전반기 의회(2020.6)까지 지속에서 예결위원의 자격을 유지하게 함.

■ 예결위원수 조정(교육청 증원)

○ 예결위원은 본청(15명),교육청(13명)에서 각각 15명으로 통일성을 기함.

■ [갈등] ❷ 예결위 상설이후의 제도적 문제점과 해결

---

4) 별표 5 제1호 비고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예산의 심의·확정 및 결산의 승인을 위한 위원회를 상설로 운영하는 시·도는 위 표에도 불구하고 4급 전문위원 1명을 추가로 둘 수 있다.

○ 경남도의회는 예결위를 비상설에서 상설로 개혁을 하였지만, 예결위원장은 매 예산안, 추경안, 결산안이 제출될 때 마다 예결위원 중 호선하는 규정을 변경하지 못함 상태임.

○ 그 결과 예결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매번 예결산안이 제출될 때마다 선출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음.

■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예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실질적인 임기는 예산안, 추경안, 결산안 제출시점에서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는 시점까지로 상당히 기간이 짧아, 예결위 운영과 관련하여 협의에 어려움이 있음.**

■ **둘째, 예결위원장 선임과 관련하여 교섭단체 간 갈등이 노출됨.**

○ 민선 8기 경남도는 여당(34명, 58.6%)과 야당 및 소수당(25명. 이 각각 41.4%)로 약 6: 4비율임. 실제 교섭단체는 여당(34명, 58.6%)과 다수 야당(21, 36.2%)으로 구분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점권에 대한 갈등이 진행됨.

개선성과

1. 【 사례 ❶】: 윤리특별위원회

■ **(운영편람 발간을 통해서 의원의 윤리성 강화)**

○ 경남도의회에서 민선 8기 출범에 대비하여 「윤리특별위원회 운영편람」을 발간하여, 윤리특위 의안 발생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있었음.

■ **(청원과 윤리특위 간 역할 구분으로 특위 위상 강화)**

○ 경남도의회에 지역의원의 5분자유발언과 관련하여, 반대입장을 가진 단체에서 도의회에서 민원을 청구하여, 의원의 윤리심사를 할 것을 요구한 사례가 있음.

○ 본 윤리특위를 담당하는 전문위원실에서는 청원심사 수립과 의원의 윤리심사 청구권자의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였고, 이 결과 의회 내 민원처리 부서(의사담당)에서 일반적인 청원 민원처리 절차에 따라서 윤리특위에 회부하려는 민원접수가 윤리특위의 개의요건에 부합하지 않음을 착안하고, 지적하여 윤리위 심사 대상으로 상정하지 않음.

- 「경상남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4조에서는 [청원불수리] 대상으로 ① 재판에 간섭하는 것 ②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 ③ 동일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 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 ④ 법령에 위배되는 것에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법을 보다 자세히 보면 의원의 윤리심사 청구는 〈청원심사〉 대상이 아님에도, 의회에서 청원처리 접수 부서에서 이를 수리함으로서 의원의 신분에 관한 주요 사항을 다루어는 문제점이 발생함.

■ (윤리특위 운영편람 발간과 운영 성과)

○ 지역주민 입장에서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 부정적 이미지를 각인하기 위한 부적정한 민원처리에 대해서『윤리특별위원회 운영편람』에 따라서 적절히 대응함으로서 윤리특별위원회 개의 요건과 처리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서 합리적인 윤리특위 사안은 적정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 불합리한 윤리심사 청구에 대해서는 접수단계에서 부적정함을 제기하는 성과를 가짐.

■ (윤리특위 운영편람의 발간의 정책적 함의)

○ 의원대상으로 하는 징계요구는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으나, 윤리특위의안 심사요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윤리특위 안건 상정 자체가 잘못 된 것임.

○ 그런데도,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윤리특위를 담당하는 특별담당과 의사담당관에서 여러 차례 회의와 의견교환을 통해서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게 됨. 만약 윤리특위 담당하는 경남도의회 특별담당이 사전에 관련 절차와 운영매뉴얼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였다면,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원에게 청원접수와 안건 상정 자체가 불명예스러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을 극복하게 됨.

2. 【사례 ❷】: 특별위원회 운영의 효율적 운영 미흡

(1) 자치분권위

■ (중앙정부와 국회의 공감대 형성)

○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실질적 자치분권을 위한 정책방향과 세부집행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하는 기구임. 또한 자치분권위원회는 중앙정부와 국회, 지방정부의 의견을 조정·통합하는 역할을 하며, 대통령과 청와대에 관련 사항을 전달하는 기구와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고, 관련 과제 발굴이나 정책아이디어를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정책소통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함.

○ 국회(비서실장)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대한 실질적인 최종 의결기구일뿐 아니라, 국회의장의 경우,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한 강력한 확신과 의지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국회차원에서도 지방자치법 개정을 필요한 정책적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됨.

■ (지방의회 간 정책협력 강화)

○ 방문한 경기도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 등 자치분권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음. 경기도는 인구 1300만 명에 이르는 광역자치단체이고, 경기도의회 의원수도 142명으로 17개 광역시도에서 가장 많은 지방의원이 선출되고 있어, 중앙정부와 국회 등에 다양한 정책네트워크를 통해서 국회를 설득할 수 있는 정책역량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특히 지방의회 차원에서 강력한 자치분권 정책의지가 있어야 자치단체추진에서 부족한 추진역량을 지원하고 강화할 수 있음을 확인함.

■ (종합적·다차원적 활동 추진)

○ 중앙부처·국회·경기도의회 방문을 통해서, 자치분권의 추진과 구체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관련 단체와 정보를 교류의 필요성을 확인함.

○ 전국적인 자치분권 관련 정책정보를 생산·전달하여 공유하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자치분권의 시급성과 필요성, 그리고 미래 지향성 차원에서 중요한 정책과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하는 전략이 필요함.

○ 특위활동이 효과적인 자치분권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단일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 차원이 아니라 지방분권과 관련된 지방자치분권위원회, 국회, 경기도의회 등과 함께 종합적·다차원적이 추진 전략과 활동이 필요함.

○ 예컨대, 현재의 지방자치제에서 나타나는 사무와 권한의 불일치로 인한 지방공공서비스 생산과 공급의 사각지대(예, 근로감독, 보건환경 등)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역주민이나 현장의 정책문제를 발굴하는 활동 필요성도 확인함.

3. 【사례 ❸】 경남도의회의 예결위특이성과 정책학습

■ (도전과 기회) 전국 유일의 예결위의 특이성과 정책학습 기회

○ 경남도의회는 첫째,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예결위가 운영되는 '비상설'에서 '상설'로 전환되었다는 점 둘째, 예결위 구성이 상설로 전환되었지만, 예결위원장과 부위장인 '임시직'이라는 특이성이 남아 있음.

■ 이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정책적 효과는

○ 첫째, 도청과 교육청 예결위원장직에 대한 선점권에 대한 여야 교섭단체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아직 갈등이 이루어지는 '정책학습'을 이라는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가지고 있다는 점

○ 둘째, 민선 8기에 여야 간 교섭단체의 역할과 기능이 예결위구성과 위원장 선출에 대한 제도화를 위한 정책학습하는 기회가 되고 있다는 이점을 가짐.

■ 경남도의회는 지방의회 차원의 교섭단체 정치와 공진화(coevolving)의 정책학습기회를 가짐

○ 지방자치체제는 새로운 정책실험과 운영을 통해서 최적의 방법을 찾아 가는 나선형의 발전적 과정이라는 점에서 민선 8기 경남도의회는 타지자체가 가보지 않는 길을 걷고 있고, 새로운 최적의 제도적 장치를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공진화' 의회로서 정책학습이라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됨.

향후계획

1. 【사례 ❶】 윤리특별위원회

■ (『의원겸직』 사항을 포함한 『운영편람』개정 발간)

○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지방자치법 제30조)으로서 주민에 대한 책임성과 윤리성에 대한 요구가 점점 더 강화하게 요구되고 있음.

○ 특히 『지방의원의 겸직』에 대한 사항이 강화되고 있지만, 일부 지자체에서 겸직에 대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 하지 못하고, 안내 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음.

○ 이에 향후 개정 『지방의회 운영편람』에서 『지방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관련 법령 해석 기준과 사례』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를 착안하게 된 것은, 행정안전부 주관 『2019년 전국지방의회 담당관 워크숍』(2019.5.2.~3.)을 통해서 관련 교육을 통해서 인지하였고, 『경남도의회 윤리특위 운영편람』 보완필요성을 인식하게 됨.

■ 윤리특별위원회의 예방적 활동 강화

○ 윤리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사후적 조치에서 사전 예방적 활동으로 선도함.

○ 윤리특별위원회는 사후적 활동이 현재는 기준이 되고 있음. 지방의원에 윤리에 관한 사안이 발생하면, 소극적으로 위원회가 운영되는 특징을 가짐.

○ 지역주민의 대표의기관으로 윤리특위의 안건 대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분기별로 지방의원에게 의원연찬, 지역구활동, 국외공무활동 등등을 수행할 때, 사전에 미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적극적 윤리위원회 역할을 강화함.

■ 소속 지방의원 대상 윤리역량 강화를 위한 정기적 교육훈련 강화

○ 의원의 의정역량은 조례와 예결산 심사에 역량 뿐만 아니라,『윤리역량』도 중요한 정책역량의 한 요소로 인식시키고, 윤리역량 강화를 위해서 적실성 있는 교육과 훈련을 정기적으로 강화함.

2. 【사례 ❷】 :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운영편람 발간과 업무조정

■ 특별위원회의 활동과 운영에 대한 편람 발간과 제도화

○ 특별위원회는 경남도의 지역현안과 특성에 기초하여 구성되고 운영됨

○ 예컨대, 『가야사연구복원 사업 추진특위』 경남이 가야유적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관련지역도 넓게 분포되어 있어, 경남도와 경남도의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음.

- 고대역사문화권법, 백제왕도·신라왕경 특별법, 가야법 등의 주요내용을 통합 반영하여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 역사문화권의 실체적 연구·조사뿐만 아니라 정비와 지역발전에 관한 내용을 담아 개발과 보존의 균형 모색

○ 이러한 특위활동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관련 정보와 지식이 공유될 수 있도록 운영 가이드 라인을 발간하여 정책지식을 공유해야 함.

■ 특별위원회 업무의 상임위원회와 조정

○ 특별위원회 업무를 현행 특별담담에서 관련 상임위로 조정함.

○ 경남도의회는 특별위원회 보좌기관과 실제 업무 간에 차이가 있음. 「경상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제6조에 따라, 특별위원 소관 사무를 운영수석전문위원이 겸임하되, 필요한 경우 상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소관 특별위원회 소관 사무를 겸임할 수 있음.[5)]

○ 그런데 실제로는 '특별담당'에서 특별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구조임.

○ 부산시는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직제규칙」 제7조에 따라 "그 밖의 특별위원회 지원사무는 주된 업무가 속한 상임위원회의 전문위원이 담당한다"고 규정함. 하지만 2017년부터 특별담당이 신설되었는데, 이전에 과한 규정이 그대로 개정되지 않고 있다. 실제로는 특별담당이 특별위원회 업무를 담당함.

○ 이와 같이 〈특별위원회〉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관련 특위활동에 대한 사항을 파악하고 있는 관련 상임위로 업무를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함.

3. 【사례 ③】 예산결산특위원회로 분리

■ 예결위원회 설치를 통한 예결산 기능 강화

○ 경남도는 2020년도「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신설로 예결위의 전문성과 책임성 강화

■ 도청과 교육청 예결위의 통합

○ 경남도의원 58명 중 30(약 52%)가 예결위에 참여하는 구조임. 긍정적 측면은 예결산에 대한 도의의 관심과 기능 강화를 의미하지만, 지방자치법 제39조에서 규정한 지방의회의 여러 가지 기능 중 하나인 '예결위' 기능에 편중되는 문제점도 있음.

○ 따라서 도청소관과 교육청 소관으로 분리되어 운영 중인 예결위 구성으로 인한 예결위 운영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도청과 교육청 소관 예결위를 통합운영할 필요성이 있음.

■ 예결위 심사기법 개선

○ 각 시·도의회별 예결위의 심사기법은 지방의회의 지방재정통제 기능에 차이를 가져옴. 따라서

5) 「경상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제6조(전문위원) ① 전문위원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은 특별위원회 소관 사무를 겸임하되, 필요한 경우 상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특별위원회 소관 사무를 겸임할 수 있다.

예결위 심사기법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

○ 첫째, 예산안 심사대상 실국을 어떤 수준에서 질의할 것이 가장 효율적인 예산심사기법인지 검토해야 함. 예산안 심사대상자를 중심으로 보면, ① 모든 실국을 대상으로 하는 유형 ② 상임위원회별 소속 실국을 중심으로 하는 유형 ③ 실국별 직제순이나 예산안 편제에 따른 심사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됨. 각 유형에 따라 예산심사 기법과 심사의 효율성에 차이가 있기 때문임.

| 질의대상 부서별 질의 유형에 따른 장단점 |

질의대상 부서	장점	단점	비고
모든 실국 일괄대상	• 예결위원 주요 관심예산과 정책사업에 선택과 집중 가능 • 관련 실국과 연계형 질문 가능 • 예결위 활동 사전준비 가능	• 실국별·분야별 편차 발생일	
상임위원회별	• 예결위 검토보고서 활용 가능 • 상임위와 소속 실국을 안배한 질의가능	• 소속 상임위 관련 질문 중복발생	
직제순·예산편제순	• 집행부에 대한 긴장감과 재정통제 가능 • 예결위원에게 모든 실국에 대한 관심과 준비 유도	• 질의가 없는 부서는 사각지대 • 모든 정책사업에 대한 심사 부담	

○ 둘째, 예결위원의 질의순서와 질의시간을 정하여, 예결위 활동의 집중도와 재정통제 기능을 강화해야함. 예결위원 중 질의순서나 질의시간에 관한 사항을 두는 경우와 그러하지 않는 경우다. 일부 시·도는 질의시간, 질의순서를 사전에 정하고 시작함. 하지만 대다수 시·도의회는 질의순서와 질의시간을 규정하지 않고, 예결위원의 의사에 따라서 이루어짐.

■ 예비심사와 종합심사 관계 유형 제도화[6]

○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속하지 않음. 하지만 각 시·도의회의 회의규칙에서는 '존중' '협의' '동의'의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음.

○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의 관계에 대해서 각 시도의 회의규칙에서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예결위가 종합심사에서 예비심사와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4 가지 유형을 구분할 수 있음.

○ 앞으로 경남도의회는 〈예비심사〉와 〈종합심사〉의 관계를 4가지 유형을 종합한 형태로 회의규칙 변경을 추진함.

6) 배득종 연구에 따르면, OECD국가의예결위 유형은 3개다. 첫째, 예결위가 상임위 검토의견을 참조할 뿐 구속되지 않는 국가(OECD국가 52%). 둘째, 예산총액은 예결위가 결정하고 부문별 예산은 상임위 심사(37%). 셋째, 예결위가 존재하지 않고 상임위에서 모든 예산심사(11%)다(배득종, 2018:181-182)

| 예비심사와 종합심사 관계 |

구분	내용	단체수	단체명	비고
유형1	존중+증액시 동의	3	서울, 경기(새비목), 전남	국회
유형2	존중+증액+비목설치 협의	9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울산, 세종, 충북, 충남	국회
유형3	존중만 있음	2	경남, 강원	
유형4	존중 없음	3	전북, 경북, 제주	
계		17		

주 1. 국회: 존중+증액+새비목+동의 (국회법제84⑤)
자료 : 각 시도 회의규칙

■ 예결위 역량강화를 위한『예결산 심사요량』전면 개정 발간과 예결산 교육 강화

○ 경남도의회는 예결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첫째,『예결산운영 요량』전면개정과 교육이 필요함. 경남도의회 예결위는『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및 예결산 심사요량』제정하여, 1회성 예결위원을 기준으로『예결산심사요령』을 제정하여 운영함. 하지만 2019년 7월부터 예결위가 상설로 운영되고 있어, 변화된 제도에 맞는 (가칭)『예결위운영과 활동 그리고 예결산심사 기법을 위한 요령』을 개정하여 발간이 필요함.

○ 둘째, 예산결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사전에 설명하고, 주요 쟁점에 대해서 예결위원과 공유하기 위한 가칭『예결산 검토보고서』사전설명회 제도를 보다 확대하여 전략적 예결산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임.

정책적 함의

■ 특별위원회 활동 성과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 〈입법관료〉 〈전문관료〉제도 정착

○ 특위활동의 성과는 특위지원 조직의 역량과 위원의 노력의 산물임.

○ 지방의회의 활동방식과 유형에 '맞다' '틀리다'는 정답은 없음. 지방자치제는 각 지방정부 형태(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와 지방의원의 특성(의원개인, 지방의회규모 등) 등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활동이 이루어짐.

○ 그럼에도 활동의 성과에 미치는 변수의 하나가 〈특위전문위원실〉의 보좌기능의 수준과 전문성이 따라 차별화가 될 것으로 예상됨.

○ 그런 측면에서 지방의회 특별전문위원실의 〈입법관료〉 〈전문관료〉제를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한 통과를 통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성 제고가 필요함.

■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의정활동 지식정보체계 구축

○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관련『편람』『요령』발간과 교육을 통한 의회 관련 전문지식을 축적하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 경남도의회는「윤리특별위원회 운영편람」「예결산특별위원회 운영 및 예결산 심사요령」발간을 통한 특위활동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주민의 대의기관」의 지방의회 의원의 대표성과 책임성 인식·인정·이해

○ 지방의회에서 재직한 경험지식(약 15년)은 지방의원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다양한 지역주민의 정책수요와 우선순위에 대한 판단력이 발달되어 있다는 점.

○ 그리고 4년이란 짧은 기간동안 학습능력이 급속히 증가하고, 지역주민과 지방정부에 중요한 정책결정의 중요한 참여자라는 것임.

■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성과 제고를 위한 정책지원 조직의 역량과 전문성 강화

○ 따라서 이들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가 보다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정책지원 조직은 지방의회의 존재가치를 인정하고, 지방의회 지원기관으로서 역할개발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인력 확보와 교육훈련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음.

붙임 1 유사법안 입법 동향(9개 법안)

■ 현행 법안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 "고도"란 과거 우리 민족의 정치 · 문화의 중심지로서 역사상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경주 · 부여 · 공주 · 익산, 그 밖에 제7조의 절차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 국회 문체위 소관 법안 발의 현황 |

구 분	발의의원	발의일자	소관위	계류현황	문화권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민홍철 의원 (민, 김해 갑)	'19.4.11.	문체위	상임위 심사 - 상임위 의안 회부('19.4.12.) - 상임위 의안 상정('19.6.24.)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 검토보고서상 마한 추가 의견
풍납토성 보존 및 주민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박인숙 의원 (한, 서울 송파갑)	'17.2.28.	문체위	상임위 심사 - 상임위 의안 회부('17.3.2.) - 상임위 의안 상정('17.9.19) - 공청회('18.11.6.)	한성(초기)백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	김석기 의원 (한, 경북 경주)	'17.5.29.	문체위	상임위 심사 - 상임위 의안 회부('17.5.30.) - 상임위 의안 상정('18.3.19.) - 공청회 생략 의결('18.3.19.) - 상임위 법안심사소위 상정 ('18.3.21/9.11/'19.7.16.) - 상임위 법안심사소위 의결 ('18.7.17.) - 상임위 의안 의결('19.7.18.) : 수정의결	신라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	정진석 의원 (한, 충북 공주부여청양)	'17.5.30.	문체위	상임위 심사 - 상임위 의안 회부('17.5.31.) - 상임위 의안 상정 ('17.9.19/'18.11.20./11.22.) - 상임위 법안심사소위 상정 ('19.7.16./7.17.)	백제
고대역사문화권 지정 및 연구·조사 등에 관한 법률	정종섭 의원 (한, 대구 동구갑)	'18.3.13.	문체위	상임위 심사 - 상임위 의안 회부('18.3.14.) - 상임위 의안 상정('18.9.10.)	고조선, 신라, 고구려, 백제, 가야
마한역사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안	서삼석 의원 (민, 전남 영암무안신안	'19.6.27.	문체위	상임위 심사 - 상임위 의안 회부('19.6.28.)	마한

| 국회 국토위 소관 법안 발의 현황 |

구 분	발의의원	발의일자	소관위	계류현황	문화권
가야문화권 특별법 (대안법안)	국토위원장	'17. 11. 28.	국토위	상임위 심사 - 법안심사소위 의결('17.11.28.) - 전체회의 상정('18.2.22./3.20.)	가야
	이완영 (한, 경북 성주)	'16.6.16.			
	민홍철 (민, 경남 김해갑)	'17.8.25.			
고대역사문화권 연구·조사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윤영일 의원 (무, 전남 해남완도진도)	'17. 12. 15.	국토위	상임위 심사 - 상임위 의안 회부('17.12.18.) - 상임위 의안 상정('18. 2. 6.)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역사문화권 연구조사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위성곤 의원 (민, 제주 서귀포)	'18. 11. 1.	국토위	상임위 심사 - 상임위 의안 회부(襲.11.2.)	탐라

붙임 2 도내 가야유적 현황 ('19.10.21.기준)

구 분	계	지정문화재			비지정문화재
		소계	국가지정	도지정	
계	544	44	30	14	500
창 원	47	3	2	1	44
진 주	56	1	-	1	55
통 영	2	0	-	-	2
사 천	25	1	1	-	24
김 해	40	12	9	3	28
밀 양	33	0	-	-	33
거 제	13	1	1	-	12
양 산	22	3	3	-	19
의 령	35	2	-	2	33
함 안	90	4	3	1	86
창 녕	36	5	4	1	31
고 성	36	3	2	1	33
남 해	6	0	-	-	6
하 동	15	1	1	-	14
산 청	43	2	1	1	41
함 양	3	3	2	1	-
거 창	36	0	-		36
합 천	6	3	1	2	3

붙임 3 역사문화권별 연구복원 사업 예산 현황

구 분	구 분	소관부처	대상사업	사업비 (억원)*국비	사업기간	관계법령
가야문화권		문화재청	27개 유적	3,000	19~22(4년)	문화재보호법(보수정비사업)
신라문화권	계			4조 7,033		
	① 경주역사도시조성사업	문체부	6개분야 65개	3조 3,533	06~35(30년)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
	② 경주고도보존육성사업	문화재청	3개분야 24개	4,050	06~35(30년)	고도보존육성법
	③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정비	문화재청	8개	9,450	14~25(10년)	문화재보호법(보수정비사업)
백제문화권	계			3조 3,026		
	④ 공주·부여역사도시조성사업	문체부	7개분야 57개	1조 2,577	09~30(22년)	국가균형발전5개년 계획
	⑤ 공주·부여·익산고도보존육성사업	문화재청	3개분야 57개	6,422	12~21(10년)	고도보존육성법
	⑥ 백제왕도핵심유적복원정비	문화재청	26개	1조 4,027	16~38(22년)	문화재보호법(백제역사유적지구 보존관리)

지방의회 우수사례집

Part 4

연구활동 등 전문성 제고

1. **정책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의회 |
2. **광산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주민자치연구회」** |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
3. **경기도의회 정책분석보고서 "GA정책이슈브리프"** | 경기도 경기도의회 |
4. **전문성 있는 의회 구현을 위한 정책중심, 연구중심의 의정활동 강화** | 경기도 고양시의회 |

우수사례 요약서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01 정책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분야 : 연구활동 등 전문성 제고

기관명 광주광역시의회

제출자 광주광역시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 정책담당

목적

-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의제 개발과 주요정책에 대한 연구 및 자문
-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정책네트워크 위원으로 위촉하여 적극적으로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을 강화하여 정책에 반영

현황

- 추진근거 : 광주광역시의회 정책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조례
- 위원구성 : 5개 분과 30명(분과위원별 6명) ※위원명단(붙임 1)
  민간위촉위원 30명은 시민활동가, 교수, 연구원 등으로 구성
- 회의운영 : 분과회의(분과별 연 6회 이상), 전체회의(연 1회 이상)
- 주요기능
  - 의회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연구조사와 자료수집
  - 의회의 의제 개발과 정책대안 수립을 위한 자문
  -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
  -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세미나, 토론회 등 개최
- 운영체계 : 회의운영(상임위), 총괄 및 예산지원(입법정책담당관실)
- 소요예산 : 33,500천원

추진내용

● 정책네트 위원위촉(제8대의회 전반기)

- 위촉기간 : 2018. 9. 6.~2020. 9. 5.(2년)
- 위촉위원 : 30명

※ 위원 위촉식 개최

• 일 시 : 2018. 9. 6.(목) 12:00 ~ 13:00 • 장 소 : 광주광역시청 지하1층 푸드코트

추진성과

● 제8대의회 전반기 정책네트워크 분과별 회의 개최 : 29회('19.10.23. 기준)

- 의회운영 5, 행정자치 6, 환경복지 8, 산업건설 5, 교육문화 5

※ 전반기 회의개최 내역(붙임 2)

● 8대의회 전반기 정책네트워크 전체위원 세미나 개최

- 일 시 : 2019. 10. 22.(화) 12:00~15:00
- 장 소 : 김대중컨벤션센터(311호)
- 참 석 : 80명(전체의원 23, 정책네트워크 위원 22, 사무처장 등 직원 35)
- 주요내용 : 분과별 1년 주요성과 공유 및 주요정책발표

〈 분과별 1년 주요성과 발표 〉 – 분과별 주요내용

① 의회운영분야 각종 정책에 대한 연구 및 자문역할을 통해 정책대안 제시 기능 강화 등 4개 안건(의회운영분과)

② 문제인 정부의 자치분권 계획과 개선과제 등 5개 안건(행정자치분과)

③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현안사항과 관련된 정책개발 및 논의 등 5개 안건(환경복지분과)

④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주요현안 공유 및 의견수렴 등 4개 안건(산업건설분과)

⑤ 교육문화 각종 정책에 대한 연구 및 자문역할을 통해 정책 대안 제시 기능강화 등 3개 안건(교육문화분과)

〈 주요정책발표 〉

① 자치분권 개정(안)에 대한 추진배경과 그간 추진한 경과보고 및 향후 추진 방향(전광섭 호남대교수)

② 광주복지혁신의 필요성과 복지공공성 확장을 위한 광주복지혁신의 방향 및 광주복지혁신(안) 제시(함철호 광주대 교수)

※ 언론보도 자료 별도첨부(붙임 3)

【제8대 의회 전반기 정책네트워크 전체위원 세미나】

- 일 시 : 2019. 10. 22.(화) 12:00~15:00
- 장 소 : 김대중컨벤션센터(311호)
- 참 석 : 80명(전체의원 23, 정책네트워크 위원 22, 사무처장 등 직원 35)





향후계획

- 정책네트워크 자문 및 연구기능 강화방안 마련
- 타 시·도의회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합동세미나 검토
- 제8대 의회 후반기 정책네트워크 위원 위촉(계획수립)

※ 분야별 전문지식과 소양을 겸비한 전국적인 인사 위촉

붙임 1 제8대 의회 전반기 정책네트워크 위원 명단

분과 위원회	성명	소속
의회 운영	최은영	사)아시아희망나무
	김용목	사)실로암사람들
	백희정	금남로시민정치페스티벌
	김종헌	국제영어마을
	임미숙	광주시민센터
	오미덕	사)지역미래연구원 참여예산센터
행정 자치	이상수	우리경영기술
	김대현	위민연구원
	전광섭	호남대학교
	강준원	전남대학교 종교문화연구소
	송은미	지역문화연구소 운영본부
	임두택	전남대학교
환경 복지	함철호	광주대학교
	채현숙	광주복지공감플러스
	조성용	전남대학교
환경 복지	이민철	광주路
	염건이	광주장애인종합복지관
	장화선	광주호수생태원지구센터
산업 건설	이정희	㈜청해건설
	전정현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광주지부
	이명규	광주대학교 도시계획 부동산학과
	김경은	이철원 김경은 법률사무소
	최남길	㈜마음을나누는사람들
	이이수	㈜유선엔지니어링
교육 문화	이경은	충남대학교
	조규정	호남대학교
	이윤애	광신대학교
	문상필	사)광주공동체
	윤중현	전)진월초
	고영란	전통음악연구소

붙임 1 제8대 의회 전반기 정책네트워크 위원 명단

- 회의 개최 : 총 29회(19. 10. 23. 기준)
- 분과별 회의 개최현황(의회운영 5, 행정자치 6, 환경복지 8, 산업건설 5, 교육문화 5)

분 과 명	일 시	주 제	비 고
의회운영 (5회)	'18.10.10.	정책의제 주제발표 및 차기회의 정책의제 발표자 선정, 운영방안 논의 등	
	'18.11.19.	금남로시민정치페스티벌 활성화 방안과 시의회 역할 모색	백희정
	'19.02.11.	시민참여예산제 운영현황과 활성화 방안	오미덕
	'19.04.17.	광주광역시 문화경제 도시를 위한 제언	김종헌
	'19.09.17.	캄보디아 광주진료소 운영을 통해서 본 공적개발원조	최은영
행정자치 (6회)	'18.10.11.	향후 정책네트워크 운영 방향 논의 등	
	'18.11.28.	문재인정부의 자치분권 계획과 개선과제- 자치입법권 강화를 중심으로	김대현
	'19.03.13.	광주광역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제도 개선방안	전광섭
	'19.04.17.	문화적 승화를 위한 민주·인권·평화 광주	송은미
	'19.09.23.	지방정부의 인사혁신	임두택
	'19.10.10.	시스템 속성과 시스템 사고	이상수
환경복지 (8회)	'18.09.19.	향후 정책네트워크 운영 방향 논의 및 발표순서 선정 등	
	'18.10.23.	주요 정책 제안요지서 발표 및 다음 회의 발표자 선정	
	'18.11.19.	~ 복지 분야 예산 경향 분석 및 발표 등	염건이
	'18.12.14.	기후변화와 녹색문화	장화선
	'19.02.11.	빅데이터 정보연계형 AI를 활용하여 공기질 취약 분야에 대한 최적 자율 운영 솔루션 제공	조성용
	'19.04.29.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의미와 활성화 방안	함철호
	'19.06.17.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광주광역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정책 추진 모색을 위한 제언	채현숙
	'19.10.22.	지역문제해결 플랫폼 구축 및 맞춤형 성장지원	이민철
산업건설 (5회)	'18.10.11.	정책네트워크 향후 추진방향 논의 및 상임위 주요현안 논의, 차기 발제자 선정 등	
	'18.11.28.	광주광역시 용도 용적제 개정 조례에 대한 몇가지 검토사항	이명규
	'19.02.18.	광주 지역화폐의 보완과 개선방향	김경은
	'19.05.17.	분양 및 임대 목적 공동주택 등 허가권자 감리자 지정에 관한 광주시 정책 방안 모색	이이수
	'19.06.11.	광주 자동차산업과 생태계 보존 방안 도출	전정현
교육문화 (5회)	'18.10.12.	향후 정책네트워크 운영방향 논의 및 차기 발제자 선정 등	
	'18.11.28.	관례(冠禮), 계례(禮)와 인문학교육을 통한 청소년상 확립	고영란
	'19.05.17.	저출산 고령화 대응을 위한 연극과 함께 하는 인구교육 방안	이윤애
	'19.06.11.	교권과 학생 인권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지원 방안	윤중현
	'19.10.18.	장애인 학생 통합체육 활성화에 관한 소고	조규정

붙임 3 정책네트워크 세미나 보도자료

光州日報

2019년 10월 24일 (목)
22면 인물

광주시의회, DJ센터서 '정책네트워크 세미나'



광주광역시의회(의장 김동찬)는 지난 22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제8대 광주광역시의회 전반기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네트워크 세미나'를 진행했다. 〈광주시의회 제공〉

9.4 X 7.4 ㎝

광주 매일신문

2019년 10월 24일 (목)
03면 종합

광주시의회 '정책네트워크 세미나' 성료

1년간 분과별 활동한 성과·주요 정책 발표

광주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운영 중인 정책네트워크를 통해 소통의 장구 및 창의적 정책개발 싱크탱크(think tank)로서 입지를 다지고 있다.

시의회는 22일 오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제8대 전반기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네트워크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제8대 시의회가 추구하는 공부하는 정책의회 구현을 위해 각 분과별로 추진 중인 현안과제와 활동성과를 공유하고 논의하는 토론의 장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김동찬 의장을 비롯한 23명 의원들과 학계, 시민단체 등 각 분과별 전문가로 구성된 5개분과 정책네트워크 위원 30명 등 총 80여명이 참석했다.

지난 1년간 의회운영분과는 '캄보디아 광주진료소 운영을 통해 본 공적개발원조 등 4건을, 행정자치분과는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계획과 개선과제 등 5건, 환경복지분과는 기후변화와 녹색문화 등 5건, 산업건설분과는 광주지역화폐의 보완점과 개선방향 등 4건, 교육문화분과는 교권과 학생인권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지원방안 등 3건을 각각 제안했다.

김 의장은 "광주공동체의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지역 현장의 미비점을 개선해 나가는 든든한 길잡이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풍부한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을 살려 광주시의 미래 비전을 위해 지혜를 모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정책네트워크는 지난 2010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주요시책에 대한 연구와 자문 기구로 출범했다. /김다이 기자

11.5 X 11.5 ㎝

全南日報

2019년 10월 24일 (목)
07면 종합

전국 최초 광주시의회 '정책 네트워크' 성과

현안과제 등 공유·논의 '공부하는 의회' 구현

광주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운영 중인 '정책 네트워크'를 통해 현안과제와 활동성과를 공유·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23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전날 광주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전반기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 네트워크 세미나'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김동찬 의장을 비롯한 23명 의원들과 학계, 시민단체, 각 분과별 전문가로 구성된 5개 분과 정책 네트워크 위원 30명 등 총 8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는 제8대 광주시의회가 추구하고 있는 '공부하는 정책의회' 구현을 위해 각 분과별로 추진 중인 현안과제와 활동성과를 공유하고 논의하는 토론의 장이 마련됐다.

지난 1년간 분과별 주요성과를 들여다 보면 △의회운영분과는 캄보디아 광주진료소 운영을 통해 본 공적개발원조 등 4건 △행정자치분과는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계획과 개선과제 등 5건 △환경복지분과는 기후변화와 녹색문화 등 5건 △산업건설분과는 광주지역화폐의 보완점과 개선방향 등 4건 △교육문화분과는 교권과 학생인권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지원방안 등 3건을 제안했다.

주제발표에는 전광섭 정책위원(행정자치분과)이 '자치분권 개정안 및 향후 추진 방향'을, 함철호 정책위원(환경복지분과)이 '광주시 복지혁신권고안'을 발제했다.

김대현 정책위원은 "그동안 행정자치분과 위주로 참여하고 활동을 해왔는데 세미나를 통해 다른 분과 활동성과를 확인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의제에 담아 시민들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2일 광주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시의회의 '정책 네트워크 세미나'가 열렸다. 광주시의회 제공

광주시의회 김동찬 의장은 "정책 네트워크가 광주공동체의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지역 현장의 미비점을 개선해 나가는 든든한 길잡이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풍부한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을 살려 광주시의 미래 비전을 위해 지혜를 모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정책네트워크는 지난 2010년 전국 최초로 주요시책에 대한 연구와 자문기구로 출범했다. 광주시의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광주시의 주요정책에 대한 연구와 주요정책 제안, 조례제정 등 활동을 펼쳐왔다. 김정대 기자

22.0 X 12.2 ㎝

광남일보 2019년 10월 24일 (목) 18면 인물

'더 나은 광주' 만들기…광주시의회 '열공'

정책네트워크 세미나…1년 성과·주요 정책 발표

광주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운영 중인 정책네트워크가 소통의 창구이자 창의적 정책개발 싱크탱크(think tank)로 위상을 높여가고 있다.

시의회는 22일 오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전반기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네트워크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제8대 광주시의회가 추구하는 '공부하는 정책의회' 구현을 위해 각 분과별로 추진 중인 현안 과제와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논의하는 토론의 장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김동찬 의장을 비롯한 23명 의원들과 학계, 시민단체 등 각 분과별 전문가로 구성된 5개 분과 정책네트워크 위원 30명 등 총 80여 명이 참석했다.

지난 1년간 분과별 주요 성과에서 의회운영분과는 '캄보디아 광주진료소 운영을 통해 본 공적개발원조 등 4건, 행정자치분과는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계획과 개선과제 등 5건, 환경복지분과는 기후변화와 녹색문화 등 5건, 산업건설분과는 광주지역화폐의 보완점과 개선방향 등 4건, 교육문화분과는 교권과 학생인권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지원 방안 등 3건을 각각 제안했다.

이날 주제발표는 요즘 핫이슈로 꼽히는 두 가지가 선정됐는데 '자치분권 개정안 및 향후 추진 방향'이란 내용으로 전광섭 정책위원(행정자치분과)과 '광주시 복지혁신권고안'이란 내용으로 함철호 정책위원(환경복지분과)이 발표자로 나섰다.

김대현 정책의원은 "그동안 행정자치분과 위주로 참여하고 활동을 해왔는데 오늘 세미나를 통해 다른 분과 활동성과를 확인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 의제에 담아 시민들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광주시의회는 22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전반기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향후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네트워크 세미나'를 개최했다.

특히 김동찬 의장은 "정책네트워크가 광주 공동체의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지역 현장의 미비점을 개선해 나가는 든든한 길잡이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풍부한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을 살려 광주시의 미래 비전을 위해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정책네트워크는 지난 2010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주요 시책에 대한 연구와 자문기구로 출범했으며, 광주시의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광주시의 주요 정책에 대한 연구와 주요 정책 제안, 조례 제정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장승기 기자 sky@

26.5 X 15.3 ㎝

남도일보 2019년 10월 24일 (목) 03면 종합

광주시의회, 정책네트워크 세미나 '호응'

1년간 연구 성과 공유·주요 정책 발표

광주광역시의회(의장 김동찬)가 전국 최초로 운영 중인 정책네트워크가 소통 창구이자 창의적 정책개발 싱크탱크로 거듭나고 있다.

23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1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제8대 광주광역시의회 전반기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네트워크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제8대 광주광역시의회가 추구하는 공부하는 정책의회 구현을 위해 각 분과별로 추진 중인 현안과제와 활동성과를 공유하고 논의하는 토론의 장으로 열기가 뜨거웠다.

이 자리에는 김동찬 의장을 비롯한 23명 의원들과 학계, 시민단체 등 각 분과별 전문가로 구성된 5개분과 정책네트워크 위원 30명 등 총 8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지난 1년간 분과별 주요성과를 살펴보면 ▲의회운영분과는 '캄보디아 광주진료소 운영을 통해본 공적개발원조 등 4건 ▲행정자치분과는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계획과 개선과제 등 5건 ▲환경복지분과는 기후변화와 녹색문화 등 5건 ▲산업건설분과는 광주지역화폐의 보완점과 개선방향 등 4건 ▲교육문화분과는 교권과 학생인권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지원방안 등 3건을 제안했다.

이날 주제발표는 '자치분권 개정안 및 향후 추진 방향'을 주제로 전광섭 정책위원(행정자치분과)과 '광주광역시 복지혁신권고안'을 주제로 함철호 정책위원(환경복지분과)이 각각 발표자로 나섰다.

김동찬 의장은 "정책네트워크가 '광주공동체의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지역 현장의 미비점을 개선해 나가는 든든한 길잡이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풍부한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을 살려 광주시의 미래 비전을 위해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정책네트워크는 지난 2010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주요시책에 대한 연구와 자문 기구로 출범했으며, 광주시의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광주시의 주요 정책에 대한 연구와 주요정책 제안, 조례 제정 등의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정세영 기자 jsy@namdonews.com

11.4 X 15.7 ㎝

전남매일 2019년 10월 24일 (목) 03면 종합

시의회 정책네트워크 가시적 성과

전반기 연구성과 발표·발전방안 모색 세미나

광주시의회가 지역 현안을 고민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운영 중인 정책네트워크가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지난 22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제8대 광주시의회 정책네트워크 전반기 연구성과를 발표하고, 향후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동찬 의장을 비롯한 의원 23명과 학계·시민단체 등 각 분과별 전문가로 구성된 5개 분과 정책네트워크 위원 30명 등 총 80여 명이 참석했다.

지난 1년간 성과로는 의회운영분과의 경우 캄보디아 광주진료소 운영을 통한 공적개발 원조 등 4건, 행정자치분과는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계획과 개선과제 등 5건, 환경복지분과는 기후변화와 녹색문화 등 5건, 산업건설분과는 광주지역화폐 보완점과 개선방향 등 4건, 교육문화분과는 교권·학생인권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지원방안 등 3건을 제안했다.

전광섭 정책위원은 '자치분권 개정안 및 향후 추진 방향', 함철호 정책위원은 '광주시 복지혁신 권고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동찬 광주시의회 의장은 "정책네트워크가 광주공동체 특성에 맞는 창의적 정책을 제시하고 지역 현장의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해 나가는 든든한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며 "각 분과 위원들의 풍부한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을 살려 광주의 미래비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의회 정책네트워크는 지난 2010년 전국 광역시의회 중 처음으로 출범했으며, 의정활동 지원과 광주시 주요 정책에 대한 연구·조례 제정 등 활동을 하고 있다.

/황애란 기자

11.4 X 14.3 ㎝

무등일보

2019년 10월 24일 (목)
03면 종합

광주시의회 '정책네트워크' 성과

의회운영·행정자치·환경복지 등 지역현안에 대한 연구·방향 제시

전국 최초로 운영하고 있는 광주시의회(의장 김동찬)의 '정책네트워크'가 소통의 창구이자 창의적 정책개발 싱크탱크로 잘 활용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23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전날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제8대 광주시의회 정책네트워크 전반기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제8대 광주시의회가 추구하는 '공부하는 정책의회' 구현을 위해 각 분과별로 추진 중인 현안과제와 활동성과를 공유하고 논의하는 토론의 자리였다.

이 자리에는 김동찬 의장을 비롯한 23명 의원들과 학계, 시민단체 등 각 분과별 전문가로 구성된 5개분과 정책네트워크 위원 30명 등 총 80여명이 참석했다.

지난 1년간 분과별 주요성과는 ▲의회운영분과 캄보디아 광주진료소 운영을 통해 본 공적개발원조 등 4건 ▲행정자치분과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계획과 개선과제 등 5건 ▲환경복지분과 기후변화와 녹색문화 등 5건 ▲산업건설분과 광주지역화폐의 보완점과 개선방향 등 4건 ▲교육문화분과는 교권과 학생인권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지원방안 등 3건이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전광섭 정책위원(행정자치분과)과 함철호 정책위원(환경복지분과)이 각각 '자치분권 개정안 및 향후 추진방향'과 '광주광역시 복지혁신권고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김동찬 의장은 "정책네트워크가 광주공동체의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지역현장의 미비점을 개선해 나가는 든든한 길잡이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풍부한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을 살려 광주시의 미래 비전을 위해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정책네트워크는 지난 2010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주요시책에 대한 연구와 자문 기구로 출범했으며, 광주시의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광주시의 주요정책에 대한 연구와 주요정책 제안, 조례제정 등의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김성학 기자 pleasure@srb.co.kr

14.1 X 13.9 ㎝

우수사례 요약서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02 광산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주민자치연구회」

분야 : 연구활동 등 전문성 제고



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제출자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목적

- 구민을 위한 정책 개발과 의정발전을 위한 의원 공동연구활동 추진
- 의원 입법 전문성 향상 및 활성화 도모

현황 및 문제점

- **주요현황**
  - 지원근거 :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 대표의원 :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이귀순 의원
  - 연구주제 : 광산구 주민자치 현황 점검, 타 지역사회 사례 검토를 통한 광산형 주민자치의 방향과 정책방안 제시
  - 연구기간 : 2019. 3. ~ 2019. 12.
  - 소속의원

(2019년 10월 현재)

연 번	직 위	성 명	비 고
1	대표의원	이귀순	
2	의 원	공병철	운영위원장
3	의 원	조영임	기획총무위원장
4	의 원	강장원	산업도시위원장
5	의 원	김태완	
6	의 원	이영훈	

● **문제점**

- 오늘날 기초의회의 제도적 한계 상 정책보좌인력 등 지원체계가 열악하여 의원 연구활동에 대한 심도 있는 지원과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 광산구의회 청사 노후화, 공간 부족으로 수용 가능한 인원의 한계가 있어 원활한 연구활동 진행이 어려움

추진내용

●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 개최**

- 일　시 : 2019. 7. 11.(목) 10:30 ~ 13:00
- 장　소 : 광산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 참　석 : 20여명(의원, 5개동 주민자치회, 관계공무원 등)
  * 5개동 : 광산구 우산동, 운남동, 첨단2동, 어룡동, 수완동
- 주요내용 : 주민자치회 현황 공유, 자유토론 등
- 회의결과
  - 광산구 주민자치회 주요 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 애로사항 공유
  -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 논의
  - 주민자치 전담인력 양성, 주민자치회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 등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 수렴
- 회의사진



주민자치회 현황 공유



현황공유 및 자유토론

● 주민자치연구회 자체 연구활동 실시

- 매주 수요일 오전 스터디 진행
- 각 동별 주민자치회 및 주민총회 현장 방문

추진성과

● 광주광역시 광산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제249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및 수정가결(제250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 자체 연구활동 및 각계각층의 다양한 관계자와의 간담회, 현장방문 등을 통해 조례안 개정, 지역현안 논의 등 의원 입법·정책 활동과 연계

향후일정

● **광산구의회 주민자치연구회 주관, 저자와의 만남 및 특강 추진**(예정)

- 일　시 : 2019. 11. 14.(목) 15:00
- 장　소 : 광산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 참　석 : 소속의원 등
- 강　사 : 신용인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주요내용
  - 저자와의 대화 : 마을공화국, 상상에서 실천으로
  - 특별강연 진행 및 자유토론 등

※ 강의주제 및 일정 조율 중

우수사례 요약서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03 경기도의회 정책분석보고서 "GA정책이슈브리프" Gyeonggi Assembly



분야 : 연구활동 및 전문성 제고

기관명 경기도의회

제출자 경기도의회사무처 협치지원담당관

추진목적

- 道 당면 현안과제의 발굴·분석
- 상시 정책정보 제공 및 현안이해 증진에 기여
- 의원 맞춤형 보고서 제공으로 학습 및 연구 역량 강화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경기도의회는 1,360만 경기도민의 대의기관이자 경기도 도정에 관한 최고의결기관으로서, 다양한 당면 현안과제에 대한 해결과 조정, 의사결정의 수행을 요함.
- 경기도의 연간 예산 규모는 24조 197억 원('19년 본예산 기준)이며,
- 제10대 의회 개원 이후 440건의 조례, 68건의 동의안, 40건의 결의안과 건의안을 채택하는 등 703건(제338회 임시회 기준)에 달하는 안건을 처리하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 문제점

- **부족한 의정활동 지원 인력·기능**
  - 경기도의회가 심의·의결하는 예산규모와 안건의 질적·양적 측면을 감안할 때, 이를 위한 의정지원을 받을 필요성이 크게 존재하나,
  - 행정직 인력을 포함한 의회 사무처 인력은 의원 1명당 1.7명에 불과하며('18.12월 말 기준) 별도의 정책보좌 인력이 부재한 상황
  - 도의회 맞춤형 연구기능의 부재

- 국회의 경우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와 같은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기관들이 자체적인 연구 기능 수행을 통해 국회의원의 정책 결정을 지원함.
- 반면 경기도의회를 비롯한 지방의회의 경우 이러한 기능이 미약하고, 道 싱크탱크인 경기연구원, 경기도교육연구원 등 연구기관이 설치·운영되어 있으나, 기본적으로 경기도- 경기도교육청의 정책 추진을 위한 논리 개발과 대안 마련 등에 연구의 초점이 맞혀진 바, 경기도의회에서 요하는 현안 대응과 연구 수행과는 일정 부분 차이가 존재함.
- 따라서 도의회 자체적인 사례 수집 및 연구기능, 정책 분석 지원 기능을 추가·보완할 필요성이 크게 존재함.

추진경과

● GA정책이슈브리프 추진 계획 수립

- 道 당면 현안과제의 발굴·분석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정책분석보고서 (제명 'GA정책이슈브리프') 를 통해 도의원에 대한 상시 정책정보 제공 및 현안이해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도로 추진

▶ 구성방향

- 주요 현안 및 정책이슈에 대한 검토 및 정책제언
- 道, 교육청 등의 주요 핵심 사업 관련 분석자료 제공

● 추진절차

- 주제 선정을 위해 부서 자체적으로 회의를 추진하거나 도의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선정
- 영역별 담당자(협치분석팀, 현원 7명)가 보고서를 작성, 3차에 걸친 내부 검토 후 전체 도의원에게 발송(이메일, SNS)

주제발굴	작성	검토	수시보고서 발송	백서 발간
·도의원 제안 ·협치지원담당관 발굴 ·담당자 제안	·영역별 담당자 작성	·(1차) 작성 담당자 ·(2차) 총괄 담당자 ·(3차) 분석팀장 → 협치지원담당관	·전체 도의원 메일발송·문자 안내	·분기별 GA정책분석 보고서 발간 (수시보고서 통합본)

● **추진실적**

- 현재까지 총 30회 보고서 작성 및 발송 完('19.10.30 기준)

▶ GA정책이슈브리프 총 30회 작성 및 메일 발송 (´19.10.30. 기준)

▶ GA정책이슈브리프 백서 제1, 2권 발간 (각 200부)

- GA정책이슈브리프 제1권 발간 (이슈브리프 제1호~제13호, ´19.5.18.)
- GA정책이슈브리프 제2권 발간 (이슈브리프 제14호~제25호, ´19.9.10.)
- GA정책이슈브리프 제3권 발간 예정 ('19.12월 예정)

추진성과

● **도의회 의정지원 체계 발전대안으로 활용**

| 사례① :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협의회 안건 상정

▶ 의정지원 인력 확충 필요성 및 방안을 보고서로 제안

- 보고서 제명 : "의회 의정활동 지원 인력 확충"(제1호)

▶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협의 실시

- 도의회-道 정책 조정을 위한 정책협의회 주요 안건으로 채택
- 의정 지원인력 확충 및 전문직화를 위한 조직·인력 개선 방안 제안 및 근거자료로 활용

| 사례 ② : 보고서 제언을 바탕으로 의정포털 시스템 구축 추진

▶ 의정포털 시스템 구축 필요성과 타 광역자치단체 사례를 보고서로 제안

- 보고서 제명 : “경기도의회 '의정포털 시스템' 도입 방안 검토”(제10호)

▶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의정포털 시스템 구축 추진 중

- 경기도의회 의정포털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19.10~'20.2.)
- 의정활동 정보활용 체계 강화, 의정지원 프로그램 통합 관리 등 추진



● GA정책이슈브리프를 착안한 조례 제·개정 추진(예시)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일부개정 (기획재정위원회)

- 개정 취지 : 시·군의 부담을 수반하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시장·군수 의견 청취를 권고하는 개정사항 반영 (제339회 임시회, ‘19.10.22.)
- 관련 보고서 제명 : “경기도 도-시·군 재정 분담율 현황 및 조율과제”(제22호)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일부개정 추진 중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 개정 취지 : 비법정전입금에 대한 책임과 관리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조항을 신설
- 관련 보고서 제명 : “경기도교육청 재정구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제23호)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일부개정 추진 중 (기획재정위원회)

- 개정 취지 :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시 도의원 의견을 수렴할 것을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
- 관련 보고서 제명 : “조례 개정을 통한 특별조정교부금 배분기준 정립”(제12호)

● 경기도 정책토론 대축제와 연계 추진

| 사례 ① :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GA정책이슈브리프 작성

▶ 정책토론 대축제 종료 후 결과를 보고서로 발간

- 보고서 제명 : "정책토론대축제의 평가와 발전방향 모색"(제2호)
- 목 적 : '18년 추계 정책토론대축제 종료 이후, 운영 방식의 발전적 변화와 토론회 실효성 제고의 목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분석 결과를 담은 보고서 발간

▶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토론회 실시

- 토론회주제 : "바람직한 정책토론회 추진을 위한 토론회"
- 장소 / 일시 : 경기도의회 대회의실 / '19. 2.19.



| 사례 ② : GA정책이슈브리프 바탕으로 토론회 추진

▶ 현안과제(미세먼지 저감) 주제로 보고서 발간

- 보고서 제명 : "경기도 취약계층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 현안 및 해결과제"(제6호), "경기도 미세먼지 발생 원인에 대한 저감조치 방안"(제9호)

▶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토론회 실시

- 토론회주제 :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진단과 해결방안"
- 장소 / 일시 : 경기도의회 대회의실 / '19. 9.20.



▶ 현안과제(감사위원회 도입) 주제로 보고서 발간

- 보고서 제명 : “경기도 감사위원회 도입의 쟁점과 시사점”(제15호)

▶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토론회 실시

- 토론회주제 : “공정 경기를 위한 합의제 감사위원회 도입 방안에 관한 토론회”
- 장소 / 일시 : 경기도의회 대회의실 / ’19. 9. 9.



‘공정 경기를 위한 합의제 감사위원회 도입 방안에 관한 토론회’ 개최

● 언론 인터뷰, 예산안 심의, 결산 검사, 행정사무감사 등 활용

| 언론 브리핑, 인터뷰 등 의원 대외 의정활동에 근거자료로 활용

▶ 언론 브리핑 사례

- 브리핑 보도 사례 : “김봉균 도의원,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 경기도 버스업체 수익구조 악화 유발’”(경기일보, ’19. 6.17)
- 보고서 제명 :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제의 환승손실 보전금 분담기준 정립”(제4호)

▶ 언론 인터뷰 사례

- 인터뷰 보도 사례 : “유영호 경기도의원 "공정한 경기 위해 합의제 감시위 도입 필요‥ 9일 도의회서 토론회 개최"”
- 보고서 제명 : “경기도 감사위원회 도입의 쟁점과 시사점”(제15호)

- 경기도·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및 ’18회계연도 결산 검사 시 GA정책이슈브리프 활용
- ’19년 경기도·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GA정책이슈브리프를 통해 제시된 문제점, 대안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

향후과제

● GA정책이슈브리프 활용도 제고 방안 마련

- '20년도 사업 추진 방향 설정을 위해, 연초 GA정책이슈브리프 관련 설문조사 및 검토 주제 수요조사 실시 예정
- GA정책이슈브리프 내용을 바탕으로, 인포그래픽을 활용한 정책자료 개발 등 가독성, 시인성 제고 방안 마련
- 요약 자료, 활용 예시 (ex. 정책 대안, 행정사무감사 포인트, 조례안 제시 등) 별도 제공 등 활용도 제고 방안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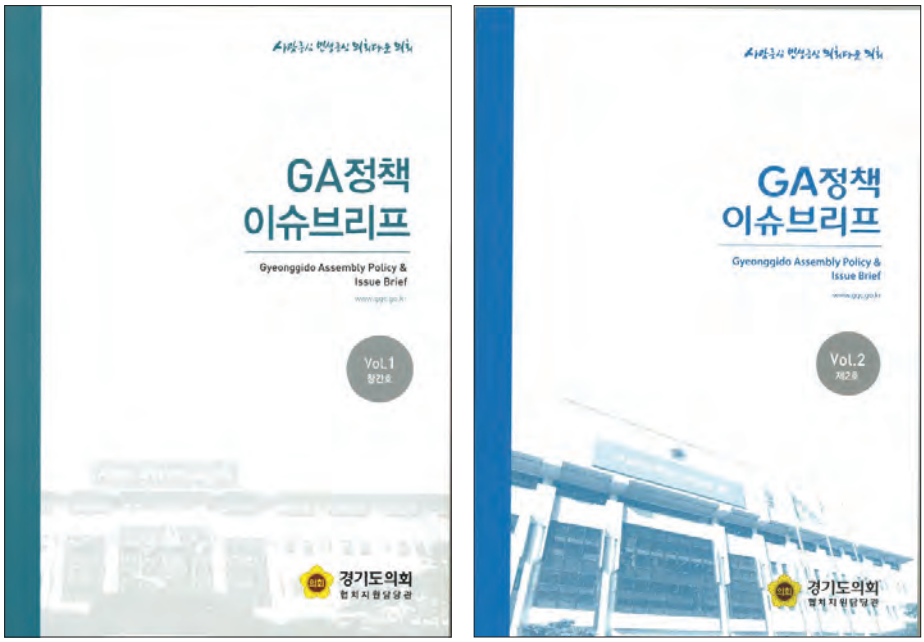
● GA정책이슈브리프 전문성·내용 충실성 강화 방안 마련

- 도의회 내 타 지원부서, 경기도 산하 연구기관, 기타 연구단체 등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전문가 자문, 원고 의뢰 등 전문성·내용 충실성 제고방안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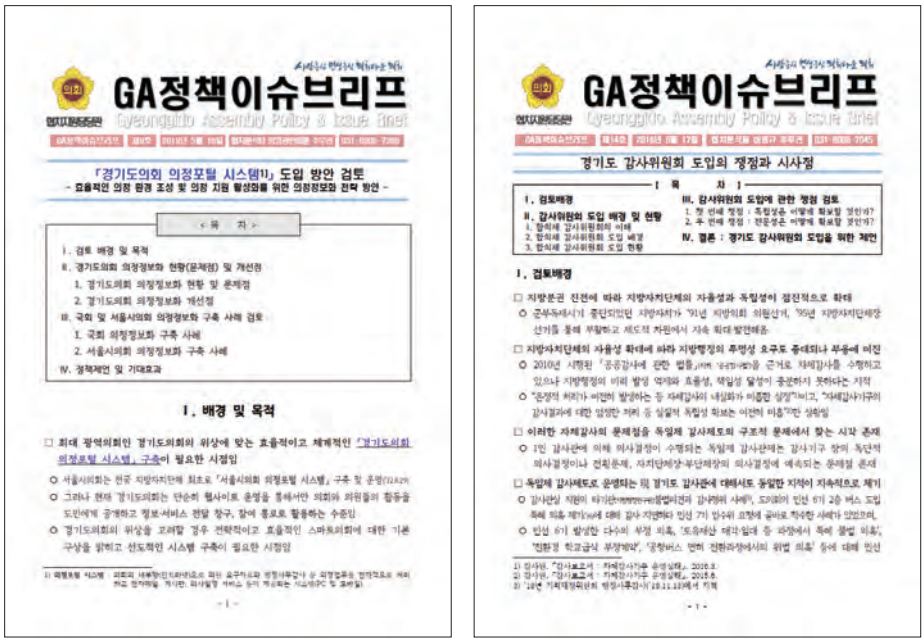
첨부 1 GA정책이슈브리프 추진 실적

연번	보고서 제명	비고
1	의회 의정활동 지원 인력 확충	2월 19일 1호 발송
2	정책토론대축제의 평가와 발전방향 모색	
3	「2019 경기도 경제 활성화 대책」추진계획 검토	
4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제의 환승손실 보전금 분담기준 정립	
5	2019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배분계획 -의회 예산심의권 침해 등에 관한 검토-	
6	경기도 취약계층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 현안 및 해결과제	
7	조건부 예산확정으로 바라본 예산의결권의 한계와 과제	"GA정책이슈브리프" 백서1권 발간 ('19.05.28.)
8	남북평화협력시대, 경기도 남북교류협력 구상 및 전략	
9	경기도 미세먼지 발생 원인에 대한 저감조치 방안	
10	경기도의회 '의정포털 시스템' 도입 방안 검토	
11	경기시장상권진흥원 타당성 검토용역 분석	
12	조례 개정을 통한 특별조정교부금 배분기준 정립	
13	「경기도 대표도서관」건립에 따른 주요 쟁점 검토	
14	경기꿈의대학의 주요 쟁점과 정책제언	
15	경기도 감사위원회 도입의 쟁점과 시사점	
16	경기도 청년정책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	
17	경기행복마을관리소의 시범운영 성과 및 향후 과제	
18	경기도 세수추계 현실화 검토	
19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경기도 공공도서관의 역할 강화	"GA정책이슈브리프" 백서2권 발간 ('19.09.10.)
20	경기도 버스정책의 현황과 주요 쟁점	
21	학교폭력 대응 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	
22	경기도 도-시군 재정분담율 현황 및 조율과제	
23	경기도교육청 재정구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4	경기지역화폐 운영 현황 및 향후 발전과제	
25	일본의 對 한국 수출규제와 경기도 재정에 미치는 영향	
26	민주적 입법을 위한 현행 입법과정의 보완 및 협치 입법제도 신설	
27	고교 무상교육 재원분담 한시지원의 문제점 및 정책 제언	
28	경기도 학교무상급식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3권 발간 예정 ('19. 12월 중)
29	경기도 지하시설물 통합적 안전관리 강화 대책 방안	
30	과밀-과소학교 간 불균형 해소방안 검토	

첨부 2 GA정책이슈브리프 백서 발간



GA정책이슈브리프 표지 (1, 2권)



GA정책이슈브리프 표지 (1, 2권)

우수사례 요약서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04 전문성 있는 의회 구현을 위한 정책중심, 연구중심의 의정활동 강화



분야 : 연구활동 등 전문성 제고

기관명 경기도 고양시의회

제출자 경기도 고양시의회

개요

| 주요 추진사항 |

1	정책 중심, 현장 중심의 맞춤형 「공무국외연수」 추진	
		1-1. 2018 공무국외연수결과 공개 보고회 개최(`18.11월)
		1-2. 효율적인 공무국외 연수를 위한 개선 방안 마련(`19. 4월)
		1-3. 사전 심사 강화를 위한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운영(`19. 6월)
2	「고양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연구 활동	
		2-1. 자치법규연구회
		2-2. 도시재생 및 장묘연구회
		2-3. 미세먼지연구회
		2-4. 도시브랜드연구회
3	「상임위원회 주관 토론회 등」 개최	
		3-1.(경제) 아쿠아스튜디오 활성화, 고양시 먹거리 전략 수립
		3-2.(청년) 청년 정책 의견 수렴
		3-3.(환경) 난지물재생센터가 인근 지역에 미치는 영향
		3-4.(도시) 킨텍스 지원시설부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3-5.(복지) 고양시 장애인의 탈시설 정책 논의
		3-6.(보건)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제도 개선
4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한 자체 연구 용역」 추진	
		4-1.(자치법규) 행정권한 위탁 제도개선 검토 연구 용역
		4-2.(자원순환) 자원순환 시설 및 체계 개선 용역
		4-3.(장묘문화) 장사시설 설치계획 및 수립 방안 용역
5	주민과 함께하는 「의원 동호회」 활동	
		5-1. 고양시 의원 합창단-어깨동무
		5-2. 고양시 의원 수어동호회-손으로 전하는 사랑

● **개괄설명**

- 제8대 고양시의회 첫 공무국외연수 추진에 있어 사전 선진사례 연구를 통해 주제 및 대상지 선정, 방문기관 섭외 등 효율적인 연수를 추진하였으며, 연수 후 고양시의회 최초로 4개 위원회 공동 결과보고회를 실시하였음.
- 제8대 고양시의회는 자치, 지역경제, 환경, 도시 개발 등 고양시의 더 나은 발전과 주민 생활을 위해 연구회 활동과 함께,
- 각 상임위원회(기획행정, 환경경제, 건설교통, 문화복지)에서는 위원회별 시민 생활에 밀착된 주제를 선정하여 토론회, 공청회 등을 하고 있으며, 또한 고양시정연구원의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음.
- 한편, 임시회 및 정례회 등 의정활동으로 바쁜 가운데에서도 '합창단'및'수어동호회'를 다양한 시민층을 대상으로 공연 함으로써 지역 주민과의 소통과 사회통합에 노력하고 있음.

추진내용

● **정책 중심, 현장중심의 맞춤형 「공무국외연수」 추진**

1-1. 2018 공무국외연수 공개보고회 개최('18. 11월)

| 연수 추진경과(각 상임위원회 공통사항) |

일자(기간)	장소	주요 내용	비고
2018. 7월	각 상임위원실	• 국외 연수 장소 및 주제 등 논의 – 기획·건교(체육 및 도시개발, 교통 분야), 환경(환경 및 에너지 정책 등), 문복(복지정책, 관광산업) 주제를 정한 후 해당 선진 지역 국가 선정	
2018. 8월	영상회의실	• 국외 연수 수행 업체 선정을 위한 프레젠테이션 개최 – 4~5개 업체를 대상으로 프레젠테이션 실시 – 각 위원회에서 선정한 연수 주제에 맞는 적격 업체 선정	
2018. 9~10월	영상회의실	• 국외 연수 전체적인 일정 등 브리핑 실시 – 연수 주제에 맞는 방문지 및 일정 등 확인 – 위원회별 간담회 및 기관 방문 등 추가 요청 사항 확인	
2018. 10월	영상회의실	• 국외 연수 최종 일정 브리핑 및 준비사항 안내 – 연수 시 간담회 및 기관 방문 등 최종 일정 확인	
2018. 11월	위원회별 대상지	• 국외 연수 실시	
2018. 11. 22.	영상회의실	• 국외 연수 보고회 실시 – 위원회별 연수 보고회 실시	

| 연수현황 |

위원회	연수기간	연수국가	연수주제	비고
기획행정위원회 및 건설교통위원회	2018.11.6.~11.14.	영국, 프랑스, 독일	체육 및 도시개발, 교통	
환경경제위원회	2018.11.1.~11. 9.	독일, 체코	환경 및 통일	
문화복지위원회	2018.11.1.~11. 9.	오스트리아,체코,헝가리	관광산업 및 복지	

| 연수 보고회 주요내용 |

■ **런던 대중교통 체험**

☞ 지하철, 버스, 트램 등 대중교통 연계시스템 고찰을 통해 환승에 따른 교통 불편 해소 방안 마련

■ **헤센주 체육연맹 방문**

☞ 체육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여 생활체육이 뿌리 내릴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

■ **환경문제 해결의 3대 원칙에 대한 이해 및 접목 방안 고찰**

☞ 오염 발생원인 완전 차단, 오염원 배출 최소화, 배출오염원 최대한 재활용 등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방법으로 이끼벽 등의 설치 방안 연구(슈투트가르트)**

■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바람길 조성 사업 연구(슈투트가르트)**

■ **독일의 통일에 대해 舊 동독인 입장에서 독일 통일 과정 청취(뫼들라로이트)**

■ **독일 주재 주 한국대사관(대사: 정범구) 방문을 통해 독일 통일 과정 청취 및 통일 전초기지로서의 고양시 역할에 대한 논의**

■ **까르따스 요양원 방문**

☞ 단순한 입소자 보호 차원의 시설이 아닌 힐링 및 치유의 기능 도입

☞ 치매노인 수혜자 중심의 공간구성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필요

■ **잘츠부르크 청소년센터 방문**

☞ 청소년센터에 핵가족화된 현실을 고려한 세대 간 격차를 줄이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 및 프로그램 필요

■ **부다페스트 관광청**

☞ 부다페스트 카드(Budapest Card) 사례를 활용한 (가칭)'고양이카드'를 도입하여 관광산업 발전 방안 모색

(※ 별첨 1–공무국외연수관련 보도자료)

| 시사점 |

- 연수 주제를 정한 후 국가를 선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공무국외 연수 계획 수립
- 다수의 업체 제안서 접수 후 프레젠테이션 등 경쟁을 통하여 업체를 선정함으로써 방문지 및 비용, 주요 일정 등 위원회 연수 주제에 맞는 최적의 업체를 선정할 수 있어 더욱 능률적인 연수 추진 가능
- 기획행정위원회 및 건설교통위원회는 대중교통, 도시계획, 생활체육 활성화 부문, 환경경제위원회는 미세먼지 저감, 바람길 조성, 에너지 자립, 통일을 대비하는 자세,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선진화된 복지시설 및 주요 관광지 방문을 통한 사례 연구 등 내실 있는 연수 추진
- 「공무국외연수결과 공개보고회」를 실시함으로써 시민에게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공공성에 기여

(※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무국외연수 결과보고서 참조)

1-2. 효율적인 공무국외 연수를 위한 개선 방안 마련(`19. 4월)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등에 관한 조례」 제정

| 개괄설명 |

공무국외 연수의 외유성 논란을 불식시키고 공무국외 연수의 내실화 및 효율성을 높이며, 외부 통제수단 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 표준안보다 더 강화된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였음.

| 개선내용 |

- 요지 : 현행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폐지하고, 국외출장 목적과 국외출장지 및 국외출장 계획 등의 적합성을 제고함으로써 시정정책을 개발하고 입법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 내용
  - ☞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민간위원 비율을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
  - ☞ 심사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과반수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강화
  - ☞ 심사위원회 심의·의결한 국외출장계획서 및 출장 후 결과보고 홈페이지 의무적 공개
  - ☞ 연수의 내실화를 위해 공무국외 출장계획서 제출 시기를 행정안전부 표준안보다 강화하여 제정
    ※ 행정안전부: 출국 30일전, 제정 조례: 출국 45일 전
  - ☞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표에 의한 심사 실시 규정 마련
  - ☞ 공무국외출장 후 심사위원회 및 상임위 또는 본회의 결과보고 규정 마련
  - ☞ 연수 후 지식의 활용방안 등 사후관리 강화 규정 마련

(※ 별첨 2-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표)

| 시사점 |

-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은 공무 국외연수의 사전 계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원들 간 인식 공유가 이루어져 표준 조례안보다 강화된 내용으로 조례 개정을 한 사례로서 철저한 사전 계획 수립을 통해 더욱 알차고 내실 있는 공무국외연수가 가능하고,
-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 중 민간심사위원을 대폭적으로 확대하여 공무국외연수의 외부 통제 기능이 강화되고 외유성 논란을 불식시키는 등 효율적인 연수 추진을 이룰 수 있으며,
- 연수 후 결과보고회 추진, 사후활용 강화 등 시정 정책 제언 등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음.

1-3. 사전 심사 강화를 위한 공무구외출장심사위원회 운영('19. 6월)

| 운영현황 |

- **개요**: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등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공무 국외출장심사위원회가 2019년 6월 3일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음.
- **위원회 구성**
  - 인원: 7명(민간위원의 비율이 2/3 이상(5명)으로 구성)
  - 민간위원: 교육계·법조계·시민사회단체 등
  - 임기: 2년(한 차례만 연임 가능)
- **추진경과**
  - 2019. 6. 3 : 2019 건설교통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건 심사
  - 2019. 9. 17: 2019 건설교통위원회 국외연수 결과보고회 개최
- **주요내용(결과보고회 주문사항 중심)**
  - 여러 도시의 방문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연수의 내실화 방안 마련
  - 선정된 주제를 바탕으로 기관 방문, 견학, 문화 관광 등 구분 실시
  - 전문통역사의 배치 방안 마련
  - 연수 실시 전 국내 비슷한 사례를 검토하고 실제 연수 시 비교 시찰 실시
  - 2019 연말에 4개 위원회의 합동 보고회 개최 제안

| 시사점 |

- 외부 전문가 심사위원회 구성을 통해 사전 계획 수립의 중요성이 증대되어 더욱 효율적인 연수 추진이 기대되며,
- 방문지 선정 시 벤치마킹 분야에 대한 국내 유사 사례를 검토하고 연수 후 비교분석 실시함으로써 개선방안 도출, 시민과의 공유 등 연수의 내실화를 이룰 수 있음.
- 연수주제를 명확히 하여 그 주제에 맞는 현지 대상지를 선정하고 여러 지역의 방문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대상지 선정으로 이동시간 및 비용 절감의 효과가 기대됨.

(※ 별첨 3-공무국외출장심사 관련 보도자료)

● 고양시의회 연구단체 활동

- 요지: 의정활동과 별도로 진행된 의원 연구단체는 자료조사, 간담회, 토론회, 전문가 특강, 우수사례 벤치마킹, 워크숍, 강연회 등을 통해 최종 연구보고서가 발간되고 조례 제정 및 정책 수립으로 그 결실을 맺게 됨.

| 고양시의회 연구단체 현황('19년 기준) 및 활동사항 |

연구단체		현 황
명 칭	구 분	
2-1. 자치법규 연구회	목 적	효율적인 자치법규 제·개정 및 폐지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 의원발의 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함.
	기 간	2019. 3. 1. ~ 2019. 11. 30.(9개월)
	구성원 (8명)	·회장: 이홍규 의원 ·부회장: 김덕심 의원 ·회원: 강경자, 김수환, 김완규, 손동숙, 심홍순, 엄성은 의원
	활 동	정례회의(4회), 워크숍(1회), 강연회(3회)
	성 과	고양시 지역 현실에 맞는 자치법규 제 · 개정 사례 및 정비가 필요한 자치법규를 발굴하여 시 집행부에 정책 제언 실시
2-2. 도시재생 및 장묘 연구회	목 적	도시재생 사업이 지정된 삼송, 화정, 일산, 능곡지역의 문제점과 현안에 대한 검토 및 정책방향 제시하고 타 지자체 벤치마킹을 통해 고양시 장묘문화의 대안 제시
	기 간	2019. 3. 1. ~ 2019. 11. 30.(9개월)
	구성원 (9명)	·회장: 정판오 의원 ·부회장: 박현경 의원 ·회원: 김미수, 김보경, 김서현, 김종민, 문재호, 이길용, 채우석 의원
	활 동	정례회의(3회), 벤치마킹(2회), 현장방문(1회), 포럼참석(1회)
	성 과	원도심을 중심으로 한 경제기반 구축, 신·구 도시 간 균형발전 방안, 관광과 연계된 도시재생사업, 주민과 전문가의 참여 기회 확대 등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정책 제언 실시

연구단체		현 황
명 칭	구 분	
2-3. 도시브랜드 연구회	목 적	도시의 브랜드는 도시의 상징 및 정체성이며, 강력한 도시브랜드는 국가의 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인식 하에 고양시의 도시브랜드를 폭넓게 발굴하는 연구 활동을 목표로 함.
	기 간	2019. 3. 1. ~ 2019. 11. 30.(9개월)
	구성원 (6명)	·회장: 송규근 의원 ·부회장: 정연우 의원 ·회원: 김해련, 양 훈, 윤용석, 조현숙 의원
	활 동	정례회(5회), 세미나(4회)
	성 과	도시를 상징할 수 있는 브랜드 발굴 및 활용방안, 도시의 미래와 연계된 '도시의 브랜드화'등 정책 제언 실시
2-4. 미세먼지 연구회	목 적	고양시 미세먼지 정책 분석 및 타 지자체의 우수 대책 사례 벤치마킹 등 고양시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정책 제언 목표
	기 간	2019. 3. 1. ~ 2019. 11. 30.(9개월)
	구성원 (5명)	·회장: 장상화 의원 ·부회장: 박소정 의원 ·회원: 박시동, 박한기, 정봉식 의원
	활 동	정례회의(3회), 특강 및 간담회, 설명회 등(6회), 매연 농도 측정 및 확인(2회), 벤치마킹(1회)
	성 과	대기질 관련 조례 제정 추진, 옥상녹화사업 시범대상지 선정 등

※ 별첨 4-미세먼지연구회 주요 활동 내역 첨부, 별첨 5-연구단체 활동 보도자료

● 상임위원회 주관 토론회 등 개최

분야	토론회(좌담회)	내 용	
경제	3-1. 특수촬영사업의 이해와 아쿠아 스튜디오 미래를 위한 특별강의 및 좌담회	일 시	• 일자: 2019. 9. 5.(목) • 장소: 의회영상회의실
		참석자	지역 주민, 환경경제위원회 위원, 고양시 관계 공무원,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관계자 등 ※ 강연자(박상훈 촬영감독)
		내 용	• 특수촬영사업에 대한 이해와 아쿠아스튜디오 향후 활용방안의 정책 발굴 • 고양시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가 강연 및 좌담회 실시
	3-1. 고양시 먹거리 전략(푸드플랜) 수립을 위한 토론회	일 시	• 2019. 9. 30.(월) • 장소: 아람누리도서관 강의실
		참석자	주민, 환경경제위원회 위원, 대학교수, 친환경농업인 관계자, 경기도 및 고양시 관계공무원 등
		내 용	• 서울시 먹거리 전략 방향과 고양시 푸드플랜을 위한 제언, • 지역 주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먹거리 전략 수립 방안 모색

분야	좌담회	내 용	
청년	3-2. 청년 고양시를 말하다! 고양시의회와 함께하는 청년정책 좌담회 개최	일 시	• 일자: 2019. 10. 23.(수) • 장소: 의회영상회의실
		참석자	주민 및 청년, 환경경제위원회 및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시 관계 공무원 등
		내 용	• 고양시에서 진행되는 청년정책에 대한 각 계층 청년들의 의견 청취 • 청년들의 주요 이슈인 청년일자리, 청년 주택 등 청년 전반의 정책에 대한 의견 공유 및 정책 제언 사례 발굴

분야	토론회	내 용	
환경	3-3. 난지물재생센터 인근 지역 환경 영향 및 관련 조례 개정 관련 토론회 개최	일 시	• 일자: 2019. 11월 중(미정) • 장소: 협의 중
		참석자	주민, 환경경제위원회 위원, 고양시정연구원 관계자, 시 관계 공무원 등
		내 용	• 고양시에 소재한 서울시 소유의 난지물 재생센터 인근 지역에 대한 토양, 수질, 악취 등 제반 환경 영향을 전문가 집단과 재조명 • 「고양시 환경시설 등에 관한 조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정방안 등 토론

분야	토론회	내 용	
도시	3-4. 킨텍스 지원시설부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일 시	• 일자: 2019. 11. 4.(월) • 장소: 일산서구청 대강당(2층)
		참석자	지역주민,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대학교수, 도시관리공사 관계자 등
		내 용	• 전시시설 기능유지를 위한 용도제한과 오피스텔 주거용지에 필요한 시설의 용도추가로 인한 갈등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결 방안 모색

분야	토론회	내 용	
복지	3-5. 고양시 장애인의 탈시설 정책을 위한 토론회 개최	일 시	• 일자: 2019. 6. 5.(수) • 장소: 일산동구청 대회의실
		참석자	장애인,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장애인관련 단체, 관계 공무원 등
		내 용	• 장애인이 거주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 근거 및 제도 마련 • 탈시설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진단 등 장애인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조성

분야	토론회	내 용	
보건	3-6. 고양시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의 제도개선 정책수립을 위한 토론회 개최	일 시	• 일자: 2019. 10. 22.(화) • 장소: 고양교육지원청 3층
		참석자	주민(학부모),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고양시약사회 관계자, 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 관계자 등
		내 용	•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유해약물 오남용 사례의 실상을 알리고 제도 개선 사항 주제 발표 및 정책제언 • 유해약물로 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

| 시사점 |

- 기존의 의정활동은 집행부의 잘못된 시정을 바로 잡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견제 및 감시의 기능이 대부분이었으나,
- 지금은 전통적인 기능과 함께 지역의제가 복잡해지고 의회에 대한 시민의 눈높이 및 기대치가 높아진 만큼 시민을 위한 시민 중심의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쳐야 할 시기임.
- 제8대 고양시의회 개원 후 의원들은 지역 의제 및 시정 현안의 제도 개선, 문제점 진단, 해결 방안 모색, 정책 제언을 위해 시민 및 전문가 그룹을 대상으로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 이는 하나의 토론회 등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과제선정, 계획수립, 의제발표, 토론회, 결과에 대한 집행부와 공유 등 일련의 준비 과정이 필요한 만큼 의원 스스로의 많은 연구 노력이 필요한 부분임.
- 주요성과로는 고양시 방송영상산업 활성화를 위한 현장 전문가 특강으로 고양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정책 제언이 실시되었으며, 먹거리 전략 수립 토론회를 통해 의원발의로 고양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가 제정(`19. 10. 18. 제235회 고양시의회 임시회)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음.
- 이러한 토론회 등 선진의회시스템을 바탕으로 시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표출하여 집행부에 대한 비판과 감시의 기능을 넘어 정책대안 제시 등 정책중심, 연구 중심의 의회로 거듭나는 데 기여하였음.

※ 별첨 6-토론회 등 의원 의정활동 관련 보도자료

|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한 자체 연구 용역 추진 |

분야	용역명	내 용	
자치법규	**4-1. 행정권한 위탁 제도개선 검토 연구 용역**	기 간	• 2019. 4. ~ 2019. 7.(3개월)
		목 적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민간위탁·공공위탁 시 법적 근거 불명확, 법령 불부합 사항들을 발굴 검토해 행정권한 변경 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추진
		내 용	민간위탁·공공위탁 시 법적 근거 불명확, 법령 불부합 사항들을 발굴 하였으며 행정권한 변경 시 법적 안정성 확보에 기여
자원순환	**4-2 고양시 자원순환 시설 및 체계 개선 방안 용역**	기 간	• 2019. 10. ~ 2020. 4.(6개월)
		목 적	창릉 신도시 등 고양시 미래, 도시 팽창에 대비해 하수처리장, 소각장, 재활용선별장, 음식물쓰레기처리장 등의 제반 자원순환 시설에 대한 증축 및 신축 로드맵과 자원순환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개선 방안 모색
		내 용	자원순환 시설의 순환 방식에 대한 선진 사례 및 적용 가능성 연구, 가정에서부터 지방정부에 이르기까지 자원순환을 위한 행정 및 거버넌스 체계 개선 방안 마련 등
장묘문화	**4-3 고양시 장사시설 설치계획 및 수립 방안 용역**	기 간	• 2019. 10. ~ 2020. 4.(6개월)
		목 적	인구의 지속적 팽창으로 인해 지자체가 운영하는 장사시설의 필요성 시급하며 장사문화의 변하에 따른 신규 토지매수 방식을 통한 활용 방안 모색
		내 용	고양시 기존 장묘시설의 특성 및 여건 분석, 장사시설의 방향성 제시, 기존 장묘시설의 공원화 방안 모색

| 시사점 |

- 용역 업무는 통상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공무원 및 시민의 시각 차이로 인해 시민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점도 있음.
- 이번 의회 차원의 용역 추진은 이러한 시각 차이를 극복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추진하는 데 큰 의의가 있으며 금년 중으로 2건의 용역(기획행정, 문화복지)이 더 발주될 예정 임.

| 주민과 함께하는 의원동호회 활동 |

동호회명	내 용	
5-1. 고양시 의원 수어동호회- 손으로 전하는 사랑	목적	고양시의회 의원은 '작은 손짓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청각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인식개선을 위해 「손으로 전하는 사랑」의 수어동호회를 구성하였음.
	활동사항	• 2018. 9.29.: 제14회 고양시수어문화제 • 2018.10.21.: 고양 다문화 한마당 • 2018.12.14.: 농아인 송년의 밤 • 2018.12.21.: 장애인 인권포럼 북콘서트 • 2019. 9. 6.: 제15회 고양시수어문화제 • 2019. 9.21.: 2019년 경기도 농문화제 및 수어경연대회
	추진성과	청각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꾸준한 공연활동을 펼쳐 장애인과 비장애인과의 소통을 통한 사회통합에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 2019년 경기도 농문화제 및 수어경연대회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하였음.
5-2 고양시 의원 합창동호회- 어깨동무	목적	대 시민 음악 공연을 통한 시민과의 소통의 장 마련
	활동사항	• 2019. 1.: 정기 합창단 연습 • 2019. 2.: 정기 합창단 연수 • 2019. 5.: 문화행사 합창 공연 • 2019. 6.: 대 시민 합창 공연
	추진성과	대 시민 합창공연을 통해 시민들에게 감동의 선율을 안겨주고 음악과 노래를 통한 소통으로 시민과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마련되었음.

※ 별첨7-수어동호회 활동 및 수상 관련 보도자료

종합의견

● 「2018 공무국외연수」를 추진하는 데 있어 先 주제를 정하고 해당 국가를 선정하였으며 경쟁을 통한 최적의 업체 선정, 방문지 섭외 및 일정협의, 연수 실시 및 결과보고회 개최 등 철저한 사전계획 수립으로 연수의 효율성을 극대화시켰으며 고양시의회 최초로 결과보고회를 개최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의회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였음.

● 공무국외연수 추진 시 민간위원이 중심이 된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철저한 사전심사, 출장 후 결과보고를 통한 활용방안 강화, 일련의 과정에 대한 대 시민 공개 등 연수의 내실화를 기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하였음.

- 제8대 고양시의회는 전문성 있는 의회 구현을 위해 시정 주요 현안과 관련한 연구단체 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정에 대한 감시 견제 기능이 강화되고 시 행정이 놓치는 부분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음.

- 주민생활과 밀착된 현안에 대한 세부 주제를 정하고 전문가를 포함한 시민과 함께하는 토론회 등을 개최함으로써 시민의 의정활동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시 집행부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편익 증진에 기여하고 있음.

- 고양시의회에서는 연구단체 활동 및 위원회 주관 토론회, 연구용역 등을 통해 시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집행부에 대한 비판과 감시 등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한 정책대안 제시 등 정책 및 연구 중심의 의회로 거듭나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한편, 고양시의회 의원들은 임시회 및 정례회 등 의정활동으로 바쁜 가운데에서도 「합창동호회」 및 「수어동호회」 공연 활동을 꾸준히 펼치는 등 시민과의 소통에 노력하였음.

- 특히,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수어동호회」에서는 지난 9월에 개최된 '경기도 농문화제 및 수어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으며 상금 전액을 청각장애인의 학비 지원을 위해 기부하는 등 청각장애인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지역 사회의 리더로서 책임을 다하였음.

별첨 1 2018 공무국외연수 결과보고회 보도자료

고양시의회, 최초 국외연수 정책 결과보고

입력 2018-11-23 09:13 수정 2018-11-23 09:16

지난 22일 시의회 영상회의실서 각 상임위별 진행

[KFM 경기방송 = 이창문 기자] 고양시의회는 지난 22일 고양시의회 영상회의실에서 이번달 초・중순에 실시한 각 상임위원별 국외연수 정책 결과보고회를 처음으로 개최했습니다.



고양시의회가 지난 22일 영상회의실에서 국외연수 정책 결과보고회를 진행하고 있다

환경경제위원회는 지난 1~9일 7박9일 일정으로 독일・체코를 방문해 태양광시설 시찰과 에너지자립마을 펠트하임, 독일연방환경청 등을 방문했고, 문화복지위원회 역시 지난 1~9일 7박9일 일정으로 오스트리아・체코・헝가리를 방문해 까리따스 노인요양원과 하벨전통시장, 짤츠부르크 청소년센터, 프라하 장애인학교 등을 방문했습니다.

이 기사와 관련된 기사


단풍 보러 강원도까지 간다고? 수도권에도 설악산 뺨치는 단


'인천e음카드' 캐시백 서비스 오늘부터 3%-경기밖속 [현재]


무릎통증, 수술없이 해결한다!
관절보공

기획행정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6~14일 7박9일 일정으로 영국・프랑스・독일을 함께 방문해 런던 대중교통 체험학습과 노면전차 트램 체험, 생컹탱 엉 이블린 시청, 보봉 생태마을, 헤센주 체육연맹 등을 방문했습니다.

각 상임위는 이에 이날 결과보고회에서 고양시와 접목 가능한 우수사례를 소개하면서 환경정책과 남북교류, 복지정책, 관광정책, 도시재생, 트램 등 대중교통, 일자리 창출,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등 정책 제언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10px 12px 인쇄하기 취소

고양시의회 국외연수 결과보고회 첫 '시동'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1.23 02:07 수정 : 2018.11.23 02:07

고양시의회 국외연수 결과보고회. 사진제공=고양시의회

[고양=강근주 기자] 고양시의회는 22일 고양시의회 영상회의실에서 국외연수 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

각 상임위는 국외연수를 통해 얻은 고양시 접목 가능한 정책을 이번 보고회에서 발표했으며, 의원들은 이를 통해 정보를 공유했다.

이번 보고회는 국외연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고양시의회가 처음 시도했다.

환경경제위원회는 조중수 위원장이 연수 목적 및 주요 일정 등을 소개하고, 정봉식 의원은 보봉마을, 빌드하임 에너지 자립마을, 독일연방환경청 등을 소개하며 독일의 환경정책과 고양시에 접목 가능한 우수사례 등을 찾았다. 송규근 의원은 외돌라로이트, 베를린장벽, 연방의회의사당, 주독일 한국대사관 등을 돌러보고 느낀 독일 통일과정을 소개하면서 통일시대 남북 교류의 전초기지로서 고양시 역할과 고양시의회 역할에 대해 정책 제언을 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김혜련 위원이 자리따스 노인요양원, 할츠부르크 청소년센터, 프라하 장애인학교 및 재활교육원을 소개하며 수혜자 중심 서비스 제공,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정책 등 선진국 복지정책 및 보편적 복지에 대한 높은 시민의식 등 고양시 복지정책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또한 할츠부르크 관광안내사무소 프라하 하벨 전통시장, 부다페스트 관광정책을 소개하며, 고양시 관광정책에 접목할 우수사례 등을 발표했다.

김효금 문화복지위원장은 "충분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국외연수를 위해서는 다양한 기관 방문도 중요하지만 연수 대상을 신중히 선정하고, 연수과정을 통해 더 깊이 정책에 대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윤승 의장은 "이번 국외연수가 해외연수에서 직접 보고 느낀 선진외국의 우수사례 등을 발굴해 각종 정책대안 마련 등 선진 의정활동에 하는데 소중한 기회가 됐었을 것으로 평가한다"며, "발굴된 우수사례는 연수결과 보고회로 끝나지 않고 우리 시정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kkg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중도일보 - 지역민과 함께 60년 미래 함한 100년 페이지 1/2

중도일보

1955년 창간 joongdo.co.kr

경기 고양시의회, '국외연수 결과보고회'개최

고양시의회(의장 이윤승)는 지난 22일 고양시의회 영상회의실에서 국외연수 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보고회는 이달 초 중순에 실시한 각 상임위원별 국외연수 결과를 고양시에 접목 가능한 정책을 중심으로 발표하였으며, 의원 간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국외연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고양시의회에서 처음 시도하는 것이다.

이날 보고회에는 고양시의회 의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 등이 참석하였으며, 환경경제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순으로 발표가 진행되었다.

이윤승 의장은"이번 국외연수가 해외연수에서 직접 보고 느낀 선진외국의 우수사례 등을 발굴해 각종 정책대안 마련 등 선진 의정활동에 하는데 소중한 기회가 됐었을 것으로 평가한다"며,"발굴된 우수사례는 연수결과 보고회로 끝나지 않고 우리 시정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양=염철매 기자 yamjaya@

http://www.joongdo.co.kr/main/print.php?key=20181123010010205 2019-1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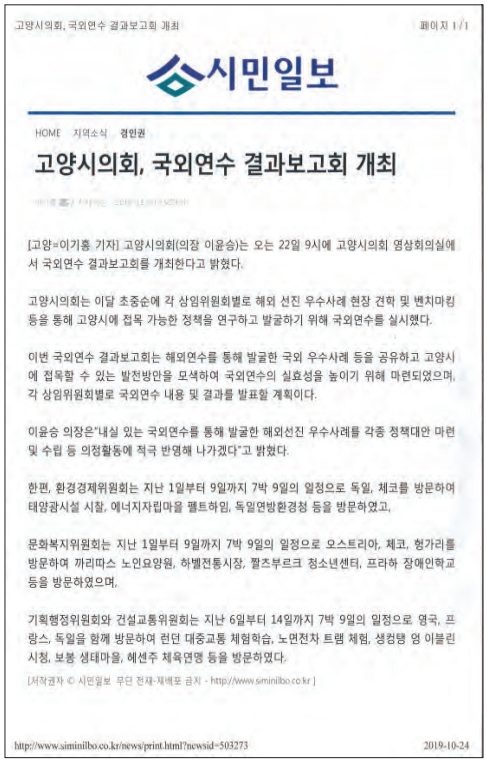
고양시의회 국외연수 결과보고회. 사진제공=고양시의회

연수를 통해 다녀온 기획행정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는 김수환 기획행정위원장이 대표로 발표를 했으며 풍력두센터, 생컴탱 영 이블린 시청을 방문하여 실제본 프랑스 도시재생 및 신도시 개발과 관련한 우수사례를 제시한 뒤 고양시의 기경 유치, 일자리창출 등 도시경쟁력과 자족기능 향상을 위한 우수사례 접목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이 함께 뿌리 내릴 수 있는 독일 해센주의 체육 활성화 시스템 등을 설명하여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이길용 건설교통위원장은 "충분을 통해 이번 국외연수는 준비과정에서부터 의원들이 중분히 논의해 대중교통은 트램과 도시계획시설 등 연수 대상을 선정했고, 현지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 1DY, 2층버스 등을 체험했다며 고양시 교통정책에 도움 도입을 제안했다.

이윤승 고양시의회 의장은 "이번 국외연수가 해외연수에서 직접 보고 느낀 선진외국의 우수사례 등을 발굴해 각종 정책 대안 마련 등 선진 의정활동에 하는데 소중한 기회가 됐을 것"이라며"발굴된 우수사례는 연수 결과보고회로 끝나지 않고 우리 시정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고양시의회, 국외연수 결과보고회 개최 페이지 1/1

시민일보

HOME 지역소식 경인권

고양시의회, 국외연수 결과보고회 개최

[고양=이기홍 기자] 고양시의회(의장 이윤승)는 오는 22일 9시에 고양시의회 영상회의실에서 국외연수 결과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고양시의회는 이달 초중순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해외 선진 우수사례 현장 견학 및 벤치마킹 등을 통해 고양시에 접목 가능한 정책을 연구하고 발굴하기 위해 국외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국외연수 결과보고회는 해외연수를 통해 발굴한 국외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고 고양시에 접목할 수 있는 발전방안을 모색하여 국외연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별로 국외연수 내용 및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윤승 의장은"내실 있는 국외연수를 통해 발굴한 해외선진 우수사례를 각종 정책대안 마련 및 수립 등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경제위원회는 지난 1일부터 9일까지 7박 9일의 일정으로 독일, 체코를 방문하여 태양광시설 시찰, 에너지자립마을 펠트하임, 독일연방환경청 등을 방문하였고,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1일부터 9일까지 7박 9일의 일정으로 오스트리아, 체코, 헝가리를 방문하여 까리따스 노인요양원, 하벨전통시장, 짤즈부르크 청소년센터, 프라하 장애인학교 등을 방문하였으며,

기획행정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6일부터 14일까지 7박 9일의 일정으로 영국, 프랑스, 독일을 함께 방문하여 런던 대중교통 체험학습, 노면전차 트램 체험, 생컴탱 엉 이블린 시청, 보봉 생태마을, 헤센주 체육연맹 등을 방문하였다.

[저작권자 © 시민일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http://www.siminilbo.co.kr]

http://www.siminilbo.co.kr/news/print.html?newsid=503273 2019-10-24

별첨 2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표

■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 (제6조 관련)

항목	심사기준	예	아니오
출장의 필요성	1.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2.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가?		
	3. 해외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 수행이 가능한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1.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 및 기관을 방문하는가?		
	2. 과거 또는 향후 다른 출장자가 동일 기관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지?		
	3. 수집하려는 자료가 인터넷이나 문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지 확인했는가?		
	4. 방문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가?		
	5.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는가?		
	6. 여러 국가나 도시 방문 시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가?		
출장자의 적합성	1. 출장목적 및 계획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가?		
	2.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이 출장에 포함되었는가?		
	3. 출장목적에 맞게 필수 인원으로 한정하고 출장자 간 업무분장이 명확한가?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시성	1. 출장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했는가?		
	2.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등을 감안, 방문 시기는 적합한가?		
	3. 국내외 등 출장을 자제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	1. 공무국외출장 경비는 예산편성기준 및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되었는지?		
	2. 타 기관으로부터 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의 정당성 여부 및 지원금액이 적정한지?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	1. 방문국 및 주변국의 감염병 발생 여부를 확인했는가?		
	2. 현지활동 중 교통수단을 확보했는지?		

별첨 3 공무국외출장 심사 관련 보도자료

news1

전국 > 경기

고양시의회, 해외연수계획서 셀프 심사 '그만'

심사위원회 2/3이상 민간인 위촉 조례 개정



©News1

최근 일부 지방의원들의 국외연수 과정에서의 일탈이 문제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 고양시의회가 의원들의 공무국외출장 심의와 결과보고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고양시의회는 지난 11일 제2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장상화 의원(정의당)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이번 조례안에서는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에 민간위원 비율을 3분의 2 이상으로 규정했다. 심사위원회 위원 정원이 7명인 가운데 민간위원의 정원 기준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5명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

또한 심사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과반수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강화했으며, 심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국외출장계획서 및 출장 후 결과보고서를 의무적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여기에 국외출장의 타당성, 방문국이나 기관의 타당성, 출장기간 및 경비의 적정성 등을 고려해 심사하도록 했으며, 연수를 통해 습득한 지식의 활용방안 강구 등 사후관리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상화 의원은 "최근 일부 지방의회에서 국외연수와 관련해 지방의원의 일탈 등이 언론에 보도됨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조례 제정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며 조례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 고양시에서는 의원들의 공무국외출장 시 사전심의를 의회 운영위에서 시의원들이 진행해 사실상 셀프 심사를 해 왔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지난해 정의당 소속 시의원 4명은 제8대 의회가 시작하면서 '외유성 해외연수를 가지 않겠다'고 선언한 뒤 이후 모든 해외연수에 불참했다.

별첨 4 미세먼지연구회 주요 활동 내역

■ 미세먼지 연구회 세부 연구 추진 현황

구 분	연구활동 실적 및 계획	비 고
3월 정례회의/간담회	**■ 제1차 정례회의 개최 (3. 15.)** **■ 관련 부서와의 간담회 개최(3. 26.)** - 고양시 미세먼지 저감 및 예방에 관한 주요 업무 청취 및 질의응답	
4월 정례회의/시연회	**■ 제2차 정례회 및 매연저감 첨가제 특허제품 시연회(4. 29.)**	
5월 특별강의/좌담회	**■ 1차 특별강의 및 좌담회 개최(5. 17.)** - 미세먼지 개선방안 및 정책방향 특강 (이화여대 김용표 교수) - 좌담회(시민활동가, 시 관계공무원 등)	
6월 신기술설명회/ 벤치마킹/특별강의/ 좌담회	**■ 옥상녹화사업 관련 신기술설명회(6. 7.)** **■ 수원시 그린커튼사업 벤치마킹(6. 7.)** **■ 2차 특별강의 및 좌담회(6. 13.)** - 미세먼지가 무서우면 해야 할 일 (아주대학교 장재연 교수) - 좌담회(시 관계공무원, 시민활동가 등)	
7월 정례회의/간담회	**■ 제3차 정례회의 및 부서 간담회(7. 30.)** - 미세먼지 저감 시범사업(그린커튼, 옥상 녹화 등) 도입(2020년) 관련 부서 간담회	
8월 기관방문 간담회	**■ 미세먼지 관련 중앙 및 광역 부서 간담회** - 대상 : 환경부(미세먼지 관련 부서) - 내용 : 미세먼지 관련 국가, 광역 단위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 및 향후 계획 관련 간담회	
9월 시민단체 간담회	**■ 시민단체와의 간담회** - 대상: 미세먼지대책촉구위원회, 경기도 미세먼지 대책 관련 부서 - 내용: 미세먼지 관련 의견수렴을 위한 시민단체와의 간담회	
10월 정례회의	**■ 1차 보고서 작성** **■ 대기질 관련 조례 제정 또는 개정 추진**	
11월 정례회의	**■ 정리 및 최종 보고서 작성**	

별첨 5 연구단체 활동 보도자료

이뉴스투데이

HOME > 전국 > 기타

고양시의회 도시브랜드연구회, '스포츠 통한 도시브랜드 강화 전략 전문가 특강 및 좌담회' 개최

이혜윤 기자 승인 2019.05.29 14:30



(사진=고양시의회)

[이뉴스투데이 이혜윤 기자] 고양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도시브랜드연구회'가 5월 28일 고양시의회 영상회의실에서 스포츠를 통한 도시브랜드 강화 전략 마련을 위한 전문가 초청 특강 및 좌담회를 가졌다.

이번 특강은 도시브랜드연구회가 고양시의 정체성과 미래비전을 담은 도시브랜드 발굴을 목적으로 준비한 4회의 특강 중 두 번째 특강으로, 도시브랜드연구회 및 고양시 체육정책과, 고양시정연구원, 고양도시관리공사,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고양시체육회, 고양시장애인체육회 등이 참석했다.

이날 특강은 서울대학교 김기환 교수가 '스포츠를 통한 도시브랜드 강화 전략'이란 주제로 도시브랜드 개념, 도시브랜드의 필요성, 도시브랜드 결정요인, 스포츠와 도시브랜드, 외국 우수사례 등을 설명하며 고양시의 성공적 스포츠 도시브랜딩을 위한 다양한 제언을 하였다.

특강에 이어 고양시 체육정책과 계은영 스포츠산업팀장이 '스포츠 도시 고양의 가치창출 및 브랜드 세일즈 전략'이란 주제로 발제를 했으며, 좌담회에서는 지자체 최초 스포츠 브랜드(SC Goyang) 런칭, 크고 작은 국내외 스포츠 이벤트 개최, 프로 스포츠팀 연고지 등 잘 정비된 고양시 스포츠 인프라를 바탕으로 고양시 스포츠산업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도시브랜드 강화 전략에 대해 참석자들은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도시브랜드연구회 송규근 회장은 "도시브랜드는 하나의 요인이 아닌 여러 복합적인 요인으로 결정된다. "며, "스포츠, 관광, 문화유산, 마이스산업 등 고양시의 우수 자원을 잘 활용하여 고양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연구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혜윤 기자

기호일보

HOME > 정치 > 경인지역

고양시의회 도시브랜드연구회, 도시브랜드 창출 위한 연구활동 박차

조병국 기자 승인 2019.07.25 5면

고양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도시브랜드연구회'가 고양시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미래 비전을 담은 도시브랜드 발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연구회는 지난 23일 고양아쿠아스튜디오에서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고 일선 현장을 방문하는 등 시의 새로운 도시브랜드 발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제미나는 고양시 방송영상미디어산업의 이해를 통한 시 발전 방향 모색 및 미래 비전을 담은 도시브랜드 발굴을 위해 마련됐으며, 고양시의회 도시브랜드연구회 및 고양시 전략산업과, 고양시정연구원,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사공진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팀장과 김준우 고양시정연구원 연구원이 각각 '방송영상미디어의 이해와 고양시 콘텐츠산업 발전 방향', '고양아쿠아스튜디오 발전 전략'이란 주제로 발표에 나섰고 이어진 질의응답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연구회 소속 의원들은 아쿠아스튜디오 공사 현장 및 입주기업을 차례로 방문한 뒤 MBC 드림센터와 EBS 스튜디오 등을 시찰하며 방송영상미디어산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다. 또한 방송 관계자들과 시의 방송영상미디어산업 발전 방향 및 문화콘텐츠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펼쳤다.

고양시의회 도시브랜드연구회 송규근 회장은 "고양시는 아쿠아스튜디오, 방송지원센터 '빛마루, 브로멕스타워 등 방송영상미디어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며 "방송영상미디어산업 지원을 통해 고양시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연구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저작권자 © 기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병국 기자

이뉴스투데이

HOME > 전국 > 수도권특별뉴스

고양시의회 도시브랜드연구회, '도시브랜드 강화 전략 좌담회' 개최

이혜윤 기자 승인 2019.10.01 14:55



(사진=고양시)

[이뉴스투데이 이혜윤 기자] 고양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도시브랜드연구회'가 9월 30일 고양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공예·수제품 산업을 통한 도시브랜드 강화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좌담회는 고양시 공예·수제품 산업의 이해를 통한 고양시의 발전 방향 모색 및 미래비전을 담은 도시브랜드 발굴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고양시의회 도시브랜드연구회 및 고양시 소상공인지원과, 문화유산관광과, 고양시정연구원, 고양시 공예·수제품 관련 단체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첫 순서로 고양시정연구원 이현정 부원장이 '고양시의 공예·수제품 산업 활성화 방안'이란 주제로 발제를 하였고, 이현정 부원장은 "지역공예 인력 양성 및 네트워크 강화, 공예 산업에 대한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발표하며 공예·수제품 산업에 대한 다각도적인 접근을 주문했다.

발제에 이어 진행된 좌담회에서는 고양시 공예·수제품 산업 육성을 통한 고양시의 새로운 도시브랜드 발굴에 대해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좌담회는 고양시 공예사업협동조합 등 고양시 공예·수제품 관련 단체가 좌담회에 참석하여 애로사항과 육성 방향에 대해 함께 의견을 나눔으로써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는 자리가 되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관련 부서 및 고양시 공예·수제품 단체의 의견 및 건의사항을 공공의 정기적 상설 공예·수제품 판매 공간과 트렌드를 읽을 수 있는 장소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특히 이번 좌담회의 좌장인 고양시의회 도시브랜드연구회 소속 윤용석 시의원은 "단위공예품에 대한 스토리를 만들어 수제품 사업을 고양시의 대표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간담회를 마친 후 도시브랜드연구회의 회원들은 전통가옥 미니어처 공방을 찾아 공예품 제작 과정 등을 살펴보았다.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혜윤 기자

이뉴스투데이

HOME > 정치 > 기타

고양시의회'도시재생 및 장묘 연구회', 수원·군산 벤치마킹 방문

이혜윤 기자 승인 2019.08.30 07:00



(사진=고양의회)

[이뉴스투데이 이혜윤 기자] 고병시의회(의장 이윤승) 의원 연구단체인 '도시재생 및 장묘 연구회'가 수원 및 군산 지역의 장묘시설과 도시재생사업지를 방문해 벤치마킹을 실시했다. 지난 8월 28일부터 8월 29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이번 벤치마킹은 타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수 도시재생사업 과 장묘시설에 대한 현장방문을 통해 고양시민의 복세 없는 도시재생 성공모델 개발 및 장묘문화의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벤치마킹에는 연구회 소속 정찬모, 박현경, 김미수, 김보경, 문혁호, 이길용, 채우석 의원과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주무관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벤치마킹 첫째날에는 수원시에 위치한 경모시설 연화장과 군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복보산장 등 도시재생뉴딜사업현장을 방문했고, 둘째날에는 군산시 월명동 일대와 근대건축물, 주택등거리 답사 등 도시재생으로 변화된 도시의 모습을 직접 확인했다.

수원시 연화장은 2001년 분을 연직 화장 시스템의 한리성을 갖춘 것은 물론 주요공간을 넓어 시민들에게 휴식과 문화체험 공간을 제공하는 등 혐오 문화를 창립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아온 곳으로, 연구회 의원들은 관계자로부터 연화장 설립 현황 및 사업추진 시 에로사항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시민들이 혐오하는 시설을 어떻게 하면 호해하는 시설로 바꿀 수 있을까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군산시는 지역의 쇠퇴와 위기를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기우 여건, 상업 여건을 개선하는 동시에 문화·관광도시 선도지역으로 도시재생을 추진해온 곳으로, 연구회 의원들은 특히 군산시 철갑을 일대의 근대 한존 건축물을 보수하고 근대역사박물관을 건립하는 등 계발과 관련이 결합된 도시재생사업에 주목했다. 연구회 의원들은 군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이강명 사무국장으로부터 군산시 도시재생사업 추진 과정, 특징 및 성과에 대한 브리핑을 받고, 낙후된 원도심을 관광이 결합된 도시재생으로 5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관광중심 도시로 어떻게 성장시킬 수 있었는지 관계자와 의견을 교환했다.

'도시재생 및 장묘 연구회' 회장을 맡은 정찬모 의원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벤치마킹을 실시하게 되었다"며 "수원 및 군산지역의 사례와 같이 신·구 도시간 균형발전및 지역적 특색을 고려한 새로운 고양형 도시재생 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혜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양시의회-환경부 미세먼지 대책 논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8.28 02:10 수정 : 2019.08.28 02:10



고양시의회 환경부 미세먼지 대책 간담회 사진제공=고양시의회

[고양=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고양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미세먼지연구회'가 미세먼지 저감 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활동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미세먼지연구회는 27일 환경부를 방문해 주관부서인 대기환경정책과와 미세먼지 대책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장상화, 박소정, 박시동, 박한기, 정봉식 의원을 비롯해 고양시 기후대기과장, 대기대응팀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국내 미세먼지 현황 및 여건, 그동안 중앙정부의 미세먼지 추진 현황 및 성과, 미세먼지 배출 저감 대책, 중점 추진과제 등에 대해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 신영수 사무관의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장상화 미세먼지연구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미세먼지는 광역적인 문제로 환경부 단독이나 어느 한 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중앙부처, 광역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필요한 지원과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해 나가자"고 제언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경기신문

HOME > 경기

고양시의회 미세먼지연구회, 환경부와 간담회 '광폭 활동'

고중오 기자 승인 2019.08.28 20:28

저감대책, 정부 적극지원 건의

고양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미세먼지연구회'가 미세먼지 저감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 활동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미세먼지연구회는 지난 27일 환경부를 방문해 주관부서인 대기환경정책과와 미세먼지 대책 간담회를 갖고 중앙정부의 미세먼지 종합대책에 대한 이해와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고양시의회 미세먼지연구회 회원인 장상화, 박소정, 박시동, 박한기, 정봉식 의원을 비롯한 고양시 기후대기 과장, 대기대응팀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현황 및 여건, 그간 중앙정부의 미세먼지 추진 현황 및 성과, 미세먼지 배출 저감 대책, 중점 추진과제 등에 대해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 신영수 사무관의 설명을 들은 후 질의 응답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연구회 의원들은 미세먼지가 국·내외적 다양한 발생원인과 함께 광역적 발생범위 확대로 인해 보다 강력하고 종합한 미세먼지 관리대책이 필요한 만큼, 미세먼지 공동대응을 위한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의 소통 및 역할 분담 논의와 함께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미세먼지연구회 장상화 회장은 "미세먼지는 광역적인 문제로서 환경부 단독이나 어느 한 기초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중앙부처, 광역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필요한 지원과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양=고중오기자 gjo@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뉴스투데이

HOME > 전국 > 기타

고양시의회 미세먼지연구회, 정책 간담회 개최... "종합적 대책 필요"

이배윤 기자 승인 2019.03.27 14:14



<사진제공=고양시의회>

[이뉴스투데이 이배윤 기자] 고양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미세먼지연구회'는 3월 26일 의회 영상회의실에서 미세먼지 저감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15일에 출범한 '미세먼지연구회'는 고양시의 미세먼지 시책에 대한 분석과 연구를 통해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대책을 제시하고자 구성된 연구단체로 이번 간담회에서는 미세먼지 소관 부서인 고양시 기후대기과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미세먼지 저감 방안 및 시책 등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의원들은 고양시 관계자로부터 그간의 미세먼지 저감 및 예방을 위한 주요사업 추진 결과 및 2019년도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미세먼지 문제 해법 모색을 위한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특히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는 미세먼지 발생의 정확한 원인 파악이 선행되어야 그에 맞는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미세먼지 분석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미세먼지연구회 회장인 장상화 의원은 "미세먼지 문제는 일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연구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배윤 기자

일요서울

HOME > 사회문부 > 경기 북부

고양시의회 미세먼지연구회, 미세먼지 특강 및 좌담회 개최

강동기 기자 승인 2019.05.17 17:52



고양시의회 미세먼지연구회, 미세먼지 특강 및 좌담회 개최

[일요서울 | 고양 강동기 기자] 고양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미세먼지연구회'가 전문가 초청 특강 및 좌담회를 개최하는 등 연구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3월에 출범한 미세먼지연구회는 3월 관련 부서 정책간담회, 4월 정례회의에 이어 5월 17일 의회 영상회의실에서 미세먼지 문제의 올바른 이해와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초청 특강 및 좌담회를 개최했다.

전문가 특강 및 좌담회에는 고양시의회 미세먼지연구회 회원과 관련 부서인 고양시 기후대기과, 자원순환과, 3개 구청 환경녹지과 등이 참석했다.

이날 특강은 이화여자대학교 화학신소재공학과 김용표 교수를 초빙하여 진행하였으며, 김용표 교수는 '미세먼지 문제 이해'란 주제로 미세먼지 발생과정, 대기오염과 사망률, 미세먼지 해결 방안, 고양시 미세먼지 대책 제언 등 미세먼지 발생부터 대책에 이르기까지 심도 있는 강의를 펼쳤다.

김용표 교수의 특강을 경청한 참석자들은 미세먼지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인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인지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의원들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확한 원인 분석과 함께 그에 맞는 적절한 대책 마련이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미세먼지연구회 장상화 회장은 "오늘날 미세먼지는 모든 일상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고,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다방면의 접근이 필요하다"며, "미세먼지로부터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연구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동기 기자

별첨 6 토론회 등 의정활동 관련 보도자료

인쇄하기 페이지 1/2

時事매거진

HOME > 전국 > 경기

고양시의회와 함께하는 청년정책 좌담회 성료

김태훈 기자 승인 2019.10.23 22:12

'청년, 고양시를 말하다' 주제...청년들 뜨거운 참여



청년정책 좌담회 현장

[시사매거진=김태훈 기자] "시 단위 정책을 청년의 관점에서, 정당의 가치를 업혀 입안하고 이를 통한 정책경쟁이 이뤄져야 합니다. 2022년 청년 정치개입 전략 수립을 통해 '기특한 존재'에서 '두려운 존재'로 도약해야 하죠"

23일 오후 고양시의회 4층 영상회의실에서 '청년, 고양시를 말하다!' 주제의 청년정책 좌담회가 열렸다.

이번 좌담회는 고양시 청년들과 단체장을 포함 고양시의원들이 대거 참여, 회의장을 가득 메웠다.

고양시의회 송규근 의원(환경경제위원회)과 정연우 의원(건설교통위원회)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각 당 청년위원이 발제를 진행했다.

백상진 정의당 청년위원은 '밋밋한 청년 기본조례' 현황을 지적했다.

고양시 청년기본조례에는 청년정책팀, 청년정책위원회, 청년정책협의체 공조 구도를 신

http://www.sisamagazine.co.kr/news/articlePrint.html?idxno=301194 2019-10-24

시민일보

HOME > 정치 > 지방의회

고양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 고양시 먹거리 전략(푸드플랜)수립을 위한 토론회 개최

[고양=이기홍 기자] 고양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는 9월 30일 오후 2시 아람누리도서관 강의실에서 고양시 먹거리 전략(푸드플랜)수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의 먹거리 전략을 논의할 이번 토론회에는 고양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비롯하여 참교육학부모회 고양지회와 식생활교육고양네트워크 등 시민사회 관계자, 학계 및 전문가, 관계공무원, 시민 등 60여 명이 참석하여 토론회의 열기를 더했다.



▲ 사진제공=고양시의회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 먹거리시민위원회 기획조정위원회 및 공공급식위원회 운영선 위원장과 식생활교육고양네트워크 안병덕 공동대표가 발제자로 나서 각각 '서울시 먹거리 전략 방향과 고양시 푸드플랜을 위한 제언'과 '고양시 먹거리전략 수립 방향'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이어서 식생활교육고양네트워크 박이선 공동대표를 좌장으로 경기도 먹거리전략 기획담당 정광룡 사무관, 한살림고양파주생활협동조합 유현실 전 이사장, 고양시 친환경농업인연합회 염현수 회장, 고양시의회 장상희 시의원, 고양시 농산유통과 신복교 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고양시 먹거리 전략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토론회에 참석한 고양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들은 지역의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소비 확대와 고양시의 특성에 걸맞은 먹거리 전략의 수립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조현숙 고양시의회 환경경제위원장은 "먹거리는 우리의 생존과 관련된 중요한 산업인 만큼, 민·관과 함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정책과 제도를 수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시민일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http://www.simmilbo.co.kr |

인쇄하기 페이지 2/2

설했으나, △개발직 공무원 △사무국 △예산이 없어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고양사 청년의 삶을 구체적으로 따질 발판을 만들려면, 가장 큰 경제적 부담인 '주거비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청년기본조례에 날개를 달아주려면, 자신이 갖고 있는 구조적 어려움을 구조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느끼는 청년들이 발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식 자유한국당 청년위원은 "면사 담당자 출신으로서 고양시 일자리 박람회 및 카페 프로그램을 통한 실질적인 고용 효과에 의문이 든다"며 "주거정책을 포함한 복지정책이 시민에게 돈 몇 푼 나눠주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고 소리를 높였다.

그는 "어떤 정책이 청년 청년을 위한 것인가?"이라 묻으며 "복지가 전시행정이 되면 안 되고, 정말 실질적인 효과를 줄 수 있게끔 고민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장민지 더불어민주당 청년위원은 "최근에 개장한 청취다방의 경우 막상 들어가보니 학교 도서관과 같은 분위기였다"며 "고양시 내에서 매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들은 많지만, 청년들을 위한 문화장소는 많이 없는 현실에서 이러한 장소들을 청년들을 위해 문화적으로 열린 공간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녀는 "청년들을 기획자나 참여자가 아닌 수혜자로 보는 시선을 개선해나가야 한다"며 "청년정책협의체, SNS 등 청년들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창로가 조성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후 참여자들 및 패널 간 자유로운 의견들이 오고 간 가운데, 많으로 고양시 청년 정책개발 및 시행에 훈풍이 불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시사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태훈 기자

http://www.sisamagazine.co.kr/news/articlePrint.html?idxno=301194 2019-10-24

이뉴스투데이

HOME > 전국 > 기타

고양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장애인 탈시설 정책 위한 토론회 개최

이배윤 기자 승인 2019.06.05 17:34



[사진=고양시의회]

[이뉴스투데이 이배윤 기자] 고양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5일 오후 2시 일산동구청 대회의실에서 고양시 장애인의 탈시설 정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장애인이 거주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 근거 마련 및 진정한 장애인 자립생활 정책을 추진하고 제도를 도입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자리로 고양시의회 이윤승 의장, 김효금 문화복지위원장 등 시의원을 비롯해 장애인 관련 단체, 장애인 당사자 등이 참석했다.

김효금 문화복지위원장의 인사말과 패널 소개로 시작된 토론회는 한국장애학회 윤상호 이사와'홈즈중증장애인의 탈시설 자립생활 실천 방안'이라는 발제에 이어 경기장애인권포럼 안희정 운영위원과'거주 시설 장애인의 탈시설 지원에 중요성', 일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안미선 소장의'장애인 탈시설 자립 지원 정책의 문제점', 한국장애인개발원 서혜정 부연구위원의'장애인 탈시설 정책과 커뮤니티케어의 연계 방안', 고양시의회 김혜연 의원의'지역에서 장애인 탈시설 지원 정책 제안', 고양시 장애인복지과 윤희성 과장의'장애인 탈시설 자립 지원 정책 로드맵'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이어나가며, 탈시설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는 등 개선 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뤄졌다.

패널들은 시설 거주 장애인에 대한 지원체계가 아직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은 현실이라며, 재활훈, 활동 보조 지원 등 지역사회에서 장애인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김효금 문화복지위원장은"장애인이 시설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을 깨야한다"며" 장애인의 탈시설을 위해 장애인 당사자, 시설 관계자,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여건을 충분히 수렴해 실효성 있는 장애인 탈시설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윤승 의장은"장애인을 위한 최고의 정책은 장애인들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불편함이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시스템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장애인이 불편함이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배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양시의회 '유해약물 오남용' 교육개선 모색

파이낸셜뉴스 입력 : 2019.10.22 23:20 수정 : 2019.10.22 23:20



[고양=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고양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22일 고양교육지원청 대강당에서 고양시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제도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윤승 고양시의회 의장·문화복지위 소속 의원을 비롯해 학계, 전문가, 관계공무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윤승 의장은 "성별과 연령에 관계없이 남녀노소 누구나 약물 오남용에 노출돼 있다"며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이 함께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김덕심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약물오남용 예방·교육에 대한 제도 개선'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약물 오남용 안전교육 개념 및 필요성', '청소년 약물 오남용에 대한 실태', '초고령 노인을 대상으로 한 약물 과다중복복용에 대한 대체 기능교육'등을 발표하고 "약물 오남용 문제는 국가가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아직은 미흡한 부분이 많다"며 "시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지자체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에 이어 김효금 고양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을 좌장으로 양호·이해원 의원, 박은진 고양시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장, 김은진 고양시약사회장, 정미경 주엔고운영위원장, 김형식 덕양구보건소 의약관리팀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및 교육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자들은 약물 오남용 문제가 이제는 청소년에서부터 노인까지 전 국민의 문제이며, 인구 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자 증가로 약물 사용 증가와 함께 의약품 안전사용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짐에 따라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통해 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해 건강한 보건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지역사회와 연대해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시민 건강 및 보건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의 제도개선과 정책 수립 필요성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며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김효금 위원장은 "오늘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건강하고 안전한 고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고양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 특수촬영 사업의 이해와 아쿠아스튜디오 육성을 위한 특강 및 좌담회

[고양방송뉴스 기자 (box0502@naver.com)] | 입력 : 2019/09/06 10:22 | 수정 : 2019/09/06 10:22

경기고양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는 5일 오전 고양시의회 영상회의실에서 고양시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가 초청 특강 및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특강 및 좌담회는 '특수촬영의 이해와 아쿠아스튜디오의 미래'라는 주제로 고양시 방송영상산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고양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 의원과 고양시 전략산업과,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사진=고양시의회제공]

경기고양시 아쿠아스튜디오는 지난 2011년 방송영상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자 기존 폐정수장을 리모델링하여 수상 수중특수촬영장으로 조성한 곳으로 해운대, 명량, 기생충 등이 촬영됐으며, 국내 영상제작 기술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첫 순서로 박상훈 촬영감독이 특수촬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특강을 실시했다. 박감독은 우선 스튜디오의 종류, 특수촬영의 의미와 필요성, 방법 등에 대해 설명하고, 아쿠아스튜디오에서 직접 특수촬영을 하며 느낀 경험을 바탕으로 아쿠아스튜디오의 현재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다양한 제언을 했다. 특히 현대 드라마·영화의 영상 표현은 한계가 없다고 할 만큼 다양화 되어 가고 있다며, 특수촬영 스튜디오로서의 전문성과 차별성을 갖출 것을 제안했다.

특강에 이어 진행된 좌담회에서는 고양시가 전략산업으로 육성중인 아쿠아스튜디오를 포함한 고양영상문화단지 조성사업의 추진방향과 고양시가 방송영상산업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성장 발판 마련 및 경쟁력 확보를 통한 발전방향에 대해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다.

조현숙 환경경제위원장은 "수도권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리적 위치, 기존 방송영상 인프라 구축 등의 이점을 잘 활용해 고양시 방송영상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를 수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별첨 7 고양시 동호회 활동 및 수상 관련 보도자료

파이낸셜뉴스 글자크기 출간제 인쇄하기 위소

고양시의회 '경기도 수어경연대회' 대상 차지

파이낸셜뉴스 입력 : 2019.09.23 13:20 수정 : 2019.09.23 11:20



[고양=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고양시의회 수어동아리 '손으로 전하는 사랑'이 21일 화성시 동탄 센트럴파크 내 잔디광장에서 개최된 '2019년 경기도 농문화제 및 수어경연대회'에 참가해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경연대회에는 총 15개 팀이 참가하고, 고양시의회 수어동아리는 3번째 공연 팀으로 출전해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틈틈이 갈고 닦은 수어 솜씨를 선보였다.

이날 고양시의회 수어동아리는 '거위의 꿈'과 '사랑의 배터리'란 노래를 수어로 공연해 객석의 박수갈채를 받았으며, 김효금·강경자·김덕심·김미수·김보경·김혜련·문재호·이채림·조현숙·정봉식 의원이 공연을 펼쳤다.

이들 의원은 이번 대상 수상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수어에 대한 시민 관심을 유도하고 농아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수어공연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고양시의회 경기도 수어공연대회 참가 시장님과 고양시의회

이날 행사에 동참한 이윤승 고양시의회 의장도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이 농아인과 수어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높아지길 기대한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소통하며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경연대회는 수어 보급 및 농문화 이해와 장애인-비장애인의 소통을 통한 사회통합을 위해 (사)한국농아인협회 경기도협회가 주최하고 (사)한국농아인협회 경기도협회 화성시지회가 주관했다.

kkjcc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 지적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일요서울

HOME > 지역뉴스 > 경기북부

고양시의회, '경기도 수어경연대회' 대상 수상

강동기 기자 승인 2019.09.23 14:52



고양시의회, 경기도 수어경연대회 대상 수상

[일요서울 | 고양 강동기 기자] 고양시의회(의장 이윤승) 수어동아리 '손으로 전하는 사랑'이 지난 9월 21일 화성시 동탄 센트럴파크 내 잔디광장에서 개최된 '2019년 경기도 농문화제 및 수어경연대회'에 참가해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수어의 올바른 보급 및 농문화의 이해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소통을 통한 사회통합을 위해 (사)한국농아인협회 경기도협회가 주최하고 (사)한국농아인협회 경기도협회 화성시지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총 15개팀이 경연에 참가하였고, 고양시의회 수어동아리는 3번째 공연팀으로 출전하여 바쁜 일정 속에서도 틈틈이 갈고 닦았던 수어 솜씨를 선보였다.

이날 고양시의회 수어동아리는 '거위의 꿈'과 '사랑의 배터리'란 노래를 수어로 공연해 많은 이들의 박수갈채를 받았으며, 김효금, 강경자, 김덕심, 김미수, 김보경, 김혜련, 문재호, 이채림, 조현숙, 정봉식 의원의 공연을 펼쳤다.

공연을 펼친 의원들은 이번 대상 수상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수어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농아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수어공연 활동을 꾸준히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행사에 함께 참석한 이윤승 의장도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농아인과 수어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높아지길 기대한다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소통하며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동기 기자

경인일보

손짓언어로 편견 허문 고양시의원들



고양시의회 의원들이 지난 6일 고양 화정역 광장에서 열린 '제15회 고양시수어문화제'에 참여해 수어 공연을 펼치고 있다. /고양시의회 제공

수어문화제 무대올라 박수갈채
"장애인-비장애인들 함께 소통"

고양시의회(의장 이윤승) 의원들이 지난 6일 고양 화정역 광장에서 열린 '제15회 고양시수어문화제'에 참여해 수어 공연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사)한국농아인협회 경기도협회 고양시지회가 주최하는 고양시수어문화제는 사회적 장벽으로 문화생활을 제대로 누리기 어려운 농아인들이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다.

특히 수어(手語)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유도, 청각·언어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행사로,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조현숙·김효금·강경자·김덕심·김혜련·이채림·정봉식 의원 등이 무대에 올라 수어 공연을 펼쳤다. 의원들은 그동안 갈고 닦은 수어 솜씨를 무대에서 선보였고 관객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았다.

김덕심 의원은 "이번 공연을 통해 시민들의 농아인과 수어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높아지기를 기대한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소통하며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이윤승 의장도 "수어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막혀 있는 소통의 벽을 허물고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아름다운 언어"라며 "편견과 차별이 없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지방의회 우수사례집

Part 5

주민참여소통

1. **시민 소통과 화합을 위한 "찾아가는 버스킹 의회" 개최** |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의회 |
2.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 대축제** | 경기도 경기도의회 |
3. **농산업경제위원회 적극 의정활동 통한 전문성 제고로 지역경제 활력** | 전라북도 전라북도의회 |
4. **채소가격 안정을 위해 민·관 합동 국산김치 소비확대 운동 전개** | 전라남도 전라남도의회 |
5. **군민생활현장 방문 실시** | 전라남도 완도군의회 |
6.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통한 협력적 거버넌스의 실현** | 경상북도 경상북도의회 |

우수사례 요약서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01 시민 소통과 화합을 위한 “찾아가는 버스킹 의회” 개최



분야 : 주민참여소통

기관명 울산광역시의회

제출자 울산광역시의회

목적

- 버스킹 공연자가 거리에서 공연을 통해 관객과 소통하듯 현장을 찾아가 의정활동 홍보
- 시민들과 격의 없는 대화와 스킨십을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피드백하면서 소통과 화합의 장 연출

현황 및 문제점

- 지역구 행사나 간담회 등을 통해 의원 개별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청취·수렴
  - 의원과 친분이 있는 사람 또는 단체 등의 대표를 통하여 의견이 전달되는 경우가 많아 시민과의 자유로운 소통 곤란
    ※ 의회에 청원 또는 진정 등의 창구가 있으나 절차가 복잡하여 접근 애로
- 의회의 기능 및 역할, 추진성과 등에 대해 언론 및 각종 미디어 매체 등을 통해 홍보
  - 시민들이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도가 낮으며 미디어 등 단방향 소통방법은 외면하는 경향
    ※ 시민들의 즉각적인 요구에 반응하는 양방향 소통 플랫폼 필요

사업개요

- 시 기 : 2회(상·하반기 각 1회)
- 장 소 : 지역현안을 고려,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
  ※ 권역별 연 2회 중 태화강 기준(중·동·북구/남구, 울주군) 교차실시

- 참여인원 : 회당 100명 정도
- 예 산 액 : 20백만원(회당 10백만원)
- 주요내용
  - 문화공연(노래, 마술공연 등)
  - 시의원과 함께하는 토크콘서트, 소통과 화합 퍼포먼스
  - 이동홍보관(의회 홍보 및 의견수렴을 위한 패널설치, 팜플릿 등)

추진경과

- 관공서의 진부한 행사라는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토크콘서트"라는 대담형식을 통해 가볍고 재미있는 진행
  -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서 소통하며 공감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가벼운 주제부터 의정활동의 뒷이야기까지 진솔한 대화
  - 참여시민들과의 즉석 질문·답변을 통해 진정성 있는 의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즉답이 곤란한 부분은 검토 후 추후 통보
- 시민들이 좋아하는 공연 등 요소와 융합하여 즐거운 분위기 조성
  - 남녀노소 모두 좋아하는 노래, 연주, 마술공연 등과 함께 조화를 이뤄 시민들의 관심 제고
- 자치구의 축제행사(왕생로 차 없는 문화거리)와 연계하여 참여함으로써 축제 활성화 및 참여인원 확보(남구청-시의회 Win-Win)

성과 및 반성

- 소통의회를 펼치기 위해 시민 속으로 찾아간 참신한 시도
  - 의원 개인이 버스킹 형식의 행사나 상임위원회에서 현안해결을 위한 현장방문 등은 있어 왔으나 의회차원은 전국 최초
- 참여를 강요하거나 동원하지 않고 시민들이 자연스럽고 능동적으로 정치과정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생활 속 정치의식 향상
  - 정치인들과 직접 소통하는 기회제공에 긍정적 반응
- 프로그램에 따라 시민들의 호응도 차이가 많고 이석을 방지하고 몰입도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기 존		개 선
단방향 소통	⇒	양방향 소통
미디어를 통한 홍보		현장을 찾아가 시민들과 접촉
정치참여의 기회 제한적		자연스럽고 능동적으로 정치참여

향후계획

- 2020년 당초예산 편성(20,000천원)
  - 상·하반기 각1회, 의원들과 협의를 통해 시기, 장소 선정 추진
- 알차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시민 호응도 제고

우수사례 요약서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02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 대축제



분야 : 주민참여소통

기관명 경기도의회

제출자 경기도의회사무처 협치지원담당관

추진목적

- 도민과 소통하는 지방의회 구현
- 학습하고 연구하는 지방의원 역량 강화
- 민의반영 정책개발 및 협력형 도정추진
- 국가정책의 지방수용 및 도정과 교육행정 홍보

현황 및 문제점

- **추진현황**
  - 추 진 명 : 경기도 정책토론 대축제
  - 추진기간 : 2018년 10월 / 2019년 4월 및 9월(총 68일간)
    ※ 2018년 경기도의회 자체 시범추진, 2019년 경기도 협력추진
  - 추진규모 : 80회 개별 정책토론회
    ※ 발제 및 토론자 547명, 도민, 시민사회, 도의원, 시의원, 전문가, 학자, 공무원 등
    방청(추정)인원 6,180여명, 도민, 시민사회, 공무원 등
  - 개 최 지 : 도의회 39회, 시·군지역 회의실 등 41회
  - 추진방식 : 공무원 직접추진
  - 소요예산 : 2년간 220,120천원(실집행액 70% 수준, 154,084천원)
    ※ 2018년 의회비 70,120천원, 2019년 경기도 행사비 125,000천원, 의회비 25,000천원

● **문제점**

○ 도의회 자체추진 예산확보 곤란

– 도의회 자체추진 시 의회비(의정운영공통경비)로 추진, 별도 행사운영비 편성 불가

○ 기부행위 금지 등 공직선거법 준수

– 의원 개인 의정 성과를 위한 편의제공 금지

– 선거기간 및 선거일 180일 전 지역 토론회 추진 자제

– 공직선거법 저촉여부 세부적 검토 및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협의 추진

○ 도의회 및 집행부 협력추진 상의 문제

– 경기도의회 제안, 초기 신규 사업으로 도 집행부 소극적 참여

– 도와 도의회 부서 간 실무진 의견 조율 장기간 소요

○ 홍보의 한계 및 도의원의 협조

– 별도 홍보비 편성의 한계 – 도의원의 이해, 참여와 협조

추진경과

● 협력적 예산편성

- 경기도, 도의회 의회비 이외 정책토론 위한 행사운영비 편성 반대
- 집행부와 협력하여 추진하는 방안으로 예산편성

● 공직선거법 준수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와 세부적·구체적 사항 문서협의
- 집행부의 도의회 기부행위 차단 위해 의회비 일정부분 부담

● 집행부 및 개별 도의원 설득 및 협조

- 집행부 예산편성 및 집행협조, 도의회 행사전반 실무진행추진
- 도의원 개인성과를 위한 토론회가 아님을 홍보 및 설득
- 각 토론회별 도의원 참여 시 좌장 및 토론자로만 참여, 발제금지
- 토론회별 주제, 집행부 및 도의회 의견수렴 통해 협의선정

추진성과

● 지방의회 주민대표기능 및 참여 강화

- 민선7기 협치 차원, 주민 소통기능 강화
- 도민, 전문가, 시민사회, 공무원 등 발제 및 토론 참여 547명

※ 교육관련 토론회 중 지역 학부모, 청소년, 초등학생 등도 토론자로 참여

- 도민 방청, 총 6,180여명 추정, 토론회 방청석 의견개진 등 참여

● 지방의회와 집행부의 학습 및 연구조직화 지향

- 토론회 마다 좌장 및 토론자로 도의원과 시의원, 경기도와 시군 5급 이상 간부공무원, 교사 및 장학사 등을 참여시켜 도의회, 경기도와 시군, 도교육청 전반 학습하고 연구하는 분위기 조성 및 구축
- 토론회 참여 구성원들의 정책과정 이해 및 정책이해도 체화

● 도민 의견수렴을 통한 정책개발 및 협력형 도정추진

- 토론회에서 발제되고 제출된 정책자료 관리
- 토론회에 참여한 도민, 도의원, 공무원 등이 현장토론으로 정책 정보 수렴 및 행정실제 이해도 제고

● 주요 국정과제의 지방수용 및 도정과 도교육행정 홍보

- 토론회 주제 중 국정과제 지방수용 및 이해방안 마련

※ 정부정책, ▲3기 신도시 광역교통망 확충방안, ▲사회서비스원 추진, ▲미세먼지 차단 및 억제 방안 등 정부 주요 정책설명 및 공감대 형성

- 지역 토론회를 통한 도정 및 도교육행정 주요정책 이해 및 비판으로 방청 도민 정책이해 확대 유도

● 재능기부 및 예산절감

- 토론회 참여 도의원, 경기도 및 도교육청 간부공무원 참여수당 미지급(단, 시군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 등은 수당지급)

향후과제

●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홍보방안 마련

- SNS 웹자보, 도의회 홈페이지 홍보 등을 넘어, 시군 반상회 등 홍보추진

● 토론회 백서 제작

- 80회의 토론회에서 제안된 정책제안 등을 반영한 백서 발간, 정책자료화

● 토론회 도출 제안들을 활용한 조례 입법화

- 경기도 농민기소득, 교권 확립방안 등 주요 현안 조례 제정 및 개정추진

첨부 1 2018년~2019년 경기도 정책토론 대축제 세부 추진 현황

1 2018년도 추계 시범추진

- 추 진 명 : 2018 경기도의회 추계 정책토론 대축제
- 추진기간 : 2018. 10. 15.~10. 31(16일간)
- 추진규모 : 28회 정책토론회
- 참 여 자 : 발제 및 토론 205명, 방청인원 1,800여명
- 언론보도 : 501회
- 개 최 지 : 도의회 16회/시군 회의실 등 12회
- 소요예산 : 의정운영공통경비 등 70,120천원

2 2019년도 춘계추진

- 추 진 명 : 2019 경기도 춘계 정책토론 대축제
- 추진기간 : 2019. 4. 8.~4. 30(23일간)
- 추진규모 : 30개 정책토론회
- 참 여 자 : 발제 및 토론 194명, 방청인원 2,200여명
- 언론보도 : 749회
- 개 최 지 : 도의회 16회/시군 회의실 등 14회
- 소요예산 : 75,000천원(도 행사운영비 62,500천원, 의회비 12,500천원)

3 2019년도 추계추진

- 추 진 명 : 2019 경기도 추계 정책토론 대축제
- 추진기간 : 2019. 9. 2. ~ 9. 30(29일간)
- 추진규모 : 22개 정책토론회
- 참 여 자 : 발제 및 토론 148명, 방청인원 2,180여명
- 언론보도 : 504회
- 개 최 지 : 도의회 10회/시군 회의실 등 12회
- 소요예산 : 75,000천원(도 행사운영비 62,500천원, 의회비 12,500천원)

첨부 2 정책토론 대축제 추진 현황

1 2018년도 추계 정책토론대축제(28회)

번호	토론주제	일 시	장 소
1	경기도 장애인 택시운전원 양성사업 발전방안	10.15(월) 10:30	도의회 소회의실
2	경기도 커뮤니티케어 추진방향에 따른 사회적경제	10.15(월) 14:00	도의회 대회의실
3	경기도형 공유경제 육성방안	10.15(월) 14:00	도시환경위원회회의실
4	경기도의회보건복지위원회-경기복지재단 간 정책커뮤니티 구성	10.15(월) 14:00	도의회 대회의실
5	경기도"학교자치,학부모의 역할과 현장속 이야기"	10.17(수) 10:00	도의회 대회의실
6	경기도건설공사현장 선진화를 통한 건설공사 현장 청년일자리창출방안	10.17(수) 14:00	도의회 대회의실
7	경기도 미혼모 기본권 제고 방안	10.17(수) 14:00	도의회 소회의실
8	경기도 편의점 근접 출점 제한제도 정비	10.18(목) 10:00	도의회 대회의실
9	경기체육의 전환·실업과 독립야구 활성화	10.18(목) 14:00	도의회 대회의실
10	경기도형 도시농업 발전방안	10.18(목) 14:00	도의회 소회의실
11	경기도 유소년야구 건전 육성방안	10.19(금) 10:00	도의회 대회의실
12	지역언론의 공공성,언론기본소득	10.19(금) 10:00	도의회 소회의실
13	경기도교육청 몽실학교 확대 및 발전방안	10.19(금) 14:00	도의회 대회의실
14	경기도 노인일자리 확대방안	10.19(금) 14:00	도의회 소회의실
15	경기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역할 및 발전방향	10.22(월) 10:00	도의회 대회의실
16	경기도형 도제교육 발전방안	10.22(월) 14:00	도의회 대회의실
17	성남시 MICE클러스터 개발	10.25(목) 15:00	성남시 백현동 주민센터
18	남북협력시대,경기북부의 발전전략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10.25(목) 14:00	고양 어린이박물관
19	경기도 공공택지개발의 문제점과 대안찾기	10.26(금) 14:00	시흥시청 글로벌센터
20	경기도 아스콘 공장 대책찾기	10.26(금) 16:00	양평군청
21	'하남역사가하남교육이되다'	10.29(월) 13:00	하남시청 대강의실
22	도심 골프장과 도심 숲의 사회적 가치 비교 토론회	10.29(월) 14:00	일산동구청
23	안전마을 구축을 위한 학교 통학로 안전정책	10.29(월) 14:00	화성시 향남읍 사무소
24	공공스포츠및G스포츠활성화방안	10.30(화) 10:00	성남시청 한누리실
25	경기도 평생학습과 일자리창출	10.30(화) 15:00	만안종합사회복지관
26	7호선(도봉산~옥정)광역철도기본계획노선이대로좋은가?	10.31(수) 14:00	의정부 아일랜드캐슬 그랜드볼룸
27	자기주도시대, 청소년 정책방향	10.31(수) 14:00	고양시일산서구 청소년수련원강당
28	경기도 미세먼지 정책·석탄발전소를 중심으로	10.31(수) 19:00	포천반월 아트홀 소극장

2 2019년도 춘계 정책토론대축제(30회)

번호	토론주제	일 시	장 소
1	도민 주도 공동체 중심 에너지 전환 정책토론회	4.08(월) 14:00	경기도 대회의실
2	학교체육관의 원활한 대관 및 사용에 대한 발전방안 모색 토론회	4.12(금) 14:00	성남시 한누리실
3	장애인이 행복한 경기도 ('경기도형무장애커뮤니티공간건립'토론회)	4.15(월) 10:00	도의회 대회의실
4	주민주권시대의 경기도형 주민자치회 구축방안	4.15(월) 14:00	도의회 대회의실
5	신도시건설에 따른 하남위례길 조성 추진	4.17(수) 14:00	하남시 대회의실
6	노인복지시설의 공공성 강화 및 전달체계 개편방안 – 경기도형 커뮤니티 케어	4.17(수) 16:00	도의회 대회의실
7	언론주권자 배당제도의 도입과 지역언론 공공성 모색 정책토론회	4.18(목) 10:00	도의회 대회의실
8	"경기도 생활체육시설 안전관리 이대로 좋은가?" 정책토론회	4.18(목) 10:30	군포문화예술회관
9	미세먼지,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평택만들기	4.18(목) 14:00	비전1동 행정복지센터
10	보육영역의 공공성 강화 및 지원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4.18(목) 14:00	도의회 대회의실
11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의 합리적 관리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4.19(금) 10:00	소흘읍사무소
12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경기북도 바람직한가?" 정책토론회	4.19(금) 15:00	북부청사 평화누리홀
13	사회서비스 공공성 인식 및 사회서비스원 운영에 관한 토론회	4.22(월) 10:00	도의회 대회의실
14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4.22(월) 14:00	도의회 대회의실
15	정신보건 영역의 공공성 강화 및 지원 강화방안 정책토론회	4.23(화) 10:30	도의회 대회의실
16	가평군 먹거리체계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4.23(화) 14:00	가평뮤직빌리지
17	경기도 원폭피해자 지원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4.23(화) 14:00	도의회 소회의실
18	중고등학생 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4.23(화) 14:00	도의회 대회의실
19	시흥교육발전방안 "시흥지역 고교평준화 필요한가?" 정책토론회	4.24(수) 14:00	시흥 능곡어울림센터
20	장기 방치 공공용지 활용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4.24(수) 14:00	도의회 소회의실
21	양평교육발전 정책토론회, "양평 교육의 미래를 묻다"	4.24(수) 15:00	양평평생학습센터
22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기도 소상공인 자립지원 방안 정책토론회	4.25(목) 10:00	도의회 대회의실
23	잘 사는 혁신농촌마을 육성을 위한 정책토론회	4.25(목) 14:00	로컬푸드체험장 '곳'
24	요양시설입소환자의 다제약물복용 실태와 의약품안전사용을 위한 정책토론회	4.25(목) 14:00	도의회 소회의실
25	고양동 아름다운 문화의 거리 만들기 정책토론회	4.25(목) 15:00	고양동종합복지회관
26	소득 중하위 가계의 가처분소득 증대를 위한 주택비용 절감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4.26(금) 14:00	도의회 소회의실
27	시대에 역행하는 화성호 담수화 정책 대안 토론	4.26(금) 15:00	도의회 대회의실
28	중학교 입학배정 발전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4.29(월) 14:00	용인수지구청 대회의실
29	경기지역 미세먼지 현황과 대책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4.29(월) 15:00	시흥 에코센터
30	도민과 함께 그리는 학교폭력대책 모색 정책토론회	4.30(화) 10:00	국립국제교육원 강당

3 2019년도 추계 정책토론대축제(25회 중 22회 추진, 3회 향후 추진)

번호	토론주제	일 시	장 소
1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과제와 방안모색 토론회	9.2(월) 14:00	경기도의회 대회의실
2	3기 신도시 광역교통망 확충방안	9.3(화) 14:00	도의회 대회의실
3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	9.5.(목) 14:00	도의회 대회의실
4	디지털 활용교육을 위한 교육정보 인프라 확충 방안 토론	9.6(금) 14:00	부천시의회 대회의실
5	공정 경기를 위한 합의제 감사위원회 도입 방안에 관한 토론회	9.9(월) 14:00	도의회 대회의실
6	경기도 뇌병변 현황과 정책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9.10(화) 16:00	도의회 대회의실
7	팔당상류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 방안	9.16(월) 14:00	수자원본부 대회의실
8	경기도형 탈시설을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 체계 구축 어떻게 할 것인가?	9.16(월) 14:00	도의회 대회의실
9	주한미군기지 평택이전 후 경기도의 군관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토론회	9.16(월) 14:00	동두천시 두드림뮤직센터
10	어린이가 가고 싶은 놀이터, 어떻게 만들것인가	9.17(화) 10:00	기흥도서관 시청각실
11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과제와 발전 방안 모색	9.17(화) 15:00	도의회 대회의실
12	하남시민을 위한 경기도 택시정책 토론회	9.18(수) 14:00	하남농협 대강당
13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도입방안 모색 토론회	9.18(수) 14:00	이천서희청소년문화센터 대회의실
14	한강 상하류 유역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는 한강유역 물관리 대안 모색	9.18(수) 14:00	양평군 용문면사무소 대회의실
15	문화예술을 통한 도시재생	9.18(수) 14:00	시흥시 ABC학습타운 내 강의실
16	남북교류협력사업 및 통일교육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	9.20(금) 14:00	안산시의회 대회의실
17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진단과 해결방안	9.20(금) 14:00	도의회 대회의실
18	[연기] 환경(생태계)을 위한 지속가능 농업방향 모색 토론회	9.23(월) 14:00	김포 통진두레문화센터 두레홀(공연장)
19	교권확립 방안 마련 토론	9.25(수) 14:00	도의회 대회의실
20	[연기] 김포 민속 5일장의 안전한 운영을 위한 정책토론회	9.25(수) 14:00	김포시 모두의공간
21	미래 평택 교육 방향과 고교평준화	9.27(금) 16:00	평택시 청소년문화센터 대강당
22	서당어린이공원 재정비와 아이들이 즐거운 놀이문화 토론회	9.30(월) 10:30	성남시 서현2동 주민센터 대강당
23	[연기] 청년들이 만드는 청년일자리 정책토론	9.30(월) 14:00	파주시 보훈회관 대강당
24	경기도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바람직한 운영 방향	9.30(월) 15:00	도의회 대회의실
25	수원시(장안구) 도시재생사업의 추진방향	9.30(월) 16:00	장안구청 대회의실

첨부 3 정책토론 대축제 언론보도 및 행사 현장 사진

1 정책토론 대축제 주요 언론보도



경기매일 2018년 10월 29일 (월) 종합 03면

장대석 의원 '공공택지개발 문제점·대안 찾기 토론회' 개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대표 염종현)은 지난 26일 시흥시청 글로벌센터에서 '경기도 공공택지개발의 문제점과 대안 찾기'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장대석(시흥2)의원이 제안했으며,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송미희 위원장, 목감자구협의주자대표회의총연합회 시민단체, 관계 공무원, 도민 등이 참석했다.

좌장을 맡은 장대석 의원은 "공공택지개발은 주거공급 뿐만 아니라, 주변 상권, 지역 개발까지 이뤄지는 대규모 사업이다. 하나 초기 주변 인프라 부족, 교통 혼잡, 교육여건 미확보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현 시흥시 공공택지개발지구에 대한 현황을 점검해보고 현장 관계자들과 함께 단기·중기·장기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토론회의 목적을 밝혔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 단국대 건축학과 홍경구 교수는 도시의 변화과정과 신시가지 개발사업에 대한 계획방안을 제시했으며, 시흥시의회 송미희 위원장, 목감자구협의주자 총연합회 김현민 회장 등은 시흥시 주요 택지개발사업 자구인 장현, 은계, 목감지구 현장의 문제점, 개발 사업 정책 방향 등에 대해 설명했다.

토론회를 제안한 장대석(시흥2)의원은 "시흥은 서울과 인접한 지리적 장점과 토지이용이 용이한 장점을 가진 곳"이라며 "수요자 중심의 개발, 교통·교육 환경 개선, 복합커뮤니티 형성 등이 함께 이루어지는 효율적인 공공택지개발이 도시개발 시기에 맞춰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영진 기자

경기도 공공택지개발의 문제점과
대안 찾기 토론회(18.10.26)



경기방송 2019년 04월 25일 (목) 종합

경기도의회, '소상공인 자립지원' 정책토론회 개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기도 소상공인 자립지원 방안 정책토론회

[KFM 경기방송= 문종화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오늘(25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기도 소상공인 자립지원 방안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소상공인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소상공인들의 자립기반 확충과 경쟁력 강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안혜영 경기도의회 부의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지역 경제의 뿌리자만 아도급, 가맹점, 대리점, 상가 임대차 등의 영업환경에서는 선험적인 피해자일 수밖에 없다"며 '지역경제가 건실해지기 위해서는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사업 기반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주제발표에 나선 소상공인포럼 정상철 전문위원은 △ 소상공인기자영업 기본법 제정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경제 주체간 상생을 위한 조례 제정 △ 협업화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 △ 지역화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득 증대 등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노란우산 공제같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오늘 토론회에는 소상공인전국연합회 보일규 지역경제활성화 위원장, 민포역상가번영회 서승의 총무, 동양경실련 채빛개혁본부 권오인 국장,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이영주 의원, 경기도 북선경 경제노동실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명철연 경인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원지원 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기도 소상공인 자립지원 방안
정책토론회(19.4.25)



경기일보 2018년 09월 03일 (화) 자치의정 05면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조속히 신설해야"

도의회 추계 정책토론 대축제

한달간 도내 5회 토론회 열어 정책과제 해결 방안 머리 맞대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2018 추계 경책토론 대축제'의 막을 올렸다. '경기도 지방고용노동청 신설 과제와 방안 모색' 토론회를 시작으로 도내 곳곳에서 20개 과제에 지방 분권의 물꼬 튼다.

도와 도의회는 2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첫 행사를 시작으로 '경기도형 일자리 플랫폼 정책 대안 마련' '자치경찰 시범실시 운영방향 정책토론회' '경기도 다양한 치안환경 조성 과제와 방안 모색' 등 5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도의회는 자신을 개혁하고 있다'면서 "초속형 시설 내에 신설할 수 있는 종은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용덕 위원장은 "도의회는 자신을 개혁하고 있다"면서 "초속형 시설 내에 신설할 수 있는 종은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용덕 위원장은 "도의회는 자신을 개혁하고 있다"면서 "초속형 시설 내에 신설할 수 있는 종은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전국 인구 시설 규모의 약 25%를 차지하고"며 "지역에 있는 특색있는 노동현안을 함께 해결 위해 노력하겠다"고 지적했다.

한편 '2018 추계 경책토론 대축제'는 △공사유치원의 도입 방안 △농민기본소득 도입 방안 등을 주제로 모두 25일까지 열린다.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과제와
방안모색 토론회(9.2)



경기일보 2019년 10월 01일 (화) 종합 02면

경기도 다양한 치안환경… '자치경찰 시범실시' 최적지

경기도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바람직한 운영방향

경기도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바람직한 운영방향 정책토론회 '2022년까지 단계 단위 8개(2019~) 단계적 확대 정책토론 개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다양한 치안환경 조성 과제와 방안 모색' 토론회를 시작으로 도내 곳곳에서 20개 과제에 지방 분권의 물꼬 튼다.

도와 경기도의회는 2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첫 행사를 시작으로 '경기도형 일자리 플랫폼 정책 대안 마련' '자치경찰 시범실시 운영방향 정책토론회' '경기도 다양한 치안환경 조성 과제와 방안 모색' 등 5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도의회는 자신을 개혁하고 있다'면서 "초속형 시설 내에 신설할 수 있는 종은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용덕 위원장은 "도의회는 자신을 개혁하고 있다"면서 "초속형 시설 내에 신설할 수 있는 종은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전국 인구 시설 규모의 약 25%를 차지하고"며 "지역에 있는 특색있는 노동현안을 함께 해결 위해 노력하겠다"고 지적했다.

한편 '2018 추계 경책토론 대축제'는 △공사유치원의 도입 방안 △농민기본소득 도입 방안 등을 주제로 모두 25일까지 열린다.

경기도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바람직한 운영 방향 모색
토론회(9.30)

2 정책토론 대축제 주요 현장 스케치



남북협력시대 경기북부 발전전략과
지방자치단체 역할 모색 토론회



공정경기를 위한 합의제 감사위원회
도입방안 토론회



소득 중하위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위한
주택비용 절감 방안 모색 토론회



남북교류협력사업 및 통일교육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 모색 토론회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도입 방안 모색
토론회



경기도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바람직한
운영 방향 모색 토론회

우수사례 요약서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03 농산업경제위원회 적극 의정활동 통한 전문성 제고로 지역경제 활력

장려상

분야 : 주민참여소통

기관명 전라북도의회

제출자 전라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추진배경

-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적 대응을 위한 의정활동 전문성 요구로 위원회의(위원, 전문위원실 직원 등) 역량 강화를 위한 집중·전문교육 필요
  - 최근 일본 수출규제 등에 따라 급변하는 국제 정세 대응 필요
  - 전라북도 대도약을 위한 정치·경제 체질 개선 모색 필요
  - 위원회 소관 업무의 전문성을 높여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강화
- 지역의 현안 및 정책문제에 대한 이해와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다양한 소통창구 마련 필요성 대두 (세미나, 토론회 및 간담회 개최 등 개최 확대)
  - 전문가 및 관계자 참여를 통한 소통거버넌스 구축과 더불어 방향 모색
  - 의원의 전문성 제고 및 직원의 의정활동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 의정활동과 관련된 주제를 선정하여 세미나 확대 실시
  - 일자리 창출 및 인구감소, 청년 유출 등 지역현안에 이해가 많은 전문가 의견 수렴 필요

현황 및 문제점

- 15~39세 경제활동인구수는 275천명으로 전국 대비 2.7%를 차지하고, 경제활동참가율은 전북 56.4%로 전국 62.7%보다 6.3%p 낮음
- 15~39세 고용률은 53.7%로 전국 평균 59.2%에 비하여 5.5%p 낮음
- 전북 청년인구는 '39년말 기준 473천명으로 전북인구 대비 23.3%를 차지하고 최근 3개년 평균 8,000명이 타 지역으로 유출

- 현대重 군산조선소 가동중단('17. 7. 1.) 이후 2년이 지남으로써 협력업체 폐업(매각) 지속 및 지역경제 어려움 더욱 가중

  * 가동중단 및 폐업 67개업체, 일자리손실 5,020명(직영 760, 협력 4,260명)

- 2018년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1만여 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완성차 생산량 또한 작년 대비 40% 이상 급감

  * 자동차·조선 실직자와 협력업체 지원과 자동차사업 대체일감 확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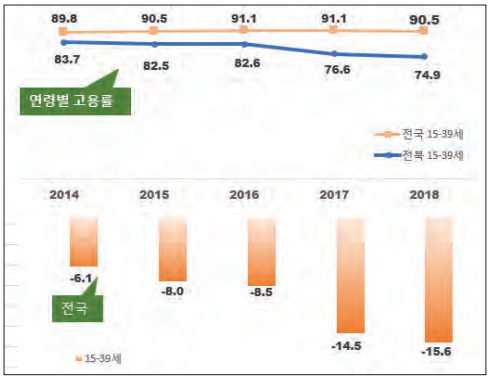
- 전북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대도약 필요

  *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의 지방소멸 2018〉 보고서에 따르면 전북의 경우 전국 89개 지역중 10개 지역 포함('18. 6월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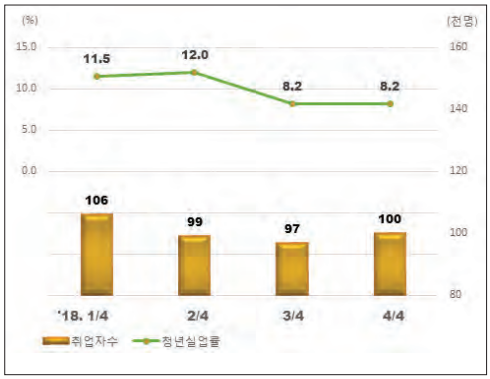
| 청년층 경제활동인구 및 고용 현황 |

(단위 : 천명, %)

구 분	연령계층별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전국	(15~39세)	16,527	10,089	6,437	62.7	59.2
전북	(15~39세)	526	275	252	56.4	53.7



연령별 고용률 및 전국 격차



'18년 분기별 청년 취업자 및 실업률

추진방향

- 빠르게 변화하고 보다 전문성을 요구하는 경제·산업 분야의 이해를 통해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이해로 의정 역량 강화

  - 홀로그램, 상생형일자리, 금융중심지, 미래형 자동차 산업 등 전문성 요구

- 지역경제의 어려움으로 대도약 기반 및 경제 체질 개선
  -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 등에 따른 전북 지역경제 어려움으로 미래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사업 필요
-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의제로 담아 도민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성과 창출의 의정활동
- 지역 현장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풍부한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을 연결 할 정책 네트워크 및 소통의 장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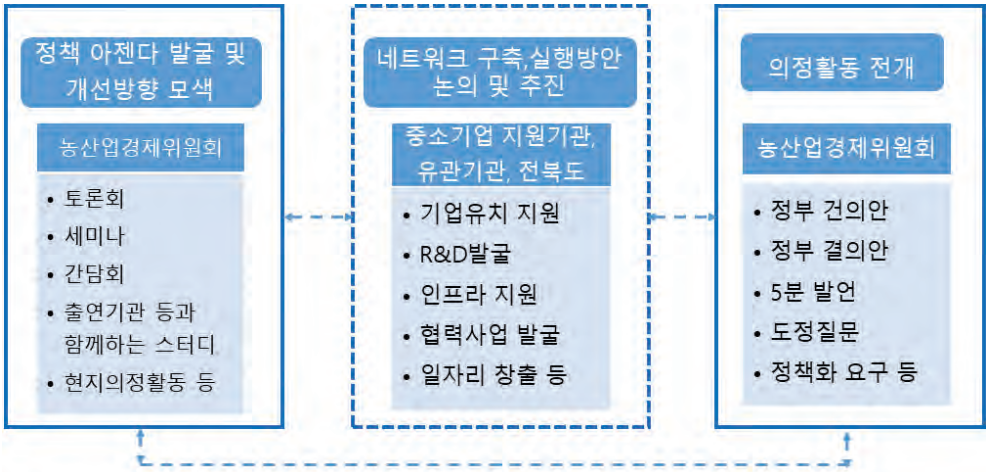
■ 농산업경제위원회 추진목표 및 전략

비 전 : "도민을 위해 일하는 역동적인 의회"

적극의정활동·소통거버넌스 구축 · 전문성 강화 : 5대 전략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위원회	• 지역주민, 전문가, 관계자 참여 활성화를 통한 소통 거버넌스 구축 • 도서·벽지 취약지구 현지의정 활동 강화
협력 네트워크구축	• 일자리창출 및 중소기업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협치 • 뿌리기업 방문 간담회를 통한 소통 창구 마련
농촌경제 활성화	• 농촌관광 활성화 전략 수립을 위한 특례군 제도 법제화 마련 • 농민공익수당 국가 정책사업화 촉구 건의 ·마을활성화 연구회 운영
NO일본, R&D경쟁력강화	• 일본 對 한국 수출규제 및 백색국가 제외조치 관련 대응 • 내실있는 R&D추진으로 성장동력 확보 및 경쟁력 강화
융복합미래신산업육성	•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 생태계 구축 • 수소경제연구회 운영 • 4차 산업혁명 활성화

| 추진 체계도 |



추진내용 (2019년 적극 소통 행정 신규·강화 사업)

■ 신규사업

● **(스터디) 전국최초위원회(위원)의 자발적·지속적인 스터디 결성** ('19.8.19.)

- 경제·산업 분야의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분야별 정책 추진방향, 국내·외 동향과 트랜드 분석 등의 스터디 실시로 전문성 강화

* 국내·외 금리, 국내 R&D, 자동차 산업, 상생형 일자리, 세계 공정무역, 전라북도 제조산업, 홀로그램, 농식품기술생태계 조성 등 다양한 주제를 선정하여 진행

- 지역 현안에 대한 관계 출연기관·유관기관과 위원회(위원), 전문위원실 직원 등의 공동 참여 스터디로 문제해결 방안 및 실질적 대안 마련 창구로 활용

● **(중소기업지원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실질적인 기업유치·지원 방안 논의를 위한 전국 광역 시·도 의회 최초 중소기업지원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간담회 개최(2회 개최, 벤처 기업유치 3개사, 내년 상반기 이전 검토 3개사, 국가정책사업 발굴)

* **중소기업 유관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북지역본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신용보증기금 전주지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 전북테크노파크, 생물산업진흥원, 전북 국방벤처센터, 자동차융합기술원, 전북대 TIC)

- 지역에 적합한 일자리 제공과 자산형성 지원 및 인구감소·청년유출에 따른 지역에 활력 제고

● **(유관기관과 함께하는 성과보고회 개최)** 위원회 차원 전국 최초 성과보고회 개최로 의정활동 피드백 및 강화

- 연간 5분 발언, 조례제·개정, 도정질의 등 추진상황 점검 및 현장행정, 스터디, 간담회, 연구활동 등 총체적인 위원회 활동에 대한 성과분석 및 문제점 개선방안 도출

  * PPT발표 및 별도 책자 발간 추진

- 공개 보고회로 진행 예정(참여: 출연기관, 유관기관, 도민 누구나)

■ 강화사업

● **(수요에 맞는 세미나 등 확대)** 다양한 수요에 대한 정책 네트워크 형성 및 소통의 장 확대로 지역 현안의 적극적 대안 마련

- 수요 맞춤형 세미나 및 간담회 개최 등 부족으로 기존 좋은 정책이나 아이디어가 정책 네트워크 및 소통의 장 부재로 사장됨.
- 소속 위원들의 적극 의정활동으로 기존 정책이나 아이디어를 발전할 수 있는 기회의 장 마련

> * 농촌관광활성화, 스마트팜혁신밸리, 4차산업, 새만금 신항만, 수소경제 정책 방안, 특례군 제도 법제화, 공익형 직불제 관련 농민수당 간담회 등 정책 네트워크 구축 계기 마련

● **(취약지구 실질적 현지의정 및 간담회 강화)** 도서 벽지 등 취약지구 도민이 체감 할 수 있는 현지의정 및 간담회 강화

- 정읍 정애마을(한센인촌-폐기물 처리민원 악취), 김제·익산(축산 악취 지역), 군산 어청도(서해 최남단-배 운항 3시간), 남원(동부권-원거리 낙후지역) 등

추진성과

● 주요 현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 및 전북경제의 체질개선과 산업구조 개편에 힘을 보태며 상생 및 협치 실현

● 분야별 전문성 강화 및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도 나누는 등 적극행정 추진

● 스터디를 통해 각 분야 전문가를 초청하여 특강을 듣고,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통한 차별화된 의정활동 전개

기 존	개 선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등 기본적인 의정활동을 통한 도정현안 소통 및 견제	위원회 소관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적극 의정 활동을 통한 집행부 감시와 견제 강화
기존 정책·아이디어와 체감되는 현장과의 연결의 정책 네트워크 부재 (18년 실적) ①간담회 0회 ②스 터 디 0회 ③세미나 4회 ④현장행정 6회	수요에 맞는 세미나 및 간담회 개최로 정책 네트워크 및 소통의 장 마련 (19년 실적) ①간담회 17회 ②스 터 디 5회 ③세미나 10회 ④현장행정 11회
(사례1) 도내 투자유치 및 중소기업유관기관 정책과 이전을 검토하는 벤처기업과의 네트워크 부재	**(사례1)** 도의회-전북도-중소기업유관기관 간담회, 네트워크 형성으로 전북 유치 및 이전 지원 검토, 4차 산업혁명 활성화를 위한 공동 대응 노력 등
(사례2) 전국 최초 농민공익수당 조례(도지사 안) 심의	**(사례2)** 농민수당 조례 심의 전 농민단체 간담회 실시 및 농민공익수당 국가 정책사업 반영 촉구
(사례3) 농촌낙후지역 개선사업 단순 의회 의결	**(사례3)**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특례군 제도 법제화 토론회 개최로 공론화 장 마련
(사례4) 경제 체질 개선 위한 집행부 단순 촉구	**(사례4)** 전북 협치를 통한 전북 군산형 일자리 추진
(사례5)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통한 민생청취	**(사례5)** 한센인촌 취약지구 민생청취 후, 하수슬러지와 분뇨악취 5분발언을 통해 진상조사 및 원인규명 진행
(사례6) 집행부 기획 사업진행으로 의회 역할은 단순 행사 및 협약식 참석으로 미비	**(사례6)** 민-관-정 협치를 통한 전북 서민경제 희망불씨 살리기 빚탕감행사 프로젝트 추진

향후계획

● 도정 트렌드에 맞는 경제·산업 분야 자체 스터디 지속 운영을 통한 정책 진화

-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자치법규 제·개정 추진 및 실효성 있는 입법정책 개발

● 전북 중소기업 지원기관 간담회 개최 등 수요에 맞는 세미나 및 간담회 개최를 통한 적극 의정활동 전개

- 5분발언, 조례 제·개정 검토 등 생산적인 의정활동으로 연계

붙임 증빙내역

■ 농산업경제위원회 자체 스터디 추진내역

〈스터디 개요〉

『경제왜란 속 경제강국 실현 위한 산업의병 앞장』다짐, "일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 실력있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하여 도내 경제 분야 전문가 초청을 통한 특강 및 토론 실시

- (기　간) 2019. 8월 ~ 12월 (회기 개·폐회 시)
- (대　상) 도 농산업경제위원회 위원 8명
- (추진내용) 도내 전문가 초청을 통한 산업·경제 분야 추진방향 및 토론을 통한 전북경제 체질개선 방향 모색 등
- (추진방법) 각 분야 전문가 초청을 통한 특강 및 토론

| 진행일정 |

연번	일자	기관(강사)	주 제	비고
1	'19.08.19.	투자금융과 (양해환 금융자문관)	• 금융중심지 관련 특강 및 토론	
		경제통상진흥원 (임현미 해외마케팅팀장)	• 일본 對 한국 수출규제 및 백색국가 제외조치 관련 대응 방향	NO일본
2	'19.09.17.	신용보증재단 (삼성증권 박주한 수석)	• 국내·외 금리 동향 및 초저금리 시대의 대응방안	
3	'19.10.14.	캠틱종합기술원 (이희관 R&BD사업단장)	• 전라북도 R&D 역량분석	
4	'19.10.18.	일자리정책관실	• 상생형 일자리 특강 및 토론	
5	'19.10.22.	자동차융합기술원 (노윤식 미래기술연구본부장)	•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 생태계구축	
6	'19.11.08.	캠틱종합기술원	• 전라북도 제조산업 현황 관련 특강 및 토론	
7	'19.11.20.	경제통상진흥원	• 세계 공정무역 관련 특강 및 토론	
8	'19.11.29.	창조경제혁신센터	• 청년창업 관련 특강 및 토론	
9	'19.12.13.	전북테크노파크	• TP 현안 관련 특강 및 토론	
10	연내 시행계획	전북생물산업진흥원	• 농식품 기술 생태계 조성 관련 특강 및 토론	

전북도민일보 2019년 08월 20일 화요일 003면 종합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는 19일 자동차융합기술원에서 日 경제보복에 맞서 전북 제2경제독립운동에 앞장설것을 밝히고 있다. 도의회 제공

전북도의원 '경제독립 산업의병' 나선다

日 수출규제 대응방안 마련
농산업경제위 스터디 구성
분야별 전문성 강화 교육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강용구)가 일본의 경제보복에 맞서 전북 제2경제독립운동의 기치를 내걸고 본격 행보에 나섰다.

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는 19일 자동차융합기술원에서 경제패란을 맞아 경제강국 실현을 위한 산업의병에 앞장서며, 경제 체질 개선 모색을 위해 자체 스터디를 구성하고 첫 번째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스터디는 전라북도 금융자문관을 초청, 전라북도 금융정책에 대한 특강 및 (재)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임직원들과 일본 대 한국 수출규제 및 백색국가 제외 조치 관련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농산업경제위원회는 이번 스터디를 시작으로 월 2회에 걸쳐 경제·산업 분야의 다양한 주제로 분야별 정책 추진방향, 국내·외 동향과 트렌드 분석 등의 스터디를 실시해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강용구 위원장을 비롯한 농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해 진행하는 스터디 모임은 전국 최초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용구 위원장은 "향후 스터디를 통해 농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전문성을 높여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강화하고 다툼이 주요 현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전북경제의 체질개선과 산업구조 개편에 힘을 보태며 상생과 협치를 실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지훈 (재)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은 "일본의 경제침략에 대한 도민의 분노를 폭염보다 더 뜨거운 도정에 대한 열정으로 당당히 맞서 싸워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짐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이방희 기자

金北日報 2019년 09월 18일 수요일 013면 사람



전북도의회 농산경위, 전북신보와 금융정책 스터디 모임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강용구)는 17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전북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스터디 모임을 가졌다.

이날 모임은 일본 경제보복 조치로 시작된 경제전란을 맞아 경제강국 실현을 위한 산업의병에 앞장서며, 경제 체질 개선 모색을 위해 이뤄졌다.

농산경위는 지난 8월 19일 자체 스터디를 구성한 후 첫 번째로 전북도 금융정책과 일본 對 한국 수출규제 및 백색국가 제외 조치 관련 대응을 위한 토론 등을 진행한 바 있다.

이날 스터디는 삼성증권 박주한 수석을 초청해 국내·외 금리 동향 및 초저금리 시대의 대응 방안에 대한 특강을 실시하고, 질의응답 및 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강용구 위원장은 "전북도가 도민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내년도 예산편성 여론조사 결과 도민들이 가장 바라는 투자 분야로 산업경제를 꼽았다"며 "농산경위 소관 업무에 대해 전문성을 높여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강화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강모 기자

전북도민일보 2019년 10월 15일 화요일 015면 사람들



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스터디 모임 가져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강용구)는 경제강국 실현과 경제 체질 개선 모색을 위해 14일 오후 5시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세 번째 스터디 모임을 가졌다.

이번 스터디는 캠틱종합기술원 이희관 단장을 초청하여 전라북도 R&D 역량을 분석하고, 전라북도 연구개발 방향에 대해 질의응답과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이방희 기자

전북도민일보 2019년 10월 23일 수요일 015면 사람들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 군산서 스터디 모임 가져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강용구)는 경제 체질 개선 모색을 위해 22일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SCC)에서 네 번째 스터디 모임을 이어갔다.

이날 스터디는 제3회 자동차·부품 기술 융복합 협업페어과 연계 상용차 사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 생태계 구축이라는 주제로 자동차융합기술원 노윤식 미래기술연구본부장을 초청하여 특강을 듣고 질의응답과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및 완성차 생산량 감소 등으로 전북 자동차 산업이 어려움에 있는 가운데, 내년부터 추진되는 상용차사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 생태계구축 지원 사업에 대해 이해하고, 미래차 산업 전망과 발전전략 등을 살펴보았다.

강용구 위원장은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사업을 통해 핵심기술개발 및 산업생태계 조성을 지원하여 전북지역 산업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방희 기자

■ 농산업경제위원회 세미나 및 토론회 등 개최 내역

※ 파란색 글씨는 위원회 활동 사례에 대한 주요 내용을 예시로 작성한 것임

연번	구분	의원명	일자	주 제	비고
1	토론회 및 세미나 등	강용구	'19.04.12.	• 4차산업혁명 대응 심포지엄	4차 산업 혁명
		강용구	'19.06.03.	• 차산업혁명 시대 우리의 과제(생물산업진흥원) 특강	
		강용구	'19.07.02.	• 차산업혁명과 우리의 방향(경제통상진흥원) 특강	
		강용구	'19.07.20.	• G 시대, 드림전북을 희망하며(칼럼)	
		강용구	'19.06.20.	• 2019 전북혁신도시 활성화 대토론회	
		나기학	'19.06.26.	• 새만금 신항만 활성화 토론회	
		강용구	'19.07.24.	• 약용작물유통 활성화 세미나	
		최영심	'19.08.12.	• 자림원 활성화 방안 토론회	
		최영심	'19.08.20.	• 의료공공성 강화 토론회	
		강용구	'19.08.25.	• 청년정책연구소 청년정책 포럼	
		강용구	'19.10.01.	• 특례군 제도 법제화 관련 토론회	
		김철수	'19.08.05.	• 청년농업인 육성 발전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2	현지 의정 활동	위원회	'19.01.15.	• 에코융합섬유연구원 현지의정	
		위원회	'19.03.14.	• 허브산채시험장, 남원조합공동법인 현지의정	도서벽지
		위원회	'19.03.18.	• 자연순환농업센터(논산계룡축협), 전북디자인센터 현지의정	축산악취
		위원회	'19.04.24.	• 비나텍, 하이트진로 전주공장 현지의정	
		위원회	'19.05.15.	• 김제·익산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현지의정	축산악취
		위원회	'18.8.27.~9.4.	• 국외연수(네덜란드 쿠막 플랜트, 웰텍바이오파워 등 방문)	
		위원회	'19.07.19.	• 경제통상진흥원, 농업기술원 현지의정	
		위원회	'19.07.23.	• 방사선연구소, 생명연 전북분원 등 현지의정	
		위원회	'19.08.19.	• 어청도(서해 최남단) 현지의정	도서벽지
		위원회	'19.09.19.	• 일자리종합센터, 가축방역상황실(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현지의정	
		위원회	'19.10.22.	• 도지사인증상품판매장, 전주신중앙시장 현지의정	
3	취약 계층 간담	김철수	'19.07.09.	• 정애마을(한센인촌) 방문 간담회	취약계층 폐기물악취
		김철수	'19.07.16.	• 정읍 정애마을, 제2의 장점마을 사태 우려(5분발언)	
		황영석	'19.05.14.	• 김제 호이스트코리아 애로사항 청취 간담회	뿌리기업
		김정수	'19.06.03.	• 익산 기일금속 애로사항 청취 간담회	
		나기학	'19.06.10.	• 군산 한성산기 애로사항 청취 간담회	
		김철수	'19.06.20.	• 정읍 카라 애로사항 청취 간담회	
		강용구	'19.07.11.	• 남원 우경건설 애로사항 청취 간담회	
		김만기	'19.09.06.	• 고창 리더스산업 애로사항 청취 간담회	

연번	구분	의원명	일자	주 제	비고
4	농민 간담	위원회	'19.04.11.	• 새농민회 임원단 업무추진을 위한 간담회	
		위원회	'19.06.05.	• 한우협회 전북지회 애로사항 청취 간담회	
		위원회	'19.07.17.	• 전북농업인단체연합회 애로사항 청취 간담회	
		위원회	'19.08.16	• 전국 농기계 업체 관계자 애로사항 청취 간담회	NO 일본
		강용구	'19.08.01.	• NO 일본(칼럼)	
		김철수	'19.08.15.	• 동학농민혁명정신으로 극일(克日)을	
		김철수	'19.07.25.	• 일본정부의 경제도발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	
		강용구	'19.08.26.	• 농기계 단체 간담 건의에 따른 전문가 의견수렴 (전북대교수, 우석대 교수, 경지원 등)	
		강용구	'19.10.16.	• 도내 친일 잔재물 조치계획(도정질의)	
		위원회	'19.09.24.	• 공익형 직불제 도입 관련 농민단체 간담회	농민수당관련 대응
		강용구	'19.10.02.	• 농민수당, 전국 광역 최초 전북서 시작(칼럼)	
		김만기	'19.10.16.	• 농민공익수당, 사회적합의로 이뤄낸 결실(칼럼)	
		김철수	'19.10.16.	•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첫발 재원 대책(도정질의)	
		김만기	'19.10.24.	• 농민공익수당 국가 정책사업 반영 촉구 건의안	
5	중소 기업 유관 기관 간담	위원회	'19.05.31.	• 중소기업중앙회 유관기관 간담회	
		위원회	'19.06.15.	• 신용보증재단 유관기관 간담회	빚탕감 빚탕감
		위원회	'19.07.08.	• 서민경제 희망불씨 살리기 빚 탕감 행사	
		위원회	'19.06.04.	• 경제통상진흥원 유관기관 간담회	
		강용구	'19.07.05.	• 중소기업 유치기업 간담회	
		강용구	'19.10.21.	• 전북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강용구	'19.12월중	• 중소기업지원 간담회(이인영 원내대표 참석)	
6	연구 단체	오평근	'19.07.25.	• 수소경제 정책 방향 모색 세미나	수소경제 연구회
		연구회원	'19.05.16.	• 수소경제 현장 방문(현대자동차, 가온셀)	
		연구회	'19.12월중	• 수소경제활성화를 위한 벤치마킹	
		연구회	'19.11월말	• 마을 활성화 전략을 위한 현지의정활동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연구회
		김만기	'19.11월말	•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활성화 전략 토론회	
		연구회	'19.12월중	• 마을 활성화 전략을 위한 벤치마킹	
7	성과 보고	위원회	'19.12월중	• 농산업경제위원회 성과보고회 개최	



4차산업혁명 대응 심포지엄(4.12.)



새만금 신항만 활성화 토론회(6.26.)



특례군 제도 법제화 관련 토론회(10.1.)



전북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10.21.)



에코융합섬유연구원 현지의정(1.15.)



생명연 전북분원 현지의정(7.23.)



가축방역상황실 현지의정(9.19.)



전주신중앙시장 현지의정 (10.22.)

우수사례 요약서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04 채소가격 안정을 위한 민·관 합동 국산김치 소비확대 운동 전개

최우수상

분야 : 주민참여소통

기관명 전라남도의회

제출자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추진배경

- 국내 배추·양념 채소류의 가격 안정을 위해 소비 확산 필요
  - 김성일 농수산위원장 국산 김치 소비확산 운동 제안('19.3.13. 본회의)

현황 및 문제점

- 채소류의 수급·가격 불안 상황 반복으로 생산농가 소득 저하 심각
- 외식업체의 값싼 수입 김치 사용이 증가하면서, 김치 주·부재료인 국내 채소류 소비 감소와 가격 폭락 초래

  ※ 김치수입량 : '10) 19만톤 → '15) 22만톤 → '18) 29만톤 → '19) 30만톤 추정

추진내용

- ('17.12.22.) 채소류 가격불안 대비를 위해 관련 조례 제정
- ('19.3.13.) 채소류 가격폭락에 따른 생산농가 활로 모색을 위해 전남도의회 김성일위원장 국산김치 소비 확산 운동 추진 제안
- ('19.3.~현재) 민·관 합동으로 국산김치 소비 확산운동 추진 중

추진성과

- 주민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전국 최초의 김치 소비 확산 운동 추진
  - 도의회 의원의 제안을 시작으로 민·관 협업 공동 사업 발굴·추진
- 음식점·지역주민·공직자 자발적 동참 상향식 주민참여 운동 실현
- 전남을 시작으로 학교·공공급식 식재료 국산 농산물 사용 전국 확대

향후계획

- 전남 시군 의회·외식업중앙회·농협간 국산김치 사용 업무협약 체결
- 전국 국산김치 소비촉진 운동 전개를 위해 타 시·도의회 동참 유도
- 신뢰할 수 있는 농업관측정보체계 구축과 채소류 생산쿼터제도 등 채소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 발굴 중앙정부 지속 건의

국내 채소류 가격 안정을 위한 민·관 합동 국산김치 소비확대 운동 전개

추진배경

- 농산물은 기상변화에 따른 과잉·과소 생산의 폭이 크게 작용하여 이에 따른 수급·가격 불안 상황이 빈번하게 반복됨.
  - 가격변동률('12~'16) : 무(28.8%), 배추(18.8%), 양파(11.9%), 양배추(7.5%)
  ※ 배추가격('05~'16년) : '05) 307원/포기 → '10) 934 → '14) 390 → '16) 1,004

- 특히 주요 양념채소류는 수요 변화가 크지 않고 저장성이 낮아 과잉 생산·소비 감소에 따른 가격안정 정책으로 산지폐기 추진
  - 최근 6년간('14~'19년) 주요 채소류 수급불안으로 산지 폐기 빈번
  ※ '14~'19년 산지폐기 품목 : 무·배추·마늘·양파·양배추·파프리카·감귤 등

- 채소류 주 소비처인 외식업체는 수입김치와 국산김치의 생산원가 차이로 사용 김치의 대부분을 수입김치로 대체하는 추세
  ※ 외식업체 김치 납품단가(10kg) : (수입) 9~12천원, (국산) 25~35천원

● 국내 채소류의 가격 안정을 위해 근본적인 소비 확산 필요성 대두

- 김성일 농수산위원장 국산 김치 소비확산 운동 제안('19.3.13. 본회의)

현황 및 문제점

● 음식점 등의 고정수요처가 늘면서 수입 김치 사용량은 '05년 급증 이후 2000년 초반부터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 김치수입량 : '10) '19만톤 → '15) 22만톤 → '18) 29만톤 → '19) 30만톤 추정

● 국내 김치시장 규모('17)는 2조 6,540억 원(73만톤)이며, 이 중 수입 김치는 약 1,451억 원(29만톤)으로 5.5%(유통 물량의 40%) 차지

- 수입 김치의 대부분(99%)는 생산원가가 저렴한 중국(산동성)에서 수입되어 국내 외·급식업체에 공급

●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 증가 등으로 소비 트렌드가 변화하면서 김치 등 신선채소류 소비량은 감소 추세

- 1인 가구 : 562만(비중 28.6%), 맞벌이 가구 : 533만(45%)

※1인당 김치 소비량(보건복지부) : '10) 71.4kg/인 → '16) 62.4kg(△12.6%)

● 수입김치 증가와 식문화 패턴 변화는 김치의 주·부재료인 국내 배추·양념채소류 소비 감소와 가격 폭락으로 이어짐

- '18~'19년 채소류(무·배추·양파·대파) 수급 안정대책 추진(전남도)

※ '18년 : 겨울대파·양파·가을무·가을배추 : 459ha / 15,779톤 / 65억원

'18년 : 겨울배추·겨울대파·양파 : 1,344ha / 89,975톤 / 179억원

추진내용

● ('17.12.22.) 채소류 가격불안 사전 대비를 위해 선제적 대응 추진

- 전남도의회 '전라남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조례' 제정

● ('19.3.13.) 채소류 가격폭락에 따른 생산농가 활로 모색을 위해 전남도의회 의원 '국내산 김치 소비확산 운동 추진' 제안

- 김성일 농수산위원장 국내산 김치 소비확산 5분 발언(제329회 본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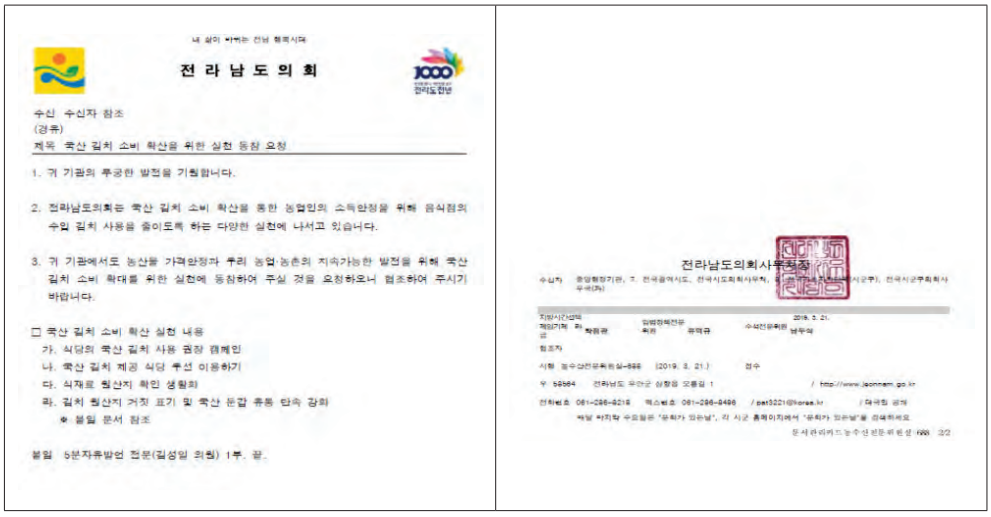
〈주요 내용〉

- 노지채소류 가격 폭락에 대한 정부 가격안정 정책 비판
- 국산 농산물 소비촉진과 농산물 수입물량 조절 필요성 강조
- 양념채소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국산김치 애용 캠페인 전개 제안



● ('19.3.21.) 국산 김치 소비 확산을 위한 실천운동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동참 요청(중앙 및 전국 지자체 공문 송부)

- 도의회·도·교육청 등 임직원 국산김치 사용 음식점 애용운동 전개



전 라 남 도 의 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국산 김치 소비 확산을 위한 실천 동참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라남도의회는 국산 김치 소비 확산을 통한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음식점의 수입 김치 사용을 줄이도록 하는 다양한 실천에 나서고 있습니다.

3. 귀 기관에서도 농산물 가격안정과 우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국산 김치 소비 확대를 위한 실천에 동참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산 김치 소비 확산 실천 내용
가. 식당의 국산 김치 사용 권장 캠페인
나. 국산 김치 제공 식당 무선 이용하기
다. 식재료 원산지 확인 생활화
라. 김치 원산지 거짓 표기 및 국산 둔갑 유통 단속 강화
※ 붙임 문서 참조

붙임 5분자유발언 전문(김성일 의원) 1부. 끝.

전라남도의회사무처장

● ('19.3.29.) 국산김치 소비확대 추진 대책 협의회 개최

- 도·시군·농관원·농협·외식업중앙회 등 기관별 세부실천 계획협의

● ('19.3.29.) 국산김치 소비확대 추진 캠페인 전개(도의회·도·농협)

- 전남도청 인근 음식점 대상 국산김치 애용 캠페인 전개
- 홍보 현수막, 홍보 피켓, 어깨 띠 부착 후 상가방문, 거리홍보





● ('19.4.2.) 국산김치 소비확대 추진 기자회견 등 결의대회(도의회·도·농협·소비자 단체·농업인 단체 등)

- 전남도의회 앞 국산김치 소비확산 기자회견 및 결의대회
- 전남도청 인근 식당가 일원 상가방문 및 거리홍보 캠페인 실시





● ('19.4.26.) 국산김치 소비 확대 추진계획 수립 시달(도·시군·농협)

- 군부대, 학교·단체·공공급식 등 김치 내수시장 확대 추진
- 도·시군·농관원 협업으로 원산지 지도·단속 등 유통·관리 강화

※ 원산지 미표시·허위표시(국산 둔갑 수입 김치) 적극 적발

- 도내 학교·공공급식 식재료를 우리 농산물(채소류) 사용토록 권장

※ 학교장 및 영양사 등을 대상으로 국산김치 사용 적극 권장 지도·감독(도·시군 관련부서 및 도 교육청)

- 국산김치를 사용 음식점임을 홍보할 수 있도록 스티커 제작 배부(1만부)
- 국산김치 사용업소 적극 애용하기, 원산지 확인하기 캠페인 전개

※ 국산김치 사용하시죠? 중국산 김치 아니죠? 질문하기 전개

● ('19.5월~) 국산김치 사용 음식점 스티커 부착 추진(도·시군·농협)

※ 김치 원재료(배추·무·쪽파) 및 부재료(고춧가루·마늘 등)을 국내산 100% 사용하는 음식업소를 대상으로 스티커 부착(시 200개소, 군 100개소)





● ('19.8.27.) 국산김치 소비촉진 업무협약 체결(도의회·한국외식업중앙회·농협·김치공장 등)

- 외식업중앙회 회원업소는 사용 김치를 국산 김치로 전환 협약

〈주요 협약사항〉

* 협약자

〈도의회·한국외식업중앙회·전남농협·김치공장〉

• 도의회·농협 : 국산김치 사용 음식점 애용운동 전개

• 외식업중앙회 : 회원업소 사용김치를 국산김치로 전환 유도

• 김치공장 : 적정가격으로 국산김치 공급



추진성과

● 채소가격 폭락 등 주민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지역 주민 소통과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전국 최초의 김치 소비 확산 운동 제안

- (주민요구) 채소류 수급 불안·가격 폭락으로 생산농가 가격안정 장치 요구
- (조례제정) 전국 최초 주민대표가 발의한 조례를 기반으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을 위한 도 조례안 제정('17.12월)
- (도의원 제안) 채소류 안정적인 소비처 확보를 위해 국산김치 애용 음식점 이용 캠페인을 제안

※ 김성일 농수산위원장 전남도 제329회 본회의 5분 발언 제안('17.3.13.)

● 전남도의회 의원의 제안을 시작으로 민·관이 협업한 전국 최초 대대적인 국산김치 소비 확대 운동 전개

- 도의회·도·농협·소비자·농업인 단체 등이 협업하여 국산김치 소비확대 실천 및 농산물 공급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중

• (도 의회)

① 전남도의회, 도청, 교육청 국산 김치 제공 식당 이용 캠페인 추진

② 전국 도·시군 의회 국산 김치 소비 확산 실천 동참 협조 요청

* 세부실천 내용 : 식당 국산 김치 사용 권장, 국산 김치 제공 우선 이용, 식재료 원산지 확인 생활화, 김치 원산지 거짓 표기 및 유통 단속 강화 등

③ 도의회 연구단체(농촌발전연구회)에서 채소류 생산쿼터제 도입 등 채소류 가격안정을 위한 정책 지속 발굴 정부 건의 추진

• (전남도)

① 도·시군 공직자, 도내 학교·공공급식의 식재료를 포함한 국내산 김치·식자재 소비확대 세부 실천계획 수립 추진

② 도내 김치업체 위생·품질관리 지원(김치 생산업체 HACCP 시설 확충)

③ 내수 및 해외 시장 개척(군부대·공공급식 등 지역 푸드플랜 연계) 및 국·내외 식품박람회 참가 지원

④ 도·시군·농관원 등 관계기관 원산지 지도·단속 등 유통·관리 강화

⑤ 전 도민 우리 농산물 사용 권장(시군 및 도 교육청) 협업 추진

⑥ 채소류 수급불안 해소를 위한 도·농업인·농협 합동 협의회 추진('19. 8월)

• (전남농협)

① 국산김치 경쟁력 제고 시설자금 지원 및 식품안전점검 교육 추진

② 전남김치 홈쇼핑 수수료 및 택배비 지원

③ 학교 등 공공급식 상품 레시피 개발 및 포장재 지원

④ 요식업협회와 국산김치 사용 캠페인 공동 전개(스티커 전개)

⑤ 채소수급안정제 사업 확대 및 원재료 절감을 위한 공동구매 추진

• (소비자단체)

①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생활개선회, 대한어머니회, 농가주부모임회, 대한간호협회, 여성자원봉사협회 등 전남 소비자단체 국산김치 소비확대 동참

②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원 음식업소 대상 국산김치 애용 참여 독려

• (생산자단체)

① 농업인단체(한농연, 한여농, 전농회), 한우협회 등 전남 생산자단체 국산김치 소비확대 캠페인

동참

② 전남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재배·생산관리 실천

③ 채소류 수급안정 대책 사전 협의 등 현장의견 적극 제안('19. 8월)

• (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 허위 표시 및 수입김치 국산둔갑 근절을 위한 단속·지도 집중 실천

● 국산김치 애용 움직임을 음식점과 지역주민·공직자 등이 자발적으로 동참하여 추진하는 상향식 주민참여 운동 실현

- 국산김치 애용 음식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발굴된 음식점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동참 음식점의 자긍심 부여

※ '19. 5.~10월까지 스티커 부착 실적 : 863개소

●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원업소의 국산김치 사용 동참 협약 체결

※ 시군 의회·외식업중앙회 시군지부·농협지부 간 협약 체결 확산 추진

● 국산 김치 국산 김치 이용에 대한 전 국민적 참여의식 고취

- 전남을 시작으로 전국 학교·공공급식 식재료 국산 농산물 사용권장
- 중앙 및 지방 언론을 통한 국산김치 소비확산 운동 전국 홍보

※ 중앙·지방 신문·라디오 등 20회 이상 언론홍보를 통해 전국적인 관심 유도

향후계획

● 전남 전 시군 의회·한국외식업중앙회·지역농협 간 국산 김치 사용 업무협약 체결 및 캠페인 협력 추진('19. 10월까지 완료)

● 국산김치 애용업소 지속 발굴하여 스티커 부착(1만개소 목표)

● 국산김치 사용 스티커 부착업소 애용 실천운동 연중 지속 추진

● 광주세계김치 축제 시식행사 참여 전남산 농산물 우수성 홍보

● 국산김치 소비촉진 운동과 국내산 식재료 사용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하여 타 시도의회 등 전국적인 동참 유도

● 신뢰할 수 있는 농업관측정보체계 구축과 채소류 생산쿼터제도 등 채소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 발굴 중앙정부 지속 건의

첨부자료 전라남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조례

전 라 남 도 의 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의안 이송(제31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처리 의안)

1. 의사담당관-6639호(2017. 12. 13.)의 의안 이송(2건)과 관련입니다.

2. 제31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2017. 12. 13.)에서 처리된 의안(2건)을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안의 정리) 및 제32조(의안의 이송)에 따라 붙임과 같이 이송합니다.

【 의안 이송 현황 】

연번	의안번호	의안(제31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1	1193	전라남도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을 위한 지원 조례안	수정가결
2	1213	전라남도 태양광산업 육성 조례안	원안가결
3	1218	전라남도 생물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4	1219	전라남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5	1220	전라남도 남도소리울림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6	1221	전라남도 조선해양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7	1222	전라남도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8	1228	전라남도 도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9	1239	전라남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10	1244	전라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1	1245	전라남도 지역건물주 산업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2	1246	전라남도 바닷가환경 관리 및 보전 조례안	원안가결
13	1247	전라남도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4	1248	전라남도 체육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전라남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조례

[시행 2017.12.28.]

(제정) 2017-12-28 조례 제 4581호 (제명) 전라남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조례

관리책임부서 : 식량원예과
연 락 처 : 061286648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주요 노지채소 도매시장 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형성될 경우 차액 일부를 지원하여 전라남도 주요 농산물의 가격안정과 농업인의 소득보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법인을 말한다.
3. "최저가격"이란 최근 5년 간 품목별 생산비와 도매시장 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가격을 말한다.
4. "도매시장가격"이란 지원품목 주 출하기간 동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제공하는 전국 주요 도매시장의 상품(上品) 평균가격을 말한다.
5. "차액"이란 최저가격에서 도매시장가격을 뺀 금액을 말한다.
6. "계약재배"란 전라남도 내(이하 "도내"라 한다) 농업협동조합(원예농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조합공동사업법인과 농업인 간 농산물을 일정한 조건으로 계약을 맺고 재배하여 출하하는 것을 말한다.
7. "계통출하조직"이란 도내 농업협동조합(원예농협 포함) 또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을 말한다.
8.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산물의 가격안정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등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시책 수립 시에 도내 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농산물 및 범위) ① 지원대상 농산물은 주요 노지채소 중 계약재배를 통하여 계통출하하는 품목으로 한다.
② 지원범위는 품목당 경지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을 기준으로 하되, 전체 품목을 합산하여 1만제곱미터를 지원 상한면적으로 한다.

제5조(지원 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차액 지원 대상은 도내에 주소를 두고 도내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하고, 계통출하조직과 계약재배하는 농업경영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정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최저가격 결정) ① 최저가격은 최근 5년 간 도매시장 가격과 통계청, 농촌진흥청에서 조사한 전년도 생산비 등을 기준으로 한다.
② 최저가격과 지원대상 농산물, 지원범위는 매년 하반기에 제13조의 전라남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7조(최저가격 고시)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최저가격을 해마다 전라남도 소식지와 누리집 등을 통하여 게재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 신청) ① 차액 일부를 지원 받고자 하는 농업경영체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계통출하증명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통출하 증명 서류에는 계통출하조직별·품목별 계약체결 내용과 출하실적 및 유통업체별 판매현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신청내용 조사) 제8조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신청 농업인의 도내 거주 여부, 계약체결 경작농지의 도내 소재 여부, 계통출하조직과 계약체결 사항 등 신청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해 조사할 수 있다.

제10조(지원 기준) 도지사는 농업경영체가 출하한 물량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차액의 일부를 지원한다.

제11조(지급 제외) 도지사는 계통출하조직과 계약을 체결한 농업경영체가 농산물을 계약 내용에 따라 출하하지 않고 임의로 처분한 경우 제10조에 따른 차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2조(지원금의 회수 및 제재) ① 도지사는 계통출하조직 또는 농업경영체가 제10조의 차액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차액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자에 대하여는 5년의 범위에서 지원을 제한하여야 한다.
③ 계통출하조직과 출하 약정을 한 농업경영체가 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약정된 농산물을 계통출하하지 않고 임의로 처분하였을 때에는 3년의 범위에서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전라남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위원회 설치 등) ① 주요 농산물의 가격안정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기획조정실장, 농축산식품국장, 농업기술원장(전라남도 조례4696호, 2018. 8. 2일자 공포,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에 따른 개정)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가.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농협중앙회전남지역본부 경제부본부장
다. 농업인 단체 대표
라. 농업생산자 단체 대표
마. 그 밖에 농업·유통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산물 가격안정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최저가격 결정
2. 지원대상 농산물
3. 지원범위
4. 그 밖에 본 조례의 목적에 해당하는 사항

제15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간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3명 이상의 위원이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지원된 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시장·군수에게 지도·감독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원금이 목적과 달리 사용되었거나 부당하게 사용되었을 경우 시장·군수에게 회수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7조(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부칙(2017. 12. 28.)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차액 지원)차액 지원은 조례공포 후 2019년부터 시행한다.

첨부자료 국내 김치 소비확산 제안 5분 발언 (김성일 위원장)

5분 자유 발언

김 성 일(해남 1)

『국산 김치 소비 확산에 나서야 한다』

안녕하십니까? 해남 출신 김성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용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저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게 해 주신 데 대해 먼저 깊이 감사드립니다. 김영록 도지사님과 장석웅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 드립니다.

저는 오늘,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장으로서 수입산 김치의 국내시장 잠식으로 위협받고 있는 우리 농업과 농촌을 지켜 나가기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가장 최근에 간 식당에서 어떤 음식을 드셨습니까? 우리 쌀로 지은 밥에 우리 농수산물로 만든 김치가 나왔습니까?

100% 그렇다고 답할 수 있는 분은 많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부터 식당에 가시면 드시는 음식의 재료가 도대체 어디서 난 것인지 꼭 확인해 보셨으면 합니다.

농도 전남의 농촌 상황이 녹록치 않습니다. 고령화는 급속히 진행되는데, 농사짓는 젊은이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최솟는 경영비용에 가뭄·폭염 같은 기상이변을 덧고 힘들게 농사는 지었는데, 헐값에 농산물을 팔아야 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 고심하고 수시로 채소가격 안정 대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국민들의 식생활이 바뀌고, 수입산 김치가 대량 유통되고 있어 우리 농산물의 판로가 막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산 김치 생산량은 91만 톤인데, 수입 김치가 26만 톤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는 국내산 김치 생산량의 30% 가까운 양입니다. 특히 심각한 것은 우리나라 식당의 80%가 수입 김치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변 식당에서 제공되는 김치 대부분을 수입산이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수입 김치가 늘어난 만큼 배추 뿐만 아니라 대파, 고추, 마늘 같은 양념 채소류 수요마저 위축되어 농민들은 해마다 어떤 작물을 심어야 되나 고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손 놓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농민들이 가격 폭락 걱정 없이 농사짓고, 젊은이들이 농업에서 희망을 찾고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전남도의회와 공직자가 당장 나서야 합니다.

지금은 '금연'이 큰 흐름이긴 합니다만, 한때 우리 지역에서 담배를 구매하자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지방세수를 늘리자는 취지였을 겁니다.

이제는 우리 농업과 농촌을 살리는 데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몇 가지 제안 드리겠습니다.

첫째, 식당들에서 수입김치 사용을 자제하고, 국내산 농산물로 만든 김치를 사용하도록 하는 캠페인을 펼쳐 나갑시다.

예컨대 '우리 식당은 국산 농산물로 만든 김치만 사용합니다'. 이런 문구를 넣은 스티커를 만들어 식당에 게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국내산 김치 사용이 우리 농업농촌을 지키는 소중한 일이라는 자부심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 전남도청 뿐만 아니라 도내 모든 공직자들과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수입김치를 제공하는 식당 이용을 자제하고, 국산 농수산물, 국산 김치를 쓰는 식당들만을 즐겨 찾는다면 자연스럽게 수입 김치가 설 자리는 점차 줄어들 것입니다.

셋째, 식당에 가시면 "수입 김치 안 쓰죠?, 김치는 우리 거죠?"라고 물어봅시다. 손님의 이런 물음이 쌓이는 만큼 국산 김치 사용은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음식의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우리 농업을 살리는 올바른 소비를 실천해 나갑시다.

넷째, 전남도내 학교 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급식에 들어가는 식재료를 우리 농산물로 사용하도록 일선 시·군 및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도록 합시다. 농민단체나 기관들과도 손잡고, 보다 효과적인 지역 농산물 공급시스템도 마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비롯한 관계기관은 원산지를 허위표시하거나, 수입 김치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유통하는 일이 없도록 단속을 수시로 철저히 해 나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전남도민 여러분!

이미 우리나라의 식량자급율은 24% 안팎에 그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농산물 가격 폭락은 급기야 농업 생산기반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전적으로 수입 농산물에 의존해야 하는, 그야말로 식량안보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 모든 분들이 당장 오늘부터 '국내산 김치 소비 확산'을 위한 실천에 나서줄 것을 간곡히 말씀 드립니다.

작지만 소중한 실천이 우리 농업과 농촌을 지키고, 청년이 돌아오는 활기찬 전남을 만드는 길이라는 것을 다시금 강조 드리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자료 국산김치 소비확대 결의 기자회견 등 홍보

국산 김치 소비 확산을 위한
결 의 문

한 겨울 농도 전남의 푸른 들녘에 난 데 없는 트랙터 소리가 요란했다. 겨울 배추, 겨울 대파에 이어 수확을 앞둔 양파마저도 가격이 폭락하여 우리 농민들은 눈물을 머금고 산지폐기에 나선 것이다.

우리는 정부에 반복되는 노지채소 가격 폭락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그러나 애써 농사지어 헐값에 팔아야 한다는 엄혹한 현실 앞에 마냥 정부 대책만을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다.

우리는 김치 시장의 3분의 1을 차지해 버린 수입 김치가 채소가격 폭락의 주요 원인이라고 판단한다. 수입 김치 소비를 줄이지 않고는 우리 농업과 농촌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도민 모두가 생명산업인 농업을 지키는 소중한 실천에 동참해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하며, 오늘부터 국산 김치 소비 확산을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실천에 나설 것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국산 농산물, 국산 김치 제공 음식점을 우선적으로 이용한다!!

하나, 우리는 음식점이 국산 김치를 제공하도록 하는 캠페인을 적극 펼쳐 나간다!!

하나, 우리는 음식점 이용 시 김치가 국산인지 물고, 식재료의 원산지를 꼭 확인한다!!

하나, 우리는 국산 김치를 애용함으로써 생명산업인 농업을 반드시 지켜낸다!!

2019. 4. 2.

(붙)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 전라남도의회, 전라남도여성단체협의회, 전라남도새마을부녀회, 한국자유총연맹 전남여성협의회, 고향생각주부모임 전남도지회, 대한어버이회전남연합회, 전라남도21세기여성발전협의회, 한국여성유권자전남연맹, 농가주부모임전남도연합회, 대한간호협회전남간호사회, 대한조산협회전남조산사회, 소비자교육중앙회전남도지부, 전라남도여성자원봉사협의회, 한국청소카우드전남연맹, 한국부인회전남도지부, 한국생활개선전라남도연합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남지회





결의문낭독(소비자교육중앙회 전남도지회장, 농업인단체대표, 2019. 4.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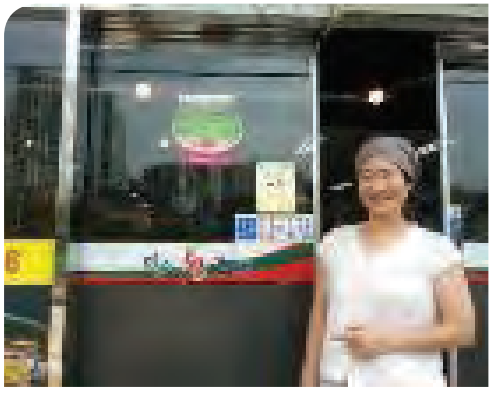
첨부자료 국산김치 애용 홍보 캠페인







국산김치 애용 길거리 캠페인 (2019. 3. 29.)




국산김치 애용 길거리 캠페인(2019. 4. 2.)

첨부자료 산김치 소비확산 민·관협력 업무협약 체결

업 무 협 약 서

전라남도의회, 한국외식업중앙회전라남도지회(이하 "외식업중앙회"), 전남농협지역본부·순천농협·화원농협(이하 "농협")은 국산김치 애용운동을 확산하고자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각 기관 간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국산김치 애용 음식점을 늘려감으로써, 외식업중앙회 소속회원의 매출증진과 채소생산 농가의 소득향상을 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협력사항) 각 기관은 상호합의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적극 추진한다.

① 외식업중앙회는 국산김치 사용회원 확대에 협력한다.

② 농협은 적정가격의 국산김치를 외식업중앙회 회원에게 공급한다.

③ 전남도의회와 농협은 국산김치 사용 음식점 애용운동 전개에 앞장선다.

④ 각 기관은 국산김치 애용을 비롯하여 우리농산물 소비촉진 및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제3조 (자료의 제공 등) 각 기관은 제2조에서 정한 협력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자료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관련 법규의 허용범위 내에서 상호간 협조한다.

제4조 (유효기간) 본 협약은 체결일로부터 유효하며, 어느 일방의 해지표시가 없을 경우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5조 (신의성실의 원칙) 각 기관은 본 협약서에 정한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해 이행한다.

제6조 (비밀유지) 각 기관은 업무협력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외부에 누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협약의 해지) 각 기관은 본 협약을 이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지할 수 있다. 단, 협약의 해지는 상대방에게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8조 (효력발생 및 준수) 본 협약은 각 당사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협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해 협약서 5부를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2019년 8월 27일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장	김성일	김성일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전남지회장	송기현	송기현
전남농협지역본부	본부장	김석기	김석기
순천농업협동조합	조합장	강성채	강성채
화원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서정원	서정원





도의회·외식업중앙회·농협·김치공장
국산김치 애용 활성화 업무협약식(2019. 8. 27.)

첨부자료 관별 국산김치 소비확산 대책 추진(전남도)

내 삶이 바뀌는 전남 행복시대

전 라 남 도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국산김치 소비확대 추진대책 협의회 개최 계획 알림

우리 도에서는 김치수입 증가로 어려움에 처한 배추·양념채소류 생산농가의 활로 모색을 위해 국산김치 소비확대 붐을 조성코자 아래와 같이 「국산김치 소비확대 추진대책 협의회」를 개최하오니, 각 시·군 및 유관기관에서는 반드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 시 : 3. 29.(금) 14:00~15:30
2. 장 소 : 농협전남지역본부(4층 중회의실)
3. 참석 인원 : 31명 ※ 농식품유통과장 주재
   - 도 3, 시군 22, 교육청 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남지원 1, 농협전남지역본부 1, 순천농협 1, 화원농협 1, 한국외식업중앙회전라남도지회 1
4. 협의내용 : 기관별 국산김치 소비확대 방안 설명 등
   ※ 기관별 국산김치 소비확대 방안 추진대책 3. 27.(수)까지 도에 제출

붙임 국산김치 소비 확대 추진대책 1부. 끝.

전 라 남 도 지 사

수신자 목포시장(농업정책과장), 여수시장(축산품유통과장), 순천시장(농식품유통과장), 나주시장(녹원에너지과장), 광양시장(농산물수비팀과장), 담양군수(친환경유통과), 곡성군수(농정과장), 구례군수(친환경농정과장), 고흥군수(경제유통과장), 보성군수(차원에유통과장), 화순군수(농업정책과장), 장흥군수(농산과장), 강진군수(친환경농업과장), 해남군수(유통지원과장), 영암군수(친환경농업과장), 무안군수(농정과장), 함평군수(친환경농산과장), 영광군수(유통축산과장), 장성군수(일자리창업추진), 진도군수(경제마케팅과장), 신안군수(친환경농업과장), 완도군수(농업축산과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남지원장(품질관리과장), 전라남도교육감(체육건강과장), 농협전남지역본부장(경제지원단), 한국외식업중앙회전라남도지회장, 순천농협조합장(남도식품김치가공공장장), 해남화원농협조합장(화원농협김치가공공장장)

주무관 김수지 농촌유통팀장 김병수 농식품유통과 전결 2019. 3. 29. 과장 김병심
협조자
시행 농식품유통과-4249 접수
우 58964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라남도청) / http://www.jeonnam.go.kr
전화번호 061-286-6434 팩스번호 061-286-4788 / sujilove@korea.kr / 대국민 공개
해당 마지막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날", 각 시군 홈페이지에서 "문화가 있는날"을 검색하세요

국산김치 소비확대 추진대책

국산김치 소비확대 붐을 조성함으로써 김치수입 증가로 어려움에 처한 배추·양념채소류 생산농가의 활로를 모색코자 함

1 김치산업 동향

❑ 국산·수입김치 생산원가 차이 등으로 김치수입 지속 증가
- ○ '97년부터 소폭 증가세를 보이다가 '15년 급증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 김치수입량 : ('10) 19만톤 → ('15) 22만톤 → ('17) 28만톤 → ('18) 29만톤

❑ 수입김치는 국내 상품김치시장의 1/3을 차지하며, 대부분의 물량이 중국에서 수입되어 국내 외·급식업체에 공급
- ○ 국내 김치시장 규모('17)는 2조 6,540억원(73만톤)이며, 이 중 수입김치는 약 1,451억원(29만톤)으로 5.5%(물량 40%) 차지
  - 외식업체 김치 납품단가(10kg) : (수입) 9~12천원, (국산) 25~35천원

❑ 1인 가구 증가, 식문화 다양화 등으로 김치 소비량 감소
- ○ 인구구조변화 및 식생활 패턴 변화로 김치 소비량 지속 감소
  - 1인당 김치 섭취량(보건복지부) : ('10) 71.4g/인 → ('16) 62.4g(△12.6%)

2 소비확대 추진대책

❑ 도내 김치업체 위생·품질 경쟁력 제고로 수입김치와 차별화
- ○ 김치류 생산업체에 HACCP 시설 확충 지원
  - HACCP 미인증 업체에 대해 컨설팅 및 시설 확충 우선 예산지원

❑ 내수 및 해외 프리미엄 시장 개척으로 김치시장 확대
- ○ (내수 확대) 군부대, 학교·단체·공공급식 등(지역 푸드플랜 연계)
- ○ (시장 개척) 김치제조업체 국내·외 식품박람회 참가 적극 지원

❑ 도·시군·농관원 관계기관 원산지 지도·단속 등 유통·관리 강화
- ○ 원산지 미표시·허위표시(국산 둔갑 수입김치) 적극 적발

❑ 전 도민 국산김치 소비확대 운동 적극 전개
- ○ 도내 학교·공공급식 식재료를 우리 농산물을 사용토록 권장
- ○ 김치 원재료·부재료를 국내산을 사용하는 음식업소 이용하기
  - 국산김치인지 질문하기 및 원산지 반드시 확인하기 등
- ○ 국산김치 사용하는 음식점임을 알 수 있도록 스티커 부착 권장
  - '국산 농산물로 만든 김치만 사용합니다' 스티커 2만매 제작 배부(농협)
- ○ 행정, 농협, 농업인 단체 등이 연계하여 소비확대 운동 전개 및 지역 농산물 공급시스템 구축

3 주요 추진사항 세부일정

❑ 국산김치 소비확대 추진대책 협의회 개최
- ○ 일 시 : 3. 29.(금) 14:00~15:30
- ○ 장 소 : 농협전남지역본부(4층 중회의실)
- ○ 참석 인원 : 31명 ※ **농식품유통과장 주재**
  - 도 3, 시군 22, 교육청 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남지원 1, 농협전남지역본부 1, 순천농협 1, 화원농협 1, 한국외식업중앙회전라남도지회 1
- ○ 개최내용 : 기관별 국산김치 소비확대 방안 설명 등

❑ 국산김치 애용 캠페인 실시
- ○ 일 시 : 3. 29.(금) 15:40~16:00
- ○ 장 소 : 농협전남지역본부 인근 음식점 거리
- ○ 참석인원 : 40여명(도, 농협 등)
- ○ 추진방법 : 어깨띠 착용, 스티커 배부

국산김치 소비확대 추진대책

[기관명 : 농협 전남지역본부]

□ 국산김치 소비 확대방안 및 세부추진계획

○ 국산김치 경쟁력 제고
- 농협 김치·고춧가루가공공장 시설 자금지원을 통한 활성화
- 식품안전관리능력 향상을 통한 안전 국산김치 경쟁력 강화
  * 전문기관 위탁에 의한 식품안전점검 및 교육 실시 (2019년부터 시행)

○ 판매확대 지원 및 제품개발
- 홈쇼핑을 통한 전남김치 판로확대 지원
  * 수수료 및 택배비 지원을 통한 연중 동일판매가 도입
- 농협 판매장(하나로마트, 로컬푸드 등) 입점확대
- 소비 패턴변화에 대응하는 상품개발 및 포장재 지원
- 학교·공공급식용 상품화 및 레시피 개발

○ 소비확대 운동 및 캠페인 전개
- 요식업협회와 함께 국산김치 사용 음식업소 현판식 전개
- 국산김치 애용 가두 캠페인 전개
- 국산김치 사용 맛집리스트 제작 및 홍보

○ 국내산 원재료 조달 및 원가절감
- 계약재배 및 채소수급안정제 사업 확대
- 공동구매를 통한 원재료 원가절감방안 모색
- 국내산 원재료 사용 모범(안) 마련

첨부자료 기관별 국산김치 소비확산 대책 추진(농협)

"농심(農心)을 가슴에 안고 농민(農民) 곁으로!"

농협경제지주

수신 :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 국산김치 이용업소 발굴추진 요청(홍보용 스티커 부착 사업)

행정주관 국산김치 스티커 부착 사업을 진행중이나, 추진실적 미흡으로 전남농협도 동참하여 국산김치 이용업소 발굴추진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적극적인 동참 바랍니다.

- 아 래 -

1. 추진배경

□ 수입김치 증가로 어려움에 처한 배추·양념채소류 농가의 활로모색
□ 국내 김치시장의 1/3이 수입산이며, 대부분 외식·급식업체에 공급

2. 추진개요

□ 시·군청 주관 국산김치 사용업소 발굴
○ 국산김치 이용업소에 스티커 부착 및 관리번호 부여
□ 추진목표 : 시 단위 200개소, 군 단위 100개소
○ 스티커는 지역본부에서 제조하여 각 시·군청 담당자 배부완료

3. 부착대상업소 선정기준

□ 김치 원재료(배추, 무, 쪽파 등) 및 부재료(고춧가루, 마늘 등)를 국내산 100% 사용하는 음식업소

【스티커 부착 예시】



4. 추진실적 : 246개소 (6/20 현재 전라남도청 집계 기준)

□ 시군별 추진실적 현황

시군	강진군	고흥군	무안군	신안군	진도군	화순군
업소수	18	5	8	204	10	1

※ 시군별 업소 명세 : [붙임2] 참조

【기관별 역할 흐름도】

시·군청		전라남도청		지역본부
▸ 업소 발굴 ▸ 스티커부착 ▸ 관리번호 부여	↔	▸ 업소 통합관리 ▸ 시군청 업조요청	↔	▸ 스티커 제작발급 ▸ 업소 통합관리 ▸ 캠페인 홍보

□ 추진실적 부진으로 전남농협 역할 필요

5. 협조요청 사항

□ 각 농·축협 관내 국산김치 이용업소 발굴 및 추천
○ 추천방법 : [붙임1] 양식 작성 후 개인우편 제출
○ 제출기한

구분	농·축협 → 농정지원단	농정지원단 → 지역본부
기한	'19.06.27.(목)까지	'19.06.28.(금)까지
제출처	농정지원단장	천현식 계장

○ 추천 음식업소 대상으로 시·군청에 스티커 부착 요청예정

붙임 : 1. 국산김치 이용업소 추천명세
2. 시군별 업소 명세. 끝.

전 남 지 역 본 부 장

수신자 : 지본(전남),군(장흥)전남,농(전남),농지(전남),축(전남),축지(전남),원(전남),원지(전남),경제(전남지역본부장)

시행 : 경제(전남지본)21102-222 2019.06.21. 접수 : 20190112119 2019.06.21.
우 58567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무광대로 264 / 전화 061-289-7221 / FAX 061-289-7219
담당 : 계장 천현식 (E-mail :) / 공개구분 : 부서공유

"농심(農心)을 가슴에 안고 농민(農民) 곁으로!"

농협경제지주

수신 :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 국산김치 애용 활성화 시군단위"업무협약"체결추진

국산김치 소비확대 붐 조성을 위해 아래와 같이 시군단위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추진배경

□ 수입김치 증가로 어려움에 처한 배추 및 양념채소류 생산농가의 활로모색
□ 국산김치 사용 음식점 애용으로 외식업중앙회 회원의 매출증진

2. 업무협약 체결 세부내용

□ 협약서(안) : 붙임1
□ 체결 기한 : ~10/25(금)까지
□ 체결 당사자 : 3자간
○ 시군의회 의장, (사)외식업중앙회 시군지부장, 농협지부장
- (사)외식업중앙회 시군지부장 명단 : 붙임2
□ 플래카드(안)

"국산김치 소비확대로 농가소득 제고, 국민건강 증대"
국산김치 애용 활성화 업무협약
2019. 10. 00. ◇◇시군의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농협○○시군지부

3. 업무협약 체결 결과보고

□ 보고기일 : ~ 10/30(수)까지
□ 보고사항 : 협약서 스캔파일, 행사사진, 언론홍보 내용 등
□ 보고방법 : 천현식 계장 앞 개인우편

4. 업무협약 체결 후 중점추진할 사항

□ 외식업중앙회와의 유대강화로 국산김치 이용 음식점 확대
○ 국산김치로 전환 유도 시 "농협김치공장" 우선이용 권유
- 화원농협(이맑은 김치), 순천농협(남도김치)
☞ 지역본부와 업무협약으로 원가 또는 할인공급 예정
□ 국산김치 이용 음식점 「농협임직원 애용하기 운동」 전개

5. 참고사항 : 지역본부 주관 업무협약 체결사항

□ 체결 일자 : 2019. 08. 27.
□ 체결 당사자
○ 전남도의회(농수산위원장), 한국외식업중앙회(전남도지회장), 전남농협(본부장), 김치공장 조합장2(화원, 순천)
□ 행사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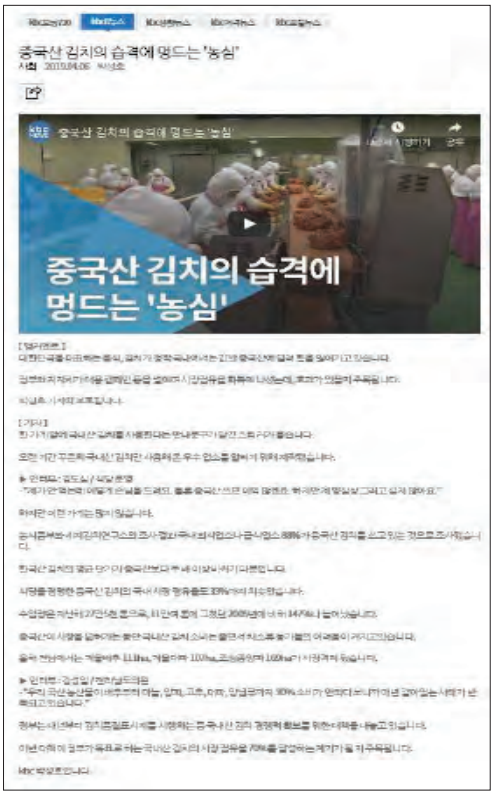
붙임 : 1. 협약서(안)
2. 한국외식업중앙회 시군지부장 명단. 끝.

전 남 지 역 본 부 장

수신자 : 지본(전남),군(장흥)전남,농(전남),농지(전남),축(전남),축지(전남),원(전남),원지(전남),경제(전남지역본부장),경제(전남지역본부장)

시행 : 경제(전남지본)21102-357 2019.10.14. 접수 : 20190191100 2019.10.14.
우 58567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무광대로 264 / 전화 061-289-7221 / FAX 061-289-7219
담당 : 계장 천현식 (E-mail :) / 공개구분 : 부서공유

첨부자료 주요 언론 보도·홍보자료



중국산 김치의 습격에 명운은 '농심'

중국산 김치의 습격에 멍드는 '농심'



[기고] '국산 김치 소비 확산' 5가지 방법

[한국농어민신문]

수입산 김치의 국내시장 잠식으로 위협받고 있는 우리 농업과 농촌을 지켜 나가기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릴까 합니다. 가장 최근에 간 식당에서 어떤 음식을 드셨습니까? 우리 밥에 지은 밥에 우리 농산물로 만든 김치가 나왔습니까?

100% 그렇다고 답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식당에 가시면 도시는 음식 재료가 도대체 어디서 난 것인지 꼭 확인해 보셨으면 합니다.

농도 전남의 농촌 상황이 녹록치 않습니다. 고령화는 급속히 진행되는데, 농사지는 젊은이들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지속는 경영비용에 가를 목적 같은 기상이변을 입고 힘들게 농사를 지었는데 정작에 농산물을 팔아야 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 고심하고 수시로 채소가격 안정 대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택없이 부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국민들의 식생활이 바뀌고 수입 김치가 대량 유통되고 있어 우리 농산물의 판로가 막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산 김치 생산량은 91만톤인데, 수입김치가 36만톤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는 국내산 김치 생산량의 30% 가까운 양 입니다. 특히 심각한 것은 우리나라 식당의 80%가 수입 김치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변 식당에서 제공되는 김치 대부분이 수입산이 자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수입 김치가 들어난 만큼 배추뿐만 아니라 대파 고추 마늘 같은 양념 채소류 수요마저 농민들은 해야다 어떤 작물을 심어야 하나 고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손 놓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농민들이 가격 폭락 걱정 없이 농사짓고 젊은이들이 농업에서 희망을 찾고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모두 나서야 합니다.

지금은 금연이 큰 흐름이긴 합니다만 판매 우리 지역에서 담배를 구매 하자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지방 세수도 올리고, 우리 담배농가도 돕고, 담배 수입도 줄어가는 취지였을 겁니다.

이제 우리 농업과 농촌을 살리는 데 함께 지혜를 모으는 차원 몇 가지 제안을 드릴까 합니다. 첫째, 식당에서 국내산 농산물로 만든 김치를 사용하도록 캠페인을 펼쳐 나갑시다. 예컨대 '우리 식당은 국산 농산물로 만든 김치만 사용합니다'이런 문구를 넣은 스티커를 만들어 식당에 게시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국내산 김치 사용이 우리 농업 농촌을 지키는 소중한 일이라는 자부심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 모든 공직자들과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수입 김치를 제공하는 식당 이용을 자제하고, 국산 농수산물 국산 김치를 쓰는 식당을 찾아 달라는 캠페인을 펼쳐 수입김치가 설자리는 점차 줄 것입니다.

셋째, 식당에 가시면 "수입김치 안 쓰죠? 김치는 우리 거죠?"라고 물어 봅시다. 손님의 이런 물음이 많아는 만큼 국산 김치 사용은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중심의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우리 농업을 살리는 올바른 소비를 실천해 나갑시다.

넷째, 공공급식에 들어가는 식재료를 우리 농산물로 사용하도록 법적 사은 및 문제가르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도록 합시다. 농민단체나 기관들과도 손잡고 보다 효과적인 지역 농산물 공급시스템도 마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비롯한 관계기관은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거나 수입김치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유통하는 일이 없도록 단속을 수시로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미 우리나라의 식탁 자급률은 24% 안팎에 그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농산물 가격 폭락은 공기아 농업 생산 기반의 붕괴를 초래 할 수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전적으로 수입 농산물에 의존해야 하는 그 [illegible]



전남매일 정치 03면

국산김치 소비확대 결의대회 전남도의회, 농협전남지역본부, 전남도농업인단체연합회, 소비자교육중앙회전남도지부회는 2일 도의회 앞에서 국산김치 소비확대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다. /전남도 제공

첨부자료 주요 언론 보도·홍보자료

전남도의회, 전 도민 국산김치 소비확대 운동 전개

Google 에 의해 중료된 광고입니다.
이 광고 그만 보기 이 광고가 표시된 이유



전남도의회는 2일 도의회 광장에서 국산김치 소비확대 결의대회 및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도의원, 농협전남지역본부, 전남농업관단체연합, 소비자교육중앙회전남지회 등 관계자 14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행사는 수입 김치 증가로 어려움에 겪고 있는 배추·양념 채소류 생산 농가의 활력을 모색하고 우수한 국산 농산물로 만든 김치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들은 '국산 농산물과 국산김치 제공 음식점 우선 이용하기', '음식점에서 국산김치를 제공하도록 캠페인 운동 전개', '음식점 이용 시 국산김치인지 묻고, 식재료의 원산지를 꼭 확인'을 실천해 생명산업인 농업을 반드시 지켜내자고 결의했다.

전남도의회 김성일 농수산위원장은 "수입김치 소비를 줄이지 않고서는 우리 농업과 농촌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며 "전 도민이 국산김치 소비확대 운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고자 국산김치 소비확대 운동을 전 국민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남매일

'농업의 뜰을 깨다' 김치주스로 아시나요?

김성일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장

2019년 08월 11일(일) 17:45



제11대 전남도의회에서 농수산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본자는 국내 농수산업 문제에 대한 대안을 찾기 위해 지난달 미국의 농수산업 현장을 다녀왔다. 연수기간 현지의 농수산업 생산·가공현황, 유통업체, 정책·연구기관 등을 방문하면서 세계 최대 농산물 생산·수출국인 미국의 농업 규모와 시스템에 압도당하지 않을 수 없었다. 광활한 농지자체에 생산되는 다양한 유기농 제품과 체스트 등을 전해연서 '노동집약적인 소규모 한국농업은 경쟁력이 없다'는 비관적인 생각과 '우리 농산물의 수출과 확보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현장리에서 깊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다민족·다문화 국가인 미국의 메스식(한족·전통적)식품과 체식주의 식품 소비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통식품 가공분야에서 우리 농업의 희망이 있다는 생각도 갖게 됐다.

미국의 관련 있는 건강전지 웹스(The Health)가 세계 5대 건강식품으로 '그리스 '요구르트', 스페인 '올리브유', 인도 '생강꿀', 일본 '낫토'와 함께 한국의 '김치'를 선정한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치는 주재료인 배추·무·고추에 양파, 마늘, 생강 등 다양한 부재료를 첨가해 만든 곤경 발효식품이라는 점에서 나머지 4개 식품과 차이가 있다. 채소중에 식이섬유, 비타민을 비롯, 곤경된 양념류에 면역 활성물질과 항산화 성분, 그리고 발효 유산균이 포함된 김치는 세계 4대 건강식품에 손색없을 것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먹고 있는 김치도, 매일과 생강이 들어간 세련된 고추가루 국밥을 주스로 만들어 마시다면 상상이 되는가? 놀랍게도 김치 주스는 세계적인 온라인 소핑몰 아마존 닷컴에서 판매하고 있는 품목다. '코스 테인'이라는 미국 기업이 유기농 양배추, 양파, 당근, 고추, 생강, 매실을 넣어서 음료로 판매하고 있고, 유주에서는 뿐만 김치 주스 외에 백김치 주스까지 개발해 판매하고 있다. 세계적인 명품식품에서 건강식으로 인정된 김치의 인지도가 상승하지 않에 착안해 미국의 기업도 이 김치의 건강주스로 만들어 상품화한 것이다. 이는 김치가 이미 관로별 건강식품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농식품수출정보(KATI) 통계를 보면 지난해 미국의 김치 수입액은 2017년 7,200만 달러에서 2018년 8,900만 달러로 23% 증가했다. 올 상반기에는 6,000만 달러 이상을 수입한 상으로 점계되는 등 김치 수입이 계속적으로 증가할 상으로 예측되고 있다. 미국 내 김치시장 규모가 1억 달러 이상에 달한다는 국내 김치 수출기업의 분석 자료를 비교해보면 미국 내 유통되는 김치의 상당량은 수입보다 미국 현지에서 제조한 김치로 보인다. 미국 김치 소비시장의 성장은 김치 품목에 대한 소비 확대를 넘어서 미국 내 한국 문화에 대한 인지도 상승과 미국적인 감산국인 한지 양념과 한국식 소스에 수요가 등반 확장할 것이라는 전망을 예측하게 한다. 때문맛을 단계별로 적절히 조절해 고 다양한 음식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김치 양념소스와 드레싱 소스 등이 개발된다면 건강식과 간편식을 찾는 해외의 국내 많은 소비자에게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연수중 한인매장 위에 costco, whole foods market 등 미국 주요 마켓에서 한식관 김이 스낵으로 판매되는 것을 직수 발견했다. 한편을 김을 해석한 스낵으로 착안, 개발한 것이 미국 소비자의 기호에 맞 맞았던 것이다.

농업도 마찬 고령화년을 해고 생산부터 가공·유통에 따르기까지 첨단지식과 선기술을 활용해 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한다. 한편식품 역시 글로벌 시장의 수요와 소비자 기호에 맞게 변해가야에만 세계적인 식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한나은 한국 최대의 한류를 농산업 생산체제에서 맞이 고령으로, 세계인이 맛있을 때로할 한국식 양념소스를 세계인 식탁에 자연스럽게 올려보는 마음가짐과 자세로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맛으로 본자는 세계 식품시장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살펴는 한편 농산업 가공 현장에 애려을 두고 식품관련 한문가인의 지혜를 모아 세계 트렌드에 맞는 농산업 가공·식품기술 개발을 노력할 계획이다. 연수중 여러의 세계인이 해응해는 마음새조와 디테스고 소스처럼 우리의 한류식품을 아름한 생장·감독 양념소스가 세계인의 식탁에서 사랑받도 하게를 만드에 기대과 다짐해 본다.

전남도의회, 노지채소 가격 폭락 대책 촉구

광주CBS 김신오 기자 | 2019-02-26 15:28 뉴스듣기

김성일 농수산위원장, "'풍년의 역설' 반복 막아야"



전남도의회 김성일 의원

전남도의회는 26일 본회의에서 '노지채소 가격 폭락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성일 농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해남1)은 "정부가 산지폐기 등 시장격리 정책을 펴고 있지만 겨울 배추와 겨울 대파 가격이 폭락해 재배농가들의 시름이 깊다"며, "노지채소 가격 폭락을 막을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유래 없이 온화한 겨울 날씨 속

Google 에 의해 종료된 광고입니다.
의 광고 그만 보기
이 광고가 표시된 이유

- 로또1등 "용지됐면" 비밀 밝혀, 판매점 '명당' 비결은?
- 빚갚지마! 정부지원 1억신청한 황 목적은?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9일 도매가격 기준 겨울 배추는 포기당 933원, 겨울 대파는 1kg당 1천 49원으로 각각 평년 대비 56.5%, 40% 하락한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한편 지난 해 김치 수입물량은 29만 1천 톤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농식품 수입물량이 늘어난 데다 이상기후와 소비부진까지 겹치면서 겨울철 노지채소 가격이 폭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노지채소인 양파와 마늘 가격도 심상치 않다. 1월 기준 양파와 마늘 재고물량이 각각 23만 톤과 5만 톤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본격적인 출하가 이뤄질 경우 가격 폭락으로 인한 생산 농가들의 피해가 상당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의회가 겨울 배추와 겨울 대파, 양파, 마늘 등 노지채소의 가격 폭락을 막을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산김치 애용이 농업인 살리는 길"

농협 전남본부·전남도의회·한국외식업중앙회 MOU

입력 : 2019. 08.27(화) 16:50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석기)는 27일 지역본부 8층 회의실에서 국산김치 이용 음식점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전남도의회 김성일 농수산위원장, 한국외식업중앙회 전남도지회 송기현 회장, 김석기 농협전남지역본부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주요 업무협약 내용으로는 △국산 김치 사용 음식점 확대 △적정가격 농협 김치 공급 △국산 김치 사용 음식점 애용운동 전개 등이다.

국민 1인당 김치 소비량은 1970년 400g에서 2017년 100g으로 감소했다. 국산김치 대비 4배 이상 가격이 낮은 수입김치 수입량은 2010년 19만t에서 2017년 27만t으로 급증하고 있다.

전남농협은 올해 4월부터 전남도의회·시군청과 협력해 국산김치 사용 음식점에 홍보용 스티커를 부착하고 '임직원 나부터 이용하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김석기 본부장은 "전국적으로 외식급식업소에서 수입김치를 사용하는 비율이 66%에 달하고 있어 국산김치가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다"면서 "국산김치 이용 음식점을 적극 애용하는 운동을 범국민적으로 펼쳐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수사례 요약서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05 군민생활현장 방문

분야 : 주민참여소통



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의회

제출자 전라남도 완도군의회 의회사무과 의사팀

목적

- 섬이 많은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관내소재 12개 읍·면을 전 의원이 직접 방문하여 군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의회상 정립
- 주민과의 대화 및 주요사업장 방문을 통해 민의를 적극 수용하는 의정활동 추구

추진현황

- 현황
  - 매년 상반기, 하반기 각 6개 읍면을 대상으로 추진(총 12개 읍면)
  - 읍·면정 보고를 통한 해당지역 현황 및 애로사항 파악
  - 주민과의 대화를 통한 건의사항 청취 및 대안마련
  - 주요 사업장 및 건의대상 사업장 방문을 통한 현장점검
  - 집행부 공무원 동행으로 책임감 있고 현실적인 대안 모색

추진성과

- 교통이 불편한 섬주민들의 생생한 민생 현장을 들여다 보고 주거환경 개선 등 다양한 민원 해결방안 도출
- 건의사항을 관리카드화 하여 지속적인 추진상황 점검

● 2018년: 건의사항 총 141건 접수

- 추진완료 17건, 추진중 97건, 추진불가 25건, 기타 5건

● 2019년: 건의사항 총 107건 접수(상반기 52건, 하반기 54건)

- 추진완료 9건, 35건, 추진불가 7건, 기타2건, 검토중 54건

● 관련사진









향후계획

● 건의사항 관리

- 정기적인(반기) 추진상황 점검 시행
- 부진한 추진건에 대한 사업추진 독려

● 군민생활현장방문 기간 연장 운영

- 현재 1일 2개 읍·면 방문 일정에서 1일 1개 읍면으로 확대운영
- 1시간 이내의 주민과의 대화 시간을 추가 확보하여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도모

※ 현재 조례개정을 통한 회의 총일수 80일에서 90일로 확대 예정

첨부 보도자료

BreakNews

완도군의회, 올 하반기 군민생활현장 방문 실시

이학수기자 lhs7684@hanmail.net



(완도=브레이크뉴스) 이학수 기자= 전남 완도군의회(의장 조인호)가 지난 제273회 임시회 기간 중 3일 간(9. 18.~9. 20.)의 일정으로 6개 읍 면(완도읍, 노화읍, 군외면, 청산면, 소안면, 보길면)에 대한 올 하반기 군민생활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이번 방문은 올 상반기 방문했던 6개 읍 면 이외의 지역으로 농·어번기를 감안하여 주민들이 경제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소규모 좌담회 형식으로 추진됐으며, 건의 및 애로사항 청취 등 주민과의 대화가 진행됐다.

아울러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 및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 방문이 이어졌다.

이번 방문 기간 중 읍 면 숙원사업 12건을 포함한 총 45건의 다양한 건의 사항을 접수했으며, 일부 안건의 경우 현장에서 즉답하여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했다.

또한 장기적인 계획과 예산이 수반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검토,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 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조인호 군의회 의장은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민심을 수렴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면서 "주민을 위해 존재하는 의회인 만큼 지역 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동료 의원들과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전남

기사입력시간 : 2019년 09월26일 [03:42:00]

우수사례 요약서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06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통한 협력적 거버넌스 실현

분야 : 주민참여소통



기관명 경상북도의회

제출자 경상북도의회

추진배경

● 현대사회의 복잡하고 심각한 사회문제들은 정부로서만 해결하기에 역부족임. 또한 지방분권화 될수록 지방정부 간 인적·물적 자원불균형이 확대되고 있음. 따라서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민간부문, 제3부문 등 지역사회 행동주체들 간 협력과 참여라는 동반자 관계를 통하여 지역의 공공문제를 해결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협력적 거버넌스 개념의 실천이 필요함.

● 지방의회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임. 지방의회의 정책결정이 먼저 이루어지고, 집행기관에 의한 정책집행이 이루어듯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의사를 최종 확정하는 의결기관이기 때문임. 즉, 지방의회는 공개토론과 합의로 숙의적 의사결정들이 이루어지는 주민광장(Agora)이어야 함.

●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에서도 향후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기관구성을 인구규모나 재정여건 등에 따라 주민이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통합형 내지 대립형 등으로 다양화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이에 우리나라 지방정부 기관구성은 기관분립형 정부구조를 기본으로 하되 지방의회가 중심이 되는 기관통합형을 상당부분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더욱이 자치분권화가 이루어질 경우 지방의회는 일반행정, 교육행정에 더하여 치안행정까지 이르는 통합적인 정책결정을 해나가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함.

● 현재 우리나라 지방의회는 강시장-약의회제 틀 안에서 그 위상이 단체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고 자치입법권 제약, 의회인사권 종속, 의회운영 자율성 부족 등으로 지역사회발전을 선도하기가 매우 어려움. 그럼에도 지방의회는 자치분권시대를 주도하고 지역사회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사회행동주체들과 상호협력할 수 있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실천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이를 위해 경북도의회는 지방의회 중심의 협력적 거버넌스 실현을 위한 기초단계로서 광역의회간 협력, 광역의회와 기초의회간 협력, 광역의회와 지역사회의 상생협력 등을 구축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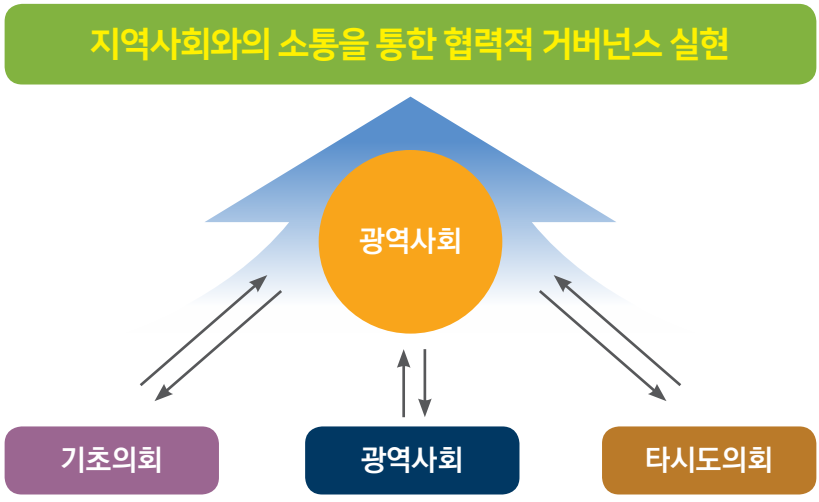
현황 및 문제점

● 각 지방의회는 상호간 지리적으로 인접하거나 특정목적에 따라 교류할 사안이 많지만 대부분 지방의회는 그의 지역에 한정하여 입법, 견제와 균형 등 고유의 전통적 기능에만 머무르고 있음. 가령, 광역의회와 기초의회는 동일지역에서 선출되었기 때문에 지역발전이라는 목표를 공유·협력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만 협력적 네트워크 관계보다는 갈등 혹은 대립하는 경우가 적지 않음.

● 또한 지역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보유한 지역대학으로 하여금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역의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도록 해야 하지만 개별적·부분적 참여에 그치고 있어 정부공공부문과 거의 연계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공론조사, 시민원탁회의 등 숙의기반 주민참여제도를 지역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지방의회 중심의 거버넌스적 네트워크로 포함시켜 지역대학들이 지역발전에 상호연계되도록 하여야 함. 이를 통해 지방의회가 지방자치의 중심적인 기관으로서 독자적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도록 할 필요성 높음.

추진내용



1 광역의회와 기초의회간 현장소통 추진

- 지역역량을 결집하고 현안해소를 위한 소통으로 전국 최초로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상호공동협력을 만드는 현장소통 추진
- 현장소통은 첫째, 도의회와 23개 시군의회간 공통현안인 자치분권관련 보고 및 토론을 실시하고 둘째, 각 시군의회마다 의견을 청취하는 형식의 현장소통으로 도의회와 시군의회간의 목표공유와 실천방안을 논의함으로써 지역발전의 토대 마련.
- 현장소통에서 건의된 사항들을 적극적인 검토와 협의 후 의원입법조례로 추진하거나 예산에 반영예정이며 향후 성과에 기반하여 확대해 나갈 방침임.

2 광역의회와 지역사회(지역대학)과의 협력체계 구축

-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중요한 것은 내생적 지역발전이기에 지역대학의 역할이 매우 큼. 따라서 자치분권시대에 지역의 내생적 발전의 핵심전략은 지방정부와 대학·연구기관기관 사이에 얼마나 네트워킹과 파트너십이 형성되어 있느냐 하는 것임.
- 이에 경북도의회는 전국 최초로 광역의회와 지역대학과의 기관간 자문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사회가 보유한 전문성을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도민의 다양한 욕구와 의정현안의 다양성에 적절히 대응하는 입법정책지원체계 확립

3 타 시·도의회와의 상생협력 추진

- 지리적으로 인접한 대구시의회와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바탕으로 의회차원의 상생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양 지역의 공동현안을 공동연구하여 해결책을 함께 찾아가는 시스템 마련 추진함.
- 영호남의 공동발전과 대한민국의 번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2015년 3월 경북도의회와 전남도의회간 상생발전 협약서를 체결하고 지금까지 매년 상생발전화합대회를 개최하여 지역갈등 해소와 지역현안에 대한 공동대응에 기여함.

추진성과

1 성과개요

- 지방자치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고 지방의회가 주도적으로 대내외적인 상생협력체계를 전국 최초로 구축하여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사업들을 창의적으로 펼쳐 나감.

● 글로벌 경쟁시대에 각 지방정부가 관할구역 경계를 넘어 적극적 상생협력을 모색하는 가운데 지방의회 차원의 소통을 위한 새로운 국면을 이끌어냄으로써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전환하여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시키는 계기를 만듦.

2 경북도내 23개 시군의회와의 현장소통 추진

● 각 시군의회와의 현장소통으로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법개정 동향 등에 동향보고와 자치분권을 위한 대응협력방안 논의함.

● 각 시군의회의 지역현안보고 및 소통과정에서 제기된 지역현안에 대해서는 경북도의회의 의정활동을 통해 정책적으로 지원함.

일자	대상	주요내용 및 성과
19.01.23	영양군의회	• 경북도의장 등 10명, 영양군 군수, 군의장 등 40여명 • 소방서신설 및 지방도 건설 등에 관한 지역현안 논의
		• 영양소방서 조기 준공예산 반영, • 지방도 911호선, 920호선 예산반영 등
19.02.26	영덕군의회	• 경북도의장 등 10명, 영덕군 군수, 군의장 등 40여명 • 동해 해양수산분야, 주왕산국립공원 탐방로등 5건 건의
		• 영덕 강구항 확대개발 2020년 예산반영
19.03.29	울릉군의회	• 경북도의장 등 10명, 울릉군의회 의장 등 7명 • 도민 여객운임지원, 울릉주민 해상이동권 등 6건 건의
		• 도서지역 여객선운임지원 조례안 본회의 의결 • 울릉공항 건설 2020년예산 국비반영
19.04.11	칠곡군의회	• 경북도의장 등 15명, 칠곡군의회 의장 등 20명 • 칠곡군의 시승격 현안 등 5건 정책건의
		• 국도33호선 대체우회도로 지선 국도지정
19.05.13	상주시의회	• 경북도의장 등 16명, 상주시의회의장 등 13명 • 국·도비지원사업 도비부담비율 상향 등 5건의 정책건의
		• 도비보조사업 보조율 2020년 예산에서 상향확정 등
19.07.13	경주시의회	• 경북도의장 등 20명, 경주시의회의장 등 15명 • 경주시 에너지과학연구단지 조성 등 10건의 정책건의
		• 폐철도 및 폐역사 활용사업 추진확정(관련 용역추진 중)


경북일보

광역-기초의회 '상생·협치 모델' 마련

경북도의회, 울릉군의회 방문
자문자치법 전부개정안 협력
울릉소방서 유치 등 의견교환


경북도의회 영양군서 '공감 톡톡! 현장 소통데이' 첫 행사

3 지역대학과의 전문성 협력

● 경북도의회는 전국 최초로 지역의 종합대학과 기관단위의 자문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의정활동에 반영함. 지방의회는 지역의 전문가들로부터 전문적 정보 등을 받을 수 있고 지역대학은 지방의회 권한을 간접적으로 공유가능함. 특히 서로의 공동목표가 있을 경우 정책결정과정에 활발한 참여가 가능함.

〈 지역대학과의 업무협력 주요 내용과 성과〉

- 일 자 : 2018년 10월 1일
- 대 상 : 경상북도의회와 경북대학교, 영남대학교, 안동대학교, 한동대학교
- 기 간 : 2018.10.1.~ 2020.9.30. (2년마다 자동연장)
- 내 용 : 전문가 풀을 이용한 의정활동자문, 상호공동연구 및 세미나개최 등
- 성 과 : MOU이후 협약대학 포함 모두 6개 대학 57명 교수들이 의정자문
  - 특별위원회 자문 인력풀 구성 4개 대학 43명 및 자문실적 2건
    ※ 지진대책특위의 수차례 지진유발원인 연찬회 등의 결과를 의정활동 반영 등
  - 의원연구단체별 전문가 인력풀 5개대학 14명 및 공동현지조사10건
  - 조례안 등 자문실적 6건 등


경북일보

지역 대학교와 맞손…자문체계 구축

경북도의회, 경북대·안동대·영남대·한동대와 업무협약 체결


경상매일신문

'전문 자문' 도의회 의정, 4개 대학이 돕는다

4 시 군·의회의장협의회 및 타 시·도의회와의 상생협력 추진

● 지방자치는 배타적인 자치권이 적용되어 행정작용과 생활권역은 불일치 현상이 발생함. 특히 국가균형발전을 기존의 하향식 접근이 아닌 상향식 접근으로 전환하게 되면, 기초단위 또는 광역단위의 자발적인 대응전략이 필요하게 되고, 이는 광역단위 또는 기초단위의 연계협력을 통해 효과를 확보할 수 있음.

① 경북도의회와 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간의 상생협력 추진

일자	주요 협력내용
18.11.29	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대응방침 논의 및 공동현안에 대한 협력 대응제안
18.12.14	경북도의회 주최 지방분권대토론회에 각 시군의회 참석으로 공감대



장경식 경북도의회장, 상생협력방안 모색



제263차 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
장경식 의장, 23개 시군의회와 협력 모색

- 향후 경북도의회와 시군의회가 지역의 현안문제를 서로 협력함으로써 지방의회가 먼저 주도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선례가 될 수 있음.

② 대구광역시의회와의 상생협력추진

- 경북과 대구는 역사적으로는 물론 현재도 한뿌리를 가지고 있으며 수도권으로 집중된 사회경제적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양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상생협력이 절실하다는 공감대 형성

일자	주요 협력내용
18.07.30	경북도의장단이 대구시의회 의장단을 방문하면서 공식교류 시작
19.01.30	구미국가5산업단지에서 반도체특화클러스 구미유치 공동촉구
19.02.11	양 시도의회 의원전원이 상생발전 위한 협력방안 논의와 협약 체결
19.03.21	대 중앙정부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의 조속 추진 촉구
19.07.11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 재검토방침 즉각 철회 요청하는 공동성명서
19.08.19	지방자치법개정을 위한 영남권정책토론회 공동참여



대구시·경북도의회 "정부는 '김해신공항 재검토 결정' 철회하라"



대구·경북 '한뿌리 상생 협력' 똘똘 뭉쳤다

③ 경북도의회와 전남도의회 상생협력 추진

- 2015년 경북도의회와 전남도의회의 상생발전교류협약을 체결한 후 매년 양 지역의 현안사업 해결과 거대 수도권에 대한 공동대응을 통해 동반성장을 모색함.

일자	주요 협력내용
18.11.01	전남 광양시에서 양 의회간 상생발전 화합대회 개최
19.04.17	경북 포항에서 상생발전 및 소통을 위한 교류행사 개최
19.11.01 (예정)	19.9.17 국무총리간담회 이어 전국시도의장협의회에서 전남, 충남이 공동참여하는 "상생혁신 철강생태계조성사업 예타선정통과"공동건의
19.07.18	전국의장협의회에서 강원의회와 동해안 재난지역 피해구제공동건의



대구일보 2019년 07월 19일 금요일 004면 정치

"지진특별법 조속히 제정해야"

지진·산불 복구지원 촉구안
강원도의회와 공동 제출



강북일보 2018년 11월 02일 금요일 005면 종합

영호남 한마음으로 지역 균형발전 '맞손'

경북도의회-전남도의회, 상생발전 화합대회 갖고 우의 다져
경북-전남 현안사업 해결-수도권 공동대응 등 방안 논의

향후계획

- 단체자치 방식의 지방자치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의회와 지역사회의 체계적인 소통은 선진국들과 달리 자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통해 지역의 역량을 축적할 수 있으려면 의도적인 소통을 통해서라도 체계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높음.

- 국가적 차원의 자치분권 정책기조 아래 지방정부간 특히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협력네트워크 체제가 구축·가동되어야 함. 광역의회와 기초의회가 각 지역에서 격리되어 존재하게 하지 말고 그 지역의 문제를 국가차원에서, 광역차원에서 통합적으로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야 함. 이를 통해 지방의회가 지역발전 창도자로서의 역할과 위상을 높여 나가야 함.

- 비록 어려운 여건이지만 시·군의회와 소통의 자리를 만들고 지역대학과의 의정자문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일, 그리고 타 시·도의회와 적극적인 대화와 소통을 추진하는 일 등은 지방의회가 지역사회 협력적 거버넌스를 실현할 수 있는 조정자(Enabler)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음. 특히 이와 같은 방식의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지방의회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전무하다시피한 상황에서 더욱 더 그 의미가 크다 할 것임

- 이를 위해 경북도의회는 첫째, 도내 23개 시·군의회와 공감대 형성을 통하여 직접적 현장소통을 더욱 확대하고, 도의회와 시·군의회의 만남을 정례화하고 필요할 경우 언제 어디서나 수시로 만날 수 있도록 제도화할 방침임. 이를 통해 지역현안 해결과 발전에 도의회와 시·군의회가 상호 협력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나갈 것임.

- 둘째, 지역대학과의 의정자문지원체계를 더욱 정교하게 하여 의정자문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의정자문은 앞으로 지역사회의 사회시민단체, 언론계, 교육계 등과의 직접적인 교류를 통해 의정역량을 높여나갈 방안을 강구할 것임.

- 셋째, 타 시·도의회와의 소통을 위해 현안이 있을 경우 수시로 만나 의견을 교환하고 필요할 경우 공동특별위원회 운영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함. 이를 통해 지역발전과 주민복리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지방의회가 함께 매진하여 나가고자 함.

지방의회 우수사례집

Part 6

기타

1. **서울특별시의회 책임성·청렴성 강화를 위한 자정노력**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
2. **계양구의회 견학 프로그램 운영** |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
3. **'주민과의 약속, 도의원 매니페스토' 달성을 위한 프로젝트** | 경기도 경기도의회 |
4. **UN SDGs 추진을 위한 2019 지속가능발전 제주 국제컨퍼런스 계최**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

우수사례 요약서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01 서울특별시의회 책임성·청렴성 강화를 위한 자정노력



장려상

분야 : 기타

기관명 서울특별시의회

제출자 서울특별시의회

추진배경

● 제9대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 출범 이후 서울특별시의회는 전국 지방의회 지방분권 추진의 선두주자로 2018년 2월 「지방의회법안」의 국회 제출을 비롯해 2019년 3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을 반영시키는 등의 성과를 이뤄냄.

●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부정적인 인식과 무관심들로 인해 지방의회 위상정립의 추진동력을 얻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지방의회 의원들의 비위와 일탈로 인해 더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왔음.

● 서울특별시의회는 자정노력을 통해 지방의회 스스로 인식개선의 계기를 마련하고, 시민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지지를 이끌어내고자 함.

현황 및 문제점

● 지방의회는 헌법상 제도적 보장을 받는 필수기관으로 1991년 지방자치 부활이후 지방화·분권화 시대에 발맞춰 단체장의 전횡과 독주를 견제·감시하고, 주민들의 복잡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는 등 지방행정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 해오고 있음.

- 특히 서울특별시의회는 천만 시민의 대표기관이자 입법기관, 그리고 통제·감시기관으로서 자치법규인 조례 제·개정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의 행복 증진과 복리 향상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음.

● 서울특별시의회는 청렴성과 투명성, 전문성 등의 제고를 위해 의회개혁특별위원회, 역량강화 T/F, 지방분권T/F를 구성·운영하는 등 지방의회 발전과 지방분권을 선도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해 왔음.

| 제8·9·10대 서울시의회 의회개혁 및 지방분권 추진 내역 |

대수	구분	위원 수	활동기간	주요활동내역
제8대	개혁과 발전 특별위원회	14명	2010.9.10. ~2012.9.9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정, 시의회 운영관련 및 각종 제도 개선 등
제9대	의회개혁 특별위원회	20명	2014.7.25. ~2015.1.24	조례 제·개정안 발의 18건, 관계기관 건의안 송부 7건, 의회운영 개선 제안 11건 과제 제안
	의회역량 강화T/F	12명	2016.7월 ~12월	의회정체성 확립 34건, 의정활동지원체계 구축 45건, 신뢰받는 의회상 정립 17건 등 총111건의 과제 제안
	지방분권T/F	14명	2016.10.31 ~2018.6.30	지방의회법 발의, 지방분권 7대 과제 제안 등
제10대	의회역량 강화T/F	13명	2018.8월 ~12월	4개 분야 총 23개 과제, 39개 제도개선 방안 제시
	지방분권T/F	17명	2018.8월 ~현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대응 등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는 시민들의 부정적인 인식 또는 무관심과 마주하고 있으며, 일부 지방의회 의원의 비위와 일탈로 인해 시민 신뢰가 크게 실추되는 등 자치분권과 지방의회 위상정립을 위한 사회적 지지와 추진동력을 이끌어 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역대 지방의회 임기 중 사법처리 된 지방의원 현황 |

구 분	제1기 ('91.4~'95.6.)	제2기 ('95.7~'98.6)	제3기 ('98.7~'02.6)	제4기 ('02.7~'06.6)	제5기 ('06.7~'10.6)	제6기 ('10.7~'14.6)	합 계
지방의원(명)	5,170	5,513	4,180	4,167	3,626	3,731	26,387
사법처리의원(명)	164	82	224	368	325	252	1,413
증감인원(명)	-	▲82	142	144	▲45	▲71	-
증감률(%)	-	▲50.0	173.2	64.3	▲12.2	▲22.0	

출처 : 행정자치통계연보(2016) 재구성

추진내용

● 서울특별시의회는 8차례의 실무회의를 거쳐 지난 3월 26일과 4월 26일, 두 차례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시민사회단체에 자정결의안을 전달하는 등 시민 신뢰 회복과 함께 시민사회단체와 상호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함.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단(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흥사단 사무총장,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한국YMCA 사무총장,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등)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단 및 각 정당 대표의원 참석





● 자정노력 결의안은 서울특별시의회 전체의원(110명)에 대한 설득과 동의의 절차를 거친 초당적 합의를 통해 작성 되었으며, 9개 분야 24개 추진과제에 대한 책임감 있는 실천과 그 의지를 대내외에 알림으로써 시민사회의 공감대 형성, 지방의회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이끌어 내는데 그 취지와 목적이 있음.

● 서울특별시의회는 자정노력 결의안의 공식화 및 진정성 확보를 위하여 전체의원(110명)의 공동발의로 「서울특별시의회 책임성·청렴성 강화를 위한 자정노력 결의안」을 의결(2019.4.30.)함.

● 전국 지방의회로의 확산을 위하여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안건으로 제출하였으며, 5월 30일 제4차 임시회에서 「전국시도의회 책임성·청렴성 강화를 위한 자정노력 결의안」을 의결함.

추진성과

● 자정노력 결의안과 관련하여 60여건의 언론보도가 이루어졌으며, 인터뷰와 취재요청이 쇄도하는 등 자정노력에 대한 높은 관심과 지지를 얻음.

| 서울특별시의회 자정노력 결의안 |

분 야	결의내용
정책지원	• 채용 시 의원의 친인척 배제(4촌 이내 금지, 8촌 이내 실명공개)
	• 채용절차 법제화를 통한 공정성 강화
	• 의원 사적업무 지원 금지
공무 국외연수 개선	• 사전 계획, 심의 결과, 방문결과보고서 등 홈페이지 공개
	• 예산사용내역 공개 및 성과보고회 개최 의무화
	• 시민단체 모니터링단 구성을 통한 사전심의·심사 강화, 국외연수 결과 평가
	• 국내연수(간담회, 시찰, 세미나 등) 계획 및 개최결과 공개
지방의원 겸직제한	• 영리목적의 겸직 제한(소속 상임위 관련 영리목적 겸직 금지)
	• 겸직신고 공개, 겸직신고 위반 및 미신고시 징계 규정 도입
영리행위 금지	• 주식 백지신탁, 이권개입 금지, 취업청탁·인사개입 금지 명문화
의정비제도 개선	• 의정비심의위원 등 의정비 결정에 시민단체 참여 강화
	• 의정비 지급기준 공개
지방의회 정보공개	• 출석률, 조례발의 건수 등 의정활동 홈페이지 공개
지방의회 시설개방	• 비회기 시 회의실 등 시민개방
윤리특별위원회 강화	• 의원 사전교육 강화(인권교육, 청렴교육, 젠더감수성교육 등 교육이수 의무 규정)
	• 윤리특별위원회 기능강화
	• 윤리특위 내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및 회의공개
의정활동 투명성 강화	• 의원 공약사항 이행계획 및 실적 공개
	• 지방의회 회의 인터넷 공개 및 상임위원회 시민 방청 허용
	• 예산심의 투명성 강화(선심성 예산 근절, 예산심의 계수조정 공개)
	• 의회권한 남용 금지(자료요구 온라인 시스템 도입, 법정 처리기한 준수)
	• 주민감시단 제도화 및 지방의회 공개감사 요청
	• 표결 실명제(안건별 찬반공개)
	• 출판기념회 개최 신고 의무화 및 수익보고(소득신고)

| 서울특별시의회 자정노력 결의안 관련 주요 보도내용 |



문화일보 2019년 04월 26일 금요일 014면 서울

서울시의회 "자정 노력 할 것" 결의서

겸직 제한 등 24개 과제 선정

서울특별시의회는 '서울특별시의회 자정노력 결의서'를 공개하고 의회의 권한을 내려놓고 자정 노력을 하겠다고 26일 밝혔다. 결의서는 총 9개 분야 24개 추진과제로 이뤄져 있으며, 약 3개월간의 내부 논의를 거쳐 최종 과제를 선정했다.

결의서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공무국외연수 개선 △지방의원 겸직 제한 △영리 행위 금지 △의정비 제도 개선 △지방의회 정보공개 △지방의회 시설개방 △윤리특별위원회 강화 △의정활동 투명성 강화 등 9개 분야를 중심으로 자정 노력을 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시의회는 결의서에 대표성을 구하고 내부 합의를 담기 위해 지난 15일 정당별 의원총회를 통해 결의서에 관한 시의원 110명 전원의 동의를 받았다.

서울시의회는 이번 결의서를 오는 5월 전국시도의회의장 협의회 회의에 공식 안건으로 제출해 전국 지방의회로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결의서 이행을 위해 서울시의회 자치법규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의 부정적인 인식과 무관심의 원인이 지방의회에 있다"며 "의회 스스로 혁신할 있는 자정 노력을 해야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의회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허후덕 기자

헤럴드경제 2019년 04월 26일 금요일 010면 사회

"친인척 채용·겸직 NO" 서울시의회 결의

시의회 '자정노력 결의서' 발표
공무국외연수 개선·공무활동 공개
9개 분야 24개 추진과제 담아
시민단체와 상호협력 적극 추진

서울특별시의회가 정책지원 전문인력 채용 시 친인척을 배제하는 등의 약속을 담은 '자정노력 결의서'를 26일 발표했다.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은 이 날 오전 시민사회단체와 함께하는 제2차 지방분권 간담회에 참석해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부정적인 인식과 무관심의 원인이 지방의회에 있다"며 "의회 스스로 혁신할 수 있는 자정노력을 해야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의회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결의서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공무국외연수 개선, 지방의원 겸직제한, 영리행위 금지, 의정비제도 개선, 지방의회 정보공개, 지방의회 시설개방, 윤리특별위원회 강화, 의정활동 투명성 강화 등 9개 분야의 24개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24개 과제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시 의원의 친인척 채용을 배제하고, 채용절차를 법제화하기로 했다. 국회와 달리 의원이 임의로 직원을 채용할 수 없도록 규정 했다.

또한 공무국외연수 시 사전심의를 강화하고, 심의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했다. 지방의원 겸직과 관련해 겸직신고 내용 공개, 겸직신고 위반 등에 대한 징계 규정을 도입하기로 했다. 영리행위로 인한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주식 백지신탁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취업청탁과 인사개입 금지를 명문 금지하기로 했다.

또한 지방의원의 의정비 지급기준과 급여, 의원별 출석률과 조례발의 건수, 의원 공약사항과 이행실적, 상임위원회 회의와 본회의 안건에 관계, 예산심의 계수조정 공개, 표결 실명제 등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의원 내 윤리심사를 시민에게 개방하고, 각종 회의의 시민 방청을 확대한다.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둬 법조전문가를 참여토록했다.

이 밖에 출자예산 근절을 위한 자정선언과 신고제 도입, 자료요구 온라인 시스템 도입 등 의원 '갑질' 금지 등을 담았다. 특히 현행 법령상 개회 신고 및 수익보고의 의무가 없는 출판기념회에 대해서도 개최신고 의무화 등의 함께 소득신고를 규정했다.

이번 과제는 약 3개월간의 내부논의를 거쳐 선정했다. 지난 1일 각 정당별 의원총회를 거쳐 서울시의회 전체 의원(110명)에게 동의를 얻은 뒤 결의서 작성을 마쳤다.

시의회는 이날 발표한 '자정노력 결의서'를 다음달 열리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의에 공식안건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자정결의 이행을 위해 서울시의회 자치법규 개정을 추진한다.

신원철 의장 등 시의회 의장단과 각 정당 시의원들은 이 날 간담회에서 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요청하고, '지방권력을 통해 많으로 시민권리를 찾겠다'고 강조했다.

한지숙 기자/jshan@heraldcorp.com

MBC

"해외연수 개선·겸직제한" 서울시의회 자정결의안 발표



서울시의회가 전체 의원 110명의 동의를 받아 해외연수 개선, 지방의원 겸직제한 등 24개 후속과제가 담긴 자정결의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해외연수와 관련해 사전심의를 강화하고 예산내역 공개와 성과보고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강화했습니다.

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할 때 친인척을 배제하고 지방의원 겸직과 관련해서도 겸직 신고 내용을 공개하지 않으면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신원철 의장은 "지방의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원인이 의회에 있기 ◆◆문에 자정노력이 필요하다"며 "발표 과제들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지수F 기자 (jisu@mbc.co.kr)

KBS

서울시의회 '자정선언'..."친인척 채용 금지·해외연수 심의 강화"



서울시의회가 오늘(26일) 친인척 채용 금지와 겸직 제한 등 6개 분야에 대한 자정 노력을 담은 '서울특별시의회 결의서'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서울 시의원들이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할 때 친인척 채용은 배제됩니다. 4촌 이내 친인척은 아예 금지되고 8촌 이내는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또 채용 절차를 법제화해 국회와 같이 의원이 임의로 직원을 채용할 수 없습니다. 의회 직원을 사적 업무에 지원하는 관행도 금지됩니다.

논란이 된 지방의회 해외연수와 관련해서는 사전 심의를 강화하고 심의 내용을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또 예산 내역을 공개하고 성과보고회 개최를 의무화하는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겸직신고 내용을 공개하고 겸직신고 위반 등에 대한 징계 규정을 도입합니다.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백지신탁 도입도 추진합니다.

의회는 이날 발표한 결의서를 바탕으로 서울시의회 자치법규를 개정하고, 다음 달 개최되는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공식안건으로 제출해 전국 지방의회로 확산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부정적인 인식과 무관심의 원인이 지방의회에 있기 때문에 의회 스스로 책임감 있는 자정노력이 필요하다"며, "자정노력을 통해 비로소 시민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지지를 얻을 수 있고, 지방분권 과제 해결과 지방의회 위상정립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

연합뉴스

서울시의회 '친인척 채용배제·겸직제한'..자정결의안

영리행위 금지…국외연수 사전심의 강화



(서울=연합뉴스) 김지현 기자 = 서울시의회가 겸직 제한, 영리 행위 금지, 친인척 채용 등 내용을 담은 자정 노력 결의서를 만들어 26일 발표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결의서는 9개 분야 24개 추진과제를 담았다. 지난 15일 정당별 의원총회를 열어 시의원 110명 전원에게 내용을 알리고 동의를 받았다.

시의회는 앞으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할 때 의원 친인척 채용을 배제하고 그 결과를 법제화해 의원이 임의로 채용할 수 없도록 했다. 4촌 이내는 금지하고 8촌 이내는 심사 공개해야 한다.

공무 국외연수는 사전 심의를 강화하고 심의 내용과 예산 내역을 공개하며 성과보고회를 의무화한다.

겸직은 신고 내용을 공개하고 신고 위반에 대한 징계 규정을 도입한다.

영리 행위로 인한 이해충돌 예방을 위해 주식 백지신탁 도입을 추진한다.

투명성도 강화한다. 의정비 지급기준 금액, 의원별 출석률·조례 발의 건수, 의원 공약사항 이행실적, 상임위원회 회의 및 본회의, 예산심의 계수조정 등을 공개하고 표결 실명제를 도입한다.

의원들의 윤리의식 강화를 위해 인권, 청렴, 젠더 감수성 교육 등을 의무화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둬 '셀프징계'를 방지하도록 했다.

현행 법령상 개회 신고와 수익 보고 의무가 없는 출판기념회에 대해서도 개최신고와 소득신고를 규정해 의원의 정치적 투명성을 제보한다.

시의회 신원철 의장은 이날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시민사회단체와 합체하는 제2차 지방분권 간담회'를 열고 결의서를 공개했다.

신 의장은 "지방의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무관심의 원인은 의회에 있으므로 의회 스스로 책임감 있는 자정 노력을 해야 한다"며 "노력해야 비로소 시민 공감대와 사회적 지지를 얻고 지방분권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jk@yna.co.kr

● 서울특별시의회는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하여 의원들의 공무국외활동 추진절차와 심사기준을 강화하였으며, 행정안전부는 서울특별시의회를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언급함.

| 서울특별시의회 공무국외활동 추진절차 변경 사항 |

(기존)	(변경 사항)
출장계획 수립(상임위원회)	
공무국외활동계획서 제출(출국 30일전)	사전 전문가 간담회 개최 계획 포함
의원 공무국외활동 심사(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회)	심사 사항에 사전 전문가 간담회 개최 계획의 내실성 포함
직원 국외출장 심사(인력개발과)	
예산 교부(의정담당관)	
의원 공무국외활동 실시(시찰방문단)	
공무국외활동보고서 제출(귀국 후 30일내)	사전 전문가 간담회 개최 결과보고서 포함
공무국외활동보고서 홈페이지 게시(의정담당관)	

●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방의회 최초로 국민권익위원회와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양 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지방의회의 청렴 수준을 제고하고 지역사회의 신뢰를 회복해 나간다는 의지를 확고히 함.





● 서울특별시의회는 자정노력 결의안을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하여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전국시도의회 책임성·청렴성 강화를 위한 자정노력 결의안」을 정식 안건으로 제출하여 채택되었고 226개 기초의회로의 파급을 위하여 기초의회의장협의회에도 자정노력 결의안 채택을 요청함.

향후계획

● 서울특별시의회는 자정노력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자치입법 등을 통한 제도개선에 힘쓰고 있음.

- 총 24개 자정노력 과제 중 11개 과제는 이미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나머지 과제에 대해서도 자치입법, 의장방침 등을 통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 자정노력 결의를 전국 226개 기초의회로 확산시키기 위하여 전국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와 상호 협조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임.

| 서울특별시의회 자정노력 이행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

분 야	결 의 내 용	제도개선 추진
정책지원	• 채용 시 의원의 친인척 배제(4촌 이내 금지, 8촌 이내 실명공개)	「지방자치법」 개정 후 조례 제·개정 추진 가능
	• 채용절차 법제화를 통한 공정성 강화	
	• 의원 사적업무 지원 금지	
공무 국외연수 개선	• 사전 계획, 심의 결과, 방문결과보고서 등 홈페이지 공개	시행 중
	• 예산사용내역 공개 및 성과보고회 개최 의무화	
	• 시민단체 모니터링단 구성을 통한 사전심의·심사 강화, 국외연수 결과 평가	
	• 국내연수(간담회, 시찰, 세미나 등) 계획 및 개최결과 공개	의장방침 추진
지방의원 겸직제한	• 영리목적의 겸직 제한(소속 상임위 관련 영리목적 겸직 금지)	「서울특별시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개정 추진
	• 겸직신고 공개, 겸직신고 위반 및 미신고시 징계 규정 도입	
영리행위 금지	• 주식 백지신탁, 이권개입 금지, 취업청탁·인사개입 금지 명문화	시행 중
의정비제도 개선	• 의정비심의위원 등 의정비 결정에 시민단체 참여 강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제10항에 따라 조례 제정 가능
	• 의정비 지급기준 공개	시행 중
지방의회 정보공개	• 출석률, 조례발의 건수 등 의정활동 홈페이지 공개	시행 중
지방의회 시설개방	• 비회기 시 회의실 등 시민개방	시행 중
윤리특별 위원회 강화	• 의원 사전교육 강화(인권교육, 청렴교육, 젠더감수성교육 등 교육이수 의무 규정)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개정 추진
	• 윤리특별위원회 기능강화	행안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참조하여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개정 추진
	• 윤리특위 내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및 회의공개	
의정활동 투명성 강화	• 의원 공약사항 이행계획 및 실적 공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공약실천을 위한 조례안」 추진
	• 지방의회 회의 인터넷 공개 및 상임위원회 시민 방청 허용	시행 중
	• 예산심의 투명성 강화(선심성 예산 근절, 예산심의 계수조정 공개)	시행 중
	• 의회권한 남용 금지(자료요구 온라인 시스템 도입, 법정 처리기한 준수)	시행 중
	• 주민감시단 제도화 및 지방의회 공개감사 요청	조례 제정 가능
	• 표결 실명제(안건별 찬반공개)	시행 중
	• 출판기념회 개최 신고 의무화 및 수익보고(소득신고)	의장방침 추진

우수사례 요약서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02 계양구의회 견학 프로그램 운영



분야 : 기타

기관명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제출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목적

-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제고
- 성숙한 시민의식 함양
- 열린 의회 구현 및 의정활동 홍보효과 제고

주요내용

- 지방의회에 대한 교육(영상시청) 및 견학
- 구의원과의 대화 및 체험프로그램(모의회의) 진행

추진성과

- 2019년 의회견학프로그램 20회 실시
  - 9개 학교 644명
- 조례 제정
  -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 2019.07.05.)
- 2019년 프로그램 만족도조사
  - 프로그램 만족도 : 만족 98.1%
  - 의회 관련 설명 이해도 : 이해 92.9%

향후계획

- 민주주의 체험 및 진로선택의 다양성을 제공하기 위한 체험학습 프로그램 내실화
  - 의사결정 과정 및 토론 등 참여체험 확대
  - 기초의회(의원) 기능과 역할에 대한 지식 전달 강화 등

※ 붙임: 시행계획서 및 결과보고

–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 –

2019년 계양구의회 체험 프로그램 운영

계양구민 및 관내 초 · 중 ·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의회 견학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와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 증진

1 추진목표

-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제고
- 성숙한 시민의식 함양
- 열린 의회 구현 및 의정활동 홍보효과 제고

2 추진방향

-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모의의회 체험**
  - 모의의회를 통한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 체험으로 성숙한 시민의식 함양의 계기 마련
- **의원과의 만남을 통한 의정활동 이해**
  - 의원과 학생들의 대화를 통한 의회의 기능과 역할의 중요성을 알고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도 증진

3 프로그램 개요

● **지방의회에 대한 교육**

- 초등학교 4학년 교과와 연계한 지방자치제도 소개
-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교육
- 계양구의회의 연혁 및 활동사례 소개

● **구의원과의 대화의 시간**

- 사전 질문을 확보하여 직업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
- 구의원에 대한 정보 제공
- 직업체험 및 의정활동 등에 대한 질문 및 답변

● **모의의회 체험**

- 본회의장에서 회의진행 체험

※ 의회에서 제공하는 모의의회 시나리오 샘플을 사전에 학교별 송부

● **설문조사 및 퀴즈**

- 계양구의회 견학 및 회의진행 관련 설문조사
- 방문학생을 대상으로 의정 관련 퀴즈

※ 방문학생 30%이내 대상으로 기념품 증정

4 추진개요

● 기　간 : 2019. 4. 9. ~ 11. 20.(약 7개월)

● 대　상 : 관내 초 · 중 · 고등학교 학생

● 장　소 : 계양구의회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실

● 소요시간 : 약 90분

● 세부일정

소요시간(총90분)	내 용	장 소
5분	• 오리엔테이션	6층 본회의장
10분	• 지방의회에 대한 교육(영상시청)	
15분	• 구의원과의 대화	
5분	• 의원과의 사진촬영	
35분	• 모의의회 진행	
10분	• 설문조사 및 퀴즈	
10분	• 상임위원회실 견학 및 해산	5층 상임위원회

● **주요내용**

- 지방의회에 대한 교육(동영상활용)
- 구의원과의 대화 및 질문(방문학교 선거구 의원)
- 체험(모의의회) 프로그램 진행

● 의회체험 시나리오 샘플 지원을 통하여 참여 학교 실정에 맞게 시나리오 준비 가능

5 추진경과

● 2019. 1. 8. 계양구의회 견학 프로그램 운영 계획 수립

● 2019. 2.25. 계양구의회 견학 프로그램 운영 안내 송부(각 학교)

● 2019. 4. 7. ~ 7.10. 계양구의회 견학 프로그램 운영

●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 2019.07.05.)

6 추진현황

| 연도별 프로그램 참가 현황 |

(단위: 학교/명)

년 도	총 계	2019년	2018년	2017년	비고
참가학교	28	9	10	9	
참가학생	1,976	644	677	655	

| 설문조사 응답자 현황 |

(단위: 명)

년 도	합계	응답자		비율(%)	비 고
		남자	여자		
2019년	574	280	294	89.1	
2018년	439	221	218	64.8	
2017년	387	208	179	59.1	

⇒ 비율(%) = 응답자(합계) / 참가학생 × 100

7 프로그램 참가현황

● **학년별 현황**

구분	합 계	방문일자				중학교	비 고
		소계	4학년	5학년	혼합		
인원	644	637	470	124	43	7	

● **학교별 현황**

학 교 명	학 년	학생수	방문일자	참가의원	비 고
9개 학교		644명	20회		
귤현초등학교	4학년 3반	26	4월 9일(화)	윤 환	계양3동
	4학년 2반	25	4월10일(수)	민윤홍	
	4학년 1반	24	4월11일(목)	김숙의	
	4학년 4반	26	4월12일(금)	김숙의	
작동초등학교	4학년1,2반	42	4월24일(수)	이병학	작전서운동
	4학년3,4반	42	4월25일(목)	박해진	
북인천중학교	동 아 리	7	5월14일(화)	조성환	효성2동
지역아동센터	이 지	15	5월27일(월)		
	임학·새봄	28	5월29일(수)		
계양초등학교	4학년1,2반	46	5월30일(목)	김숙의	계양1동
	4학년 3반	23	5월31일(금)	김숙의	
병방초등학교	4학년1,2반	48	6월24일(월)	김유순	계양2동
	4학년3,4반	47	6월25일(화)	윤 환	
계산초등학교	4학년1,2반	39	6월28일(금)	조양희	계산2동
성지초등학교	4학년	28	7월 2일(화)	이병학	
	4학년	27	7월 4일(목)	박해진	작전2동
	4학년	27	7월 5일(금)	신정숙	
효성남초등학교	5학년1,2반	41	7월 8일(월)	이충호	효성1동
	5학년3,4반	42	7월 9일(화)	조성환	
	5학년5,6반	41	7월10일(수)	이충호	

8 설문조사 결과

● **설문지명** : 계양구의회 체험 프로그램 관련 설문조사

● **설문지 조사내용**

- 방 법 : 설문지를 활용한 오프라인 조사
- 내 용 : 프로그램 만족도 및 효과, 개선요청 사항 등
- 결과활용 : 2020년 체험프로그램 운영 시 참고자료로 활용
- 조사문항 : 5문항(객관식 4문항, 주관식 1문항)



● 2019년 참여자 설문조사

| 2019년도 설문조사 총괄 [참여자 644명중 / 574명 설문참여(89.1%)] |

구분	성별		의회방문		교육담당자친절도					공무원 의회설명 만족도					프로그램 만족도				
만족도	남	여	있다	없다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불만	매우쉬움	쉬움	보통	어려움	매우어려움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불만
합계	280	294	20	554	408	118	44	2	2	133	235	165	37	4	338	154	71	7	4
백분율	49	51	3.5	96.5	71.1	20.6	7.7	0.3	0.3	23.3	40.9	28.7	6.4	0.7	58.9	26.8	12.4	1.2	0.7

| 학교별 설문조사 결과 |

구 분	학년	성별		의회방문		교육담당자친절도					공무원 의회설명 만족도					프로그램 만족도				
만족도		남	여	있다	없다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불만	매우쉬움	쉬움	보통	어려움	매우어려움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불만
합 계	574	280	294	20	554	408	118	44	2	2	133	235	165	37	4	338	154	71	7	4
귤현초등학교	4학년	41	55	0	96	68	18	9	1	0	19	39	29	9	0	57	30	8	1	0
작동초등학교	4학년	33	34	4	63	43	19	5	0	0	19	26	18	4	0	37	18	12	0	0
지역아동센터		4	4	2	6	4	3	1	0	0	3	2	2	1	0	5	2	1	0	0
계양초등학교	4학년	33	33	4	62	40	10	14	0	2	16	15	21	11	3	33	15	11	3	4
병방초등학교	4학년	51	45	3	93	64	25	7	0	0	25	38	27	6	0	54	23	18	1	0
계산초등학교	4학년	24	15	1	38	26	12	1	0	0	6	19	13	1	0	21	18	0	0	0
성지초등학교	4학년	36	46	0	82	67	12	2	1	0	16	39	23	4	0	58	15	8	1	0
효성남초등학교	5학년	58	62	6	114	96	19	5	0	0	29	57	32	1	1	73	33	13	1	0

9 향후 계획

● **2020년 구 의회 견학 및 의회교실 운영 추진계획 수립 : 2020년 2월 중**

- 회당 견학 참여학생 수를 조절하여 최대한 많은 학생이 모의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

우수사례 요약서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03 (전국최초) '주민과의 약속, 도의원 매니페스토' 달성을 위한 프로젝트

장려상

분야 : 기타

기관명 경기도의회

제출자 경기도의회사무처 도민권익담당관

추진배경

- 무절제한 정책공약 미해결 문제 해소
- 도의원들의 정책공약 실천과정을 함께 공유
- 소통을 통한 정책의 구체적인 목표와 이행 상황, 재원 조달 방법 등 모색
-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공약 이행상황 점검

현황 및 문제점

- 도의원들의 지역주민과의 정책공약 실현을 위한 실천과정 및 체계적인 목표와 이행상황 점검 등의 부재
- 도의원 매니페스토 이행실태 점검·평가 시스템 구축 필요

추진경과

- 정책공약 실천을 통해 도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전담부서 설치
- 도의원 4,194개 정책공약을 관리하기 위한 D/B 구축
  - 도민과의 정책공약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제안목록 D/B화
- 정책실현을 위한 '소통의 장'마련(도, 도교육청, 31개 전 시군 대상)
  - 도·교육청 소관 ☞ 정책공약사항을 제안
  - 시·군 소관 ☞ 시·군과의 간담회를 통한 정책공약 논의

추진성과

● 도의원 정책공약 DB구축, 정책공약집 발간, 정책간담회실시

기 존		개 선
정책공약 D/B, 체계화 無		• 11개 대분류, 83개 중분류, 4,194개 세부사업분류 D/B화
정책공약 실현 시·군간담회 無	⇒	• 도의회·시군간담회 29, 1,282건 논의(협의)
정책공약 실현 도의회 집행부 소통의 장 無		• 도의회·도청 간담회 3회 • 도의회·교육청 간담회 3회 예산관련등 정책제안

향후계획

● 지속적인 정책간담회 추진 및 정책백서 제작

(전국최초) '주민과의 약속. 도의원 매니페스토' 달성 프로젝트

추진배경

● 무절제한 정책공약 미해결 문제 해소

● 도의원들의 정책공약 실천과정을 함께 공유

● 소통을 통한 정책의 구체적인 목표와 이행 상황, 재원 조달 방법 등 모색

●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공약 이행상황 점검

추진방향

● **무절제한 정책공약 미해결 문제 해소**

☞ 정책공약의 법적근거, 집행가능성, 예산 확보 등 정책공약 실현을 위한 종합적 분석을 통해 정책 분류

● 종합 분석된 DB를 바탕으로 정책공약실현 방향을 정책제안과 시·군정책간담회, Two-Track으로 추진

1. 해당 의원과의 피드백 및 관계기관(도, 교육청 등)과의 협조 체계 구축
   - 도·교육청 소관 정책공약 ☞ 정책제안을 통한 실행강화
2.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은 시·군과의 소통을 통한 이행능력 확보
   - 지역공약 ☞ 도의회-시·군 정책간담회를 통해 이행방안 협의

● 도민과의 약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도의원 정책공약을 체계적으로 관리

추진경과 및 성과

1 정책공약 관리

무절제한 정책공약을 관리하여 미해결 문제를 해결하고 공약제안 의원들과의 피드백 및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정책제안을 통한 공약 실현



* 도의원 정책공약을 기반으로 도정 및 도교육행정을 연계한 정책제안

● 정책공약관리TF팀 구성('18. 7. 4.)
● 도의원 정책공약 DB 구축 및 책자 발간 ('18. 7. 16.)
● 도의회-인수위 간담회 및 정책공약 책자 전달 ('18. 7. 18.)

● 도의원 정책공약실현을 위한 전담 조직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선거관리의원회 질의 ('18. 8. 14.)

● 비교섭단체의원 간담회 개최 ('18. 9. 12.)

● 정책공약 관련 정책제안 43개 발굴 및 통보 ('18. 9. 12.)

- **정책제안 : 43건(도청 33, 도교육청 10)**

※ 도의원 의정과 도정 및 도 교육행정을 연계 정책제안

● 도의회-도교육청 정책간담회 ('18. 9. 17.)

● 경기도의회 조직개편[도민권익담당관 신설- 전담팀 구성(2팀 11명)] ('18. 10. 1.)

- **권익행정팀(8명), 교육협력팀(3명)**

● 도의회-도청 정책간담회 ('18. 10. 4.)

● 2019년 본예산 정책사업 제안 ('18. 10. 25.)

● 2019년 본예산 정책사업 제안 반영 분석 ('19. 1.)

- **428건, 8조 893억원**

● 2019년 1회 추경 정책제안 ([도청] '19. 3. 25., [도교육청] 3. 26.)

- **정책제안 : 20건(도청 13건, 고교육청 7건)**

※ 도의원 정책공약을 기반, 최근이슈, 지역수요를 반영하여 추경반영 정책 제안

● 2020년 본예산 정책제안([도청] '19. 9. 23., [도교육청] 10. 8.)

- **정책제안 : 39건(도청 29, 도교육청 10)**

2 도의회-시·군 정책간담회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은 시 · 군과의 소통의 장인 도의회-시 · 군 정책간담회를 통해 이행방안 협의

도의회-시·군 간담회 추진 체계

정책제안 (지역주민 사항)	⇒	정책 제안 검토	⇒	관련부서 의견 취합	⇒	정책 간담회 실시	⇒	결과보고	⇒	정책 관리
경기도의원 → 의회		시·군 관련부서 道관련부서 교육청관련 부서		의회		경기도의원 ·도·교육청·시군 간담회를 통한 관련 제안 논의		정책 간담회 실시결과 이행가능 여부 등 보고		해당 정책제안에 대한 관리

* 도의회·시·군·간 정책간담회를 통해 의정과 도정 및 시·군 정책공약에 대한 연결고리 마련

* '도민의 삶에 힘이 되는' 경기도의회를 위해 의원이 약속한 정책공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실현하기 위해 노력

● 간담회 개최 현황(2019. 10월말 기준)

• **29개 시·군 / 121명 의원 / 1,282건 논의**

구 분	'19년 개최	'18년 개최
소 계	24개 시·군	5개 시·군
대상 시군	• 시흥시(01.30. / *4명) • 하남시(02.20. / *2명) • 양평군(02.27. / *3명) • 이천시(03.15. / *3명) • 여주시(03.15. / *2명) • 구리시(03.18. / *2명) • 광주시(03.19. / *4명) • 동두천(04.10. / *2명) • 양주시(04.22. / *2명) • 의왕시(04.24. / *2명) • 과천시(04.24. / *1명) • 평택시(05.13. / *6명) • 군포시(05.31. / *4명) • 안양시(05.31. / *6명) • 오산시(06.05. / *2명) • 안산시(06.05. / *9명) • 용인시(06.28. / *8명) • 광명시(07.19. / *4명) • 고양시(08.22. /*11명) • 파주시(08.22. / *5명) • 성남시(10.10. / *9명) • 부천시(10.23. / *9명) • 의정부(10.24. / *4명) • 남양주(10.24. / *7명)	• 안성시(10.17. / *2명) • 가평군(12.07. / *1명) • 김포시(12.10. / *4명) • 포천시(12.20. / *2명) • 연천군(12.20. / *1명)

* 의원수

※ 재정여건이 어려운 시군(안성시 : '10. 10월) 부터 우선 방문, 31개 시군과 정책간담회 중 29개 시·군과의 정책간담회를 실시함.

·시·군 건의사항 : 29개 시·군 105건

※ (주요 건의사항) ① 도비보조사업(복지분야) 보조율 상향, ② 도심내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환경개선사업 확대, ③ 도내 낙후지역 에너지 복지사업(도시가스 배관망, LPG소형저장탱크,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지원 확대

추진성과 세부내역

1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 정책공약 DB : 4,194

1. 지역별 의원별 정책공약 정리(4,194건) – 도청 1,213, 교육청 496, 시·군 2,485

2. 경기도의원 정책공약 DB구축 및 분석 – 분야별 : 4,194건, 의원1인당 : 29.5건

구분	계	복지	교육	교통	문화	경제	도시 주택	건설	일반 행정	환경	재난 안전	농정
분야별	4,194	748	704	507	448	416	325	289	255	245	137	120
1인당	29.6	5.3	5.0	3.6	3.2	2.9	2.3	2.0	1.8	1.7	1.0	0.8

계		경제	일반행정	재난안전	문화	농정	복지	건설	교통	도시주택	환경	교육
계	4,194	416	255	137	448	120	748	289	507	325	245	704
	rank	5	8	10	4	11	1	7	3	6	9	2
	(%)	9.9	6.1	3.3	10.7	2.9	17.8	6.9	12.1	7.7	5.8	16.8
	1인당 29.5	2.9	1.8	1.0	3.2	0.8	5.3	2.0	3.6	2.3	1.7	5.0
당선직	3,983	363	228	137	443	115	685	285	498	319	222	688
1인당	30.9	2.8	1.8	1.1	3.4	0.9	5.3	2.2	3.9	2.5	1.7	5.3
(경기 남부)	2,729 (65.1%)	258	142	107	287	75	449	214	315	232	149	501
(경기 북부)	1,254 (29.9 %)	105	86	30	156	40	236	71	183	87	73	187
안성		7	1	1	8	0	3	9	0	8	3	1
가평		5	8	1	14	8	10	3	6	1	1	5
김포		4	1	1	8	9	18	6	12	1	6	24
포천		2	7	4	8	4	4	0	7	2	10	8
연천		2	3	0	5	4	2	1	1	2	1	5
시흥		24	11	7	34	7	27	24	54	30	14	34
하남		8	3	7	8	3	14	1	7	3	5	21
양평		7	12	2	18	14	14	41	7	11	2	8
이천		5	0	1	3	2	1	1	1	0	0	2
여주		4	5	2	7	5	14	1	0	0	1	11
구리		9	1	0	4	0	9	2	12	4	2	4
광주		4	8	2	14	1	25	20	17	9	3	29
동두천		10	4	0	4	1	5	1	6	3	7	8
양주		4	2	2	10	1	24	0	3	8	10	17
의왕		4	7	0	6	0	7	4	11	2	2	10
과천		5	3	0	2	3	2	2	5	0	5	4
화성		3	8	3	13	2	16	5	10	3	8	27
평택		17	3	4	8	4	25	16	10	12	23	16
군포		11	5	3	15	1	23	5	6	6	10	16
안양		9	10	7	12	2	32	11	21	20	8	42
오산		3	1	3	5	2	10	6	7	2	2	8
안산		25	12	5	14	5	45	5	25	12	7	39

계	경제	일반행정	재난안전	문화	농정	복지	건설	교통	도시주택	환경	교육
남양주	14	8	7	36	5	55	35	44	22	10	40
용인	7	3	10	11	3	28	7	28	13	15	36
고양	33	16	5	31	11	51	17	57	25	24	45
파주	18	31	6	28	5	39	8	30	11	7	40
의정부	8	6	5	16	1	37	4	17	9	1	15
수원	31	19	10	24	2	52	15	31	32	14	72
성남	43	19	24	34	8	28	18	19	35	6	47
부천	28	6	12	32	2	54	12	32	28	13	41
광명	9	5	3	11	0	11	5	12	5	2	13
비례직 (%) 211 (5.0)	53	27	0	5	5	63	4	9	6	23	16
비례(민주)	11	7	0	2	0	13	4	2	1	1	2
비례(한국)	27	16	0	2	3	44	0	6	3	12	13
비례(미래)	4	4	0	1	2	3	0	0	1	0	1
비례(정의)	11	0	0	0	0	3	0	1	1	10	0

2 2019년 본예산 편성관련 정책제안 43건(도청 33건, 도교육청 10건)

위원회명	정책제안명	정책 건수	의원수
기획위 (2건)	•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환경 조성을 위한 CCTV 확대 설치	30건	28명
	•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29건	13명
경제위 (4건)	•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확대	73건	33명
	•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전통시장 활성화	56건	34명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단지 지원 확대	38건	24명
	• 고용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	31건	22명
행정위 (3건)	• 안전골목길 조성	53건	38명
	• 소방관서 증설	43건	24명
	• 재난안전사고 대응교육 확대	11건	10명
문체위 (3건)	• 활력있는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문화특화지역 조성	60건	41명
	• 주민밀착형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1도민1스포츠 실현	49건	38명
	• 경기북부 평화, 생태 등 테마관광지 개발	42건	28명

위원회명	정책제안명	정책 건수	의원수
문체위 (3건)	•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13건	12명
	• 도민 거주지 중심의 친환경 먹거리 매장 설립 및 운영 지원	9건	9명
	•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지원센터 설립	5건	5명
복지위 (5건)	• 청년의 내일을 응원하는 청년 일자리 지원 확대	76건	45명
	• 노인 일자리 확대	36건	31명
	• 공공의료서비스 강화를 통한 취약계층 건강관리체계 구축	36건	30명
	• 치매안심센터 운영 확대 및 지원	27건	25명
	• 장애인 일자리 확대	19건	17명
건설위 (5건)	• 도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및 보행환경 개선	215건	76명
	• 빠르고 편리한 철도서비스 확대	148건	76명
	•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환경 개선	108건	62명
	• 안전하고 편안한 대중교통체계 구축	59건	49명
	•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하천 유지관리	26건	19명
도시위 (4건)	• 도민 휴식공간 확충을 위한 도시공원 조성	121건	62명
	•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통한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	87건	47명
	• 친환경에너지 생산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42건	29명
	• 도시환경디자인을 통한 범죄 사전예방	8건	8명
여가교위 (4건)	• 공보육 강화를 통한 보육환경 개선	134건	76명
	• 생활밀착형 문화공간으로써 도서관 조성	49건	38명
	• 여성의 경제활동 강화를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	36건	28명
	• 청소년의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 조성	34건	24명
제1교육위 (5건)	• 교육공동체 구축을 통한 혁신교육지구 확대	25건	22명
	• 차별 없는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무상교육 실현	25건	19명
	•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학교환경을 위한 공기정화장치 설치	50건	49명
	•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만들기	17건	15명
	• 수요자 중심의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46건	29명
제2교육위 (5건)	• 학생주도형 미래교실 실현을 위한 ICT활용교육 확대	5건	5명
	•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무상교복 실시	50건	49명
	•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43건	41명
	• 쾌적한 체육활동 공간 제공을 위한 학교실내체육관 건립	33건	26명
	• 수요자가 만족하는 질 높고 안전한 방과후돌봄 확대 운영	35건	31명

3 2019년 본예산 편성관

| 분야별 |

rank (건수기준)	분야	건수	비중	예산액(억원)	비중
계		428	100	8,0893	100
1	복지	167	39.0	33,076	40.9
2	교육	80	18.7	36,834	45.5
3	경제	68	15.9	5,401	6.7
4	환경	39	9.1	1,631	2.0
5	일반행정	23	5.4	629	0.8
6	농정	18	4.2	1,555	1.9
7	재난안전	16	3.7	675	0.8
8	교통	14	3.3	951	1.2
9	문화	3	0.7	141	0.2

| 기관별 |

rank	기관	건수	비중	예산액(억원)	비중
계		428	100	8,0893	100
1	도	353	82.5	44,193	54.6
2	도교육청	75	17.5	36,701	45.4

4 2020년 본예산 편성관련 정책제안 39건(도청 29건, 교육청 10건)

도 청	정책제안명 (29건)	세부사업 (50개)	비 고
경제실 (5)	소상공인의 준비된 창업 및 경영 안정화 지원	① 브랜드 디자인 지원 (정책공약)	의원12명 정책제안
		② 취약 소상공인 자금 지원 (정책공약)	
	중장년 맞춤형 일자리 창출	③ 4060 재취업 지원사업 (정책공약)	의원4명 정책제안
	창업 생태계 조성	④ 청년 프런티어 창업 지원 (김포시, 지역현안)	
		⑤ 경기도형 창업 플랫폼 구축·운영 (정책공약)	의원5명 정책제안
		⑥ 스타트업 랩 운영지원 (정책공약)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	⑦ 경기 YES 산단 육성 (정책공약)	의원24명 정책제안
		⑧ 지방 강소기업육성 프로젝트 (정책공약)	의원2명 정책제안
		⑨ 중소기업 판로 지원 (정책공약)	의원4명 정책제안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⑩ (신규) 소규모 사업 개선 (정책공약)	의원21명 정책제안
		구리 전통시장 고객쉼터 설치 지원 (지역현안)	
		안양 전통시장 노후시설 개선 도비 지원 (지역현안)	
		⑪ (신규) 주차시설 지원 (정책공약)	의원21명 정책제안
		가평 잣고을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지역현안)	
		연천 전곡재래시장 주차환경 개선 (지역현안)	
		이천 장호원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지역현안)	
건설국 (3)	도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① 시군 도로 확·포장 지원 (정책공약/지역현안)	의원42명 정책제안
		(오산) 갈천~가수 국지도82호선 도로 확장(보상비)	
		(포천) 하송우~마산 구간 도로 확포장(보상비, 공사비)	
		(포천) 신평~심곡 구간 도로 확·포장(재설계 용역비)	
		(여주) 천송~신남 구간 도로 확포장(재설계용역비)	
		(연천) 파주 적성~연천 백학 구간, 지방도 371호선 확·포장(공사비)	
		(연천) 동두천 상패~연천 청산구간 3번 국도 확·포장(보상비)	
	보행자 안전 및 교통약자를 위한 도로환경 개선	② 지방도 보도설치사업 (정책공약)	의원16명 정책제안
		③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정책공약)	의원13명 정책제안
	자연친화적 하천조성 및 유지관리	④ 지방하천정비사업 (정책공약)	의원20명 정책제안
		군포 반월천 정비사업(보상비, 공사비)지원 (지역현안)	
		⑤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정비사업(정책공약)	의원3명 정책제안
		오산 한강~평택호 자전거 도로 개설 (시군건의)	

도 청	정책제안명 (29건)	세부사업 (50개)	비 고
교통국 (2)	도심내 주차난 해소 및 교통편의 증진	① 주차환경개선사업 확대 (정책공약)	의원61명 정책제안
		연천 전곡재래시장 주차장 조성 (지역현안)	
		양주 저류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지역현안)	
		② 광역교통특별회계 사업 지원	
		군포 송정~안산 반월역 구간(중로2-46호선, 중로1-70호선) 도로개설 (시군경계구간) (시군건의)	
		여주 처리~우만 구간 지방도345호선 도로 확·포장 (국도37호선 연계) (시군건의)	
		양주 환승주차장 건립 지원 (시군건의)	
	안전하고 편안한 대중교통체계구축	③ 경기도형 버스노선 확충 (정책공약)	의원31명 정책제안
		대용량 버스(2층버스) 도입 지원, 교통소외지역 맞춤형 버스	
		④ 교통정보시스템 노후 장비교체	
		과천 교통정보수집시스템 개선 지원 (시군건의)	
		⑤ 택시쉼터 건립사업 지원	
		하남시 택시쉼터 건립사업 지원 (시군건의)	
문 화 체 육 관광국 (3)	도민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를 위한 기반조성	① 문화특화지역조성 (정책공약)	의원41명 정책제안
		② 거리로 나온 예술 (정책공약)	의원41명 정책제안
		③ 찾아가는 문화활동 (정책공약)	의원41명 정책제안
		④ 경기문화사랑방 조성 (정책공약)	의원41명 정책제안
		⑤ 경기도 1인 크리에이터 사업 (최근이슈)	
	생활체육시설 확충 통한 도민 건강권 보장	⑥ 체육진흥시설 지원 (정책공약)	의원38명 정책제안
	테마 관광지 개발 및 관광 활성화 지원 확대	⑦ 관광지 개발 (정책공약)	의원27명 정책제안
		⑧ 생태테마 관광자원화 사업 (정책공약)	
안 전 관리실 (1)	범죄 및 생활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골목길 조성	① 경기도 안전골목길 조성 (정책공약)	의원53명 정책제안
		② 특수형광물질 도포사업 (정책공약)	
도 시 주택실 (1)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환경설계 지원	①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 (정책공약)	의원8명 정책제안
보 건 건강국 (3)	건강한 삶을 위한 정신보건의료 체계 강화	① (신규) 고위험 정신질환자 관리 체계 구축 (최근이슈)	
		②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시군건의)	안양시
	출산율 제고를 위한 공공산후조리 지원 확대	③ (신규) 경기도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 지원 (최근이슈)	
	치매관리를 위한 인프라 확충	④ 치매 안심센터 확충 (정책공약)	의원53명 정책제안

도 청	정책제안명 (29건)	세부사업 (50개)	비 고
복지국 (2)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확대	①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정책공약)	의원31명 정책제안
	취약계층 미세먼지 예방시설 확충	② (신규) 경로당 공기청정기 지원 (정책공약)	의원20명 정책제안
여 성 가족국 (2)	맞춤형 보육실시로 경기도 보육환경 개선	① (신규) 사립어린이집 환경개선비 도비 지원 (정책공약)	
		② 아동복지시설 운영 도비 지원 (시군건의)	평택시 안양시
		③ 경기/공동육아나눔터 운영지원 (정책공약)	의원3명 정책제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④ 새일센터 지정 운영 확대 (최근이슈)	
소 통 협치국 (1)	사회적 경제기업(마을기업, 협동조합)을 통한 공공일자리 확대	①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활성화 (지역현안)	여주시등
평 생 교육국 (1)	도민의 지식정보 접근성 확대	① 아파트 작은도서관 시설개선 지원 확대 (정책공약)	의원21명 정책제안
환경국 (2)	에너지 낙후지역에 대한 복지 확대	① 에너지 복지사업* 지원 확대 * 도시가스 배관망, LPG소형저장탱크,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도시가스 공급확대 (지역현안)	여주시
	대기질 개선을 위한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	②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 도비 지원 (시군건의)	평택시
농 정 해양국 (1)	농촌융복화산업(6차산업) 지원으로 고부가가치 실현 및 지역 경쟁력 강화	① 로컬푸드 활성화 사업 (정책공약)	의원11명 정책제안
		② 전통식품 기반조성 (시군건의)	양평군
축산 산림국 (1)	도민 휴식공간 확대 지원	① 반려견 놀이터 조성 지원 확대 (정책공약)	의원12명 정책제안
수자원 본 부 (1)	도민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한 노후시설 개선	① 녹물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 (정책공약)	의원3명 정책제안

교육청	정책제안명 (10건)	세부사업 (14개)	비 고
교육정책국	혁신교육지구 확대 (정책공약)	① 혁신교육지구 확대	의원16명 정책제안
	고교 무상급식 확대 (정책공약)	② 고교 무상급식 확대	의원16명 정책제안
교육협력국	고교 무상교복 실시 (정책공약)	③ 고교 무상교복 실시	의원22명 정책제안
행정국	학교실내체육관 건립 추진 (정책공약)	④ 학교실내체육관 건립 추진	의원18명 정책제안
	소방시설개선 (정책공약/현안)	⑤ 소방시설개선 (신설)	의원1명 정책제안
교육과정국	위기학생지원 확대 (정책공약/현안)	⑥ 위기학생지원 확대 (신설)	의원6명 정책제안
	체험학습 지원 확대 (정책공약/현안)	⑦ 체험학습 지원 확대 (신설)	의원2명 정책제안
미래교육국	방과후돌봄 확대 운영 (정책공약)	⑧ 방과후돌봄 확대 운영	의원15명 정책제안
행정국·교육과정국·기획조정실	미래형 학교 공간 조성 확대 (정책공약)	⑨ 학교공간혁신	의원4명 정책제안 의원4명 정책제안
		⑩ 미래기술 적용개선, 메이커스페이스, 미래교실 구축	
행정국·교육협력국·교육정책국·기획조정실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 확대 (정책공약)	⑪ 시설환경개선사업	의원28명 정책제안
		⑫ 학교대응지원사업	
		⑬ 학교급식지원사업	
		⑭ 소규모교육환경개선	

5 도의회·시·군 정책간담회 : 29개 시·군 / 1,282건 논의

	진행 상황	시·군	일시	의원수			정책공약수*			논의안건수			
					지역	비례		개별	중복		도	교	시군
계		29		121	112	9	3,583	3,484	99	1,282	257	249	776
1	완료	안성	18.10.17.	2	2	–	41	41	–	41	6	1	34
2	완료	가평	18.12. 7.	1	1	–	62	61	1	61	9	2	50
3	완료	김포	18.12.10.	4	4	–	90	84	6	84	16	17	51
4	완료	포천	18.12.20.	2	2	–	56	56	–	56	8	6	42
5	완료	연천	18.12.20.	1	1	–	26	24	2	24	5	3	16
6	완료	시흥	19. 1.30.	4	4	–	266	262	4	44	11	13	20
7	완료	하남	19. 2.20.	2	2	–	80	79	1	29	4	10	15
8	완료	양평	19. 2.27.	3	2	1	136	136	–	38	4	5	29
9	완료	이천	19. 3.15.	3	2	1	16	16	–	18	2	1	15
10	완료	여주	19. 3.15.	2	2	–	50	50	–	28	3	3	22
11	완료	구리	19. 3.18.	2	2	–	47	47	–	30	6	2	22
12	완료	광주	19. 3.19.	4	4	–	132	127	5	39	12	10	17
13	완료	동두천	19. 4.10.	2	2	–	49	47	2	25	2	5	18
14	완료	양주	19. 4.22.	2	2	–	81	78	3	33	7	7	19
15	완료	의왕	19. 4.24.	2	2	–	53	51	2	28	5	7	16
16	완료	과천	19. 4.24.	1	1	–	31	31	–	12	1	1	10
17	완료	평택	19. 5.13.	6	5	1	138	136	2	49	9	12	28
18	완료	군포	19. 5.31.	4	4	–	101	95	6	35	10	7	18
19	완료	안양	19. 5.31.	6	6	–	174	166	8	47	10	9	28
20	완료	오산	19. 6. 5.	2	2	–	49	48	1	16	3	4	9
21	완료	안산	19. 6. 5.	9	8	1	194	183	11	61	14	9	38
22	완료	용인	19. 6.28.	8	8	–	161	156	5	79	16	29	34
23	완료	광명	19. 7.19.	4	4	–	76	74	2	23	7	4	12
24	완료	고양	19. 8.22.	11	10	1	315	308	7	89	13	21	55
25	완료	파주	19. 8.22.	5	4	1	223	216	7	47	10	9	28
26	완료	성남	19.10.10.	9	8	1	281	272	9	76	20	19	37
27	완료	부천	19.10.23.	9	8	1	260	253	7	72	16	15	41
28	완료	의정부	19.10.24.	4	4	–	119	117	2	33	10	5	18
29	완료	남양주	19.10.24.	7	6	1	276	270	6	65	18	13	34

첨부자료 언론보도자료

인천일보

2016년 06월 13일
05면 (자치의정)

도민과의 약속  우리가 지킨다

전국 광역의회 최초 '공약관리 TF팀' 발족

"분야별 정리 작업 마쳐 – 이행 로드맵 구축"

경기도의회가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의원들의 공약 달성을 추진하는 '공약관리TF팀'을 발족했다. TF팀은 경기도의회 142명 의원들의 4200여개 공약을 점검해 달성을 돕는다.

12일 경기도의회 공약관리TF팀에 따르면 경기도의회 142명의 도의원이 도민들과 약속한 공약은 총 4200여개에 달한다.

공약관리TF팀은 송한준(민주당·안산1) 경기도의회 의장의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도의회'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긴 기구다. 송 의장은 지난 6월 민주당 의장 후보로 도전하며 공약관리TF팀의 구상을 밝힌바 있다.

송 의장은 당시 인터뷰에서 "142명 도의원 당선자들의 공약집을 일일이 살펴보니, 변호사, 세무사, 농업인, 환경전문가 등 각종 분야 전문가들이 많이 들어왔다"며 "당선자들이 공약을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송 의장은 이런 각오로 취임 후 첫 조직개편을 통해 공약관리 TF팀을 만들었다. TF팀은 1명의 사무관과 10명의 직원으로 구성 지난달 18일 현판식을 갖고 본격 출범을 알렸다.

TF팀은 의원들과 공약 이행 로드맵을 만들고,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한 도청과의 협의, 공약의 추진상태 점검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TF팀 발족은 도의원들의 공약이 관리소홀로 자칫 선거철이 지나면 사라지는 '헛구호'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국회의원들과 도지사·시장·군수들에 대한 공약이행 상태 평가를 진행하고 있지만, 지방의원의 경우는 우수사례를 발굴해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을 수여하고 있을 뿐, 공약이행 상태는 평가하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방의원들은 공약 이행률과 재정 확보 비율 등을 확인하기 어렵고, 자체적으로 공약 이행 정도를 발표하지 않는 이상 지역주민들이 확인하기 힘지 않다.

도의회는 TF팀 운영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것으로 보고 있다. TF팀은 지난 1달여 간의 시간 동안 의원들의 공약을 확인해고, 앞일이 분야별로 정리하는 작업을 마쳤다.

정리결과 경기도의회 12기명의 지역구도의원과 13명의 비례대표가 도민들과 약속한 공약은 경제와 안전, 복지, 환경, 건설, 문화, 교통, 농정 등의 분야의 4200여개에 달했다.

TF팀은 공약 달성을 위해 경기도청 각 실·국 및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약 등을 확인하고, 의원들의 공약을 달성할 수 있는 기존 사업과 신규 사업들을 점검하고 있다. TF팀은 내년도 본 예산안이 작성되기 전까지 점검을 완료하고, 의원들과 함께 공약을 반영할 수 있는 사업을 찾을 예정이다.

또한 이행 로드맵을 구축하고, 집행부와 협의해 신규 사업을 만드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향후 공약별 추진성황을 점검하는 활동도 검한다.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은 "133만 경기도민이 선택한 도의원들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공약 이행을 지원할 것"이라며 "공약관리TF팀을 중심으로 142명의 도의원들이 내세운 공약을 빈틈없이 분석하고, 공약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도민과의 신성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했다.

도의회 공약관리TF팀 관계자는 "현재 공약을 정리하고, 집행부의 각종 사업을 살펴보는 등 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마련하는 중"이라며 "올해 연말 예산편성에서 의원들의 공약이 포함될 수 있도록 최극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종래 기자 ilcomet@incheonilbo.com

(15.5*15.5cm)

인천일보

2016년 06월 13일
05면 (자치의정)

142명 도의원 공약은 4200개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142명의 경기도의원은 4200여개를 도민과 약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제10대 경기도의원 공약리스트에 따르면 도의원들은 지역민들과 지역현안과 경제, 안전, 복지, 환경, 건설, 문화, 교통, 농정 등 다양한 분야의 공약을 내세웠다.

먼저 송한준(민주당·안산1) 경기도의회 의장은 ▲신안산선 테크노파크~한양대 구간 조속 착공 추진 ▲세계정원 경기가든 조속 추진 ▲고등학교 무상교육 패키지 등 20개 공약을 약속했다.

김원기(민주당·의정부1) 부의장은 ▲평화통일 특별도 설치 추진 ▲글로벌 관광클러스터 조성 ▲경기북부 고속버스 종합터미널 신설 추진 등 29개 공약을, 안혜영(민주당·수원11) 부의장은 ▲경기도 시설개선 및 실버맞춤 프로그램 ▲경기도 난임치료 지원사업 확대 등 14개 공약을 했다.

염종현(부천1)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청년미생 카드 지원 ▲여성특화 건강증진 프로그램 지원 확대 등을 약속했으며, 김규창(한국당·여주2) 도의원은 ▲당산리 공군사격장 이전 추진 ▲출산장려금 상향조정 등을 약속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도의원들은 도지사나 시장·군수의 인수위원회와 같이 공약을 세분화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실정"이라며 "전국지방의회 최초로 도입된 공약관리TF팀이 도의원들의 공약을 꼼꼼히 점검하고 달성을 돕겠다"고 말했다.

/김종래 기자 ilcomet@incheonilbo.com

(10.6*12.1)cm

경기일보

현장에 답있다… 31개 시·군 돌며 정책간담회 '동분서주'



제10대 경기도의회가 개원 이후 도의원 142명의 공약을 집대성해 도정에 반영할 수 있는 정책제안 작업을 진행하는가 하면, 시·군 정책간담회를 통해 지역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과 정책 발굴에 집중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진은 자리함을 하고 있는 도의회 송한준 의장과 의원들.

도민의 눈과 귀, 제10대 경기도의회 ■ 공약 실현 시스템 구축

지역서 꼭 필요로 하는 정책 발굴 집중
142명 공약 집대성, 道·교육청 정책제안
지자체·의원 소통, 사업 조속 추진 성과

제10대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개원과 함께 도의원 142명의 공약을 집대성해 도정에 반영할 수 있는 정책제안화 작업을 진행했다. 아울러 이에 연계해 송한준 의장(더불어민주당·안산)이 직접 31개 시·군을 돌며 소통하는 '정책간담회'를 마련, 실제 지역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과 정책 발굴에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도의회는 도민공약담당관실을 마련해 관련 사업을 집중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먼저 도의회는 제10대 도의원들의 공약을 모아 도정 및 교육 행정 분야별 연계관 정책 제안으로 연결했다. 도민권익담당관실에 따르면 142명의 공약은 총 4천194건이며, 기관별로는 도청 1천213건(28.9%), 도교육청 496건(11.8%), 시·군 2천485건(59.3%)이었다. 지역구별로 분류하면 경기남부 2천729건(65.1%), 경기북부 1천254건(29.9%), 비례 211건(5.0%)이다. 또 분야별로는 전체 공약 중 복지 748건(17.8%), 교육 704건(16.8%), 교통 507건(12.1%), 문화 448건(10.7%), 경제 416건(9.9%) 등이었다.

이 가운데 정책으로 제안된 공약은 총 43건으로, 도청 33건과 경기도교육청 10건이다. 위원회별로는 기획재경위원회 22건, 경제과학기술위원회 4건, 행정안전위원회 3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3건 등이다.

이들 위해 도의회는 지난해 7월 공약관리 TF팀을 구성했고, 도의원 공약 DB 구축 및 공약집 발간 뒤 도의회-인수위 간담회와 공약집 전달을 진행했다. 이후 지난해 9월 비교섭단체의원 간담회와 공약 관련 정책제안 43개 발굴 및 통보라는 절차를 거쳤다. 이에에 도의회는 도, 도교육청과 각각 정책간담회를 가졌으며, 도 및 도교육청 2019년 본예산 경제사업에 428건, 8조 803억 원(의원 1인당 570억 원)이 반영됐다.

이와 함께 도의회는 시·군 정책간담회를 마련, 도의원의 공약을 정책제안 형태로 논의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군 현안사항을 해당 지역구 도의원과 공유해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효과를 유도했다.

실례로 안성시 정책간담회에서는 안성시 도시가스 미설치 지역인 에너지내후지역에 대한 복지 수요를 공감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도의회 차원에서 증액을 제안할 예정이다. 또 이천시 정책간담회에서는 이천시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한 조속한 추진 건의사항에 대해 해당 지역구 도의원과 시 담당부서와의 협의으로 사전점차 이행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했다. 특히 시와 지역구 도의원이 긴밀히 소통해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에 시간 낭비를 줄여 조속한 사업 추진을 이끌었다는 평가다.

이와 관련, 송한준 의장은 "공약의원은 공약 이행이 아래은 구조라 제10대 도의회에서 공약 실현 시스템을 만들었다는데 의의가 있다"면서 "공약과 관련해 각 시·군 정책간담회를 갖는 등 도민과 함께 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단고자 노력하고 있다. '내 삶에 힘이 되는 대의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한호기자

경인일보

2019년 10월 25일
16면 (인물)



의정부시-지역구 도의원, 市발전 정책제안 논의

안병용 의정부시장과 의정부를 지역구로 둔 경기도의원들이 모여 시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 사항을 논의했다.

안 시장과 홍귀선 부시장,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김원기 경기도의회 부의장 및 도의원, 도 관계자 등 40여명은 24일 의정부시청 중회의실에서 정책간담회를 갖고 지역 현안사항을 토대로 모두 33건의 의원별 정책제안에 대해 검토 및 추진사항 등을 청취하고 논의를 진행했다.

주요 정책제안은 ▲평화통일특별도 설치(김원기·최경자 의원) ▲미군 반환공여지(CRC) 안보테마관광단지 조성(최경자 의원) ▲호원동 예비군훈련장 이전(이영봉 의원) ▲아동복지관 설립 및 운영(권재형 의원) ▲경기북부 고속버스 종합터미널 신설(김원기 의원) 등이다.

안 시장은 "시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구체적인 청사진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며 "시의 역점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고, 여러 현안사항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특별조정교부금 지원 건의 등 도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

(8.8×14.9)cm²

우수사례 요약서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04 UN SDGs 추진을 위한 2019 지속가능발전 제주 국제컨퍼런스 개최



분야 : 기타

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출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추진배경

- 2015년 제70차 UN총회에서 17개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채택
- 정부에서도 최근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재정립을 위한 국가 지속가능발전 목표 추진계획(K-SDGs) 마련
  - SDGs(지속가능발전목표)는 행정 최일선에 있는 지방정부의 주요 정책들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을 특별히 강조
- 국제사회 및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춰 제주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설정하고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추진전략이 절실
- 특히, 제주의 경우 관광객 및 이주민의 급증으로 인해, 하수처리, 쓰레기, 교통 등 환경·사회·경제 지속 가능성의 우려가 대두
- 지역주민 및 관광객 모두 행복도 향상을 위한 관광의 질적 성장 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

추진방향

- 'SDGs 17개 목표' 실천 중요성에 대한 전국 지방의회의 관심 제고 및 도민사회 공감대 형성 및 확산
- 국내외 지방정부 및 UN SDGs 관계기관(UNOP) 간의 협력을 통한 파트너쉽을 형성하고 구체적 실행 경험 및 우수실행 사례 공유
- 지속가능 개발 관점에서 문제점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제주형 지속가능 발전 전략 수립

● 궁극적으로, 지방정부가 앞장서 경제·사회·환경의 조화로운 균형 발전을 통한 Leave no one behind(아무도 소외되지 않음)를 실현하고 “현세대와 미래 세대가 행복한 제주 만들기”조성

행사개요

1 개 요

● **행사명** : 2019 지속가능발전 제주 국제컨퍼런스
(2019 Sustainable Development Jeju International Conference)

● **주제** : 건강한 지구! 지역에서부터
(Healthy Planet! From The Local: Local Action for the SDGs)

● **기간/장소** : 2019년 6월 18일(화)~6월 19일(수) / 메종글래드제주

● **참가자** : 17개국 25개 도시 500명 참가
※ UNDP 아시아태평양 부국장, 유럽 및 아시아 지방의회·지방정부 관계자, 전국시도의회 의장, 국내·외 NGO 기관 대표 등 참가

● **주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

● **참여기관** : 유엔개발계획(UNDP),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 시티넷(CityNet), 제주평화연구원, 연세대학교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연구원, 제주관광공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 주요 프로그램 |

일 시		내 용	장 소
6.17(월)	18:00-20:00	초청자 사전미팅 및 만찬	아자리아 (1F)
6.18(화)	10:00-10:50	개회식	컨벤션홀 (1F)
	11:00-13:00	리더스 라운드 테이블 회의	크리스탈홀 (2F)
	14:30-15:40	국제 세션	컨벤션B홀 (1F)
	15:50-17:00	국내 세션	컨벤션B홀 (1F)
	16:00-18:00	전국광역의회 의장단 세션	크리스탈홀 (2F)
	11:00-17:30	지방정부 국제교류 세션	제이드홀 (2F)
	18:00-20:00	제주의 밤(공동선언문 발표 및 만찬)	컨벤션홀 (1F)
6.19(수)	10:00-15:00	생태관광체험	도일원

2 전체 프로그램

<table>
<tr><th>시 간</th><th>6.17 (월)</th><th colspan="3">6.18 (화)</th><th>6.19 (수)</th></tr>
<tr><td>09:00</td><td rowspan="19"></td><td colspan="3">[참가자 등록]
09:30-10:00 / 컨벤션홀 포이어</td><td rowspan="2"></td></tr>
<tr><td>10:00</td></tr>
<tr><td>11:00</td><td colspan="3">[개회식]
10:00-10:50 / 컨벤션홀</td><td rowspan="5">[생태관광체험]
10:00-15:00
-세계자연유산센터
-비자림
-월정리-세화
해안도로</td></tr>
<tr><td>12:00</td><td>[리더스 라운드테이블 회의]
11:00-13:00
크리스탈홀</td><td>[지방정부 국제교류세션]
11:00-13:00
제이드홀</td><td></td></tr>
<tr><td>13:00</td><td colspan="3" rowspan="2">[오찬 및 휴식]
13:00-14:30
컨벤션홀 / 크리스탈홀</td></tr>
<tr><td>14:00</td></tr>
<tr><td>15:00</td><td>[국제 세션]
14:30-15:40
컨벤션B홀</td><td rowspan="3"></td><td rowspan="4">[지방정부
국제교류세션]
14:30-17:30
제이드홀</td><td rowspan="13"></td></tr>
<tr><td>16:00</td><td rowspan="2">[국내 세션]
15:50-17:00
컨벤션B홀</td></tr>
<tr><td>17:00</td><td rowspan="2">[전국광역의회
의장단 세션]
16:00-18:00
크리스탈홀/
아메티스트홀</td></tr>
<tr><td>18:00</td><td>Jeju Night Setting</td></tr>
<tr><td>19:00</td><td rowspan="2">[주요초청자
사전미팅 및
만찬]
18:00-20:00
아자리아</td><td colspan="3" rowspan="3">[제주의 밤 (공동선언문 발표 및 만찬)]
18:00-20:00
컨벤션홀</td></tr>
<tr><td>20:00</td></tr>
</table>

주요 프로그램

1 개회식

- **일시/장소** : 6월 18일(화) 10:00~10:50 / 컨벤션홀 (1층)
- **참가자** : UNDP 및 주요 기관장, 국내·외 전문가 등 300명
- **언어** : 사회자 영어 진행(한-중-일 동시통역 제공)

| 진행순서 |

시 간	분	내 용		비 고
10:00~10:10	10'	오프닝공연	대북공연 (노리안마로)	
10:10~10:13	3'	영상 시청	지속가능발전 홍보영상 상영	환경부
10:13~10:15	3'	오픈멘트	사회자 인사 및 참가자 소개	
10:15~10:20	5'	개회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김태석 의장
10:20~10:25	5'	환영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지사
10:25~10:30	5'	축 사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회장	송한준 회장
10:30~10:50	20'	기조연설	UNDP 아시아태평양지역 부국장 -(10') PPT 발표, (10') 동영상 상영	Valerie Cliff



사전공연



개회사



환영사



기조연설

2 리더스라운드 테이블회의

- **일시/장소** : 6월 18일(화) 11:00-13:00 / 크리스탈 B홀
- **주제** :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지역차원의 역할과 네트워크 구축 활성화 방안
- **회의내용**
  - 주제에 대해 각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례와 발전방안 등 발표
  - 지속가능발전 공동선언문(안) 동참 서명

| 참가자 |

순서	소속 / 직위	이 름	비 고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김태석	좌장
2	이탈리아 베니스 시의회 부의장	안나 메씨니스	이태리어 순차통역
4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회장	송한준	
5	인도네시아 前 해양수산부 장관	로흐민 다후리 이스마엘	
6	중국 하이난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비서장	린 성	
7	시티넷 사무총장	비제이 자가나탄	
8	태국 푸켓주정부 해외부 국장	자투퐁 카유사이	
9	UNDP 환경정책전문가	사왓 초드허리	
10	UNDP 아시아태평양지역 부국장	발레리 클리프	

| 진행순서 |

시 간	분	내 용		비 고
11:00-11:02	2'	오픈멘트	참가자/좌장 소개, 식순 등 설명	사회자
11:02-11:05	3'	회의 안내	좌장 인사	좌 장
11:05-12:45	100'	라운드테이블	각 참가자 발표 및 토론 - 참가자별 7분 이내 발표	
12:45-13:00	15'	선언문 채택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공동선언문 채택	

3 국제세션

- **일시/장소** : 6월 18일(화) 14:30-15:40 / 컨벤션B홀(1층)
- **참가자** : 이탈리아, 일본 및 중국 주요도시 초청 발표자 등 100여명
- **진행방식** : 사회자(오프닝멘트, 참여자 소개) → 좌장 토론 진행 (김봉현 원장)
- **주제** : SDGs 실천을 위한 해외 실행경험 및 우수사례 공유

| 역할참가자 |

순서	소속 / 직위	이 름	비 고
1	제주평화연구원장	김봉현	좌장
2	前 일본 가나가와현 의원	야기 다이지로 Yagi Daijiro	가나가와현 우수사례 발표
3	중국 하이난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환경부 주임	이예쩐씽 Ye Zhen Xing	하이난성 실천 우수사례
4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Roh, Hesub	제주도 실천 우수사례
5	이탈리아 베니스 환경단체 'We are here'프로젝트 코디네이터	한소영 Han, So Young	Action Practices in Venice and its Lagoon
6	일본 교토부 사회적농업모델사업소 '산산야마시로'시설장	신멘 오사무 Shimmen Osamu	사회적 농업분야 발표 (교토식 농복연계사업 우수사례)

4 국내세션

- 일시/장소: 6월 18일(화) 15:50-17:00 / 컨벤션B홀
- 참가자: 주요 초청발표자 비롯한 100여명
- 주 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제주의 선도적인 역할 방안

| 역할참가자 |

순서	소속 / 직위	이름	역할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박원철	좌장
2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 대표	양수길	주제발표, 토론
3	연세대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 교수	최대용	토론
4	환경부 지속가능전략담당관실 사무관	손명균	토론
5	서울특별시 평가협업담당관	박경환	토론
6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태윤	토론

5 제주의 밤

- **일시/장소** : 6월 18일(화) 18:00-20:00 / 컨벤션홀
- **참가자** : 공동선언문 발표자 외 참가자 전체 300여명

| 행사내용 |

시 간	분	내 용		비 고
18:00-18:02	2'	오픈멘트	사회자 인사	
18:02-18:12	10'	축하공연	제주도립무용단	
18:12-18:25	13'	공동선언문 발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공동선언문 발표 - 지속가능발전 공동선언문 발표 (사회자) - 공동선언문 채택 퍼포먼스 (9명)	
18:25-18:31	06'	건배제의	건배제의 요청 (3명)	
18:31-20:00	90'	만찬	참가자 만찬 - 뷔페	



공동선언문 발표


공동선언문 채택 퍼포먼스

추진성과

1 전국 최초 의회 차원의 UN 지속가능발전 목표 실천 분위기 확산

- 13개국 500여명의 참여한 가운데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공론화
- UNDP 기조연설, 리더스라운드테이블회의, 국내외세션, 지방정부국제교류세션, 전국시도의장협의회 세션운영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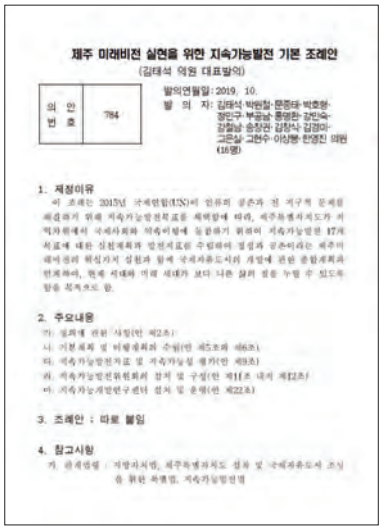
  ⇒ 지방의회 차원에서 세계 각국의 지방정부 및 전문가들과 함께 인류의 공동목표인 지속가능발전 실천 공감대 형성

2 지속가능발전의 촉진자·실행자로서 선도적 역할

- 시티넷 등 국·내외 지방정부 및 의회와의 지속가능발전 네트워크 구축
- 포용적 지역사회 구축 및 이행체계 마련을 위한 제주 공동선언문 채택
- 전국 광역시도의회 지속가능가능발전 이행을 위한 공동선언문 발표

  ⇒ 동 행사를 통해 제주의 지속가능 발전전략 수립 필요성 등에 대한 도민 공감대가 형성되어 「제주 미래비전 실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제정

|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 발의(2019.10.04.) 및 의결(2019.10.31.) |



제주 미래비전 실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김태석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784

발의연월일: 2019.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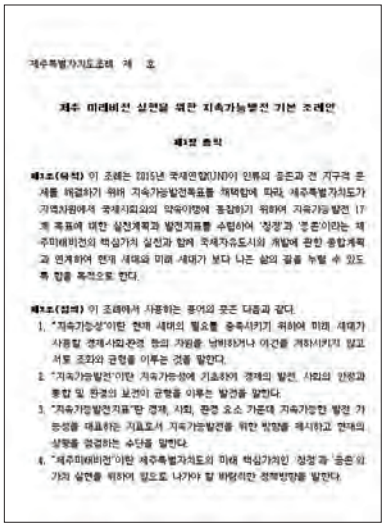
발 의 자: 김태석·박원철·문경태·박호형·강민구·부공남·홍명환·강민숙·김철남·송창권·김창식·김경미·고은상·고현수·이상봉·한경진 의원 (10명)

1. 제정이유

2. 주요내용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 미래비전 실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2015년 국제연합(UN)이 인류의 공존과 전 지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채택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역차원에서 국제지회와의 약속이행에 동참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17개 목표에 대한 실천계획과 발전지표를 수립하여 '정장'과 '공존'이라는 제주미래비전의 핵심가치 실천과 함께 국제자유도시의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남비하거나 여건을 개하시키지 않고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발전,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3. "지속가능발전지표"란 경제, 사회, 환경 요소 가운데 지속가능한 발전 가능성을 대표하는 지표로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현재의 상황을 점검하는 수단을 말한다.
4. "제주미래비전"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 핵심가치인 '정장'과 '공존'의 가치 실현을 위하여 앞으로 나가야 할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말한다.

3 도민 공감대 형성은 물론, 전국적 차원의 분위기 조성

- 지역방송사 및 언론사 집중 홍보를 통해 세션별로 국내외 전문가 및 도민 등 약 500여명이 참여하여 행사가 성황리에 개최
- 전국 광역의회 의장 16명이 동참하여, 제주는 물론 전국적 차원에서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한 실천적 규범조성 분위기 확산

4 다채로운 퍼포먼스를 통해 지속가능발전목표 실천 의지 형상화

- 개회식 대북공연 및 제주도립무용단의 공연 등을 통해 참가자들에게 제주의 문화를 널리 알리고 생기 있는 행사 이미지를 조성
- 공동선언문 채택의 공감대 확대를 위해 터치영상을 제작, 임팩트 있는 퍼포먼스 연출을 통해 참가자 감동을 배가

참고 주요 언론보도 내용

〈일간지〉

- "환경-경제 조화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한라일보)
- 환경·경제·사회통합 아우르는 발전 한뜻 (제주신보)
- "단 한사람, 단 한지역도 소외돼서는 안된다" (제민일보)
- "제주서 지속가능발전 청사진 만들자" (제주일보)
- 지속가능 발전 '제주공동선언문' 채택 (제주매일)
- '현세대+미래세대' 행복한 사회 (제주신문)

〈인터넷신문〉

- 지속가능한 발전? "소외계층 낙오 없도록 포용적사회 구축" (제주의소리)
- "환경·경제 측면에서 실천가능한 지속가능발전 청사진 나와야" (미디어제주)
- 2019 지속가능발전 국제컨퍼런스, 지역실천행동 '제주선언문' 채택 (헤드라인제주)
- '환경·경제' 담은 지속가능발전 청사진 그린다 (제주도민일보)
- '한 사람도 소외없이' ... 제주 공동선언문 채택 (제이누리)
- UN의 지속가능발전 목표, 국내선 제주가 견인 (뉴스제주)
- 제주도의회, 전세계 앞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역 실천행동' 선언 (제주투데이)
- 2019 지속가능발전 제주 국제컨퍼런스 개막 (제주경제신문)
- "단, 한 사람도, 단 한 지역도 소외되어서는 안돼" (제주환경일보)
- 2019 지속가능발전 제주 국제컨퍼런스 개최...지역 실천행동 '공동선언문' 채택 (뉴스N제주)
- '지속가능발전 제주 국제컨퍼런스'서 지역 실천행동 '공동선언문'채택 (제주뉴스)
- 김태석 의장,'지속가능발전의 의사소통자로서의 역할을 해 나가자' (영주일보)

〈통신사〉

- 지속가능발전 제주 국제콘퍼런스 '건강한 지구는 지역에서부터' (연합뉴스)
- 제주 '단 한사람도 소외없는' 지속가능발전 청사진 마련 (뉴시스)
- '지속가능발전 제주 국제컨퍼런스' 개막…UNDP 협력 논의 (뉴스1제주)

향후계획

1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선도하는 허브도시 구현

- 촉진자(facilitator)로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지역 공감대 확산과 실천가능한 로드맵의 신속한 수립
- 실행자(implementor)로서 일상에서 지속가능발전 목표가 실천적 규범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제주의 지속가능발전 전략 수립 유도
- 의사소통자(communicator)로서 포용적 지역사회 구축을 위해 국내외 지방의회와 정부, 시민단체간 네트워크를 통한 동반자적 거버넌스 구축
- 옹호자(advocate)로서 지방의회와 정부의 주요정책과 세부사업에 대한 지속가능발전 인증마크 부착 캠페인 협력

2 SDGs 지역화를 위한 환경 조성

- 지속가능발전 목표의 구체적 이행을 위해 도청내 전담조직과 예산, 전문인력 배치를 조속히 추진하고, 시민사회의 이행 프로그램 참여와 산업경제계의 제도적 참여 보장 방안 마련
- 이를 통해 민간거버넌스형으로 공동이행 목표를 작성하며 계획수립부터 집행과정, 모니터링까지 공유할 수 있는 체계 마련

3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시티넷(CityNet) 집행위원회 유치

-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자체 및 기관 등이 모여 결성한 UN 산하 국제기구(CityNet) 집행위원회의 제주유치를 통해 지속가능발전목표의 구체적 실행 경험 및 우수 현지 실행 사례 공유

4 SDGs 선도를 위한 2020 지속가능발전 제주 국제컨퍼런스 개최 추진

- 주제 :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Actions for SDGs 11 Sustainable Cities and Communities)
  - 우리가 원하는 더 나은 공동체를 위하여(Creating a better Community WE want)
- 일시/장소 : 2020. 4. 23.(목)~4. 25.(토)(2박 3일간)/메종글래드호텔
- 참가자 규모 : 국내·외 전문가 등 약 5백여 명
  - UN 고위관계자, 유럽 및 아시아 등 지방정부 관계자 등

2019
전국 지방의회
우수사례집



편집자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장 안경원 044.205.3371
지방의회운영팀장 노정란 044.205.3380
지방의회운영담당 조예진 044.205.3381

발행처

행정안전부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디자인/인쇄

제일기획 (서울) 02.2269.8900 (세종) 044.866.2181

발간등록번호
11-1741000-000245-10

2019
전국 지방의회
우수사례집

행정안전부